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18-01

정책보고서 2015-63

# 인구정책 관련 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박종서 외

**【책임연구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출산 및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2012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양지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 제출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인구정책 관련 통계 생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종서 부연구위원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근현대적 변동의 특징은 바로 출산력의 하락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인구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이후,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우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되어 노동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국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병력자원 부족과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판단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밀해지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정확한 통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통계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인구 현상과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적 논의부터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범위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통계에 대한 현황과 통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관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외 연구진이 대거 참여하고 수고해주었다. 특히 외부 전문가로 참여해준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아 중앙대학교 교수,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5
제3절 연구내용 .....	6
제2장 인구정책통계의 이론적 배경 .....	9
제1절 개념적 설명: 인구현상과 인구정책 .....	11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해외사례 .....	22
제3절 인구정책통계의 범위와 개념들 .....	83
제4절 인구정책통계 분류체계 .....	64
제3장 인구정책통계 현황 .....	16
제1절 인구정책통계 작성현황 .....	36
제2절 인구정책 주요통계 현황 .....	57
제4장 인구정책통계 개선방안 .....	92
제1절 인구영역 개선과제 .....	98
제2절 사회영역 개선과제 .....	98
제3절 정책영역 개선과제 .....	98
제5장 인구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	582
제1절 인구정책통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782
제2절 인구정책 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	392
제6장 결론 .....	297
제1절 결론 .....	299

---

참고문헌 .....	301
------------	-----

부록: 인구정책 통계집 .....	9
--------------------	---

## 표 목차

<표 2- 1>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른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2009년) .....	9	1
<표 2- 2>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통계 분류체계 .....	8	2
<표 2- 3>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 발행 인구통계자료집 분류와 통계목록 .....	4	3
<표 2- 4> 헤세이 27년판(2015년) 소자화사회대책백서 .....	6	3
<표 2- 5> 헤세이 27년판(2015년) 고령사회백서 .....	7	3
<표 2- 6> 국가통계 작성 현황 .....	9	3
<표 2- 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체계 .....	1	4
<표 2- 8> E-나라지표 주제별 통계 분류 현황 .....	6	4
<표 2- 9> KOSIS 100대 지표 .....	8	4
<표 2-10> 국가주요지표 .....	9	4
<표 2-11> 국민의 삶의 질 지표 .....	0	5
<표 2-12> 지속발전지표 .....	1	5
<표 2-13> 녹색성장 지표 .....	3	5
<표 2-14> 인구분야 통계 분류체계 .....	7	5
<표 2-15> 사회분야 통계 분류체계 .....	8	5
<표 2-16> 정책분야 통계 분류체계 .....	9	5
<표 3- 1> 인구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3	6
<표 3- 2>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4	6
<표 3- 3>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6	6
<표 3- 4> 생산기관별 인구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7	6
<표 3- 5> 생산기관별 인구영역 통계 작성 현황 2 .....	8	6
<표 3- 6> 생산기관별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9	6
<표 3- 7> 생산기관별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2 .....	1	7
<표 3- 8> 생산기관별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	2	7
<표 3- 9> 생산기관별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2 .....	3	7
<표 3-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	4	7
<표 3-11> 추정방법별 잠재성장률 .....	371	
<표 3-12>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명목, 1995-2012년) .....	6	7 1
<표 3-13>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2013년) .....	3	8 1
<표 3-14> 암검진수진율 추이(성별, 만19세 이상, 2009-2013년) .....	0	9 1

<표 3-15>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2007-2013년) .....	491
<표 3-16>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	591
<표 3-17> 고령자용 주택 공급 비율 .....	252
<표 4- 1> 인구통계 개선과제 .....	762
<표 4- 2> 사회통계 개선과제 .....	772
<표 4- 3> 정책통계 개선과제 .....	282
<표 4- 4> 국가 통계체계 개선과제 .....	382
<표 5- 1>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 내용 구성 .....	292

## 그림 목차

[그림 2- 1]	인구변동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 .....	2	1
[그림 2- 2]	한국 인구정책의 분류 .....	7	1
[그림 2- 3]	Eurostat 통계 체계 .....	7	2
[그림 2- 4]	OECD.Stat 통계 체계 .....	10	3
[그림 2- 5]	일본의 e-Stat 인터넷 홈페이지 .....	3	3
[그림 2- 6]	일본 백서 형태 보고서 발간의 사례 .....	5	3
[그림 2- 7]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틀 .....	5	4
[그림 2- 8]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 .....	6	5
[그림 2- 9]	인구정책의 메커니즘에 연관되는 주요 요인 .....	7	5
[그림 3-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인구피라미드: 1960-2060년) .....	7	7
[그림 3- 2]	연령집단별 인구비율의 변천(2000-2060년) .....	9	7
[그림 3- 3]	우리나라 인구 부양비의 변천(1970-2060년) .....	10	8
[그림 3- 4]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2005-2014년) .....	2	8
[그림 3- 5]	연령별 출산율(2005, 2014년) .....	3	8
[그림 3- 6]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5-2014년) .....	4	8
[그림 3- 7]	출산순위별 비율(2000-2014년) .....	5	8
[그림 3- 8]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2005-2014년) .....	6	8
[그림 3- 9]	성 및 연령별 사망확률 추이(1970-2013년) .....	8	8
[그림 3- 10]	기대수명 추이(1970-2013년) .....	9	8
[그림 3- 11]	생명표 생존자 추이(1990-2010년) .....	10	9
[그림 3- 12]	기대수명 국제비교, 남녀 모두(1970-2010년) .....	1	9
[그림 3- 13]	노인인구(65세) 기대여명(1970-2013년) .....	2	9
[그림 3- 14]	노인인구(65세) 기대여명 국제비교, 남녀 모두(1970-2010년) .....	3	9
[그림 3- 15]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1983-2014년) .....	4	9
[그림 3- 16]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1985-2014년) .....	5	9
[그림 3- 17]	사망원인별 65세 이상 사망률 추이(1985-2014년) .....	6	9
[그림 3- 18]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1985-2014년) .....	7	9
[그림 3- 19]	내국인 및 외국인의 순국제이동(2000-2013년) .....	9	9
[그림 3- 20]	내국인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2000-2013년) .....	10	1
[그림 3- 21]	성별 등록외국인 수(1995-2014년) .....	1	1

[그림 3- 22]	이주 관련 인구 추이(2006-2015년) .....	3·0· 1
[그림 3- 2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00-2014년) .....	5·0· 1
[그림 3- 24]	OECD 주요 국가의 조혼인율(2012년) .....	6·0· 1
[그림 3- 25]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00-2014년) .....	7·0· 1
[그림 3- 26]	OECD 주요 국가의 조이혼율(2012년) .....	7·0· 1
[그림 3- 27]	성별 평균조혼연령(2000-2014년) .....	8·0· 1
[그림 3- 28]	국제결혼건수(2000-2014년) .....	9·0· 1
[그림 3- 29]	국제결혼비율(2000-2014년) .....	0·4· 1
[그림 3- 30]	세대구성(2005, 2010년) .....	2·1· 1
[그림 3- 31]	세대구성의 비율(2005, 2010년) .....	3·1· 1
[그림 3- 32]	전체 1인 가구(15세 이상)대비 연령집단별 1인 가구의 비율(2005, 2010년) ..	4·1· 1
[그림 3- 33]	연령집단별 1인 가구수(2005, 2010년) .....	5·1· 1
[그림 3- 34]	한부모가족의 수(2005, 2010년) .....	5·1· 1
[그림 3- 35]	노인가구의 구성(2005, 2010년) .....	6·1· 1
[그림 3- 36]	노인가구의 비율(2005, 2010년) .....	7·1· 1
[그림 3- 37]	다문화 가구(2010년) .....	7·1· 1
[그림 3- 38]	혼인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	0·2· 1
[그림 3- 39]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	1·2· 1
[그림 3- 40]	연령대에 따른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	2·2· 1
[그림 3- 41]	이상 자녀수(2000-2012년) .....	3·2· 1
[그림 3- 42]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2011-2014년) .....	5·2· 1
[그림 3- 43]	스웨덴과 한국의 성·연령별 취업률(2013년) .....	6·2· 1
[그림 3- 44]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국제비교(2013년) .....	7·2· 1
[그림 3- 45]	성별 월급여액과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01-2013년) ..	2· 1
[그림 3- 46]	성별 월급여액과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1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06-2014년) ..	2· 1
[그림 3- 47]	OECD 주요 국가의 성별임금격차(2000-2012년) .....	9·2· 1
[그림 3- 48]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2001-2014년) .....	0·3· 1
[그림 3- 49]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2001-2014년) .....	1·3· 1
[그림 3- 50]	OECD 주요 국가의 관리직 비율 성별 비교(2013년 혹은 2012년) .....	1·3· 1
[그림 3- 51]	성별 가사노동시간(1999-2014년) .....	2·3· 1
[그림 3- 5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0-2014년) .....	5·3· 1
[그림 3- 5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0-2014년) .....	5·3· 1
[그림 3- 54]	성별 고용율(2000-2014년) .....	6·3· 1
[그림 3- 55]	연령별 고용율(2000-2014년) .....	7·3· 1



[그림 3- 56]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 비교(2000-2014년) .....	8·3·1
[그림 3- 57]	성별 실업률(2000-2014년) .....	9·3·1
[그림 3- 58]	연령별 실업률(2000-2014년) .....	9·3·1
[그림 3- 59]	장기실업자 비중(2000-2014년) .....	0·4·1
[그림 3- 60]	OECD 주요 국가의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2007년 4분기, 2014년 4분기) ...	1·4·1
[그림 3- 61]	중사상지위 분포(2000-2014년) .....	2·4·1
[그림 3- 62]	고용형태별 취업자 비중(2002-2015년) .....	2·4·1
[그림 3- 63]	OECD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임시직 비중(2011-2012년) .....	3·4·1
[그림 3- 64]	국가별 정규-비정규간 중위임금 격차(2008년 기준) .....	4·4·1
[그림 3- 65]	OECD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2000, 2014년) .....	5·4·1
[그림 3- 66]	OECD 주요 국가의 1년미만 단기근속자 비율(2000-2014년) .....	5·4·1
[그림 3- 67]	성별 월급여액(2006-2014년) .....	8·4·1
[그림 3- 68]	고용형태별 월급여액(2006-2014년) .....	8·4·1
[그림 3- 69]	OECD 주요 국가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연평균 시간당임금 변화율 .....	9·4·1
[그림 3- 70]	OECD 주요 국가의 임금분포 추이(2000, 2013년) .....	0·5·1
[그림 3- 71]	PIAAC 주요 국가의 임금불평등 지수(2012년) .....	0·5·1
[그림 3- 72]	OECD 주요 국가의 성, 연령 및 학력별 상대임금(2003, 2013년) .....	1·5·1
[그림 3- 73]	주당근로시간(2001-2014년) .....	2·5·1
[그림 3- 74]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2000-2014년) .....	3·5·1
[그림 3- 75]	장·단시간 근로자 비율(2000-2014년) .....	4·5·1
[그림 3- 76]	우리나라와 OECD간 고용안정성 지수(2013년) .....	5·5·1
[그림 3- 7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70-2060년) .....	6·5·1
[그림 3- 78]	학령인구(2000-2030년) .....	8·5·1
[그림 3- 79]	고등학교 졸업자수 및 진학률(2010-2015년) .....	9·5·1
[그림 3- 80]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2000-2015년) .....	9·5·1
[그림 3- 81]	우리나라 교원 수(2005-2015년) .....	0·6·1
[그림 3- 82]	교원1인당 학생수(2005-2015년) .....	1·6·1
[그림 3- 83]	OECD 주요 국가의 교원1인당 학생수(2012년) .....	2·6·1
[그림 3- 84]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2007-2014년) .....	3·6·1
[그림 3- 85]	초/중/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7-2014년) .....	4·6·1
[그림 3- 86]	우리나라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006-2014년) .....	6·6·1
[그림 3- 87]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	6·6·1
[그림 3- 88]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006-2014년) .....	7·6·1
[그림 3- 89]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	8·6·1

[그림 3- 90]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기준, 2006-2014년) .....	9	6	1
[그림 3- 91]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	9	6	1
[그림 3- 92]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가처분소득기준, 2006-2014년) .....	0	7	1
[그림 3- 93]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	1	7	1
[그림 3- 94]	잠재성장률 전망: OECD국가 평균과 비교(2015-2060년) .....	4	7	1
[그림 3- 95]	제도부문별 자산가액 연평균 증가율 .....	7	7	1
[그림 3- 96]	WHO 비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액션 플랜 목표 .....	8	7	1
[그림 3- 97]	주요 위험 요인의 질병 부담 기여(2013년) .....	9	7	1
[그림 3- 98]	성별 현재흡연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1998-2013년) .....	0	8	1
[그림 3- 99]	성별 고위험음주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	1	8	1
[그림 3-100]	성별 중등도이상(걷기포함)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	1	8	1
[그림 3-101]	성별 우울증상경험률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	4	8	1
[그림 3-102]	제왕절개분만을 추이(1982-2012년) .....	5	8	1
[그림 3-103]	연도별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2003~2014년) .....	6	8	1
[그림 3-104]	성별 비만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1998-2013년) .....	7	8	1
[그림 3-105]	치매유병률 추이 및 예측결과(2010-2050년) .....	8	8	1
[그림 3-106]	영유아(1세, 3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2011-2013년) .....	1	9	1
[그림 3-107]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2007-2012년) .....	2	9	1
[그림 3-108]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수 추이 .....	4	9	1
[그림 3-109]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	6	9	1
[그림 3-110]	병의원 연간미치료를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7-2013년) .....	7	9	1
[그림 3-111]	19세 이하 집단의 사망원인(2014년) .....	9	9	1
[그림 3-112]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4년) .....	0	0	2
[그림 3-113]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4년) .....	0	0	2
[그림 3-114]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5-2014년) .....	1	0	2
[그림 3-115]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5-2014년) .....	2	0	2
[그림 3-116]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2000-2014년) .....	3	0	2
[그림 3-117]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2000-2014년) .....	4	0	2
[그림 3-118]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익사자 수(2000-2014년) .....	5	0	2
[그림 3-119]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익사자 수(2000-2014년) .....	6	0	2
[그림 3-120]	연령별 범죄 발생건수(2000-2013년) .....	7	0	2
[그림 3-121]	연도별 61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수(2000-2013년) .....	8	0	2
[그림 3-122]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2000-2013년) .....	9	0	2
[그림 3-123]	성별 학대 피해노인 수(2007-2013년) .....	0	1	2

[그림 3-124]	유형별 노인학대 건수(2005-2013년)	1·1·2
[그림 3-125]	성별 아동학대 피해자 수(2001-2014년)	2·1·2
[그림 3-126]	유형별 아동학대 가해자(2001-2014년)	2·1·2
[그림 3-127]	재해율(천인율)과 사망률(만인율)(2000년~2014년)	4·1·2
[그림 3-128]	성별 산업재해자와 재해율(천인율)(2000년~2014년)	5·1·2
[그림 3-129]	성별 산업재해 사망자와 사망률(만인율)(2000년~2014년)	5·1·2
[그림 3-130]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추정액(2000년~2013년)	6·1·2
[그림 3-131]	성·연령별 일평균 여가시간(1999-2014년)	8·1·2
[그림 3-132]	성·연령별 문화활동 참여시간(1999-2014년)	9·1·2
[그림 3-133]	성별 자원봉사 참가율(1999~2013년)	9·1·2
[그림 3-134]	연령별 자원봉사 참가율(1999~2013년)	0·2·2
[그림 3-135]	주택보급률(2005-2014년)	2·2·2
[그림 3-136]	신혼부부 전세임대 현황(2009년~2014년)	3·2·2
[그림 3-137]	지역별 신혼부부 주택지원현황(2009년, 2014년)	3·2·2
[그림 3-138]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2006-2013년)	4·2·2
[그림 3-139]	보육아동수 및 어린이집 이용률(2001년~2014년)	6·2·2
[그림 3-140]	유형별 보육시설현황(1995~2014년)	7·2·2
[그림 3-141]	어린이집 미설치지역(2009년, 2014년)	8·2·2
[그림 3-142]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2006~2014년)	8·2·2
[그림 3-143]	평가인증률현황(2011년~2014년)	9·2·2
[그림 3-144]	출산전후휴가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률(2002~2014년)	1·3·2
[그림 3-145]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2002~2014년)	2·3·2
[그림 3-146]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2008~2013년)	3·3·2
[그림 3-147]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2006~2014년)	3·3·2
[그림 3-148]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수(2008~2014년)	4·3·2
[그림 3-149]	공적연금 가입률(2000-2013년)	7·3·2
[그림 3-150]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률(2004-2014년)	8·3·2
[그림 3-151]	기초연금수급자 비율(2008-2014년)	9·3·2
[그림 3-152]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2008-2012년)	9·3·2
[그림 3-153]	OECD 주요 국가의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	0·4·2
[그림 3-154]	퇴직연금가입자수(2008-2014년)	1·4·2
[그림 3-155]	주택연금가입자수(2007-2014년)	2·4·2
[그림 3-156]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2008-2013년)	3·4·2
[그림 3-157]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2005-2014년)	4·4·2

[그림 3-158]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2005-2014년) .....	5·4·2
[그림 3-159]	노인장기요양보호율(인정률)(2008-2014년) .....	6·4·2
[그림 3-160]	OECD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호율 .....	6·4·2
[그림 3-161]	노인장기요양 기관수(2008-2014년) .....	7·4·2
[그림 3-162]	노인일자리 창출수(2005-2014년) .....	9·4·2
[그림 3-163]	경로당 설치운영수(2005-2014년) .....	9·4·2
[그림 3-16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2005-2014년) .....	0·5·2
[그림 3-165]	노인보호전문기관수(2008-2014년) .....	1·5·2
[그림 3-166]	노인보호구역 지정수(2008-2013년) .....	1·5·2
[그림 3-16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예산(2006-2015년) .....	4·5·2
[그림 3-168]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2011년 기준) .....	5·5·2
[그림 3-169]	GDP대비 공적연금관련 지출(2011년 기준) .....	5·5·2
[그림 3-170]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2013년 혹은 가장 최근년도) .....	6·5·2
[그림 3-171]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2001-2018년) .....	7·5·2
[그림 4- 1]	기대여명 15년 미만 비중(Prop. RLE 15-)(1997-2011년) .....	4·6·2
[그림 4- 2]	기대여명 평균 추이(1970-2014년) .....	5·6·2
[그림 4- 3]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2013년기준) .....	9·6·2
[그림 4- 4]	OECD 주요 국가의 일평균 여가시간(2006년) .....	6·7·2
[그림 4- 5]	OECD 주요 국가의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참여율(2006,2013년) .....	8·7·2
[그림 4- 6]	OECD 주요 국가의 모성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	9·7·2
[그림 4- 7]	OECD 주요 국가의 부모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	9·7·2
[그림 4- 8]	OECD 주요 국가의 아버지 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	0·8·2
[그림 5-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	1·9·2
[그림 5- 2]	인구정책통계 DB와 포털사이트 구조 .....	4·9·2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인구 변동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10년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안정적 성장기’로 기록된다. 이 시기는 인구가 장기간에 걸쳐 상승추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동안을 ‘초기 변천기’로 보는데, 그 이유는 사망률 저하와 인구성장 및 대규모 이동과 같은 새로운 인구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혼란기’로 볼 수 있는데,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혼란 속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과 출산을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는 베이비붐으로 인한 출산을 증가와 사망률 하락에 따른 역사상 가장 높은 자연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 시기를 ‘후기 변천기’로 본다. 1985년 이후는 출산력이 재생산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출산력 변천과 함께 인구변천이 끝나는 과정으로써 ‘재안정기’로 보고 있다(권태환, 김두섭, 2002). 이와 같이 한국의 인구는 급변하던 근현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동의 진폭을 달리 해왔으며, 현재도 역시 이와 같은 인구변동의 큰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변동의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현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한 가지는 1985년 이후 인구변동의 재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인구변동이 단기적인 급변동보다는 장기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산력 변동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이후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여 현재까지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약 32년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망률이 1960년 이후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평균수명이 1970년 62세에서 2015년 약 82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노인인구 비율은 1982년 4%에서 2003년 8%를 넘어 2014년에 12%까지 계속 증가했다. 즉 합계출산율의 감소세와 낮은 수준의 지속, 인구 고령화추세의 지속이 장기적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단기간에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한 가지는 인구현상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복잡한 기제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출산을 결정하는 기제는 국가, 사회, 가족의 단위별로 심리적 요인, 물질적 요인, 규범적 요인, 관계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출산 결정이라는 개인 행위만 보더라도,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일상생활의 시간 형식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가족 수준에서 보면 가사분담 정도, 양육 자원의 동원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혼인, 출산, 자녀양육 관련 규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보육시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 노동시장에서 주어지는 기회균등과 양성평등, 심지어 국가의 정책홍보까지도 개인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 행위 기제의 복잡성은 사회 현상의 정확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변동은 장기지속성과 복잡성의 맥락에서 사회 각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 변동은 우선 생산가능인구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수급문제는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는 정부 차원의 각종 사회보장 재정 지출 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변동에 따른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종 인구변동 대응 정책에 대한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변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 대응은 2005년 출산율의 급감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부처 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부터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정부차원의 본격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고, 2015년에 제2차 기본계획은 완료된다. 지난 10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런 평가의 경험적 근거는 취약한 상황이며, 비판적 평가이든 긍정적 평가이든 관계없이 정책추진 성과나 효과성 평가의 근거는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인구변동이 장기적 추세와 복잡성 기제를 따른다는 면에서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구 변동이 사회 제반 영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더욱 엄격한 접근이 필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에 따른다면 정확한 정책 근거 기반의 확보는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정책의 근거기반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 접근이 미흡했던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생산 현황 분석 및 향후 안정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시행 및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단계까지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사회보장통계 관리방안을 확정하 바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소관으로 통계작성 및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보장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회보장통계 연보 발행 등 관련 통계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인구정책 관련 통계 관리체계의 확립은 시급히 보완될 과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구현상 및 인구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리부터 시작하여 통계 분류를 위한 개념틀을 확립하고 개념체계에 따라 분류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역별 통계를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안정적 생산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안정적 생산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 해외 사례연구, 통계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 등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 우선 인구현상 및 인구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한다. 인구학 관련 문헌과 기존에 발표된 인구정책관련 연구 성과를 주요한 자료로 검토할 것이며, 통계체계에 관한 문헌자료도 참고한다. 그동안 정부기관으로써 통계청에서 주로 이와 연관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통계 분류체계 구성을 위해서 기존에 발간된 각종 통계집과

통계청의 KOSIS 홈페이지, E-나라지표 홈페이지의 분류체계도 검토한다. 분류체계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체계를 본 연구의 비교의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연구는 주로 통계분류를 위한 개념들과 분류체계 구성을 위해 비교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별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차별적 통계체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몇 주요 국가의 통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지향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 통계 목록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의 추세 변화를 분석한다. 추세분석은 통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통계 추세를 분석하면서 부분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통계도 함께 제시하여 비교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체계와 분류체계의 영역별 통계 목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의견조사는 주로 통계 분류체계에 대한 전체적 의견과 각 영역별 통계목록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 제3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체 6개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서론에서 주요한 초점은 인구정책 통계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근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체계의 정립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구현상과 인구정책의 개념적 정의를 시작으로, 인구정책 관련 통계 분류를 위한 개념들을 제시한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한 정의와 범주 및 정책방향은 사회변화에 따라 재정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과 정책의 실제 변화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들은 인구정책 통계가 지향하는 핵심개념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한 통계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도식을 말한다. 핵심개념을 논의하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통계체계의 이해를 위한 개념들을 구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된 개념들을 따라서 통계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영역별 통계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3장은 인구정책 통계의 현황을 설명한다. 이 부분은 전체 통계 항목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제시하고, 연도별로 통계 내용의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전반적 추세 변화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술적 논쟁점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제4장은 분류체계를 따라 선정된 인구정책 통계 목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통계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통계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계 생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선과제는 제3장의 통계추세 분석과, 국제통계 비교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써 향후 통계 개선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개선 과제는 정부 소관부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5장은 인구정책 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인구정책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향후 인구정책 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정책 통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정책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2 장

# 인구정책통계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개념적 설명: 인구현상과 인구정책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해외사례

제3절 인구정책통계의 범위와 개념틀

제4절 인구정책통계의 분류체계



# 2

## 인구정책통계의 이론적 배경 <

&lt;

### 제1절 개념적 설명: 인구현상과 인구정책

#### 1. 인구현상

인구란 어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이때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집합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인구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구현상은 전체 인구의 규모,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와 지역적 분포 또는 이동형태 등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동적 특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인구현상의 특성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크기와 변동이라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정태적이라면 변동은 동태적인 것이다. 우선 동태적 측면에서 특정 지역의 인구 규모가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인구변동 또는 인구성장이라 말한다. 그리고 변동은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조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인구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 세 가지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결혼이나 경제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들은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인구에 영향을 주게 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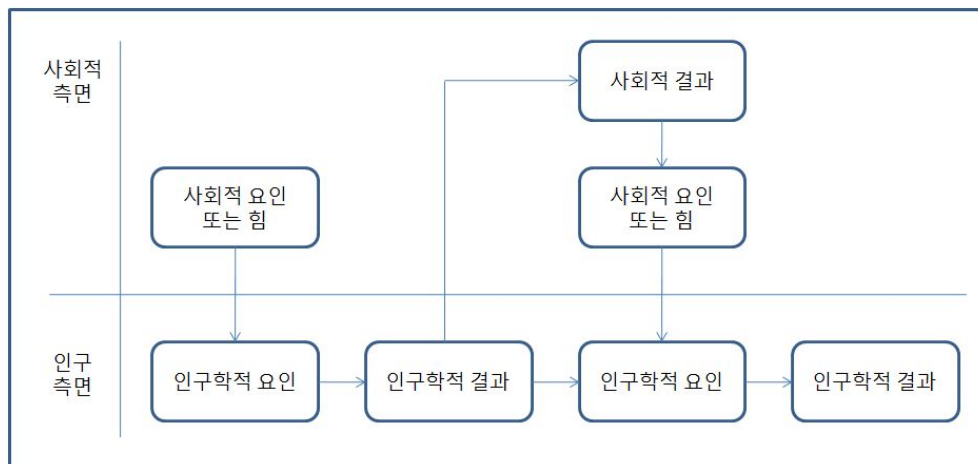
동태적 측면과 달리 정태적 측면은 인구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봄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구분, 성이나 연령에 따른 구분, 교육 정도나 직업에 따른 구분을 이용하여 인구현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인구의 구조라고 말하며, 주로 인구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권태환, 김두섭, 2002, p.9-10).

다른 한편, 인구현상에 대한 관심은 일차적으로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인구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 현상 이면에 있는 함축적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인구현상이 자체의 고유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의 맥락적’ 의미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인구현상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조

건, 규범, 가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권태환, 김두섭, 2002, p.5).

인구현상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한편으로 인구현상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거나, 다른 한편으로 제반 특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게 된다. 인구현상은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할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인구학적 요인과 결과가 사회적 요인과 결과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학적 요인은 인구학적 결과를 만들어 내며 인구학적 결과는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결과는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다시 인구학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순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1] 인구변동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



자료: 권태환, 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p.11.

좀 더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현상에 대한 관심은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고, 인구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인간복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구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 개개인의 생활을 조건 짓고,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나아가 인류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구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떤 사회과학분야보다도 ‘미래지향적’이며 ‘정책 지향적’ 성격을 띠



게 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p.4-5). 실제로 한국의 근현대사적 사회변화에서 인구변동이 사회변화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으며, 인구변동에 따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인구변동과 이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현상은 인구정책은 항상 대응하는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구정책

### 가. 정의

현재 한국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 우리의 인구정책의 큰 틀을 살펴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구정책은 적정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법률 조항으로써 인구변동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내용적 포괄성보다는 책무의 명확성 관점에서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내용 전반을 함축하지는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국가는 인구문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정책을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정부와 공적 기관들은 인구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확한 인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인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센서스, 인구등록시스템, 그리고 사회조사 등의 방법으로 인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국가는 공공 보건과 사망·출생·이동의 양태를 조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구정책이란 한편으로는 인구학적 변화의 불균형을 예방하거나 연기할 목적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서 공적 기관이 추진하는 직간접적 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이란 공공의 선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권리, 필요, 열망을 위해 인구규모와 인구연령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인구문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May, 2012, p.42). 더 명확히 설명하면,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Eldridge, 1979: 박상태, 2006 재인용).

인구정책은 결국 인구학적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이 둘의 상호관계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4가지 쟁점이 검토될 수 있다(May, 2012, p.48-49). ① 우선 사람의 수와 동원 가능한 자원에 관한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공간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개별 구성원은 생활공간에 대한 협소함을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구성원 각자의 생활에 압박감을 주게 된다. 이것을 인구압(population pressure)이라고 하며, 인구압은 결국 사회적 긴장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 인구압은 인구밀도로 표현하는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인구압이 높아진다. 이것은 인구규모의 증가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때 나타난다. 인구증가는 자연적 한계 수준(예를 들면 영토 혹은 자원)을 넘지 않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하나의 관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다음은 인구증가 비율에 관한 것으로서, 인구증가는 일반적으로 높은 출산율 때문에 일어나지만 가끔은 사망률이나 이민의 감소로 일어나기도 한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지속시킬 수 있어 국가와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한국에서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로써 당시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③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문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취업 및 주거 문제는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일 것이다. 한국에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교육 및 복지 욕구의 확대는 이와 같은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연령구조와 부양비 변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의 건강, 소득, 주거 등의 사회보장재원에 대한 압박은 점차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고용수준, 건강, 도시화, 성 역할, 문화, 종교적 믿음과 같은 맥락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된

다(May, 2012, p.64). 인구정책은 거의 사회 전영역과 관련성을 가지며, 작용 관계도 상호관계이든 인과관계이든 그 관계는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은 국가의 특정한 행정적 상황, 정치적 상황 등의 영향 관계 속에서 시행되며, 매우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범위 내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런 점은 정책적 차원에서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 나. 인구정책 분류

인구정책의 분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May(2012)는 공적 기관에 의한 인구 개입 유형을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사회경제적 발전계획, 가족계획프로그램,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의 인구정책(formal national population policy)이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발전계획은 특히 경제 성장 속도 증가를 추구함으로써 인구증가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계획프로그램은 인구증가 감소를 위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인구증가 감소 이외에도 가족계획프로그램은 산모와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적자본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준다. 국가 인구정책들은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종종 사회정책을 통해서 적용되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직접적일수도 있고 또 간접적일수도 있다.

Jones(2015)는 인구정책을 인구 영향정책(Population-influencing policies), 인구 대응정책(Population-responsive policies), 기타 간접적인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 영향정책의 예는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출산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고려된다. 반대로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구 대응정책의 보기는 보육·교육 정책, 고령화 관련 정책, 빈곤 개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의 예는 유럽사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가족정책을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정책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로 선진국에서는 이민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직접 인구현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권태환, 김두섭, 2002). 유럽 국가의 경우는 가족정책이나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인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일부 발전 국가의 경우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식적으로 인구현상에 개입하고 있다. 인구규모가 과대하거나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급속할 경우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구현상 및 과정은 사회, 경제, 문화적 제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발전은 물론, 주택, 식량, 고용, 사회보장, 국토개발, 에너지, 환경, 교통 등의 제반 사회문제들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과 상호복합적인 관련을 지닌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국내 인구학자들은 인구정책을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조정정책에는 인구와 직접 관련하여 적정규모, 균형분포 또는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한편 인구와의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경제사회개발정책 역시 넓은 의미에서 인구대응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인구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권태환, 김두섭, 2002, p.350).

인구성장억제정책과 인구분산정책은 인구의 규모, 분포 또는 구성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며, 결국 이런 정책은 인구의 양적 통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출산억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인구분산정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전출을 막는 것, 둘째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농촌에서 이주하는 인구의 유도, 셋째는 농촌에서 중소도시 이주를 유도, 마지막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지역으로 이주민을 흡수하는 것이다(정기원, 2006, p.443-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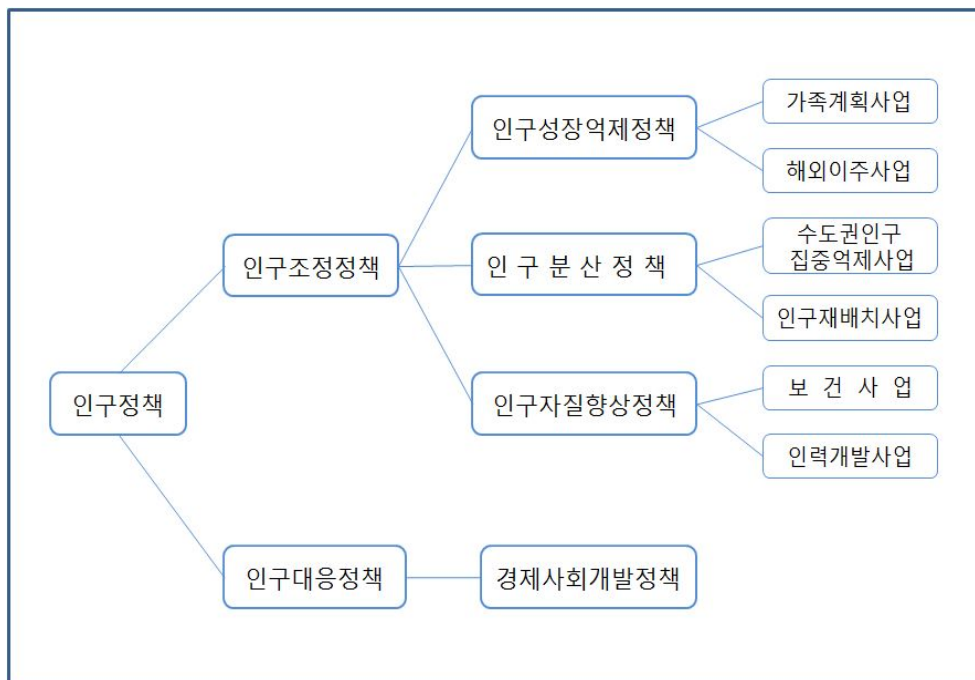
다른 한편 인구의 양적조절 정책과 달리 인구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사업과 인력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보건사업은 국민보건의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연장시켜 인적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질병률과 사망률의 증가는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국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보건 및 의료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보건, 특히 모자보건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출산력 저하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이들의 만성질환관리가 정책적 주요 관심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와 같은 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인력개발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경제개발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력개발 사업은 인력의 양성 및 훈련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의 교육을 통하여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경제사회개발정책도 기본적으로 인구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광의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복지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양적 규제는 물론, 질적 개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보건, 인력, 교육, 주택, 사회보장 등 경제사회부문의 계획사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2] 한국 인구정책의 분류



자료: 권태환, 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p.351.

## 다. 세계 인구정책 동향

인구학자 John. F. May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인구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가능하다(May, 2012).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 가족계획 정책, 공식적 국가 인구정책을 통해서 인구정책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개발도상국가들은 단순한 가족계획정책을 통한 양적인 조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발전국가들의 인구정책은 사회정책을 통해서 실행되어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이소영, 최인선, 2014; 정경희, 2006).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출산장려운동이 있었으나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사회에서는 전례 없이 낮은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지속적인 증대, 한부모가족 증가 등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정책을 채택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은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단보다 가족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들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인구 자체를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에서 가족구성원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가족정책(Family Policy)의 일부로 인구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정경희, 2006, p.485-488).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도 개발도상국가 뿐만 아니라 발전국가도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적정규모 및 구조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제를 유발한다. 세계 각국은 인구관련 주요정책으로 AIDS, 영아 및 어린이사망, 모성사망, 노동력, 청소년출산, 기대수명, 인구노령화, 인구분포, 출산수준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장영식 외, 2010, p.65-66).

아래의 UN(2010)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인구정책은 HIV/AIDS 관련이며, 다음은 영유아 사망, 모성사망, 생산가능인구 규모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다음이 HIV/AIDS, 낮은 출산율, 생산가능인구 규모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일반적 추세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른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2009년)

지역 및 문제	심각하다고 보고한 국가의 비율(%)
세계	
HIV/AIDS	87
영유아 사망	70
모성 사망	66
생산가능인구 규모	62
청소년 출산	57
출생시 낮은 기대수명	55
고령화	55
인구 분포	51
선진국	
인구 고령화	79
HIV/AIDS	77
낮은 출산율	61
생산가능인구 규모	59
개발도상국	
HIV/AIDS	90
영유아 사망	81
모성 사망	79
청소년 출산	65
생산가능인구 규모	63
출생시 낮은 기대수명	62
인구 분포	58
높은 출산율	50

자료: UN(2010), World population policies, p.7.

Finkle과 Crane(1990)는 세계 인구정책의 흐름을 시기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구조절시기(1965~1974년), 둘째는 인구계획시기(1974~1981년), 셋째는 경쟁력 있는 다원화된 인구정책시기(1981~1994년)이다(이소영, 최인선, 2014).

인구조절시기(1965~1974년)는 인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계획사업(family planning program)을 통해 출산율 감소에 집중하던 시기이다. 이때의 인구정책이 단순히 인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삶의 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치료 중심의 정보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부 보조금, 국가차원의 면역체계 구축,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구계획시기(1974~1981년)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시기이다. 정부가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개입함으로써 인구

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WHO의 전신인 WHA는 질병예방 프로그램(EPI: 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을 실시하여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1974년 Bucharest 회의를 시작으로 World Population Plan of Action(WPPA)에 가입하였고, 인구문제를 사회적 혹은 경제적 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주요정책은 출산율을 낮추고,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쟁력 있는 다원화된 인구정책시기(1981~1994년)는 정부를 통한 인구정책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를 통해 인구정책이 실행되었다. 인구정책의 목적 또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구 문제에 따라 각기 다양하였고, 지역적 가치와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가족계획사업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은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자 오히려 인구대체수준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개발도상국은 높은 출산율과 사망에 대한 대응정책, 국내 인구의 해외 이민정책, 국외 인구의 이민 정책, 가족계획사업(적극적인 피임 방법 등)에 주목하였다.

#### 라. 국내 인구정책 동향

한국의 인구정책은 추진된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년), 둘째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년),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기(2004년부터 현재까지)이다(이삼식 외, 2013; 이소영, 최인선, 2014, p.37-38에서 재인용).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년)는 인구조절을 목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시기를 말한다.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년)는 인구억제 정책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구자질의 향상 및 복지 정책에 초점을 둔 시기이다. 이때의 인구자질은 주로 보건 혹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되었는데, 노동인력의 공급 둔화, 노령인구의 증가, 혼전임신, 인공임신중절, 남녀 성비불균형, 청소년 성문제 등의 새로운 인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의 양적 조절정책으로 대처 할 수 없는 정책들에 역점을 두었다(장영식 외, 2010).

셋째 단계에 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기(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



이 중요한 특징이다.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 기본계획은 5개년 종합계획으로써, 2015년에 제2차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인구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정부부처는 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연차별로 추진하였다. 이 때 정책의 목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있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추진체계와 함께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차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였으나, 한 동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위원회로 격하되었다가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변화와 달리 정책 중심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변화가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크게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정책 추진을 위한 전체 비전과 영역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저출산 정책 영역에서 세부 정책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가정 조세 및 사회보험 확대, 자녀양육가정에 주거안정지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산전 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모자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탄력 근무시행,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죽간호휴직 제도 도입,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 복귀 지원,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사회교육강화,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화 강화 등도 중요한 정책 추진과제에 해당한다.

고령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및 노인 권익 증진,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및 여가 문화 활성화,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한 정책 추진과제들이었다.

마지막 성장동력 영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고령화 시스템 구축,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 학습체계 확립,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강화, 고령친화산업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에 해당한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부 예산은 점차 확대되었다. 1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던 2006년 첫해에는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2010년에는 11.7조원, 2015년 16.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산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데는 저출산 정책 영역에서 보육정책의 확대가 크게 기여했으며, 고령사회정책 영역에서는 기초연금의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방향은 인구의 양적 조절정책과 함께 인구의 질향상 정책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인구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절 기존연구 동향 및 해외사례

### 1. 기존연구 동향

최근 각 분야별 통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행정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통계 및 통계 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국가 통계체계에 대한 몇몇 연구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재용 외(2011) 연구는 국가통계의 개념 및 중요성, 국가통계의 현황 및 작성체계, 국가 통계 환경 분석 및 미래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통계의 전반적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석현호 외(2014) 연구는 프랑스 대통령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제시한 바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통합 국가지표체계를 참고하여, 3개 부문,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에서 주요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지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전반적인 국가 통계체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범죄, 문화예술, 방송 통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지방노동통계 등 각 분야별 통계체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은배 외(2011)는 교육분야 통계를 통계 기획·관리단계(기획·관리 조직의 현황, 관련 법령의 현황, 통계 품질의 관리 현황), 생산 통계현황 그리고 서비스 제공현황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첫째,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 각 문제점이 도출된 원인과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해 진단한 후, 마지막으로 내부적 역량, 외부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경 외(2015)는 국가범죄통계관리체계의 문제점(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통계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 미비, 책임기관의 부재 등)을 고찰하고, 미국, 일본의 관리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소영 외(2010)는 문화예술통계 조사현황과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계의 조사 일원성(일관성) 부족, 자료 체계성, 정책 활용성 및 국제비교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통계체계에서 문화예술분야를 대표하는 28개의 대표지표를 선정,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과 통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용찬 외(2005)는 현재의 방송 통신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방송통계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품질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기현, 김창환(2011)은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 현황과 문제점(실시간 변동사항 파악의 한계, 정기 실태조사의 부족 등)을 고찰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9가지의 핵심지표에 대한 영역체계(안)과 아동·청소년 통계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혜리 외(2008)에서는 6개 국가(군)들 -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노르딕 국가들, 한국 -의 국내·외 정신보건 통계현황을 통계생성·관리기관의 조직 및 체계, 통계생성·관리 표준화 정도, 정신보건통계 생산물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정신보건통계 발전전략 수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호 외(2012)는 지방노동통계 생산

및 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통계 생산의 주체들(중앙부처, 지방정부, 지방청(센터),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수직적·폐쇄적·일방적 구조의 거버넌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협력과 개방성에 기초한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 2. 해외 사례

어느 나라에서도 각 국가가 처한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이뤄지고 있으나, 서구의 발전국가들은 많은 경우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를 꺼리고 있으며,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설립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경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출산율 반등의 성과를 거둔 프랑스에는 가족정책,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정책 등이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과거 나치나 스탈린 정권이 추진했던 강제적인 인구정책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 ‘인구정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인구현상의 복잡함과 인구정책의 광범위한 범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일자리 안정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거시적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수 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인구정책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어 다른 정책들과의 중복과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발전국가 중에서 우리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형태의 인구정책의 방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국가도 일부 있는데, 여기에는 호주, 독일, 싱가포르가 해당된다. 이들의 정책 동향은 저출산 현상의 진행, 인구구조의 고령화, 인구의 감소 등 2차 인구변천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가족계획정책 형태의 개발도상국가형 인구정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국가들이 제시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 전략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갖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전략(Demographic Strategy)<sup>1)</sup>, 호주는 인구전략(Population Strategy)<sup>2)</sup>, 싱가포르는 인구정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Population Policies)<sup>3)</sup>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인구전략’으로 통칭할 수 있다,

이 ‘인구전략’은 일정 수준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 이상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범국가적 정책 아젠다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는 인구 변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산, 사망, 이민, 혹은 고령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구정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정책 및 정책 담당자들간의 통합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구전략과 연계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각 방면의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구전략은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적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는 확장된 인구정책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인구전략은 우리와 같은 구체적인 인구정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인구정책 통계 역시 부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출생, 사망, 인구이동 및 이주자 등에 대한 인구통계를 별도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국의 인구통계 관례체계를 소개하고, 그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인구통계 관리체계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유럽연합과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통합적 인구통계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살펴본다. 국제기구는 소속 회원국가의 인구통계를 통일적 체계에 따라 구축하고 있고, 잘 정비된 분류체계의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일본 사례는 우리와 유사한 정책 환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가. Eurostat: 인구 및 사회여건 통계

EU 회원국들의 핵심적 통계들을 총괄하여 제공하는 Eurostat에서는 총 9개의 영역으로 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 영역은 지역별 일반통계(General and regional sta-

1)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EN/Broschueren/2012/demografiestrategie\\_englisch.pdf](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EN/Broschueren/2012/demografiestrategie_englisch.pdf)

2) <http://www.environment.gov.au/sustainability/population/index.html>

3) [http://www.nptd.gov.sg/content/NPTD/news/\\_jcr\\_content/par\\_content/download\\_98/file.res/population-white-paper.pdf](http://www.nptd.gov.sg/content/NPTD/news/_jcr_content/par_content/download_98/file.res/population-white-paper.pdf)

tistics), 경제와 재정(Economy and finance), 인구와 사회여건(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산업 및 교역과 서비스(Industry, trade and services), 농업과 어업(Agriculture and fisheries), 국제통상(International trade), 운송(Transport), 환경과 에너지(Environment and energy),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이다.

이 중에서 ‘인구 및 사회여건(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인구관련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Eurostat 자체는 회원국들의 통계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사회적 함의나 정책적 동향은 제시하지 않는다. 인구 및 사회여건 통계 역시 인구 영역의 핵심적 통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인구 통계 외의 사회여건 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체계와 비교하여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인구 및 사회여건 통계는 아래 그림 [그림 2-3] 과 같이 14개의 통계 분류를 가지고 있다. 아래 <표 2-2> 에 제시된 내용은 각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되는 통계의 내용이다. 여기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구통계에 해당되는 영역은 인구와 센서스 자료이며,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규정하자면 이주자 통계와 건강 통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인구통계에는 혼인 및 이혼통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주자 통계에 유럽의 사회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난민 부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 관련 통계에서는 건강상태 및 주요 결정요인, 건강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통계청에서도 인구사회통계의 한 부분으로 제공하는 사망원인 통계도 독립된 영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Eurostat의 ‘인구 및 사회여건’ 통계의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 통계, 사회여건, 사회적 보호 통계 등에서 EU의 핵심적 정책 의제들이 반영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3] Eurostat 통계 체계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urostat website's 'Browse statistics by theme' page. The header includes the Eurostat logo, navigation links (News, Data, Publications, About Eurostat, Help), and a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wo primary sections: 'EU POLICY INDICATORS' and 'STATISTICS BY THEME'. The 'STATISTICS BY THEME' section is presented in a grid format, with each theme represented by an icon and a list of related statistical topics. The themes and their sub-topics are as follows:

- General and regional statistics** (Sub-national statistics):
  - Regions
  - Cities (Urban Audit)
  - Metropolitan regions
  - Degree of urbanisation
  - Rural development
  - Maritime policy indicators
  - Cohesion policy indicators
  - Land cover/use statistics (LUCAS)
- Economy and finance**:
  - National accounts (including GDP)
  - ESA Input-Output tables
  - European sector accounts
  - Government finance
  - Exchange rates
  - Interest rates
  - Harmonised Indices of Consumer Prices (HICP)
  -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
  - Balance of payments
-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 Population (Demography, Migration and Projections)
  -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Asylum and managed migration
  - Health
  - Education and training
  - Labour market (including Labour Force Survey (LFS))
  - 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 Social protection
  - Household Budget Surveys
  - Youth
  - Culture
  - Sport
  - Crime and criminal justice
  - Quality of life indicators
  - Migrant integration
  - Equality (age and gender)
- Industry, trade and services**:
  -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Short-term business statistics
  - Tourism
  - Manufactured goods (Prodcom)
  - Information society
  - Postal services
- Agriculture and fisheries**:
  -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ies
  -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International trade**:
  - International trade
- Transport**:
  - Transport
- Environment and energy**:
  - Environment
  - Energy
- Science and technology**: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footer of the page contains additional navigation links such as 'News releases', 'Database', 'Publications', 'About us', and 'Opportunities', along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rostat logos.

자료: Eurostat 홈페이지(<http://ec.europa.eu/eurostat/data/browse-statistics-by-theme>).

〈표 2-2〉 Eurostat &lt;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gt; 통계 분류체계

영역	주요 부분
Population (Demography, Migration and Projections)	Population data, Births and fertility data, Deaths and life expectancy data, Migration and citizenship data, Marriages and divorces data, Population projections dat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1 Census Hub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ensus – time series of selected indicators, Census 2011, Census 2001 – national level, Census 2001 – regional level, Census 1990/91 round – national level)
Asylum and managed migration	Asylum and new asylum applicants, Persons subject of asylum applications pending at the end of the month, Asylum and new asylum applicants, First instance decisions on applications by type of decision, Final decisions on applications, Asylum applicants considered to be unaccompanied minors, Resettled persons, First permits by reason, All valid permits by reason on 31 December of each year
Health	Health status and determinants, Health care, Disability, Causes of death, Health and safety at work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and outcomes of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mobility, Education personnel, Education fi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Languages, Education-administrative data until 2012, Past series
Labour market	Employment and unemployment (Labor Force Survey, LFS), Job vacancies, Earnings, Labour costs, Labour market policy, Labour disputes
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Europe 2020 strategy), Income distribution and monetary poverty, Living conditions, Material deprivati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per head of population. ECU/EUR,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per inhabitant, 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by type, Total expenditure on social benefits, Total expenditure on administration costs, Other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Social benefits by function, Social benefits per head of population by function, Expenditure on pensions, Expenditure on care for elderly, Social protection receipts by type
Household Budget Surveys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Consumption expenditure of private households,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Time use survey – collection round 2000
Youth	Youth population,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Youth employment, Youth health, Youth social inclusion, Youth – culture and creativity, Youth participation, Youth volunteering, Youth in the digital world
Culture	Cultural employment, Trade in cultural goods
Sport	Employment in sport, Trade in sport goods



〈표 2-2〉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통계 분류체계(계속)

영역	주요 부분
Quality of life indicators	Quality of life, Household perspective in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of crime, Public concern about crime
Equality (age and gender)	Education, Labour market, Earnings and social inclusion, Health, Information society (이상 연령평등) Education, Labour market, Earnings and social inclusion, Childcare, Health, Information society (이상 양성평등)

자료: Eurostat 홈페이지(<http://ec.europa.eu/eurostat/data/browse-statistics-by-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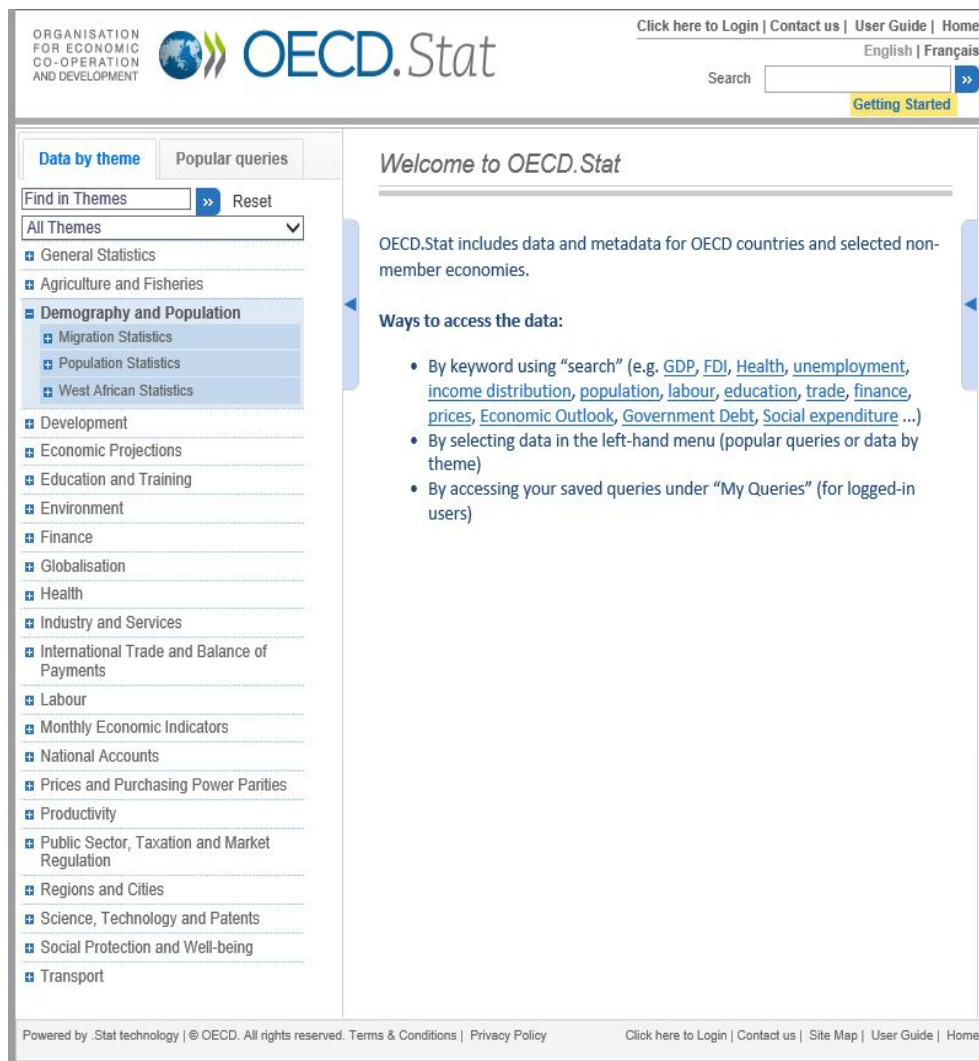
#### 나. OECD 통계 체계 및 정책적 활용

OECD는 34개 회원국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별도의 통계 database(OECD Stat)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ECD database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통계는 인구학과 인구(Demography and Population) 영역을 두었다. 하위분류로 이민통계(Migration Statistics), 인구통계(Population Statistics), 서아프리카 통계(West African Statistics)를 제시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통계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영역은 전통적으로 순수 인구통계에 해당한다. 이는 OECD database가 인구영역에서는 순수 인구통계만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OECD database가 인구 영역에서 순수 인구통계만 제공하지만, 기타 영역은 2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세부 통계를 영역별로 제공하고 있다. 영역 구분은 일반 통계, 농업과 어업, 인구학과 인구, 개발, 경제 전망, 교육과 훈련, 환경, 재정, 세계화, 건강, 산업과 서비스, 국제통상과 국제수지노동, 월간 경제지표, 국민계정, 물가와 구매력 평가지수, 생산성, 공공부분 및 조세와 시장규제, 지역과 도시, 과학 및 기술과 특허, 사회적 보호와 웰빙, 운송으로 나뉘어져 있다. OECD database는 22개 영역을 알파벳순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정책적 지향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구의 특성상 경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통계의 특징은 분류방식보다는 통계의 활용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OECD database의 통계를 활용한 정책보고서를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고서로 <How's Life?>, <Health at a Glance>, <Government at a glance>, <OECD Factbook>, <Society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그리고 <Pension at a Glance>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4] OECD.Stat 통계 체계



자료: OECD. stat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이 중에서 <OECD Factbook>은 분야별 주요 통계를 모아서 개괄적 설명을 포함한 연보 형식을 띠고 있다. 분야는 인구와 이민, 생산과 생산성, 가구소득과 자산, 세계화, 물가, 에너지와 운송, 노동, 과학과 기술, 환경, 교육, 정부, 건강으로 총 12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 책은 국가별로 발간하는 연보의 전형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

<Society at a glance>의 경우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백서와 유사한 형식이다. 여기서는 총 5개 영역에 연관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지표(General context indicators), 자급자족지표(Self-sufficiency indicators), 평등지표(Equity indicators), 건강지표(Health indicators),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이다.

우선 일반 지표는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가족, 노인부양비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영역으로 자급자족 지표는 고용과 실업, 취업, 교육, 훈련받지 않는 젊은이(NEETs), 예상 은퇴연령, 교육기간 지표를 설명한다. 셋째 영역은 평등 지표로써, 소득불평등, 빈곤, 공적급여생활자, 사회 지출, 실업급여 수급자 지표를 설명한다. 넷째 영역은 건강 지표로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자살, 건강지출, 건강 서비스 포괄범위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은 사회적 통합지표로써, 삶의 만족도, 관용(배려), 제도의 신뢰성, 안전과 범죄 지표를 설명하고 있다.

<Society at a glance>는 인구통계를 일부 포함하면서, 사회 주요 영역을 구분하여 지표를 통해 사회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구변동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통계 측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와 지표의 분류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OECD는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비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상호 비교를 통해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다. 일본의 통계관리 및 정책적 활용

일본의 국가 통계 조직은 행정 분야에 관한 통계를 성(省)별로 작성하고, 국가의 기본적 통계조사를 총무성의 통계국에서 작성한다. 이런 형태를 중앙정부 중심의 집중형

통계조직과 구분하여 분산형 통계기구라 한다. 이런 분산형 통계조직은 정부 기관 간 횡적 조정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정부조직 내에서 통계업무를 상호 조정하는 일을 재무성의 정책총괄관이 중심이 되어 관장한다(송태민, 이중순, 2010).

총무성 통계국에서는 국민 생활 전반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역별 통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인구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 비교를 주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사회·인구 통계체계」는 국가의 종합 시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지역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인구 통계체계」는 1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인구·가구, 자연환경, 경제기반, 행정기반, 교육, 노동, 문화·스포츠, 거주, 건강·의료, 복지·사회복장, 안전, 가계, 생활 시간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도도부 현 데이터는 기초데이터 4200개와 지표 데이터 67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도시 데이터는 기초 759개와 지표 4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관련 통계는 매년 업데이트 되어 인터넷(e-Stat)으로 주요 지표, 통계 GIS 기능과 API 기능 등으로 서비스되며, 주요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사회생활 통계 지표」도 발행하고 있다(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검색일: 2015.12.09.). e-Stat은 ‘정부통계의 종합 창구’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며 2008년 4월부터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e-Stat은 현재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National Statics Center: NSTAC)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통계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법인으로서 통계국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집계와 그 외 국세의 기본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국은 각종 간행물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계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통계데이터’ 기능을 두고 있다. 그리고 통계법이나 표준 통계 분류 등의 ‘통계 제도’, 아동과 학생 전용의 ‘통계학습사이트’ 등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웹메일 뉴스에서는 주요한 조사 결과의 요약, 신착 정보, 소식 등을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송태민, 이중순, 2010).

[그림 2-5] 일본의 e-Stat 인터넷 홈페이지



출처: e-Stat 홈페이지(<http://www.e-stat.go.jp>)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산하단체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NIPSSR)와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 고용지원기구(JEED)가 각각 관련된 통계DB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는 매년 ‘인구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저출산 관련 통계자료를 모아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발행 ‘인구통계자료집’은 인구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총수와 전체 규모의 변동부분과 연령별 인구 구성도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인구동태 전반에 대한 변동과 인구동태의 세부 구성부분도 내용상 분류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즉 ‘인구동태율’과 출생, 사망, 이동을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별 특성’과 ‘세대별 특성’도 별도 항목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인구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인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 발행 인구통계자료집 분류와 통계목록

중분류	주요 통계지표
인구 및 인구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총인구, 인구증가, 성비 및 인구밀도</li> <li>- 세계 주요 지역별 인구 비율과 인구 증가율</li> </ul>
연령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인구 및 증가율의 장래 추계</li> <li>-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li> <li>- 인구의 연령 구조에 관한 지표</li> </ul>
인구 동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수 및 비율</li> <li>- 미래의 출생, 사망 및 자연 증가 수 및 비율</li> <li>- 주요국의 출산율, 사망률과 자연 증가율</li> </ul>
출생 및 가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출생수 및 출생성비</li> <li>- 여성의 출산력 및 재생산력에 관한 주요 지표</li> <li>- 주요국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 및 합계특수출생률</li> </ul>
사망·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사망수 및 사망성비, 성별 주산기 사망수 및 비율</li> <li>- 특정 연령의 평균여명, 주요 사인별 사망수</li> <li>- 주요 선진국의 평균수명</li> </ul>
결혼·이혼·배우자 관계별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혼·재혼별 혼인수 및 혼인율</li> <li>- 성별 생애 미혼율 및 초혼연령</li> <li>- 성, 국적별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수</li> <li>- 주요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li> </ul>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유형별 일반 세대수와 장래추계</li> <li>- 세대의 가족유형별 자녀수</li> <li>- 외국인 세대의 가족유형</li> </ul>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인구 및 비율</li> <li>- 산업별 취업인구 및 비율</li> <li>- 성/연령별 고용 비율</li> </ul>
지역이동·지역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내·현간·시군간 이동수 성비 및 비율</li> <li>- 인구증가율 및 감소율이 큰 시읍면</li> <li>- 세계 주요도시의 인구추이와 장래추계</li> </ul>
국적별 인구 및 국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별 등록 외국인 인구</li> <li>- 성별 국적 이동에 의한 일본인 인구의 순증가</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교육정도별 인구</li> <li>- 성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율</li> </ul>
광역지자체별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자체별 성별, 인구, 인구성비, 인구밀도, 인구증가율</li> <li>- 광역지자체별 생산연령인구</li> <li>- 광역지자체별 노년인구, 인구 장래추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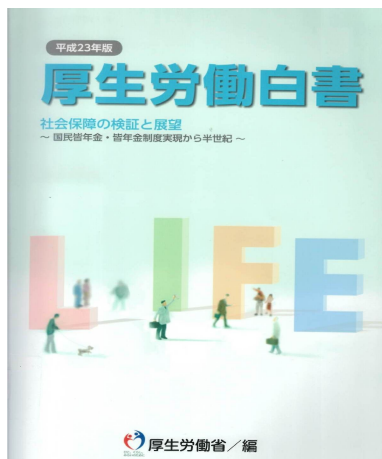
출처: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opular2015.asp?chap=0>

일본은 이와 같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는 백서와 통계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유사하게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앤젤플랜, 신앤젤플랜, 신신앤젤플랜을 추진하면서, 각 부처별로 핵심적 정책업무와 관련된 백서형태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의 구성은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거시적 맥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특히 후생노동백서는 이 부분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언급을 비교적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배경 설명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시 통계를 도표로 제시하고, 이 통계가 어떠한 맥락에서 정책의 수요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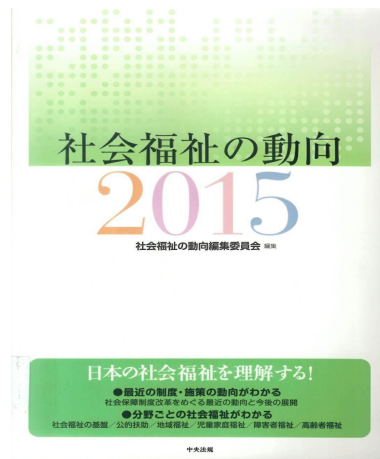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책의 내용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책통계, 정책에 대한 그림 및 도표를 통한 개념적 설명, 정책의 변화 동향 등을 핵심 정책 영역별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현재의 정책 현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계획까지 포함되어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그림 2-6] 일본 백서 형태 보고서 발간의 사례

#### <후생노동 백서>



#### <사회복지의 동향>



소자화백서의 경우도 이와 같은 형식의 발간물로써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제정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 제 9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저출산 상황 및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강구한 시책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자화사회대책백서」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서의 1부 1장에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현황을 설명하고, 1부 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2부에서는 당해연도에 실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소개 및 관련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헤세이 27년판(2015년) 소자화사회대책백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2-4〉 헤세이 27년판(2015년) 소자화사회대책백서

제 1부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과제

제 1장 저출산의 현황

1. 출생아 출산율 추이
2. 총 인구의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
3. 결혼·출산 등의 상황
4. 결혼, 출산, 육아를 둘러싼 상황
5. 외국과의 국제 비교

제 2장 저출산 대책의 추진

- 제 1절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 제 2절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의 시행개시(특집)
- 제 3절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노력에 대해(특집)

제 2부 저출산 사회 대책의 구체적 실시상황

제 1장 중점 과제

- 제 1절 육아지원 시책을 더욱 풍성하게
- 제 2절 젊은 나이에 결혼·출산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제 3절 다자녀가구에 대한 배려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환경을 제공
- 제 4절 남녀의 일하는 방식 개혁추진
- 제 5절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처강화

제 2장 치밀한 저출산 대책의 추진

- 제 1절 결혼, 임신·출산, 육아의 각 단계에 따라 한사람 한사람을 지원
- 제 2절 전사회적인 저출산대책 추진




자료: 일본내각부(2015), 헤세이 27년판(2015년)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고령사회백서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5년 시행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 8조는 정부의 국회에 고령화의 상황 및 정부가 강구한 고령사회대책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명문화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부는 연례보고서인 「고령사회백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고령사회백서」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기초적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2장에서는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헤세이 27년판(2015년) 고령사회백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2-5〉 헤세이 27년판(2015년) 고령사회백서

제 1장 고령화의 상황	
제 1절 고령화의 상황	
제 2절 노인의 모습과 주변 환경의 현상과 동향	
제 3절 고령기를 위한 「준비」에 관한 의식	
제 2장 고령사회 대책 실시 상황	
제 1절 고령 사회 대책의 기본틀	
제 2절 분야별 시책의 실시 상황	

자료: 일본내각부(2015), 헤세이 27년판(2015년) 고령사회백서.

이런 백서형식의 간행물은 정책 설명 보고서의 성격을 넘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책내용을 설명하기 목적도 나타내고 있다. 글의 구성이 간결하고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하여 정책 및 제도를 일반 대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삽화와 사진 그리고 도표를 이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통계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다양한 정책 참고자료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책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인구정책통계의 범위와 개념틀

### 1. 국가통계와 인구정책통계

#### 가. 국가통계

국가통계는 각 국가의 통계제도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1994, p.1)이 제시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의 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참고할 수 있는데, 공식통계란 “정부에 의해 생성되고, 정부기관과 공동체의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를 말한다. 국가통계는 무엇보다도 정부 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통계를 말하며, 이런 맥락에서 ‘공식통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각 국가는 이와 같은 공식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정부기관을 두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통계법 제3조 1항은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식통계 혹은 국가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재형, 2004, p.13). 호주 통계청(2004)의 경우는 “고품질 통계 제공을 통해 정부와 공동체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 및 토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통계청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2003)은 “인구,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집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시책의 기획·입안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통계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최정수, 2005, p.50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국가통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이런 구성요소의 확인은 국가통계 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는 일반적으로 크게 사회통계, 경제통계, 환경통계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통계는 사람, 경제통계는 기업체, 환경통계는 물리적 실체를 주된 측정단위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3대 구성요소로 국가통계를 이해하는 경향은 최근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이재열 외,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단계에서는 3개 구성요소

에 대한 체계정립이 진행되어있지만 아직 공식통계 체계에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는데, 통계법 제 18조(또는 20조)에 의거한 승인통계는 2015년 8월 기준 총 939종으로 지정통계 92종, 일반통계 847종이 있다. 작성기관별 통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에 의해 771종, 지정기관에 의해 168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 국가 승인통계는 통계의 주제에 따라 16개의 부분-인구, 고용·임금, 물가·가계소비(소득),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수산,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교육·문화·과학, 기타( 시도 기본통계 포함)-으로 나누어져 KOSIS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검색일: 2015.08.3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통계란 정부기관과 공동체의 토론과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로써, 국가통계는 기업체를 주 측정단위로 하는 경제통계,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회통계, 물리적 실체를 측정하는 환경통계로 분류할 수 할 수 있다. 다만 공식통계 체계에 경제통계, 사회통계, 환경통계라는 3대 구분체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아직은 정부부처가 주관이 되어 공식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종합적으로 전체 통계를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2-6> 국가통계 작성 현황

통계부분		작성통계 수(15년 8월 기준)
사회분야	인구	28
	보건·사회·복지	203
	교육·문화·과학	53
	환경	26
경제분야	고용·임금	37
	물가·가계소비	16
	농림·수산	49
	광공업·에너지	31
	건설·주택·토지	41
	교통·정보통신	45
	도소매·서비스	16
	경기·기업경영	90
	국민계정·지역계정	21
	재정·금융	17
	무역·외환·국제수지	11
기타	행정	255
계		939

자료: 통계청(2013b), 제 1차 국가통계발전(‘13-’17) 기본계획, p. 2; 통계청 홈페이지(검색일: 2015.08.31.).

## 나. 인구정책통계의 범위

인구정책이란 공적 기관에 의해 한편으로 인구학적 변화의 불균형을 예방하거나 연 기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직·간접적 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인구정책통계는 이와 같은 인구정 책의 범위에 들어있는 정책과 연관되는 통계를 지칭한다.

인구정책통계는 우선 인구현상에서 출발한다. 인구의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에 서 나타는 인구현상을 정확히 측정한 통계가 인구정책 통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 서 인구의 크기와 구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태적 통계와 출생, 사망, 이동에 따른 인 구의 동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가 인구정책 통계의 가장 기초가 된다. 또한 인구현 상은 사회현상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과 연관된 사회현상 을 측정한 통계 또한 인구정책통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사회현상 중에서도 인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요 영역들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서 인구현상의 원인과 함께 인구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또한 중요하 게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통계는 무엇보다도 정책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인구정책이 인구현상과 관련되는 공적 기관의 직·간접적 개입행동이라고 할 때 통계의 정책적 측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구정 책 통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거의 국가통계 전체와 중복될 것이다. 그만큼 인구 통 계가 국가 사회 전 분야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인구정책통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차원에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 으면서 핵심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가진 정부 종합대책으 로써, 매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고찰하는 인구정책 통계의 범 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관련 통계를 기본으로 하며, 기본계획 관련 통 계는 매년 중앙부처가 연차별로 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통계를 포함한다. 그 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핵심지표도 주요 검토 범위에 포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 내 용을 중심으로 고찰할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인구기초 분석: 인구규모(총인구 및 추계인구), 인구구조(연령별, 성별 인구구성 등), 인구변동(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 이동) 등
- ② 출산지원 및 아동 안전: 가족 구조 변화, 모자보건, 보육 및 교육, 취약 아동, 아동 범죄 및 안전사고, 아동 학대, 입양 등
- ③ 일-가정 양립: 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 실태, 가족친화 환경,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 ④ 고령사회: 노인의 주거, 고령자 고용, 국민연금 및 사적 연금, 노인 건강, 노인빈곤, 노인 사회참여 등
- ⑤ 성장동력: 여성경제활동, 외국인 인력, 직업능력 개발, 산업재해, 주택 및 금융, 고령친화산업 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할 때, 인구정책은 총 231개의 정책과제로 구분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의 3개 부문에서 9개 중영역, 31개 소영역, 86개 세부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2-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체계

구 분	중영역	소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저출산	3	11	38	95
고령사회	3	10	28	78
성장동력	3	10	20	58
계	9	31	86	231

## 2. 인구정책 통계의 핵심 개념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구정책통계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정책통계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구성하고 개념틀에 따라서 인구정책 통계의 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념틀은 인구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하나의 이론적 틀에 해당하며, 인구정책 통계가 핵심으로 삼아야 할 가치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를 반영하는 이론적 체계라 할 수 있다.

사회통계 개념들에 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사회통계는 사회관계 및 사회현상에서의 합법칙성을 양적으로 포착하여 통계화 하는 작업이다(이재열 외, 2014).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국면의 조건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규범 지향적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를 의미한다(이재열 외, 2014, p.52). 그리고 사회지표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위계의 형태로서 나타내 사회적 문제의 조기 감지, 사회적 변화의 전달,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현 위치와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재열 외, 2014, p.52). 인구정책 통계 역시 이런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구현상과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인간복지’에 대한 관심이고, 미래지향적 및 정책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정책 통계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행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구정책 통계의 핵심개념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1990년에 대두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함축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황상규, 2006)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 개발회의의 의제21(Agenda 21)에서 채택된 이후부터이다. 2002년에는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기존의 개발 및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한 것으로, 국토와 환경자원의 투입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추구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함의한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보편적인 기초교육의 달성, 젠더평등과 여성권리향상 촉진, 아동사망률감소, 모성건강 증진, HIV/AIDS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질병의 방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쉽 발전이었다. 여기서 제시하는 목표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핵심적 지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UN이 제시한 빈곤과 기아의 근절, 보편적인 기초교육의 달성은 저개발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 및 교육 정책을 통한 성장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인구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젠더평등과 여성권리 향상 촉진, 모성건강 증진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젠더평등의 문제와 여성의 사회진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 지원정책으로써 일·가정양립정책들은 이와 같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모성건강 역시 출산지원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임신단계의 의료비지원은 단지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모성을 돌볼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로써 인구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현상이 기본적으로 ‘인간복지’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인구통계의 최상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 3. 개념틀

인구현상을 이해하고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틀이 곧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틀이 될 것이다. 이 개념틀은 전체 체계의 구성요소로 구분가능하며, 핵심가치, 인구현상,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의 관계,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핵심가치는 인구정책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복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적 지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인구현상은 크게 인구구조와 인구변동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인구현상이 사회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이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와 사회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하여, 인구변동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의 종합적 연관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구현상과 인구정책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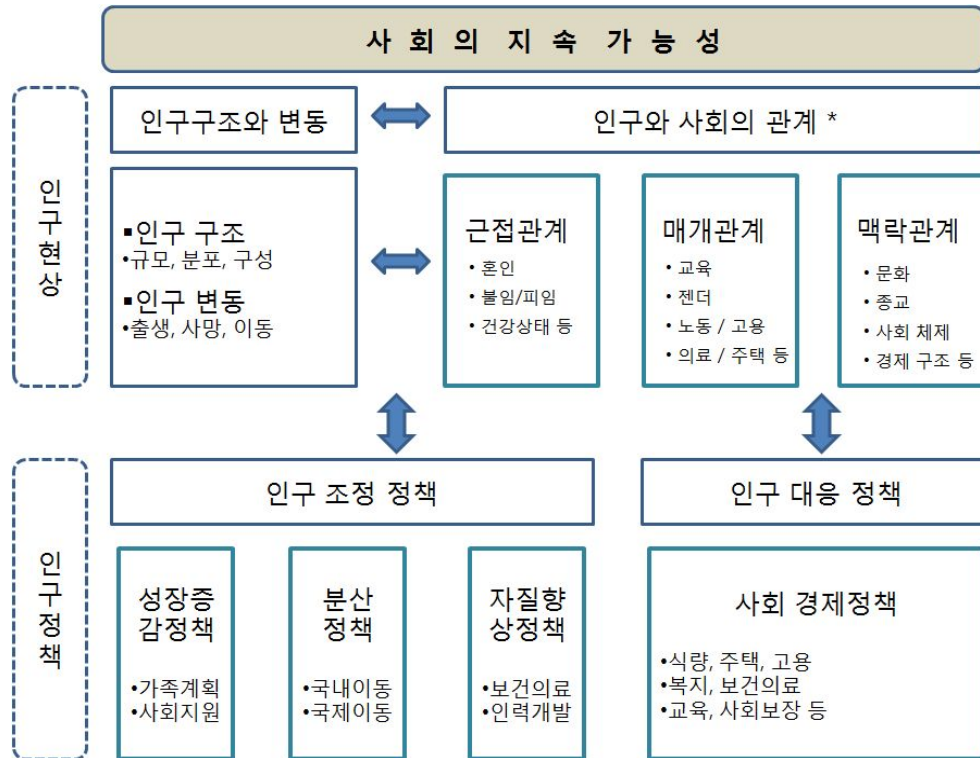
인구변동과 사회의 관계는 크게 근접관계, 매개관계, 맥락적 관계의 3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May, 2012). 물론 이런 구분은 이념형적 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인구변동과 근접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은 혼인이나 불임 및 피임, 그리고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즉 혼인이나 임신과 건강상태는 출생과 사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변동을 직접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접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변동과 매개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은 교육, 젠더, 노동과 고용, 의료 및 주택 등을 들 수 있다. 매개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사회적 요인을 거쳐 인구변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변동과 맥락적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은 문화, 종교, 사회체제, 경제 구조 등이 해당한다. 맥락적 관계는 특성상 영향관계가 심층적이며 장기간에 걸쳐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조정정책과 대응정책으로 구분 가능하다. 조정정책이 직접적 특성을 가진다면 대응정책은 간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조정정책은 인구성장 증감정책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인구의 이동과 관련하여 각종분산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교육 및 인력개발 정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인구 대응정책은 간접적 효과를 전제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 경제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식량, 주택, 고용 정책을 들 수 있고,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도 대표적인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들을 통해서 인구현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7]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틀



\* 주1) J.F. May(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 제4절 인구정책통계 분류체계

인구정책통계의 분류체계는 개념들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개념들은 인구정책통계가 크게 인구분야, 사회분야, 정책분야가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인구정책 분류체계 구성에 앞서 기존에 제공되던 주요 통계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인구정책통계 분류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 1. 주요 국가통계의 분류체계

#### 가. E-나라지표

국가 승인통계 이외에도 각종 현황과 행정자료들을 가공한 자료들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통계정보는 E-나라지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E-나라지표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5개의 대분류(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부), 43개의 중분류, 17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741개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2015.08.31).

<표 2-8> E-나라지표 주제별 통계 분류 현황

대분류 (5개)	중분류 (43개)	소분류 (172개)	지표수 (741개)
총량 지표	국토/인구	국토현황/이용,수도권현황,인구구조,인구변동,지역현황	11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지방재정	15
	공동체	사회참여	1
	행정일반	고충민원,공직채용/지원,전자정부,정보공개,정부조직,청렴/부패	22
경제	건설	건설경제/기술,도로,도시,수자원	25
	금융	금융건전성,금융일반,대출시장,보험시장,자본시장	33
	기상	기후,예보/관측,지구대기	9
	농업	농산물생산소비,농산물위생/안전성,농업생산기반,농업일반,농촌생활/지원	20
	부동산	건축,주택,토지	20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무역투자일반,산업일반동향,에너지/자원	30
	어업	수산물생산/소비,어업인지원	4

대분류 (5개)	중분류 (43개)	소분류 (172개)	지표수 (741개)
	임업	산림관리·이용, 산림일반, 산림재해, 산림조성	12
	재정	관세, 국세, 기금/공적연금, 민간투자, 분야별재정규모, 재정일반	49
	정보통신	IT산업, 우정사업, 정보보호, 정보화수준	18
	공정거래	경쟁정책, 대기업시책, 소비자보호시책, 중소기업보호시책	7
	조달	시설사업, 원자재비축, 조달사업	8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술지원, 소상공인/재래시장, 중소기업일반, 창업벤처지원, 혁신형 중소기업현황	12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일반	14
	특허	심사, 심판, 출원/등록	6
	해양	항만시설, 해양환경안전, 해운물류, 해운일반	14
	거시경제	경기동향, 고용동향, 대외거래, 대외신인도, 물가동향, 실물경제, 외환	23
	교통	교통/물류, 육상교통, 철도, 항공	15
	노동	고용, 노동보험, 노사관계, 사업체, 산업재해, 임금	33
	경찰	경찰일반/수사, 교통, 생활안전/경비, 외사	14
	보건	건강증진, 보건산업, 보건일반, 식품, 질병	22
	보훈	보훈복지, 보훈일반	17
	복지	노인복지, 복지일반,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화	30
사회	여성/가족	가족, 보육, 양성평등, 여성권익, 여성일반	22
	재난안전	소방, 재난	11
	청소년	청소년보호, 청소년일반, 청소년활동	8
	해양경찰	해상범죄, 해상안전, 해양환경	6
	환경	대기보전, 상하수도, 수질보전, 자연보전, 토지오염, 폐기물, 환경일반	25
	일·가정양립	보육, 가족친화, 휴가·휴직, 노동시간, 여성인력	16
	교육	고등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교육경쟁력,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40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문화산업, 문화예술인프라, 문화예술일반	16
문화	문화재	문화재보존, 문화재일반	8
	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7
	관광	관광산업, 관광일반	7
	국방	국방일반, 국제협력, 군인복지, 방산/군수	17
정부	법무	범죄, 법조인력, 보호/관찰/교정, 송무/공판, 출입국	46
	병무	병무일반, 입영	5
	외교	국제교류, 국제협력, 외교일반, 재외국민/영사, 통상협력	16
	통일(남북)	남북교류, 통일일반	7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2015.08.31.).

## 나. 통계청 제공 지표

통계청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지표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KOSIS 100대 지표, 국민의 웰빙과 국가의 발전상황을 보여주는 E-나라지표, 국민의 생활현황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있다. KOSIS는 인구·가구, 고용·노동, 경기·물가, 산업·에너지, 금융·재정·무역, 보건·복지, 사회·안전, 교육·과학·문화, 국토·환경의 9개의 부분의 주요 지표 100개를 선정해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2-9> KOSIS 100대 지표

분류 (9개)	지표명	지표수 (100개)
인구·가구	추계인구, 합계출산율, 중위연령, 총부양비, 인구밀도, 외국인등록인구, 국내인구이동자수, 혼인건수, 가구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명목)	11
고용·노동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층(15-29세)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보험가입률, 노동생산성지수, 전국노동조합수,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1
경기·물가	실질GDP증감률(전기비), 국내총생산(명목), 1인당국민총소득(명목),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 총저축률, 소비자심리지수, 선행종합지수(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11
산업·에너지	전산업생산(전년동월비), 제조업평균가동률, 설비투자(전년동월비), 국내건설수주(전년동월비),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비), 소매판매(전년동월비), 1인당연간쌀소비량, 경지면적, 에너지수입의존도, 총발전량, 최대전력량	11
금융·재정·무역	M1(협의통화, 평잔), 가계신용금액, 국고채수익률(3년), 종합주가지수(KOSPI), 어음부도율, 원/달러 환율(기준), 외환보유액, 조세부담률, 지방재정자립도, 경상수지, 국가채무규모액	11
보건·복지	기대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자살률, 현재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의료급여수급자, 인구천명당 의료활동 의사수(한의사포함), 지니계수(전국가구, 가처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3인가구)	11
사회·안전	주택보급률, 자동차등록현황, 도로별평균교통량(고속국도), 인터넷이용률, 등록장애인수, 현금기부인구(13세이상), 범죄발생건수, 화재발생건수, 교통사고사망자수, 산업재해사망자수, 아동(15세미만)안전사고사망자수	11
교육·과학·문화	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초등학교수, 중학교수, 고등학교수, 1인당(13세이상)평균독서권수, GDP대비총R&D지출, 연구개발종사자수, 출판건수(특허), 지정문화재건수, 공연시설수	11
국토·환경	국토면적, 지가변동률, 평균기온, 환경보호지출액, 온실가스총배출량, 대기오염도(오존), 수질오염도(BOD, 한강 팔당), 폐수발생량, 물이용량, 상수도보급률, 지진발생빈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남한)	12

자료: KOSIS 홈페이지 (검색일: 2015.08.31.).

## 다.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는 국가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15.08.31). 국가주요지표는 E-나라지표가 가지고 있던 지표의 단편성, 지표선정 기준의 부재, 공급자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였고(석현호 외, 2013),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경제·사회·환경 3개 부문-15개 영역-60개 하위영역-139개 지표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표 2-10> 국가주요지표

대분류 (3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60개)	지표수 (139개)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투자, 재정, 대외거래	8
	산업과 금융	산업구조, 생산성, 기술혁신, 금융	10
	고용과 노동	고용,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10
	소득과 소비	소득, 자산, 소득불평등, 소비, 물가, 저축	7
사회	인구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	8
	가족과 가족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8
	건강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11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10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	8
	주거	주택공급, 주택시장, 주거상황	8
	교통	교통공급, 교통이용, 교통에너지, 교통비용	7
	안전	범죄, 치안, 재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	9
환경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참여, 신뢰와 투명성, 사회적 관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	14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9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토지산림, 해양수산, 수자원, 에너지	12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15.08.31.).

## 라. 국민의 삶의 질 지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생활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국민 삶의 지표 홈페이지, 검색 2015.09.01.). 삶의 질의 측정틀은 한국 사회학회(2011)가 제시한 측정틀과 영역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사회적 관계-환경적 조건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세 차원에 포함된 각 영역들은 물질적 생활조건과 비물질적 생활조건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통계개발원, 2014, p.19-20).

&lt;표 2-11&gt; 국민의 삶의 질 지표

차원	대분류	중분류	객관적 지표(57)	주관적 지표(24)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소비·자산	—	6	2
	고용·임금	—	5	1
	사회복지	—	3	0
	주거	—	4	1
비물질적 생활조건	건강	건강상태	4	2
		건강행위 및 환경	3	0
	교육	교육기회	4	0
		교육자원	1	0
		교육성과	2	2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1	2
		문화활동	3	0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1	1
		가족형태	2	
		사회적 관계	2	
		공동체 참여	1	1
	시민 참여	정치참여	1	2
		시민적 의무	1	1
		시민적 권리	0	1
		신뢰	0	2
	안전	범죄	2	2
		사고	5	0
환경	에너지	1	0	
	대기	1	0	
	물	1	0	
	폐기물	1	0	
	기후변화	1	1	
	환경의 질	1	1	
주관적 웰빙			0	2

출처: 국민 삶의 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15.08.31); 통계개발원(2014) 국민의 삶의 질 측정 2013 p. 21-22에서 재구성

## 마. 지속발전지표(SDI)

지속발전지표는 국가 지속발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성과 평가에 의한 향후 계획 이행방향 제시를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지표는 각 분야 전문가 및 부분별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14개 영역-34개 항목에서 77개 지표가 선정되었고, 관련지표의 평가 및 변경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관계부처 협동, 2011. p.203).

<표 2-12> 지속발전지표

분야	영역(14개)	항목(34개)	지표(77개)
사회	1.형평성	1-1.빈곤	01) 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기준) (%)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 실업률(%)
		1-2.노동	04) 평균 근로시간 05)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1-3.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건강	2-1.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기준대비 %)
		2-2.사망률	09) 영아 사망률(%)
		2-3.수명	10) 평균수명
		2-4.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5.건강관리	12) 건강보험보장률(%)
	3.교육	3-1.교육수준	13) 국가보건복지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16)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7) 교육비 (공교육비,사교육비) 지출
	4.주택	4-1.생활환경	18) 1인당 바닥 면적 19)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 무주택자 비율(%)
	5.재해·안전	5-1.범죄	21)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22) 자연재해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23) 인구 증가율(%)
환경	1.대기	1-1.기후변화	24) 인구 밀도(명/km <sup>2</sup> ) 25) 고령인구비율(%)
			26) 온실가스 배출 (Gg)
			27)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8)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1-2.오존층	1-3.대기질	29)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ppm)
	2.토지	2-1.농업	31) 농지면적 비율(%)
			32)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33) 식량자급률(%)

분야	영역(14개)	항목(34개)	지표(77개)
3.해양/연안	2-2.산림		34) 비료(질소,인) 사용 (kg/ha)
			35) 농약 사용 (kg/ha)
	2-3.도시화		36)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37) 도시내 1인당 공원면적
			38) 목재 벌채 정도 (임목축적량대비)
			39) 도시화율 (%)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41) 연안 해조류 (클로로필A등) 농도
	3-1. 연안지역		42) 폐기물 해양 투기량
			43) 갯벌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
3-2. 어업		44) 수산자원량 (만톤)	
		45) 어업양식량 (만톤)	
4.담수	4-1.수량		46)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율
	4-2.수질		47) 1일 1인당 물소비량
			48) (4대강 평균) BOD, COD, SS, pH 농도
			49) 하수도 보급율(%)
5.생물다양성	5-1.생태계		50) 자연보호지역비율(%)
			51) 국가생물종 수
1.경제구조	1-1.경제이행		52) 멸종위기종 수
			53) 1인당 GDP
			54) GDP
			55) 경제 (실질GDP) 성장률(%)
			56) GDP 대비 투자분(%)
			57) 소비자물가지수
	1-2.무역		58)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59)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율(%)
	1-3.재정상태		60) 부채/GDP(%)
			61) GNI대비 총 ODA
경제	2-1.물질소비		62) 원료이용도 (GDP 1000\$당)
			63)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2-2.에너지사용		64) 총에너지 공급량 (에너지원별)
			65) 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66) 에너지 원단위(MJ/US\$)
			6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2-3.폐기물 관리		68) 유해 폐기물 발생량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71)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대중교통)
2-4.교통		72)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총 연장	
		73) 자동차 사고건수(100만명당,100만대당)	
3.정보화 등	3-1.정보접근		74)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75) PC보유 가구비율
	3-2.정보인프라		76)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수
			77)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1) 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p. 203-204.



## 바.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우리나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이행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녹색성장의 변화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지표체계이다(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 검색일 2015.09.01.). 지표의 기본 개념들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와 10대 정책방향에서 차용하였으며, 정책연관성 및 분석안정성, 측정가능성을 지표 선정기준으로 하여 3대 분야에 28개 관련지표세트를 구성하였다(통계개발원, 2014).

<표 2-13> 녹색성장 지표

3대분야	10대 정책방향	2013년 세부지표 (28개)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산업 온실가스 흡수량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원유가스 자부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예산 대비 재해예방투자 비중
		정부R&D지출 중 녹색R&D 비중
2. 신성장동력창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대비 국내 R&D 지출 비중
		천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량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비중
	녹색경제기반 조성	서비스업 부가가치 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총부가가치 중 정보통신산업 비중
	녹색 국토·교통 조성	천명당 ISO14001 인증기업수
		GDP대비 환경세 비중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
		지하철·철도 여객수송분담률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량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GNI대비 ODA 비중
		ODA 중 녹색성장ODA 비중

자료: 통계청(2013a), 2013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 사. 시사점

공식통계의 정의를 UN(1994)이 제시한 “정부에 의해 생성되고 정부기관과 공동체의 토론과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는 KOSIS를 통해 서비스되는 국가승인통계와 E-나라지표를 통해 서비스되는 국정전반에 대한 통계로 나뉘 살펴볼 수 있는데, KOSIS와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분류는 연역적으로 통계분류의 개념틀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통계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승인통계 혹은 관련 행정자료들을 생산통계의 주요 관련주제 혹은 생산기관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주요 통계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계청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표로서 KOSIS 100대 지표, 주요국가지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들 수 있고, 둘째는 국가기본계획의 이행평가 및 정책 보완을 목적으로 생성된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지표(SDI)와 녹색성장지표를 들 수 있다.

먼저, 통계청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표는 KOSIS 100대 지표, 주요국가지표, 국민의 삶의 질 지표가 있다. KOSIS 100대 지표는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9개의 분류체계에 100개의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국가지표는 국민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경제·사회·환경 3개의 부분-15개 영역-60개 하위영역-139개 지표로 구성되며, 국민의 삶의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생활현황을 개인-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세 차원-12개 대분류-23개 중분류-81개 지표로 분류되어 있다. KOSIS 100대 지표가 국가의 거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국민의 삶 지표는 보다 미시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국가지표는 거시적·미시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주요국가지표와 국민의 삶 지표는 경제/개인-사회-환경의 차원으로 지표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기본계획의 이행평가 및 정책 보완을 목적으로 생성된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SDI)와 녹색성장지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UNCSO, EU, OECD 등의 국제적 지표체계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 14개 영역, 34개 항목에서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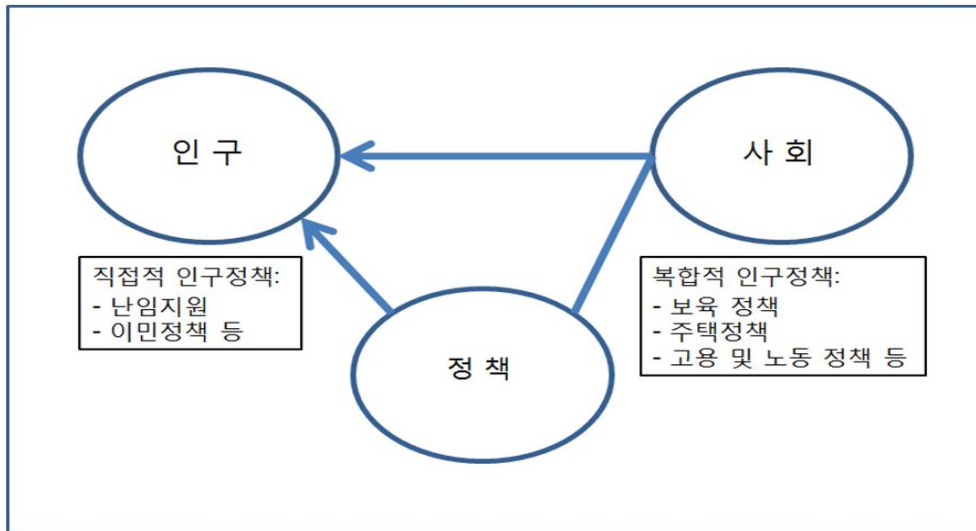
표 선정, 평가 및 변경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녹색성장지표의 기본 개념들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와 10대 정책 방향에서 차용하였으며, 정책연관성 및 분석안정성, 측정가능성을 지표 선정기준으로 선정된 28개 관련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 모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고, OECD 등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지속발전가능지표는 국제지표를 기본틀로 하여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선정하였고, 녹색성장지표는 국가기본계획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국가 주요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영역별 연계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2. 인구정책통계의 분류체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통계의 분류체계는 분야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영역 또는 요인별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기 어려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구정책 통계의 분류체계는 개념들에 기초하여 각 영향요인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계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인구정책 통계가 변동하는 인구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들에서 인구정책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인구정책은 인구 조정정책을 통하여 인구변동이 나 인구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구 대응정책을 통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인구현상이나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동기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은 크게 인구, 사회, 정책이라는 세 영역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각의 영역은 각각의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인구 영역은 크게 인구 구조와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인구 구조는 구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인구정책의 관점에서는 연령별 구성과 노동력 특성별 구성이 핵심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구성은 연령과 노동력의 관점에서 주요 통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 영역에서 주요 고찰 요인은 가족 또는 가구, 여성 또는 젠더, 고용과 노동, 교육, 불평등과 경제성장, 건강, 안전사고와 범죄 및 산업재해, 문화적 요인으로써 여가와 사회참여이다. 여기서 가족 또는 가구, 여성 또는 젠더, 고용과 노동관련 요인은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주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과 경제성장, 건강, 안전사고와 범죄 및 산업재해, 문화적 요인으로써 여가와 사회참여는 인구의 질적 측면과 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 영역의 통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저출산 대응정책과 고령화 대응정책 그리고 정책 추진기반 영역으로 구분한다. 정책 영역의 통계는 일차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또는 정책적 투입 요인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림 2-9] 인구정책의 메커니즘에 연관되는 주요 요인



인구정책 통계의 분류체계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정책 통계의 개념들에 기초하여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인구, 사회, 정책의 3대 영역으로 우선 구분한다. 대영역 별로 인구현상 및 사회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하위의 중분류를 구분한다. 그리고 중분류 하위에 세분류를 두고, 세분류 내에 각 통계 목록을 선정한다.

우선 대분류 인구 영역에는 인구구조와 인구변동 2개의 중분류를 두고, 인구변동 영역에 출생, 사망, 이동의 세 가지 세분류를 구분하였다. 각 세분류 하위에 각각의 통계 목록을 선정하였다.

&lt;표 2-14&gt; 인구분야 통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개수)	통계 목록
인구 (14)	인구구조	인구구성(3)	• 인구피라미드, 연령별 인구비율, 인구부양비
	인구변동	출생(4)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산 순위별 비율, 출산 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사망(5)	• 사망확률, 기대수명, 노인인구 기대여명, 사망원인, 노인 사망원인
		이동(2)	• 국제이동-순이동, 체류 외국인

두 번째 대분류인 사회 영역에는 8개의 중분류 영역을 구분하였다. 가족 및 가구, 여성 및 젠더, 고용과 노동, 교육, 경제, 건강, 안전, 문화로 구분하고, 중분류 중에서 세분류가 필요한 경우만 세분류를 두었다.

<표 2-15> 사회분야 통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개수)	통계 목록
사회 (61)	가족/ 가구	가족형성(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성별초혼연령, 국제결혼건수와 비율</li> <li>• 세대구성 및 1인 가구 비율,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구성, 다문화가구</li> </ul>
		가족가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필요성, 자녀필요성, 이상 자녀수</li> </ul>
	여성/ 젠더	양성평등(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 임금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li> </ul>
	고용/ 노동	고용(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종사상지위, 근속</li> </ul>
		노동(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수준, 임금불평등, 근로시간</li> </ul>
	교육	교육(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인구, 고교졸업자수와 대입정원, 교원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 월평균 사교육비</li> </ul>
	경제	빈곤과 불평등(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지니계수</li> </ul>
		경제성장(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성장률, 자본스톡증가율</li> </ul>
		건강생활습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신체활동실천율, 식품안전성가구비율, 우울증상경험률</li> </ul>
	건강	유병(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왕절개분만율, 단태아 저체중아 출생율, 비만, 치매</li> </ul>
		예방서비스(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검진율,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li> </ul>
		의료이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수,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수,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병의원)</li> </ul>
	안전	안전사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추락사고(낙상사고), 익사사고</li> </ul>
		범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범죄, 성폭력범죄, 노인학대, 아동학대</li> </ul>
		산업재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율과 사망률, 경제적 손실 추정액,</li> </ul>
	문화	여가와 사회참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 문화활동 참여시간,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율</li> </ul>

세 번째 대분류인 정책 영역에는 크게 저출산 대응정책, 고령화 대응정책, 정책추진 기반으로 3개의 중분류를 두었다. 정책 영역의 경우 대체로 제2차 기본계획의 체계를 따랐다. 다만 기본계획의 체계가 회차별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크게 저출산 대응정책 영역과 고령화 대응정책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런 구분은 기본계획의 체계가 변하더라도 대체로 두 가지 체계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로 정책 추진기반 영역을 두었는데, 이 영역 역시 기본계획 체계가 향후 변경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립시켰다.

<표 2-16> 정책분야 통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개수)	통계 목록
정 책 (34)	저출산 대응정책	혼인임산출산(3)	• 주택보급율, 신혼부부주택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
		자녀양육(5)	• 보육아동수, 유형별 보육시설현황,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평가인증률
		일가정양립(4)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사용자의 직장유지율,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가족친화인증기업수
	고령화 대응정책	노후소득보장(6)	• 공적연금가입율, 공적연금수급률, 기초연금수급률, 실질연금 소득대체율, 퇴직연금 가입자수, 주택연금 가입자수
		노후 건강 및 돌봄보장(5)	•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비중,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인장기요양기관수
		건강보장 및 주거복지(6)	• 노인일자리 창출수, 경로당 설치운영수,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 노인보호전문기관수, 노인보호구역 지정수, 고령자용 주택공급 비율
	정책추진 기반	예산 및 재정(5)	• 인구정책예산,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GDP 대비 공적연금 관련 지출,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제 3 장

## 인구정책통계 현황

제1절 인구정책통계 작성현황

제2절 인구정책 주요통계 현황



# 3

## 인구정책통계 현황 <

### 제1절 인구정책통계 작성현황

#### 1. 영역별 통계작성현황

인구정책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 통계 목록을 선정한 바 있다. 각 영역별 통계의 작성 현황을 살펴보자. 작성 현황은 통계명칭, 생산기관, 작성 주기를 아래표로 제시하였다.

<표 3-1> 인구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인구 구조	인구 구조 (3)	인구피라미드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연령별 인구비율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인구부양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출생 (4)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연령별 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출산순위별 비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인구 (14)	인구 변동 (5)	사망확률	간이생명표	통계청	1년
		기대수명	간이생명표	통계청	1년
		노인인구 기대여명	간이생명표	통계청	1년
		사망원인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노인사망원인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국제이동-순이동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	1년
	이동 (2)	체류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년
외국인주민현황통계			행정자치부	1년	

&lt;표 3-2&gt;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 주기
가족 / 가구	혼인 (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성별조혼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가족 구성 (5)		세대구성 및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한부모가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노인가구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다문화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가족 가치 (3)		혼인필요성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자녀필요성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이상 자녀수	전국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사회 (61)	여성 / 젠더	양성 평등 (4)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반년
			임금격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년
			여성 관리자 비율	안전행정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1년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고용 / 노동	고용 (5)	가사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5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근속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1년
	노동 (3)	임금수준	고용노동통계	고용노동부	1년	
		임금불평등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1년	
		근로시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통계청	월 월	
	교육	교육 (4)	학령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고교 졸업자수와 대입정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 개발원	1년
대학입학정원현황				교육부		
교원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 개발원	1년	
학생1인 월평균사교육비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빈곤과 불평등 (4)		빈곤율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노인빈곤율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아동빈곤율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경제 성장 (2)	경제 성장	잠재성장률	OECD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비정기	
		자본스톡증가율	국민대차대조표	한국은행·통계청	1년	

&lt;표 3-2&gt;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계속)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 주기		
사회 (61)	건강 생활 습관 (5)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고위험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신체활동실천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식품안전성가구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우울증상경험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건강 (4)	제왕절개분만율	OECD health data	OECD	1년	
		단태아 저체중아 출산율	출생통계	통계청	1년	
		비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치매	전국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예방 서비스 (3)	암검진율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의료 이용 (3)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	전국예방접종률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수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년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병의원)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안전 사고 (3)	교통사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	경찰청		
		추락사고(낙상사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익사사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안전 범죄 (4)	전체 범죄	범죄분석통계시스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년
			성폭력 범죄	범죄분석통계시스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년
	노인학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건복지부	1년	
	산업 재해 (2)		재해율과 사망률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1년
	문화 사회 참여 (3)	경제적 손실 추정액	산업재해 현황분석	고용노동부	1년	
		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문화활동 참여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율	사회조사	통계청	2년	

&lt;표 3-3&gt;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 주기	
혼인·임 신·출산 (3)		주택보급율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1년	
		신혼부부 주택지원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1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저출산 대응 정책	자녀 양육 정책 (5)	보육아동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1년		
		유형별 보육시설현황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1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년	
	일가정 양립 (4)	평가인증률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1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1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1년	
		가족친화인증기업수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	1년	
정책 (34)	노후 소득 보장 (6)	공적연금 가입률/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1년	
			사학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	1년	
			공무원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년	
		공적연금 가입률	장래추계연구	통계청	5년	
		공적연금 수급률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자치부	1년	
	고령화 대응 정책 (5)	기초연금수급률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년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	OECD Stat	OECD	1년	
		퇴직연금 가입자수	퇴직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1년	
		주택연금 가입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년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 사회 참여 및 인권 보장 (6)	노후 건강 및 돌봄 보장 (5)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 중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1인당 연간 진료비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장기요양기관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일자리 창출수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1년
노인 사회 참여 및 인권 보장 (6)		경로당 설치운영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노인보호전문기관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1년	
		고령자용 주택공급 비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정책 추진 기반	예산 및 재정(5)	인구정책예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부처합동	5년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OECD Family database	OECD	1년	
		GDP 대비 공적연금 관련 지출	OECD Stat	OECD	1년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	OECD Health Stat	OECD	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	기획재정부	1년	

## 2. 통계생산 기관별 현황

인구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 통계는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향조사, 생명표, 사망원인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현재 2012년 작성된 자료로써, 보통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익년에 추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혼인 및 이혼, 사망 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 신고에 의해 행정정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말한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 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통계청이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3-4> 생산기관별 인구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생산기관		통계명	통계 항목	
인구 구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피라미드	
			연령별 인구비율	
			인구부양비	
인구 변동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출산순위별비율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생명표	사망확률	
			기대수명	
			노인인구 기대여명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	
			노인사망원인	
		국제인구이동통계		국제이동-순이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체류외국인
		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	체류외국인

한편 인구정책 통계는 통계 작성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현재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주제별통계와 함께 동시에 기관별 통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구정책 통계를 작성 기관별로 분류함으로써 인구정책 통계의 관련 기관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영역의 통계에서 생산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정된 총 15개 통계 중에서 13개 항목이 통계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인구영역의 통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통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의 본연의 업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영역 통계가 특히 통계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인구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정보를 보유하여 외국인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표 3-5> 생산기관별 인구영역 통계 작성 현황 2

구분	통계청	행정자치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항목 수	13	1	1

주: 다수의 출처로 한 개의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역별 통계목록과 기관별 생산 통계목록 수는 차이가 있음.

사회영역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가 인구정책 통계와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 및 가족관련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에서 많은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혼인 관련 통계는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및 이혼 신고에 따른 원자료에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가구 및 가족 관련 통계에서 민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가족가치와 관련된 일부 의미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분석통계시스템을 통하여 범죄관련 주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건강 관련 주요 통계는 대부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분야 통계가 한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점은 향후 상세히 검토하여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사회영역 통계의 대부분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이 높고 주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lt;표 3-6&gt; 생산기관별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생산기관		통계명	사용통계
가족/ 가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세대구성 및 1인 가구
			연령대별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구성
			다문화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성별조혼연령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혼인필요성
여성/ 젠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녀필요성
			이상자녀 수
			임금격차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고용/ 노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근속
			임금불평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수준
			근로시간
			학령인구
			학생1인 월평균 사교육비
			교원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교육비조사	고교 졸업자수와 대입정원
			고교 졸업자수와 대입정원
			빈곤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
			잠재성장률
			자본스톡증가율
경제	OECD	OECD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한국은행·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lt;표 3-6&gt; 생산기관별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계속)

생산기관	통계명	사용통계
건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안전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조사
	통계청	출생통계
	보건복지부	전국치매역학조사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OECD	OECD health data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경찰청	교통사고관리시스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통계시스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문화	통계청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산업재해 현황분석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사회영역 통계에 선정한 전체 65개 중에서 29개 통계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은 사회영역의 각 분야별 통계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가구 및 가족분야, 여성과 젠더 분야, 고용과 노동분야, 교육 및 경제 분야, 건공과 안전 분야 등 사회 영역 모든 분야의 통계 생산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고용노동부가 또한 주요한 인구정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가치분야에 일부 관여하고 있고, 주로는 건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특성에 직접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분야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의 경우 OECD를 통해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국제기구에 보고함으로써 공개되는 통계에 해당한다. 한편 고용과 노동 분야의 대부분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lt;표 3-7&gt; 생산기관별 사회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2

통계생산 기관	생성통계 수	통계생산 기관	생성통계 수
통계청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3	경찰청	1
고용노동부	5	교육부	1
OECD	4	인사혁신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질병관리본부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은행·통계청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행정자치부	1

주: 다수의 출처로 한 개의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역별 통계목록과 기관별 생산 통계목록 수는 차이가 있음.

정책영역 통계의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각 정부부처가 작성기관이 되고 있고, 통계연보나 백서 형태를 통해서 통계가 작성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영역 통계는 주로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통계목록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자료를 통해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매우 신뢰도가 높고 주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어 중요한 통계가 되고 있다.

또한 몇몇 주요한 데이터베이스가 확인되고 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보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은 정부의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주요 정부 데이터베이스는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통계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추진 중인 인구정책에 비해서 주요한 통계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적절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불임지원 정책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임률을 알 수 있는 적절한 통계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보육통계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지만, 가정보육이나 민간보육관련 사항은 역시 통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가정양립 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있지만 그 이외의 유연근무제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통계가 미흡한 점을 알 수 있다. 향후 신규 조사를 계획하거나, 기존의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필요 통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lt;표 3-8&gt; 생산기관별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생산기관	통계명	사용통계
저출산 대응 정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주택보급율 신혼부부 주택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연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
		고용노동백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보육아동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평가인증률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보육아동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가족친화인증기업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통계연보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률
고령화 대응 정책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률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률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공적연금 가입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공적연금 수급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퇴직연금 가입자수
	OECD	OECD Stat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가입자수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초연금수급률 경로당 설치운영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 노인보호전문기관수
		내부행정자료	노인일자리창출수
		경찰청 홈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수
	경찰청	건강검진 통계연보	45세이상건강검진수검률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 노인1인당년간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인장기요양기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연구
정책 추진 기 반	정부부처합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정책예산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GDP대비국가채무비율
	OECD	OECD Family database	GDP대비가족관련지출
		OECD Stat	GDP대비공적연금관련지출
		OECD Health Stat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

정책 분야의 통계를 작성기관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영역 통계는 전체 41개 통계 중 10개가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인구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 영역이므로 실제 추진하는 개별 정책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통계도 보건복지부 소관 통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통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대표적 정책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정책성과로서 중요한 통계로 고려되고 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몇몇 중요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중심을 차지하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한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초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정책영역의 통계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통계가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보건복지부 이외의 다른 부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통계를 충분히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대다수 정부부처가 인구정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을 간접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각 부처별로 인구정책 관련 통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9> 생산기관별 정책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2

통계작성 기관	통계 수	통계작성 기관	통계 수
보건복지부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5	행정자치부	2
OECD	4	경찰청	1
고용노동부	4	기획재정부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여성가족부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정부부처합동	1
국토교통부	2	통계청	1
사학연금관리공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 다수의 출처로 한 개의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역별 통계목록과 기관별 생산 통계목록 수는 차이가 있음.

## 3.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 항목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표본항목은 20% 샘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센서스를 보완하게 된다. 통계청은 2016년 이후 매년 등록센서스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시의성 있는 자료 및 모집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조사도 순환센서스를 도입하여 센서스 결과를 매년 작성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통계청, 2015, p.1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항목의 경우 이전 센서스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향후 보완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t;표 3-10&gt;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구분	전수조사(12)		표본조사 (52)	
U N 권 고 항목 (38)	인 구 (24)	①성명	①성명 ②성별	⑬활동 제약
		②성별	③나이	⑭통근·통학 여부
		③나이	④가구주와 관계	⑮통근·통학 장소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 연월	⑯경제활동 상태
	가 구 (8)	⑤국적	⑦종교* ⑧교육 정도 ⑨전공 계열*	⑰종사상 지위
		⑥입국 연월	⑩출생지	⑱산업 ⑲직업
			⑪1년전거주지	⑳근로 장소 ㉑혼인 상태 ㉒ 혼인 연월 ㉓출산자녀수 ㉔자 녀 출산 시기*
			⑫5년전거주지	
	주 택 (6)	①가구 구분	①가구 구분	⑤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⑥ 점유 형태
			②사용 방 수	⑦임차료 ⑧주인(대표) 가구 여부
			③주거시설 형태	
			④난방시설	
고 유 항 목 (15)	인 구 (11)	①거처의 종류 ②주 거용 연면적 ③건축 연도 ④대지면적	①거처의 종류 ②층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건축연도** ⑥대지면적**
		① 본관***	①아동 보호 ②이용 교통수단	⑥추가 계획 자녀 수
			③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⑦결혼진취업여부*
			④통근·통학소요시간	⑧경력단절* ⑨사회활동
가 구 (4)		⑤현 직업 근무연수	⑩고령자생활비원천	
		①거주 기간	③주차장소	
		②건물 및 거주 층	④타지주택소유여부	

주: 1) \*: 신규항목('10년 대비)

2) \*\*: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표본항목

3) \*\*\*: 전수에만 있는 항목

## 제2절 인구정책 주요통계 현황

### 1. 인구통계

#### 가. 인구구조

##### ■ 배경

한 사회의 인구 변동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보편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한다. 이러한 인구변동 과정에 대한 인구학적 논의를 인구변천 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라고 하는데, 역사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되지만 거의 모든 사회는 전통적인 고사망-고출산 단계에서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기의 저사망-고출산 단계를 거쳐, 저사망-저출산 단계의 현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공통적인 단계를 따라 인구의 구조와 규모가 변화한다.

인구변천이 일어나기 전인 고사망-고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율은 높지만 주로 신생아 및 아동들의 사망률이 높아 인구 성장은 매우 더디게 나타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인구의 연령구조는 아동인구가 많고, 노인인구가 작은 피라미드 형태를 갖게 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젊은 인구구조를 갖는다.

다음으로 저사망-고출산 단계에서는 영양상태, 공공위생,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망률이 낮아지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구의 급증이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인 저사망-저출산 단계는 여성의 지위향상, 교육 수준의 향상, 출산연령의 연기,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구 규모의 성장은 안정화되지만,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사망-고출산 단계를 넘어섰는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들에서는 높은 AIDS 사망률 등으로 예외적으로 고사망-고출산 단계에 속해있다. 그 외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조차도 저사망-고출산 혹은 저사망-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저사망-고출산 단계의 국가들

도 상당 부분 출산율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후기 단계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은 물론이고, 그 외 어느 정도 수준의 산업화가 이뤄진 비서구권 국가들도 저사망-저출산 단계에 속해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대체 수준(통상 합계출산율 2.1) 이하로 하락하는 초저출산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초저출산의 사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및 노후 보장의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변천 과정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 사망률 감소의 변천은 1900년경에 공중위생시설의 개선과 전염병 예방 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80). 그러나 사망률은 한국전쟁으로 다시 높아졌다가 전쟁 이후 본격적인 사망률 감소가 시작되었고 할 수 있다.

인구변천의 다음 단계인 출산율의 변화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북한으로부터의 피난민의 증가 및 과거 여성의 사망률 감소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늘어난 시기였으므로 실제 출산아의 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출산율은 이후에도 산업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를 이어갔고, 1983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6)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lowest-low fertility)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1.076으로 사상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노인 사망률의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라는 새로운 인구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경부터는 노인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인류의 인구변천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출산율이 아직도 대체수준을 상회하는 개발도상국에서조차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빠른 출산율의 감소와 노인연령 진입 등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등 인구구조의 영향 등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급효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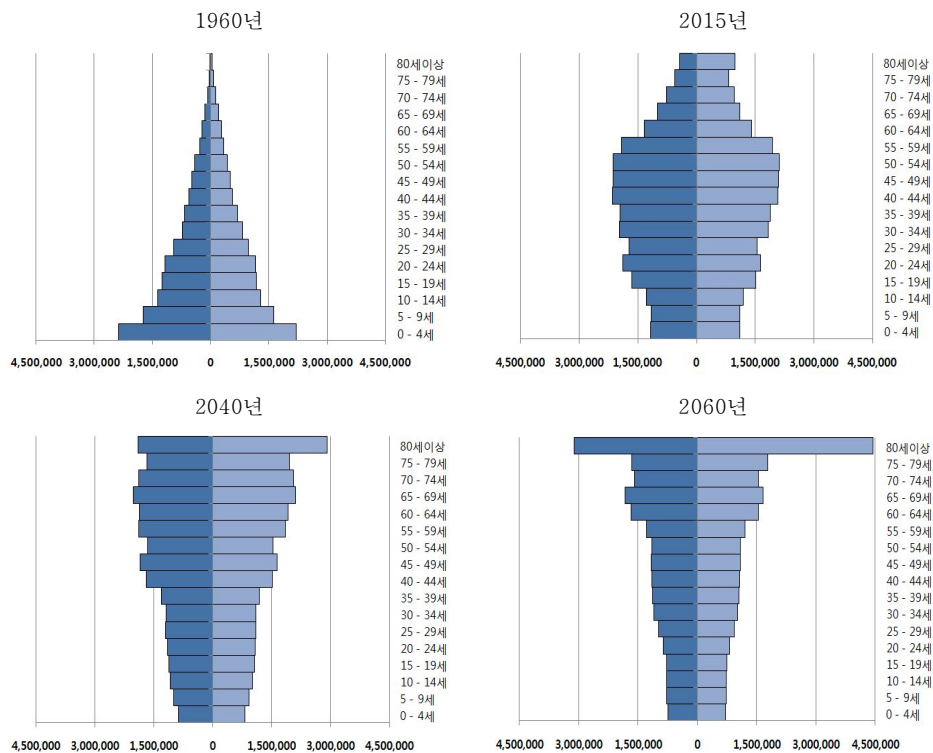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인구피라미드

인구구조는 주로 한 사회 전체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의미한다. 인구피라미드는 이러한 인구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도형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연령별 인구의 규모 혹은 비율을 세로축으로 제시하고, 좌편에는 남성의 인구를, 우편에는 여성의 인구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 인구피라미드는 한 사회의 현재 인구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경험한 인구학적 변화들의 과정도 유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인구피라미드: 1960-2060년)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아직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가 일어나기 이전인 1960년의 인구구조는 5세 이하 아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출산율 변천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현재의 인구구조는 중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초반 인구가 이전 세대(코호트)에 비해 다소 인구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85~90년까지 출산율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 세대인 1960년대 출생 코호트의 규모가 커서 나타나는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 인구성장의 타성)에 기인한다. 한편 현재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중년 인구의 노인인구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른 기간 안에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급격한 인구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며, 전체 인구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연령별 인구비율(노인인구 비율, 노동연령 인구비율, 핵심 노동연령 인구비율)

연령별 인구비율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수준 혹은 인구변천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계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의 인구비율은 고령화 수준을 가장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특히 2020년경을 지나면서부터는 증가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앞서의 설명처럼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기에 진입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이 있었던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80만 명을 넘는 수준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2050년대까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체수준 이하의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젊은 인구의 감소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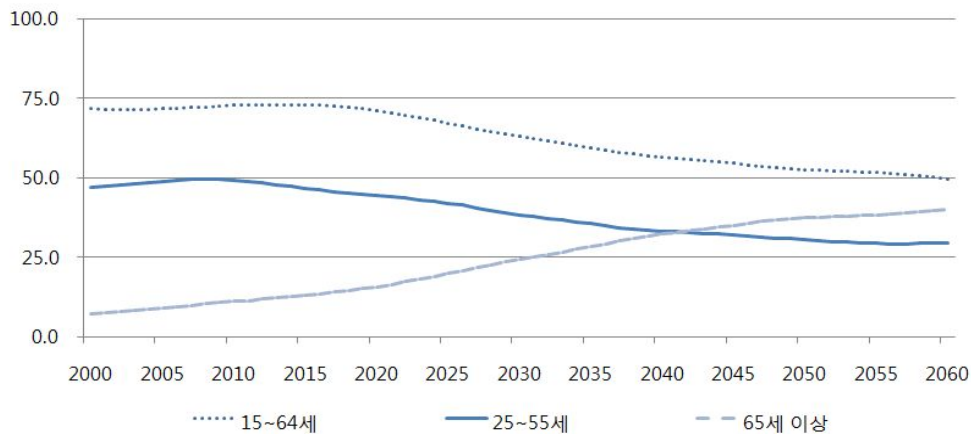
한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젊은 인구 특히 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노동연령을 15세부터 64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노동연령 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칭한다. 그림에서 제시하듯이 노동연령 인구비율은 이미 2014년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연령을 25세부터 55세로 가정한다면 이들 핵심 노동연령 인구의 비율의 감소는 더 앞서 일어나,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2042년부터는 노인인구가 핵심 노동연령 인구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2] 연령집단별 인구비율의 변천(2000-206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인구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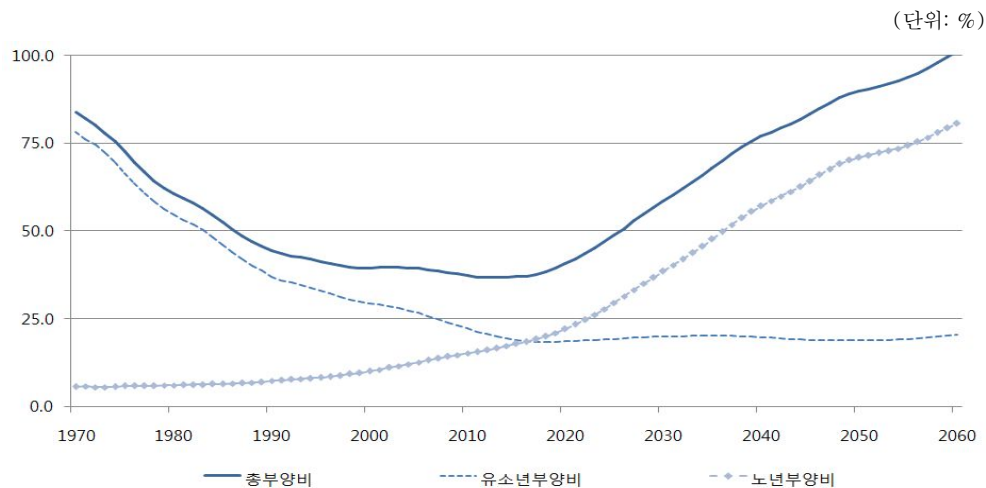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측면에서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상반되는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 인구변천 초기 단계에서 빠른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적으로나 개별 가족의 수준에서 아동 부양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수준에서는 지출율이, 사회적 수준에서는 경제 및 사회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인구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된 노동력을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다. 이

에 따라 출산율의 감소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진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를 인구 보너스라고 부른다. 실제로 우리사회가 경험한 1970~80년대의 급속한 인구성장의 이면에는 출산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생산성 증대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젊은 인구 특히 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연령층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노동연령을 15세부터 64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노동연령 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칭한다. 그림에서 제시하듯이 노동연령 인구비율은 이미 2014년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연령을 25세부터 55세로 가정한다면 이들 핵심 노동연령 인구의 비율의 감소는 더 앞서 일어나,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2042년부터는 노인인구가 핵심 노동연령 인구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3] 우리나라 인구 부양비의 변천(1970-206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나. 인구변동

### [출생]

#### ■ 배경

출생(출산)은 인구변동을 결정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출생, 사망, 인구이동) 중에서도 한 사회의 인구 구성원을 제공하여 주어 사회의 존속을 위해 가장 필수불가결한 근본적인 요인이다. 출산의 수준(출산력)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자의 차이는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후자의 내적 차이는 정책 대상을 결정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변천에 따라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나(Lloyd & Ivanov, 1988), 한국, 대만, 폴란드, 체코 등의 국가들은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단계에 있다(Billari, 2004).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전체 인구의 측면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감소,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의 부문별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출산력은 연령, 가임력, 모유수유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들과 가족구성, 문화, 가치관, 노동시장 참여,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Morgan & Hagewen, 2006), 출산의 수준과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제·가족·가치관 요인들에 대한 통계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취의 강조, 개인주의 경향 등의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는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1983; Van de Kaa, 200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저출산의 단계에서는 그 영향의 방향성이 사회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난다(Brewster & Rindfuss, 2000; McDonald, 2000).

출생과 관련된 통계들은 출산율의 연령별 차이를 반영한 출산의 수준(총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유배우 합계출산율 등)과 출산 특성(출생순위별 비율, 출생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출생성비 등), 그리고 출산 환경 측정(출산연령 여성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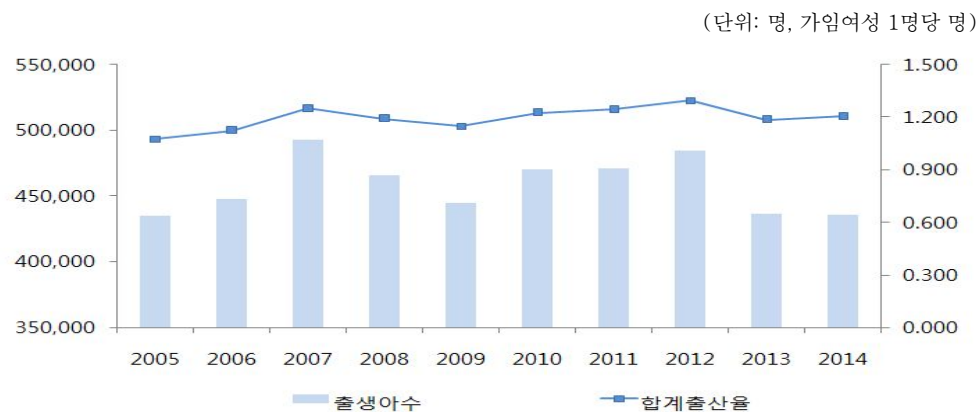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출산율은 출산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통계이며, 한 사회에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이의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5세~44세까지 연령별 출산율을 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라는 부르는데, Billari(2004)의 정의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2.1) 이하이면 낮은 출산(low fertility), 1.5이하의 매우 낮은 출산(very low fertility), 그리고 1.3 이하이면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거의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1998년에 매우 낮은 출산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주기적으로 보이고 있다. 출생아수 역시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동일한 증가와 감소의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출생아수는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가임기 여성의 수(분모)의 감소가 출산아수(분자)의 감소보다 빠르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출산정책에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3-4]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2005-2014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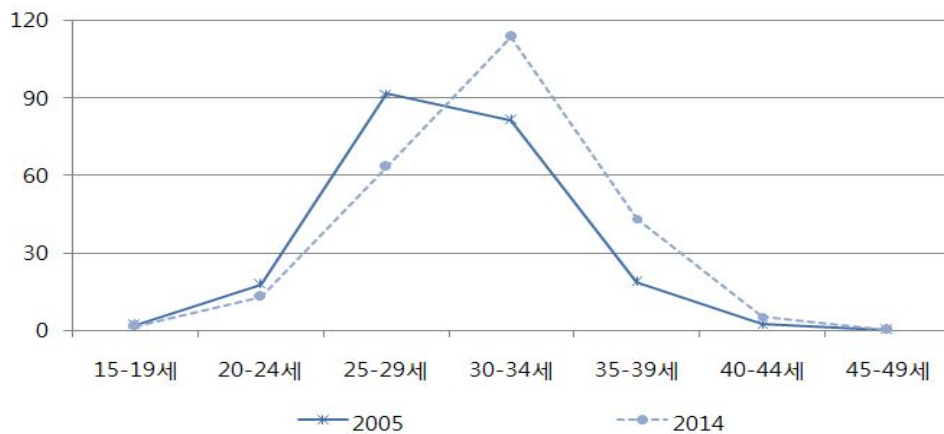
## □ 연령별 출산율

통상 인구학에서는 가임기를 15세부터 4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율은 연령에 따라 다른 분포 패턴을 갖고 있다. 주 출산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볼 수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주 출산 연령대에서 전체 출산의 90%가 이뤄졌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출산아수로 계산되는데, 연령별 출산율 분포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불과 10년 전에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 후반이었으나 현재에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는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늦은 결혼과 혼인 이후의 출산 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출산율의 분포는 지속적으로 우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늦은 결혼과 혼인 이후의 출산 연기에서 비롯된 출산연령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림 3-5] 연령별 출산율(2005, 2014년)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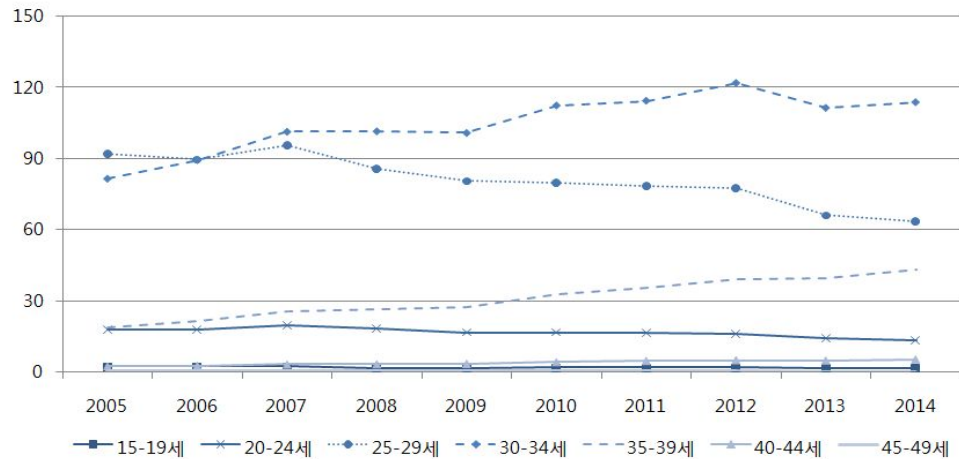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지난 10년 간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패턴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30대 초반 연령 여성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을 앞서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대 후반 출산율의 감소 속도는 30대 초반의 출산율 증가속도를 앞서고 있다. 더불어 30대 후반 집단에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이들의 출산율이 20대 후반 집단의 출산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20대 초반의 출산은 천 명당

2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40대 여성의 출산율도 비록 현재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2.2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3-6] 연령별 출산율 변화(2005-2014년)

(단위: 해당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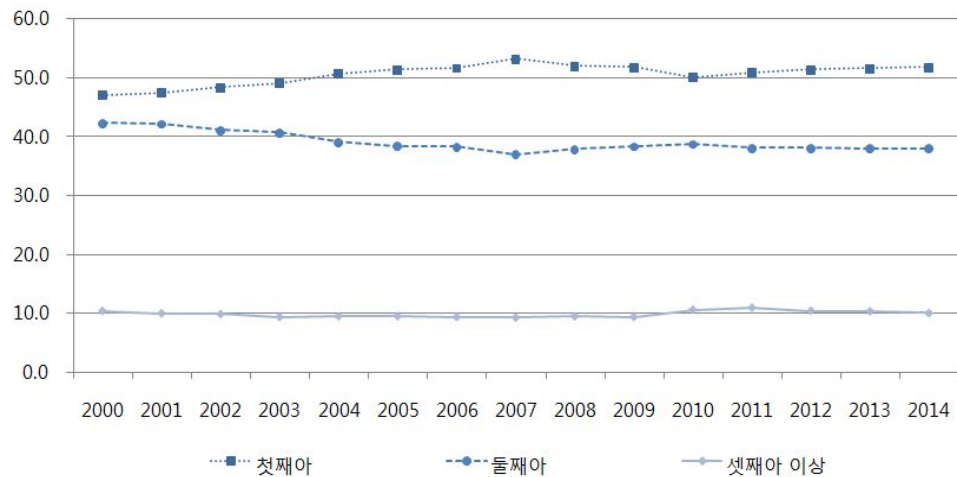
#### □ 출산순위별 비율

2014년 기준 전체 출생아에서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8%로 절반이 약간 넘 으며, 둘째아는 38.0%, 셋째아 이상은 10.0%이다. 출산 순위별 비율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아의 비율의 증가와 둘째아 비율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첫째아 비율의 증가는 첫째아 출산이 증가해서가 아닌 둘째아의 감소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아 비율의 상승을 자세히 보면 2007년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50%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아의 경우는 10.0% 수준에서 15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둘째 비율의 감소를 감안한다면 사실 상 셋째아 출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첫째아 비율의 증가와 둘째아 비율의 감소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둘째아 출산의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둘째아 출산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출산순위별 비율(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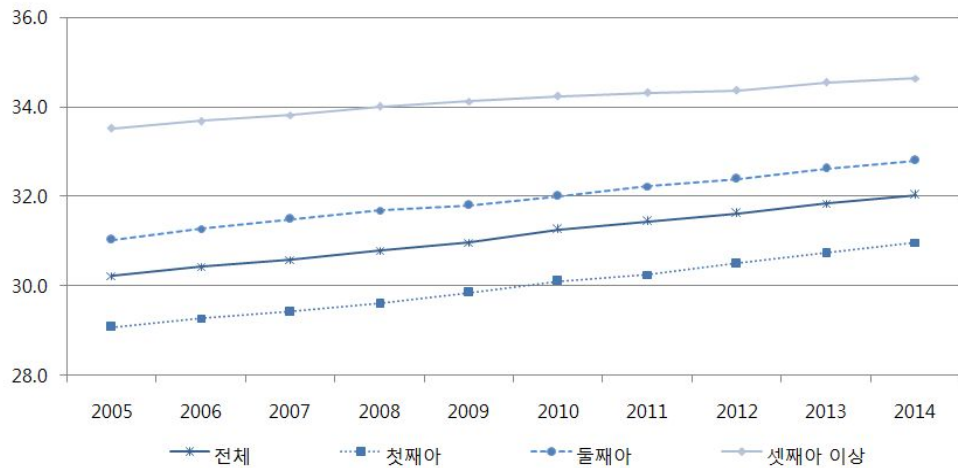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출산 연령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체 출산의 평균 연령은 32.0세, 첫째아는 31.0세로 이미 30대 초산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의 출산 연령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의 평균 출산연령은 각각 32.8세, 34.7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의 차이를 자녀들의 연령 터울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자녀 1명 출산에서 출산을 종료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연령, 첫째아, 둘째아 출산 연령이 모두 6%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0대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출산 연령, 특히 첫째아 출산 연령의 계속적 증가는 출산 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출산의 증가는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 등 이상출산 결과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 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8]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2005-2014년)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사망]

## ■ 배경

사망은 출산 및 이동과 더불어 기본적인 인구과정(population process)이다. 사망률은 인구의 크기 및 연령구성 등 기본적인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사망률의 하락은 출산 및 이동이 일정할 때 인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또한 사망률의 하락이 연령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초기에 일어났던 영·유아 사망률의 하락은 연령구조를 어리게 했으며, 최근 들어 관찰되고 있는 노인사망률의 하락은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 인구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Dyson, 2010). 사망률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망률 변화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사망률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인구학적인 연구들은 성별 사망률 차이의 추이(Li & Lee, 2005), 생존함수의 직사각형화(Wilmoth & Horiuchi, 1999), 사망원인의 변화, 사망률 하락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계(Lee & Mason, 2011)

등에 주목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사망력 지표의 변화에 주목해 왔는데, 최근 들어 대안적인 접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장은 통계청과 UN Population Division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사망력 지표의 추이 변화를 검토하고, 최근에 제시된 대안적인 지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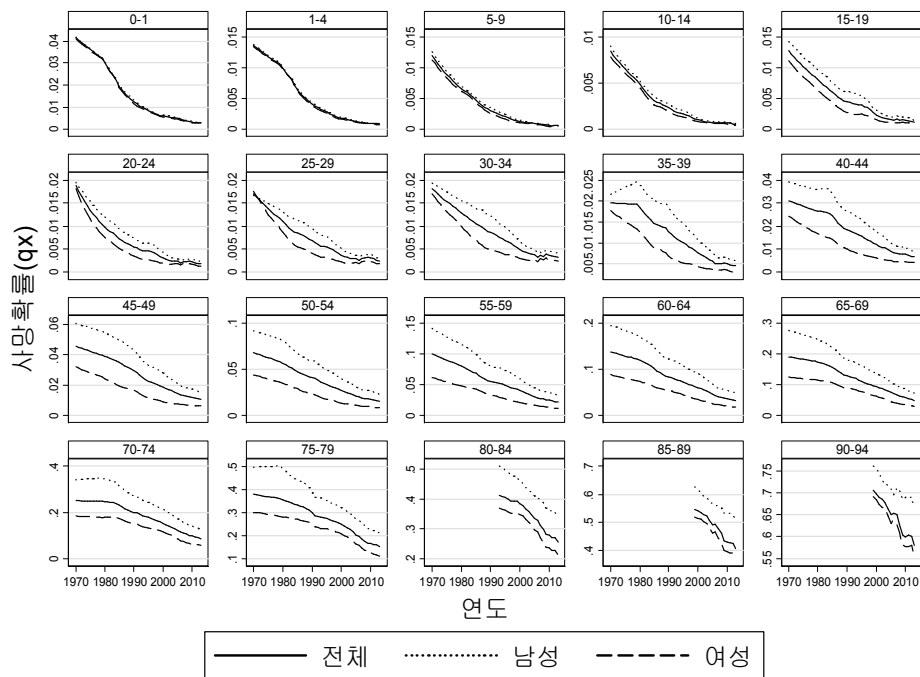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기본적인 사망력 지표인 연령별 사망확률, 기대수명, 65세 인구 기대여명, 사망원인, 65세 인구 사망원인의 추이에 대해서 논의한다. 첫째, 연령별 사망확률( $q_x$ )은 생명표에서 활용되는 추정치인데, 특정연령( $x$ 세) 인구가 특정기간 동안( $x$ 세  $-x+n$ 세)에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는 각 세별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5세 단위의 연령구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영아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0-1세는 대부분 따로 측정하여 사용한다. 통계청의 간이생명표(1970-2013)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0-1세는 1세 단위,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 5세 단위 연령별 사망률을 검토한다. 둘째, 기대수명은 기간 기대수명(period life expectancy)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의 연령별 사망률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되는 가상적인 코호트(synthetic cohort)의 평균수명을 의미한다. 셋째, 65세 인구 기대여명은 흔히 노인 기대여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생명표에서 65세 인구가 생존할 기간의 평균값이다. 넷째, 사망원인은 원인 분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의 사망원인 대분류(19개 항목)에 기반해서 사망원인을 분류하고, 이것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 □ 사망확률

[그림 3-9] 는 통계청의 1970-2013년 간이생명표로부터 추출한 성 및 연령별 사망확률( $q_x$ )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확률이 지난 40여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영아사망확률은 1970년에 4%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0.3%로 급감했으며,

75-79세 집단의 사망확률은 38%에서 15%로 급감했다. 둘째, 사망확률의 성별 차이는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데, 0-14세의 유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사망확률의 성별 차이는 15세 이후에 관찰되는데, 30대 후반부터 그 차이가 뚜렷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사망확률의 성별 차이는 최근 들어 다소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5-59세 집단의 경우 1970년에는 성별 사망확률 차이가 8.0%p이었으나, 2013년에는 2.2%p로 세 배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성별 사망확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난 리와 로널드 리의 연구(Li & Lee, 2005)의 연구에서 주장했던 성별 사망력의 수렴현상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성 및 연령별 사망확률 추이(197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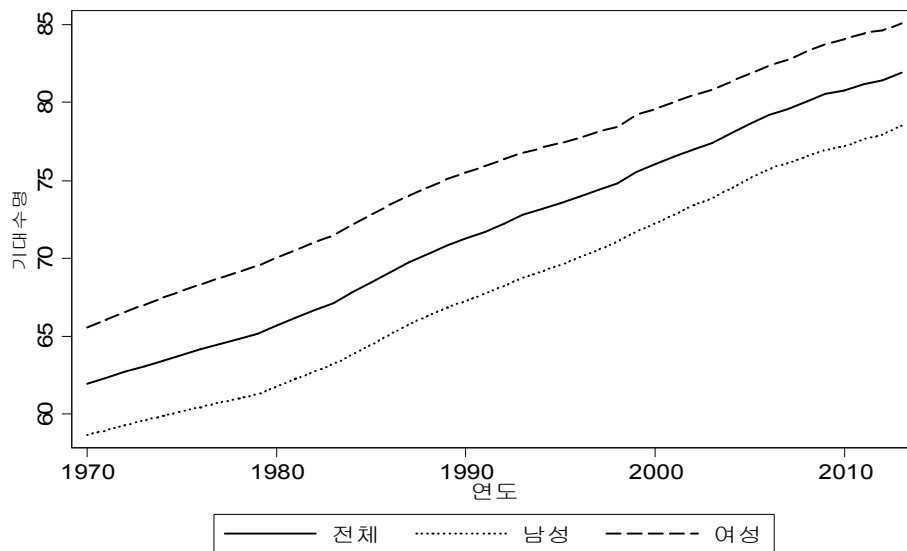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각년도.

## □ 기대수명

[그림 3-10] 은 통계청의 1970-2013년 간이생명표로부터 추출한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대수명은 1970년의 61.9년에서 2013년의 81.9년으로 20년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40여년 동안 기대수명이 연간 약 0.5년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의 급격한 향상은 [그림 3-9] 에서 살펴본 연령별 사망확률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대수명의 성별 차이는 1970년의 6.9년에서 2013년에는 6.6년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급격한 기대수명의 향상에 따라 생존곡선의 직사각형화(rectangularization)가 한국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Wilmoth & Horiuchi,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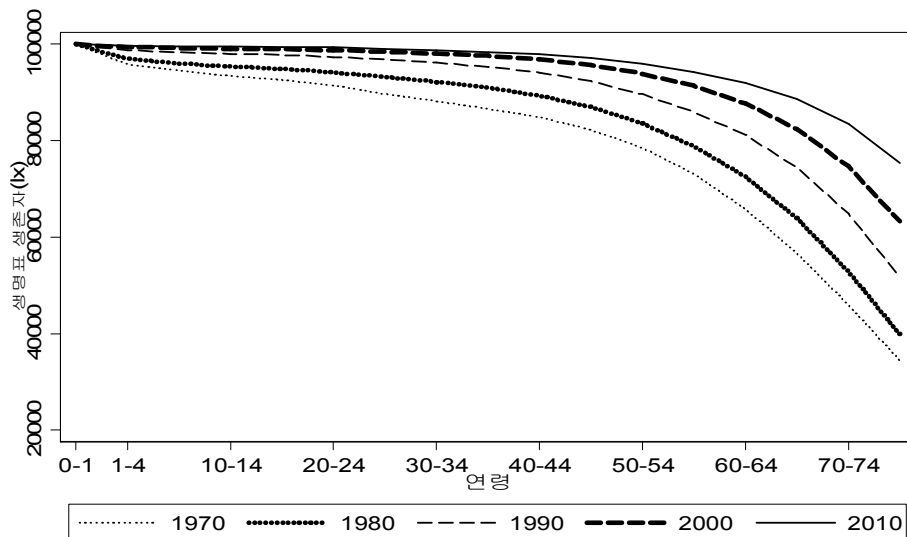
[그림 3-10] 기대수명 추이(1970-2013년)



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각년도.

[그림 3-11] 은 생명표 생존곡선(lx)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곡선 분포가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곡선은 모든 사람의 사망연령이 동일할 때 완전한 직사각형 모형을 갖게 되는데, 생존곡선의 직사각형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망연령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김현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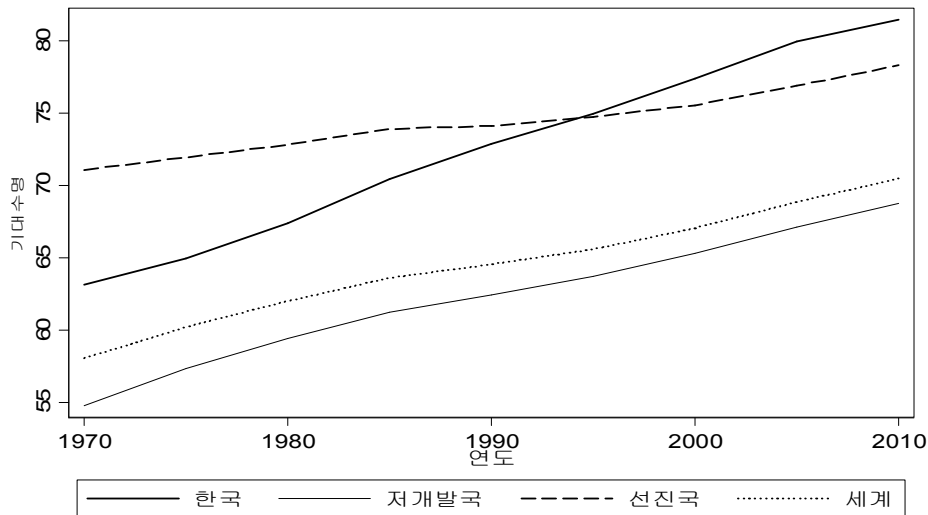
[그림 3-11] 생명표 생존자 추이(1990-2010년)



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각년도.

[그림 3-12] 는 UN Population Division의 『세계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에서 추출한 한국 및 세계 인구 기대수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평균 및 저개발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향상 속도 역시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기대수명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낮았으나, 그 향상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의 기대수명 향상이 세계 평균과 저개발국 평균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2] 기대수명 국제비교, 남녀 모두(197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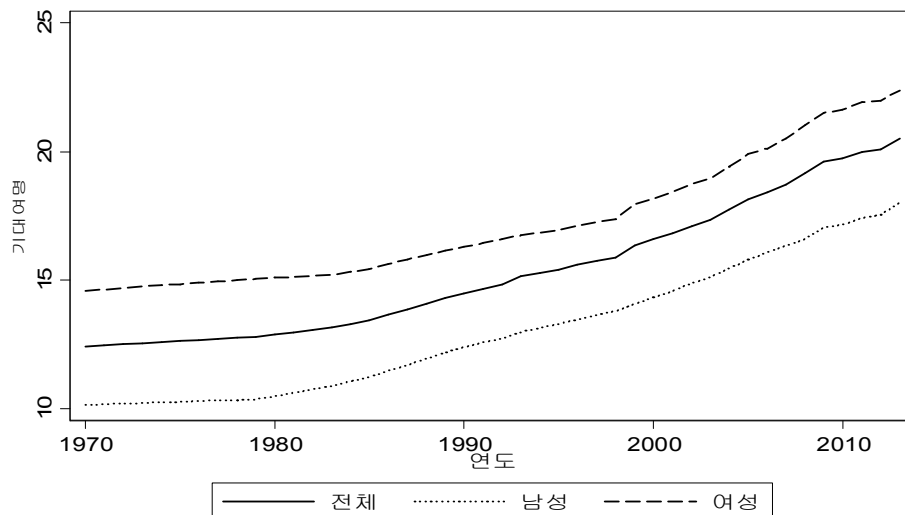


자료: UNPD,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esa.un.org/unpd/wpp/DataQuery/\)](http://esa.un.org/unpd/wpp/DataQuery/). 국가구분에 대해서는 제시한 링크 참고.

#### □ 노인인구 기대여명

[그림 3-13] 은 1970-2013년 65세 기대여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 에서 관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5세 인구의 기대여명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 1970년에는 12.4년이었던 65세 기대여명은 2013년에는 20.5년으로 8.1년 증가했다. 연평균 0.2년의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성별 차이는 4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65세 기대여명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어져서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기대수명 및 노인 기대여명의 상승은 노인건강의 향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함의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계봉오, 2015). 따라서 연대기적 연령(chronical age)에 기초한 사망력 지표는 인구고령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사망력 지표의 활용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개선 과제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3-13] 노인인구(65세) 기대여명(197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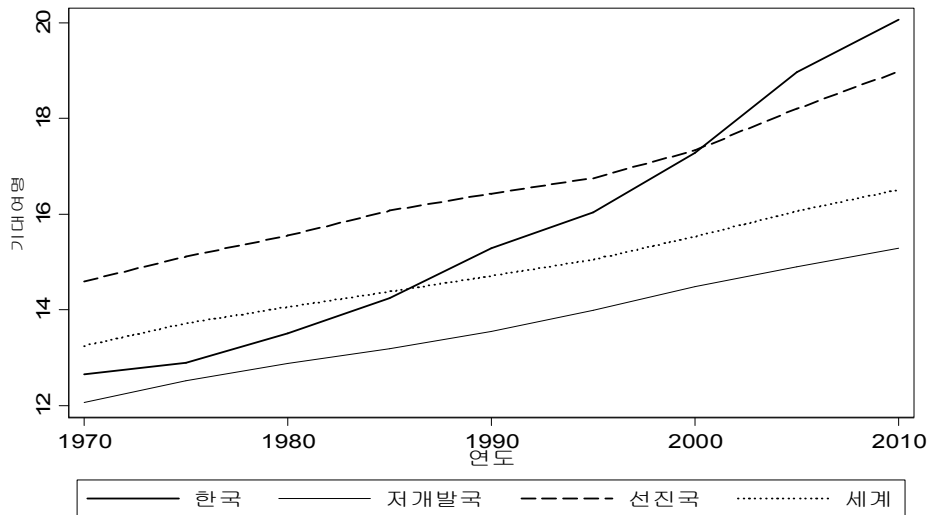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간이생명표」, 각년도.

[그림 3-14] 는 한국 및 세계인구의 65세 기대여명의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65세 기대여명은 저개발국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65세 기대여명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인구 평균보다 낮았는데, 그 이후로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 평균보다는 2000년 이후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의 상승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인구고령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과 인구고령화의 진행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고려한 새로운 사망력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개선과제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3-14] 노인인구(65세) 기대여명 국제비교, 남녀 모두(197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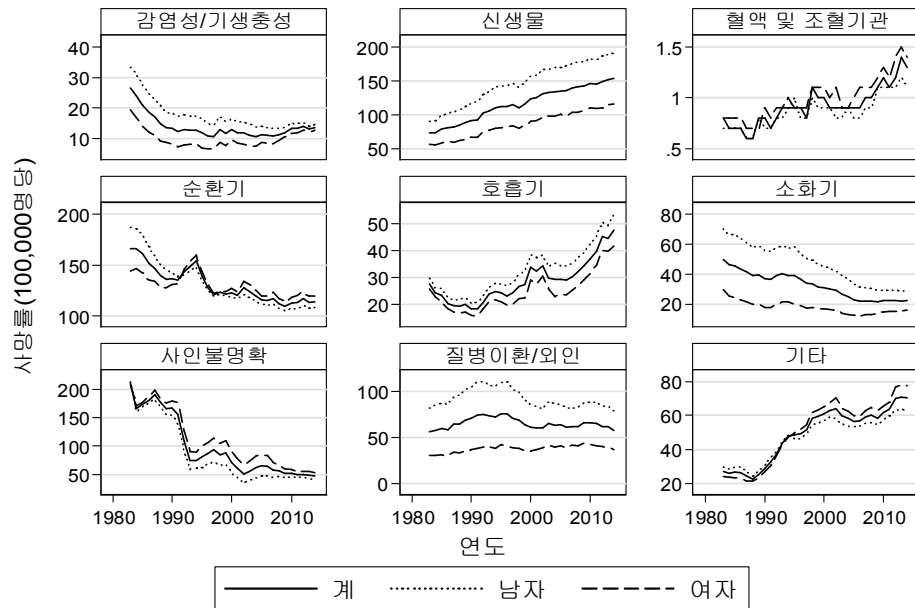
자료: UNPD,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esa.un.org/unpd/wpp/DataQuery/>). 국가구분에 대해서는 제시한 링크 참고.

#### □ 사망원인

사망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의 분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사망원인 분류 대항목을 활용했다. 총 19개의 사망원인 대항목을 비중이 높은 8개와 기타(나머지 11개 원인)로 분류하여, 9개 사망원인에 대한 추이를 제시했다. [그림 3-15]은 1983-2014년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감염 및 기생충 질환,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사인불명에 의한 사망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인에 의한 사망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감염 및 순환기/소화기 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어드는 반면, 각종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주로 생활습관과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건강을 보다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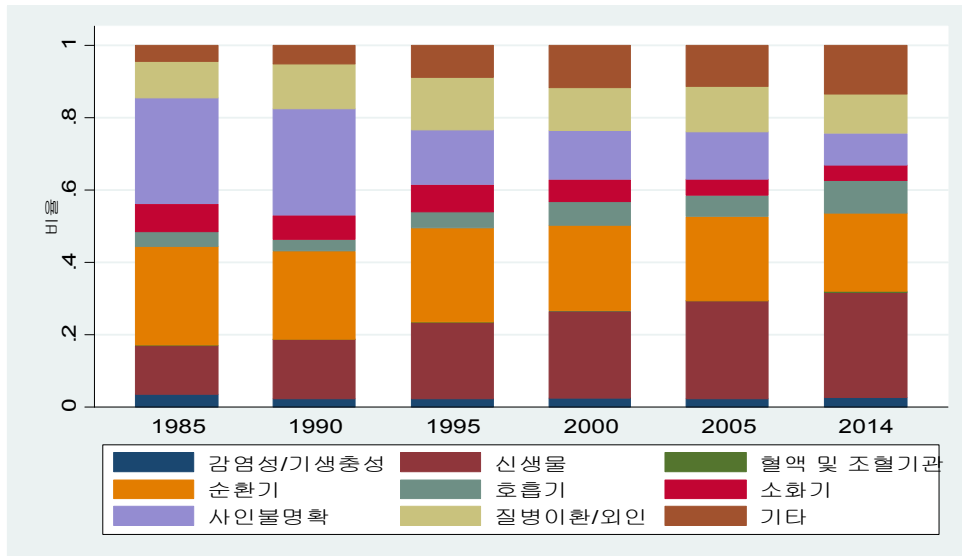
[그림 3-15]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1983-2014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그림 3-16] 은 1985-2014년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패턴은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꾸준한 증가이다. 신생물에 의한 사망은 1985년에는 전체 사망의 13.3%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그 수치가 29.1%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는 1985년의 29.3%에서 2014년에는 8.9%로 세 배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사망원인 수집 자료의 질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를 제외한 원인들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림 3-16]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198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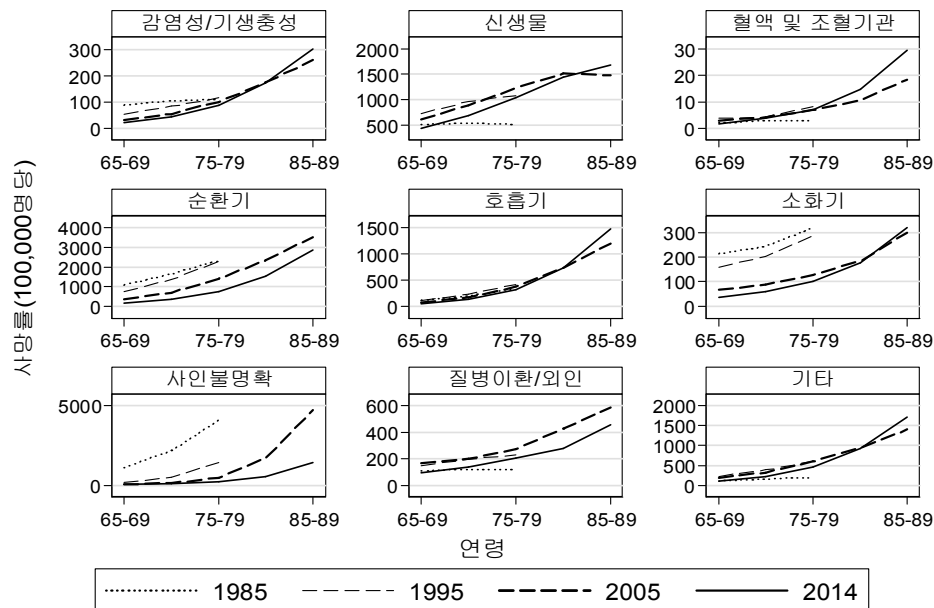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 □ 노인 사망원인

[그림 3-17] 은 1985-2014년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별 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각 원인별 사망률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패턴 이외에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85세 이전에는 각 원인별 사망률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신생물 및 질병이환/외인 사망이다. 신생물에 의한 65-84세 사망률은 1985년이 가장 낮고, 1995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200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질병이환/외인에 의한 사망은 2005년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85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경우에는 많은 사망원인에서 2014년의 사망률이 2005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성/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이 그러한데, 이는 이러한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초고령층 건강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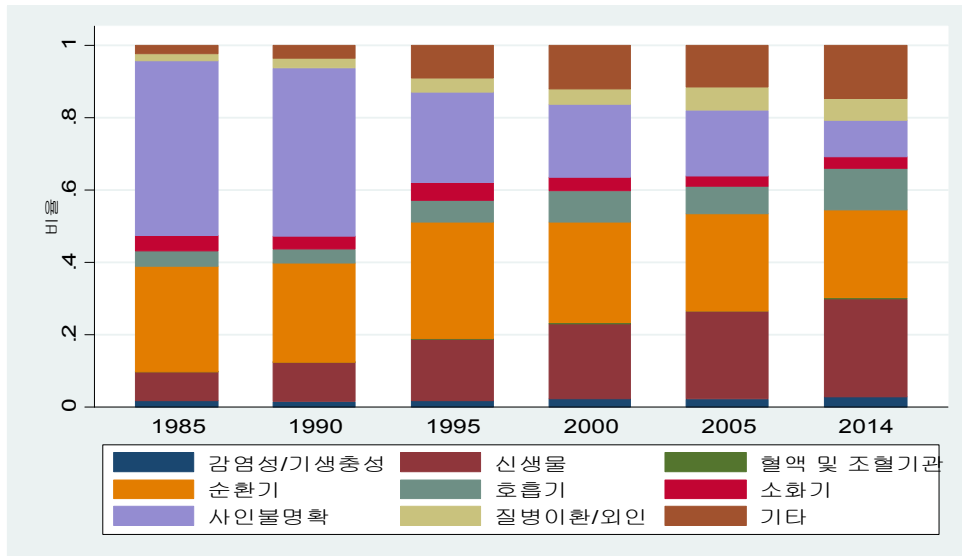
[그림 3-17] 사망원인별 65세 이상 사망률 추이(1985-2014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그림 3-18] 은 1985-2014년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 에서와 같이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생물에 의한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의 비중은 1985년에는 전체의 8.1%에서 2014년에는 27.1%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는 1985년의 48.3%에서 2014년에는 10.2%로 다섯 배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망원인 수집 자료의 질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구성 변화와 구별되는 노인인구 사망원인 구성변화의 특징은 순환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에서 발견할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순환기 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만성질환이랄 수 있는 고혈압 등 순환기 질환에 의한 사망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급성질환인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노인인구 사망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위한 중점적인 과제가 급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임을 시사한다.

[그림 3-18] 사망원인 구성비 변화(1985-2014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 [이동]

### ■ 배경

인구이동은 인구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3요소(출생, 사망, 인구이동)들 중에서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구이동 현상은 인구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폐쇄인구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제이동의 확대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인구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구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우리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주인구 수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인구이동은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을 이해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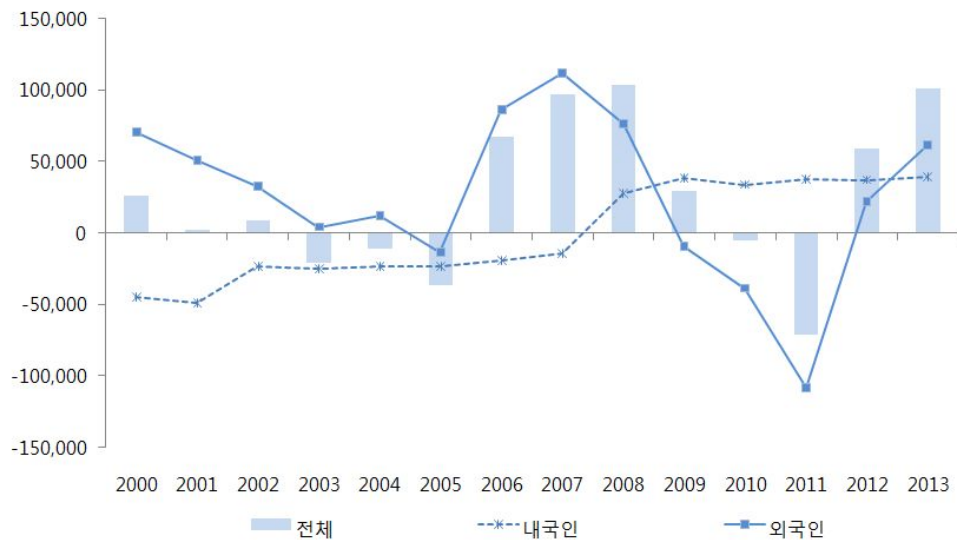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국제이동 - 순이동

국제 인구이동은 우선 인구유출과 인구유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 총유입에서 총유출을 뺀 값을 순인구이동이라고 한다. 순이동이 0보다 큰 양(+)의 값을 갖는 경우 그 사회는 인구 수용국(receiving country), 그 반대의 경우는 인구 송출국(sending country)으로 부르기도 한다. 과거의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현상을 살펴보면, 의외로 매우 최근까지 유출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 송출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 이주가 상당 수준에서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인구이동은 순유출의 경향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순인구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국제 인구이동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부터 외국인 단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고용허가제와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2000년대 후반부터 내국인들의 순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도 후반에 외국인의 순이동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세계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경기의 둔화와 방문취업제 인구의 제한 등의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정주화되지 않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9] 내국인 및 외국인의 순국제이동(2000-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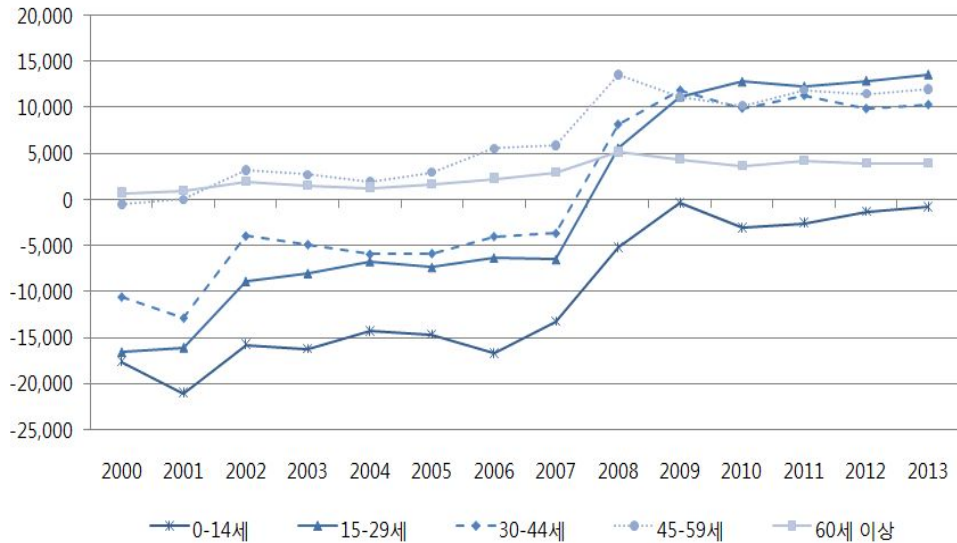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년도.

한편 내국인의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45세 이상 중년 이상의 인구에서는 국내 유입이 유출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청장년 이하의 연령에서는 2007년까지도 유출이 더 많았으며,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 연령인구에서는 여전히 음(-)의 순이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이거나 혹은 부모와 함께 동반 이민을 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구의 자질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의 상당수는 단순노동력이지만, 유출되는 내국인 인구는 유학생 등 고학력의 인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인구이동 관점에서 비록 인구가 유입되는 순유입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구의 자질 측면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의 국제이동 특히 해외 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젊은 인구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실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3-20] 내국인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2000-2013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년도.

## □ 체류외국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입의 증가와 다문화성의 진전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주자 인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국내 <체류외국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규모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약 180만 명(1,797,618명)에 이른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이들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들 중에는 관광객과 같이 단기체류 하는 외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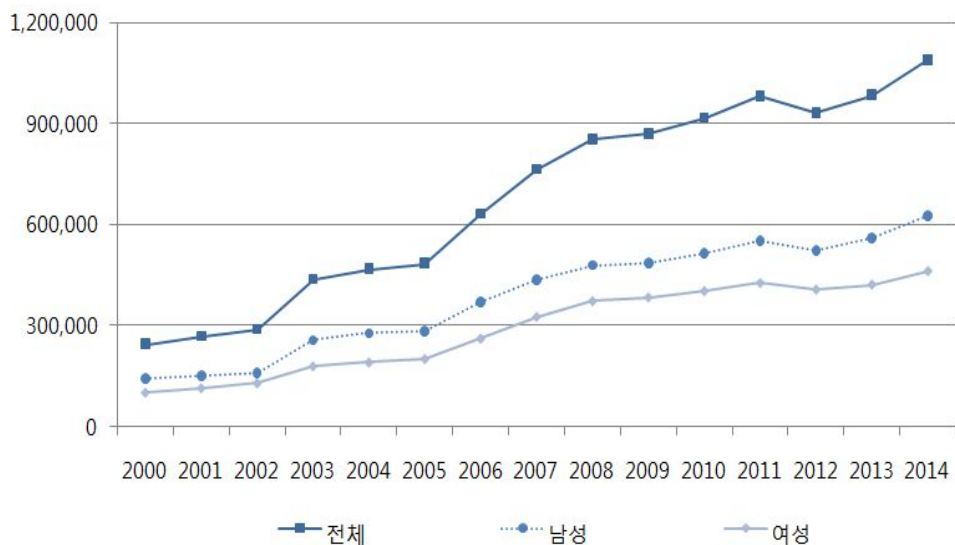
UN에서는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이주자(immigrant)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 상황에 따라 다른 기간 정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들은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체류등록 의무가 제외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의 대



략적 규모로 이해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1995년 12.3만 명에서 2014년 109.1만 명으로 무려 8.8배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남성의 인구가 다소 더 많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10.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이 일정 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기순환 원칙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1] 성별 등록외국인 수(1995-2014년)

(단위: 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년도.

그런데 이주자는 이미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외국인이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들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그리고 이주 배경을 가진 자녀들을 포함하는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과 귀화자를 합친 우리나라의 이주자 인구는 2006년 57.6만 명에서 2015년 153.4만 명으로 2.7배 증가하였다. 특히 귀화자 인구는 같은 기간

39,525명에서 158,064명으로 4.0배로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의 2.6배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 이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에서 10.3%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귀화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 온 혼인이주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 크게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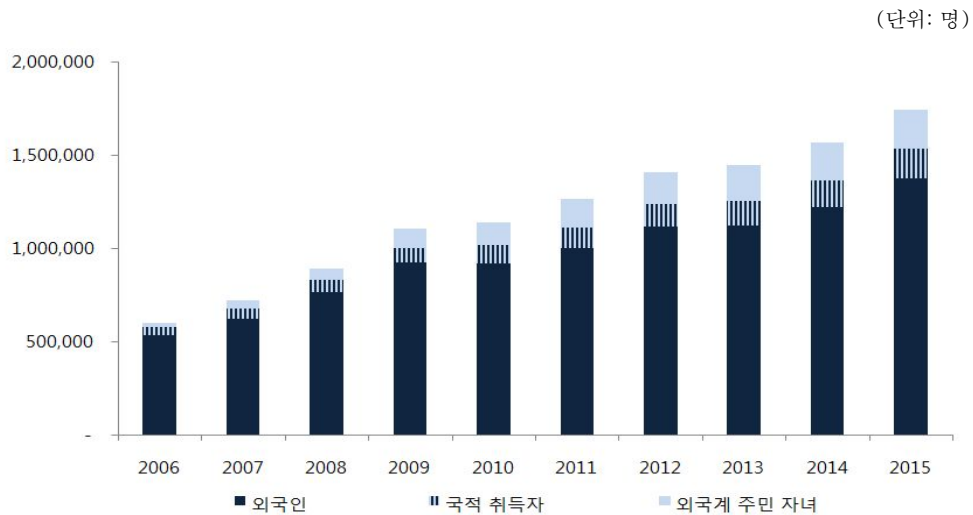
한편 이주자의 국내 유입 증가와 함께 이주자 자녀들의 증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인 이주자들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이주자 자녀들은 많은 경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이주자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하는 이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현재 주민등록 대비 3.0%에 이른다. 비록 이주자 인구의 규모를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주자 인구는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물론이고, 절대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우리의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사회는 앞으로 외국인 및 이주자 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주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보완, 부족한 노동력의 제공, 다문화성의 진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불법 체류자의 증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악화 및 계도화, 외국인 범죄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이주자 자녀들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인구의 종족적(ethnic) 구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당수의 혼인이주자들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자 수용의 확대가 우리사회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및 인구구조 변동의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이주자들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주자의 증가 및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 인구현상의 일부로 그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3-22] 이주 관련 인구 추이(2006-2015년)



주: 외국계 주민자녀: 2006~2008은 혼인이주자 자녀  
 자료: 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 각년도.

## 2. 사회 영역

### 가. 가족 및 가구

#### [가족형성 : 혼인]

##### ▣ 배경

혼인(결혼)은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보통 두 성인 간의 사회적, 성적, 법률적 결합을 지칭하며 이혼은 이러한 혼인으로 맺어진 두 성인 간 관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혼인과 이혼은 한 사회 내 가족의 형성과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에서 혼인을 통해 가족형성과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은 인구재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인뿐만 아니라 이혼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변동과 그 향방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지표이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혼인의 수와 혼인율을 파악하는 것은 출산율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출산력의 감소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혼외출산의 비중이 낮은 한국사회의 경우 혼인의 감소 및 이혼의 증가가 출산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혼의 경우는 혼인상태에 있는 가임 여성의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출산력 감소로 이어진다(계봉오, 2013). 이혼의 증감은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성비, 가족가치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Trent & South, 1989; 박세경, 2004).

생애 첫 결혼시기, 즉 평균 초혼연령은 한 사회 내 구성원들의 가족형성 시기를 반영한다. 또한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유배우자 여성의 가임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미혼자의 결혼 연기나 비혼의 증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김승권, 2004). 또한 우리나라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31.9세였고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31.8세로 나타나 만혼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09).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이유, 즉 젊은 층이 결혼을 연기하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노동시장 내 경쟁의 강화와 이로 인한 교육기간의 증가, 불안정 노동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Buchholz, Hofäcker & Blossfeld, 2006).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낳는다. 실제로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혼남성 중 6.3%, 미혼여성 중 4.7%가 결혼을 연기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기한 이유로는 집안반대를 제외하면 주로 결혼비용부담이나 실업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혼인시장의 불균형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낳았다(이상립, 2012). 국제결혼은 한 사회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이주를 포함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가정의 비율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혼인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한 지원, 복지 정책 및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 등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통계로는 혼인건수,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과 이혼건수 및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족형성의 변화양상을 가늠케 하는 통계로 평균 성별초혼연령과 국제결혼건수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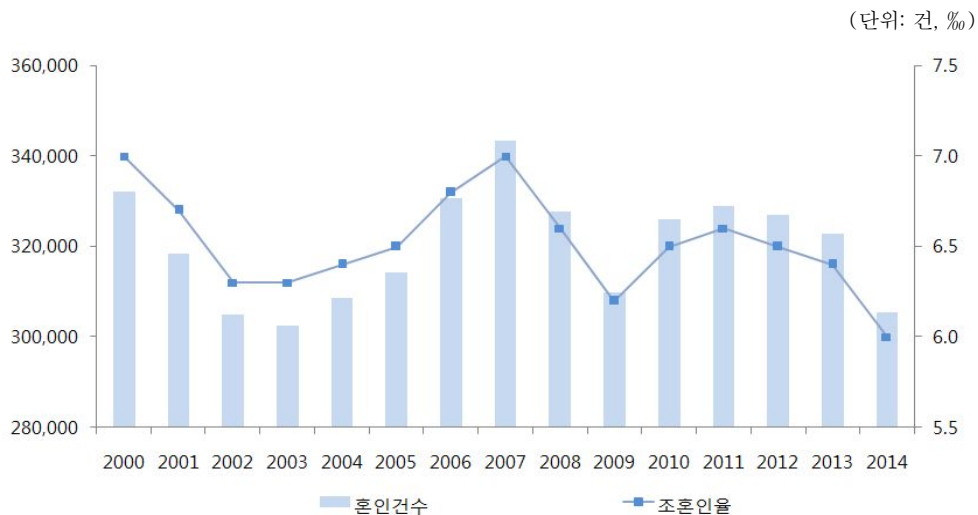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혼인건수는 한 해 동안 일어난 총 혼인건수를 말하는 것으로 혼인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조혼인율은 특정 연도의 총 혼인건수를 같은 연도에 살고 있는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누고 이를 연앙인구에 대한 천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즉,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 당 총 혼인건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증감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비해 2003년까지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혼인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4년 기준 조혼인율은 6.0으로 2009년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3-23]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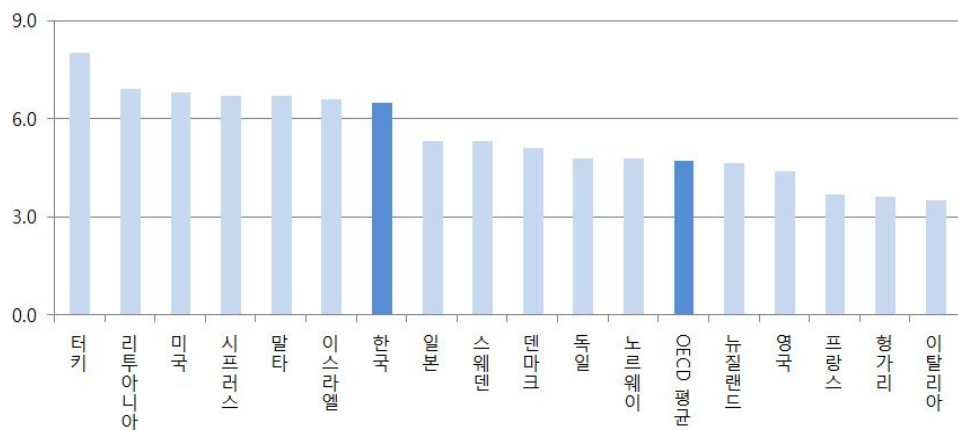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OECD 국가들의 조혼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6.5로 터키, 리투아니아, 미국 등의 나라에 이어 7위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4.7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사실혼)가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4] OECD 주요 국가의 조혼인율(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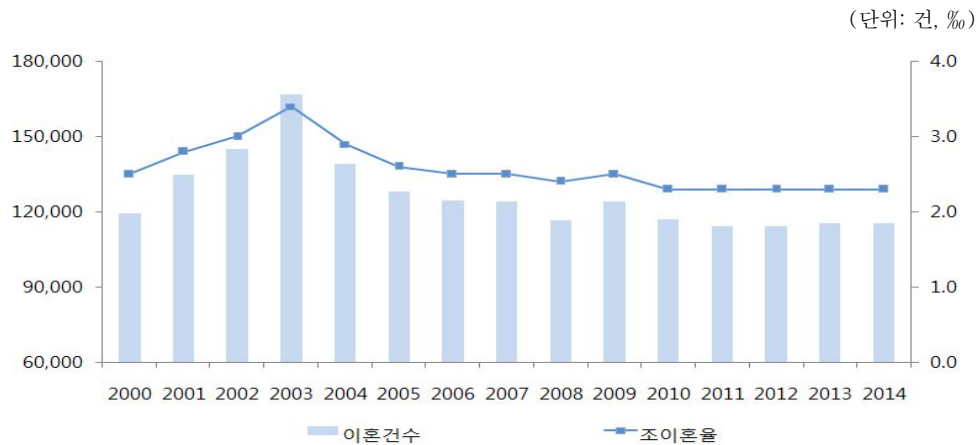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SF3.1).

####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이혼건수는 한 해 동안 일어난 총 이혼건수를 의미하며 이혼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이다.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총 이혼건수를 같은 연도에 살고 있는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누고 이를 연앙인구에 대한 천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총 이혼건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2003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후 2014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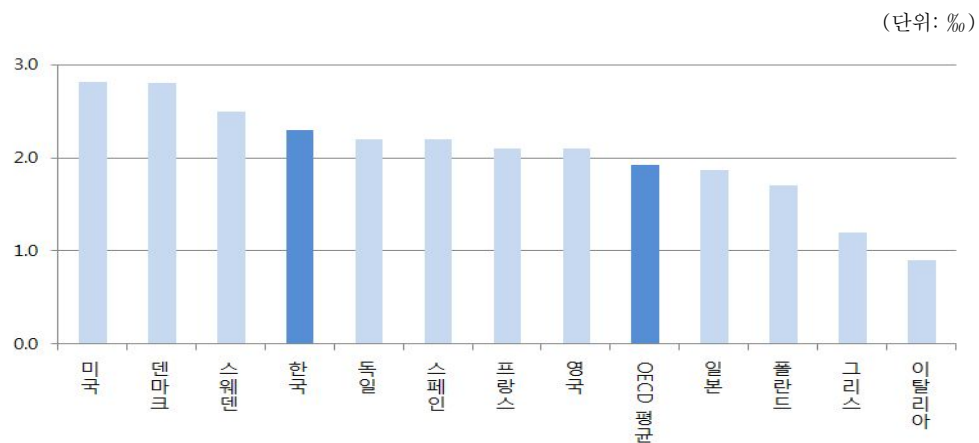
[그림 3-25]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00-2014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OECD 국가들의 조이혼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도 조혼인율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기준 국제별 조혼인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이 1.9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3을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 스웨덴 등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유럽 국가가 사실혼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6] OECD 주요 국가의 조이혼율(2012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SF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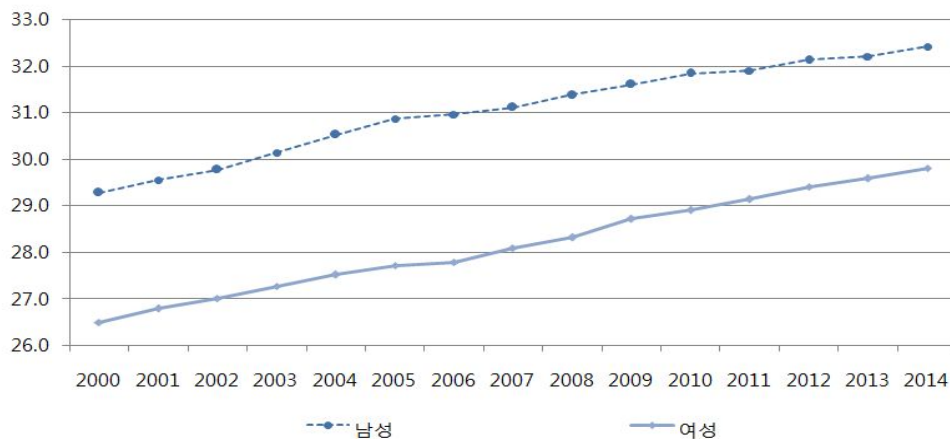
## □ 성별초혼연령

평균초혼연령은 재혼을 제외한 생애 처음으로 혼인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며 이는 출산력과 긴밀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인구변동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보통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 출산력이 떨어진다. 이는 초혼이 늦어질 경우가 임기가 짧아지고 첫 자녀 출산 후 연령증가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둘째아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평균초혼연령의 변화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로 남녀의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0년에는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이 29.3세였으나 2014년에는 32.4세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2000년에 평균초혼연령이 26.5세였으나 2014년에는 29.8세를 기록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이미 2003년도에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선 것(30.1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도 30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비용, 주거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은 미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27] 성별 평균초혼연령(2000-2014년)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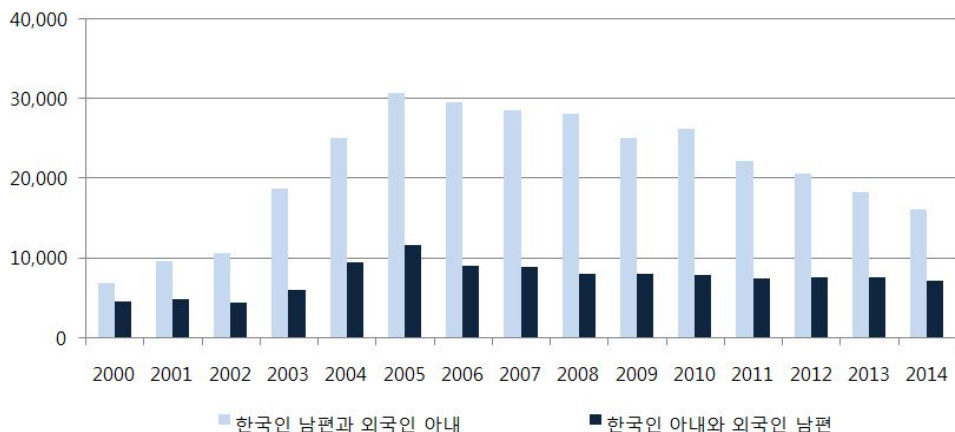
## □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국제결혼건수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총 혼인건수를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혼인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혼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한국 남성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 간의 결혼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결혼으로 인해 아시아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정착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국제결혼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한 국제결혼이 2006부터 감소한 양상이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혼인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혼인에 비해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혼인건수 감소폭이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 혼인건수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국제결혼건수의 차이는 다소 줄어든 양상이다.

[그림 3-28] 국제결혼건수(2000-2014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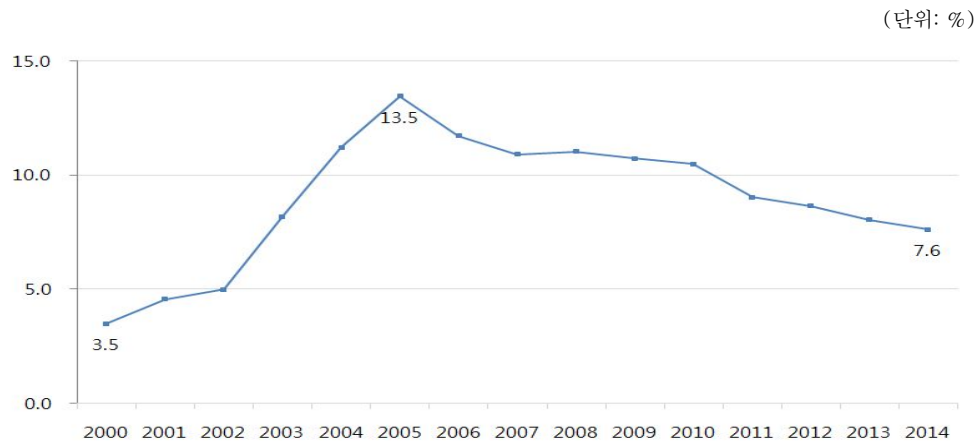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3-31] 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을 보여준다. 국제결혼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을 정점으로 감

소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2005년에 13.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 기준 국제결혼비율은 7.6%이다.

[그림 3-29] 국제결혼비율(2000-2014년)



주: 연도별 총국제결혼건수를 전국(국외포함) 총혼인건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가족형성 : 가족구성]

### ■ 배경

가족은 한 사회의 경제, 인구 및 노동력재생산의 기본단위이자 미시적 수준에서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동체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회에 가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의 특성과 구성유형 및 변화양상은 사회마다 다르다.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가족구성과 형태는 변화한다. 가족이란 보통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혼인, 혈연, 입양 등의 원인으로 맺어진 생활공동체로 정의되지만 현대 사회에 발생하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비친족가구 등)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혼인, 혈연, 입양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구성원 간 가족이라는 정체성과 친밀함이 존재하는 경우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Secombe, 2008).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포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보다는 가구

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가족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가족 및 가구구성의 다양화 및 변화가 관찰된다. 3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확대가족은 감소하고 1세대 혹은 2세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및 다문화가족의 확대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가족구성의 변화는 출산율, 산업구조, 복지수요, 빈곤율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없는 1세대 가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저출산 실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성 자체도 한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연관될 수 있다. 확대가족에 비해 부부중심의 핵가족은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대한 부부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이와 동시에 맞벌이의 증가는 부담을 과증하게 하여 임신,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연령대에 따라 증가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노인인구에서 1인 가구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은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는 취업준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연기 혹은 비혼, 직장으로 인한 단독가구설립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혼 및 별거의 증가, 교육여건으로 인한 분거가족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반정호, 2012). 또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녀부양의 부담 증가, 부모부양(혹은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노인 1인 가구는 특히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여성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그 위험도가 더 증대하여(최현수, 류연규, 2003)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및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그러나 동시에 다문화가구원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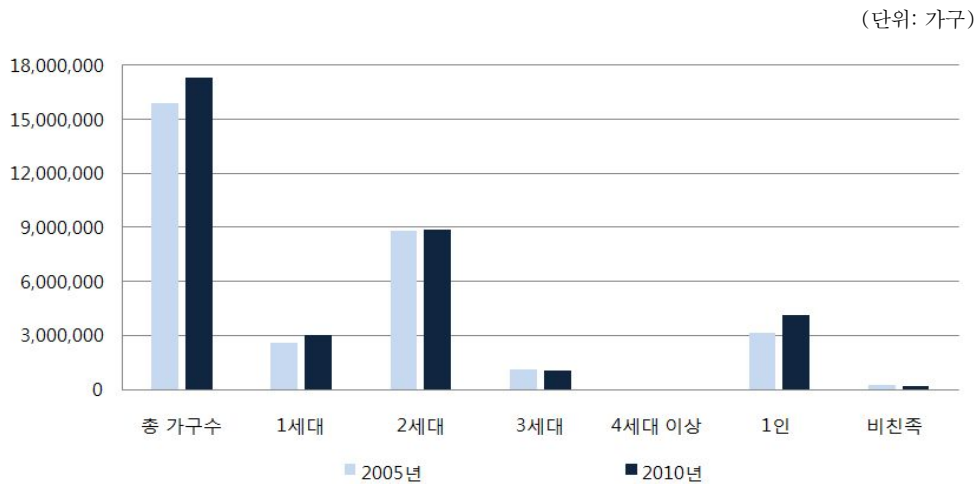
가족 혹은 가구구성과 관련되는 통계로는 세대구성, 1인 가구 비율, 한부모가족실태,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이 있으며 고령자와 이주자의 가족구성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노인가구 가구구성율과 다문화 가구구성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 ■ 통계설명

### □ 세대구성 및 1인 가구 비율

세대구성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및 4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2005년 기준 15,887,128이었으며 2010년 기준으로는 17,339,422를 기록하였다. 총가구수를 6가지의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2005년과 2010년 간에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 및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였고 3세대, 4세대이상 가구 및 비친족 가구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가구수 대비 각 세대구성 유형을 비율을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0] 세대구성(2005,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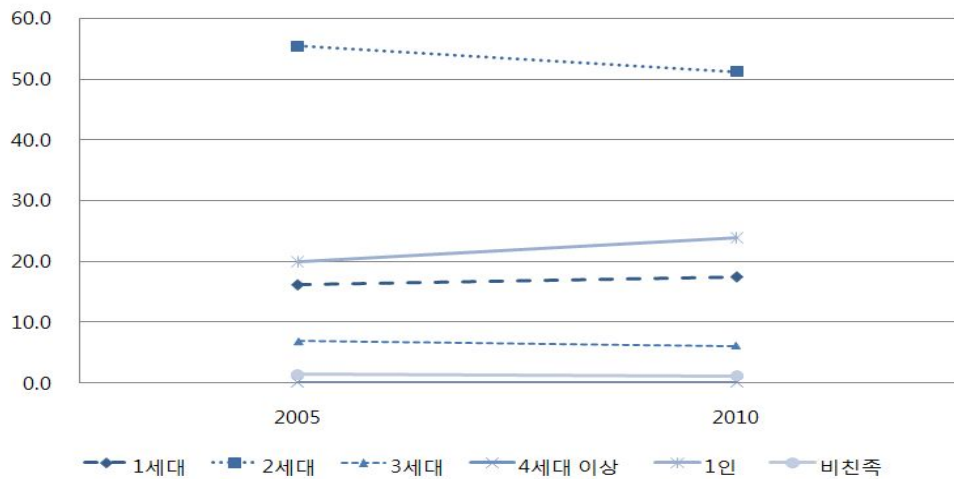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세대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1세대 가구는 16.2%에서 17.5%로 증가하였고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20.0%에서 23.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총 가구수 대비 2세대 가구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의 가구의 비율도 감소하여 확대가족의 감소가 관찰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특히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 등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선호

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확대가족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1] 세대구성의 비율(2005,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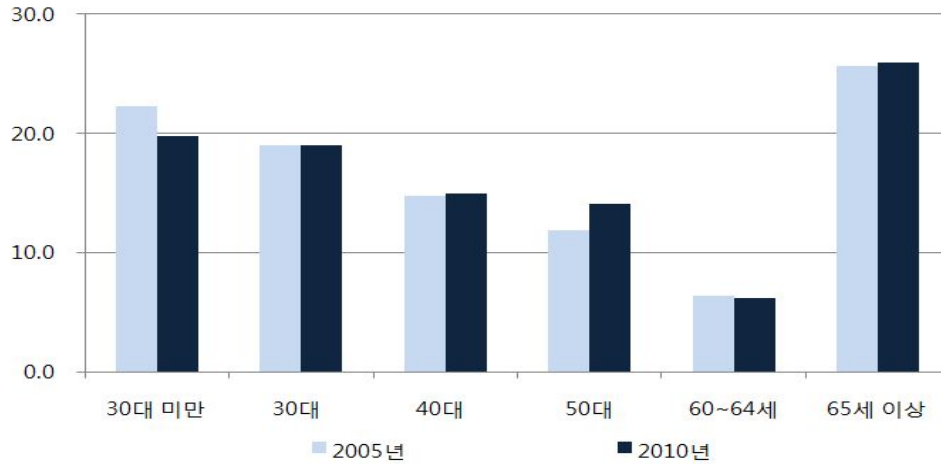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주로 노인인구에서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알려진다. 연령대별 1인 가구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좀 자세한 1인 가구의 현황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의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10년의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의 총 1인 가구 대비 30대 미만의 1인 가구 비율은 22.3%에서 2010년에는 19.8%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1인 가구 중 고령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한 사실과 연관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05년 25.6%에서 2010년에 26.0%로 다소 증가하였고 50대의 1인 가구 비율도 11.9%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3-32] 전체 1인 가구(15세 이상)대비 연령집단별 1인 가구의 비율(2005,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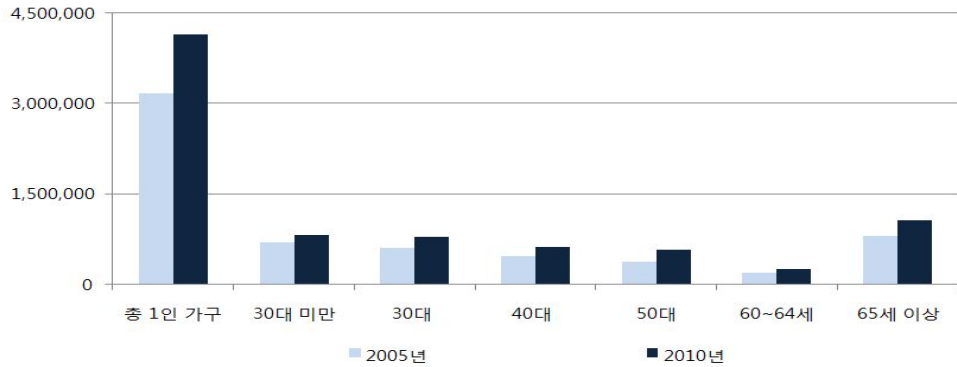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러나 연령집단별 1인 가구의 비율은 각년도 총 1인 가구 대비 비율이며 실제 1인 가구의 수를 비교해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5년의 15세 이상 1인 가구의 수는 전체 3,168,005 가구에서 2010년의 전체 1인 가구수는 4,142,113로 2005년 대비 약 30%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에서는 교육, 취업,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원가족에게서 분리되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는 만혼화 현상이 증대하여 1인 가구가 증가된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자녀출생 등의 이유로 중장년층에서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1인 가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노년기 1인 가구의 증가는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및 이에 대한 선호가 자녀, 노인세대에게서 모두 감소하고 부모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상승하면서 배우자 사망 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33] 연령집단별 1인 가구수(2005, 201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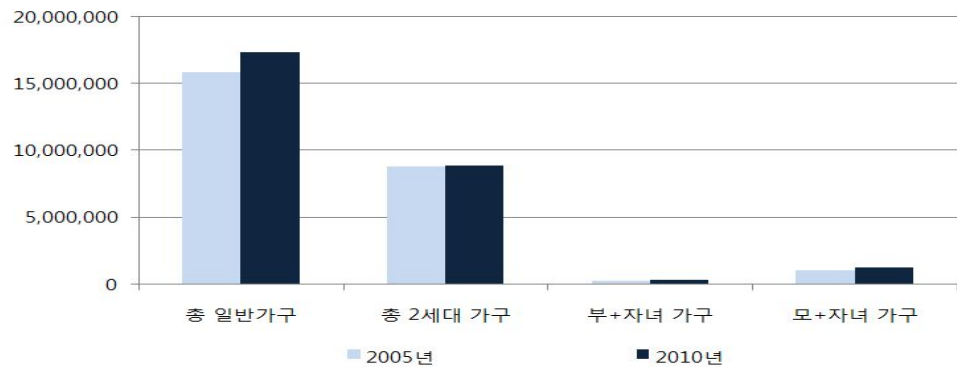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수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세대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총 2세대 가구 중 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수는 2005년에는 286,923, 2010년에는 347,448로 나타났으며 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의 수는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1,083,020과 1,246,690으로 나타났다. 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4] 한부모가족의 수(2005, 2010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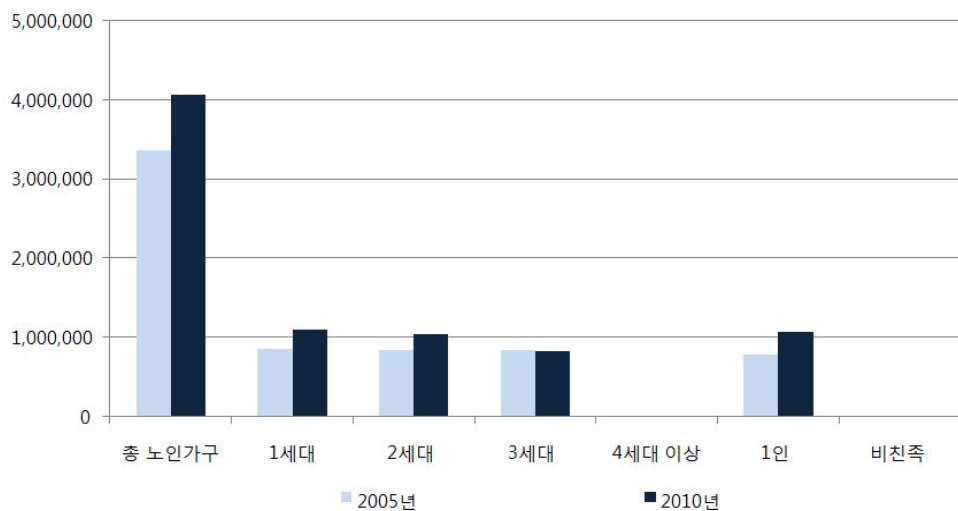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 노인가구 구성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전체 노인가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3세대 가구 및 4세대 이상 가구의 수는 감소하였고 1세대, 2세대 및 1인 가구의 수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5] 노인가구의 구성(2005, 2010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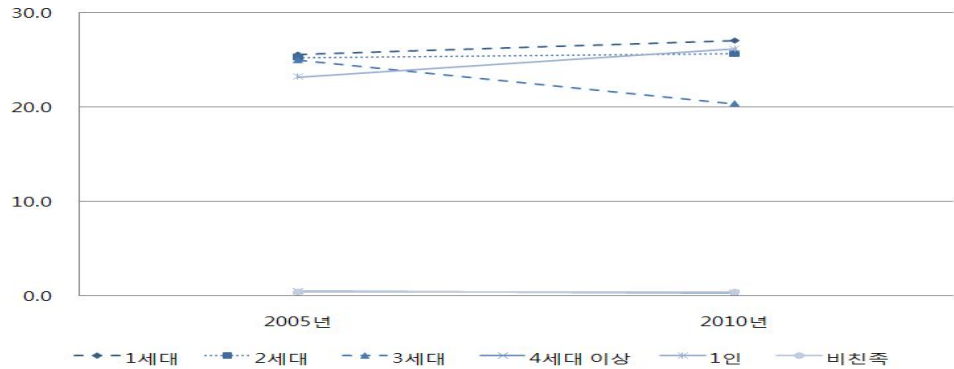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이러한 변화는 각 년도의 전체 노인가구 대비 각 가구유형의 비율 간 변화를 따져보았을 때도 확인된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도에 23.2%에서 2010년도에 26.2%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3세대 가구의 비중은 25%에서 20.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및 이에 대한 선호가 자녀, 노인세대에게서 모두 감소하여 자녀결혼 이후에 부부단독가구를 형성하거나 배우자 사망 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6] 노인가구의 비율(2005, 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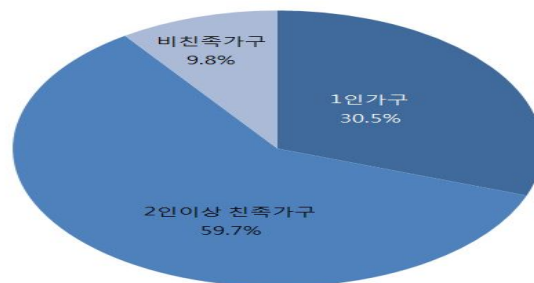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다문화가구

2010년 기준 총 다문화가구 수는 386,977로 이는 전체 일반가구(17,339,422)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전체 다문화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는 2인 이상의 친족가구(전체 다문화가구의 약 59.7%)이며 1인 가구도 전체 다문화가구 중 약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는 1990년대에 노동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고 혼인이주를 동반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 확산되었다.

[그림 3-37] 다문화 가구(2010년)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족형성 : 가족가치]

## ■ 배경

가족가치는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가족구성, 출산, 양육, 돌봄, 부양 등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가치는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 성원들의 가족관련 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가족가치가 혼인, 출산, 가구구성 등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인은 아니며 가족가치의 변화 자체도 사회구조적, 문화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가치는 사회구조적, 경제적 환경, 인구학적 요인 등과 더불어 혼인, 출산, 가구구성 등의 가족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혼인이나 출산이 어려운 사회구조적 환경에 처했을 때 가족가치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혼인이나 출산이 더 연기될 수 있다. 선행연구도 혼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거나 성역할분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삼식, 2006). 또한 자녀에 대한 태도도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및 부부 중심 가치관을 갖는 경우에 비해, 부부중심 가치관이나 가족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자녀출산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 Keizer, 2015). 이 상자녀수에 대한 태도도 다자녀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성역할 규범은 가족 내 가사노동 분담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일·가정 양립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통 성역할 규범이 전통적일수록 여성은 가정 내 출산과 양육만을 주로 담당하고 이에 따라 출산률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국제 비교연구는 성역할 규범과 출산은 U자형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성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통적인 성규범을 가진 나라에서 성평등적인 가치관으로 옮겨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출산율을 증가하였다(Arpino, Esping-Anderson & Pessin, 2015).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의 변화도 노인들의 삶과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부양의 책임은 자녀 등의 가족에게 있다는 가치관이 쇠퇴하고 자녀와의 동거필요성

에 대한 의식이 감소할수록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가족가치는 세부항목에 따라 다양한 범주를 포함할 수 있는데, 가족가치와 관련된 통계로는 혼인필요성, 자녀필요성, 이상 자녀수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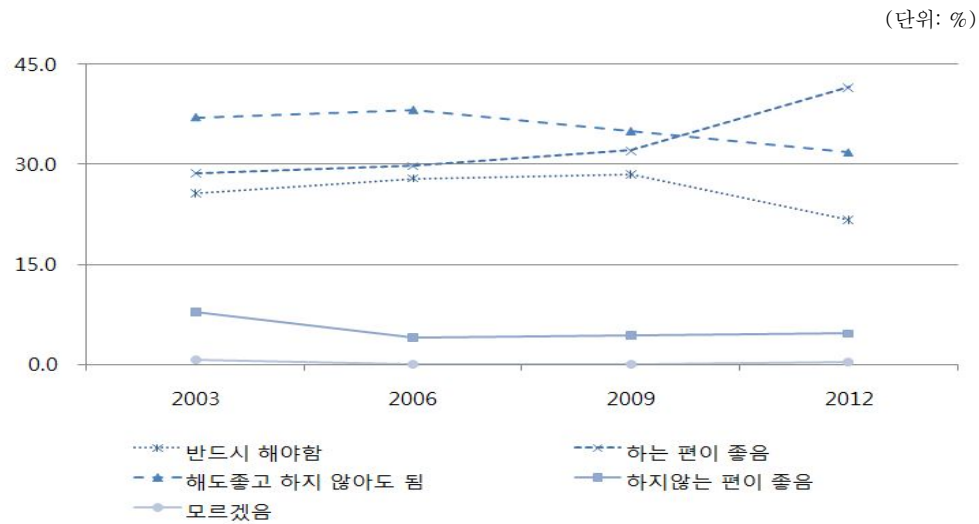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혼인필요성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평균초혼연령, 비혼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2000년대 이후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15-64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시기별로 크게 변동하지는 않으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기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7%였으나 2013년 기준으로는 21.7%였다. 2013년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답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하는 편이 좋다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로 이동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의견은 2003년에 37.1%였으며 2006년, 2009년에 걸쳐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31.8%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전체적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가족과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3-38] 혼인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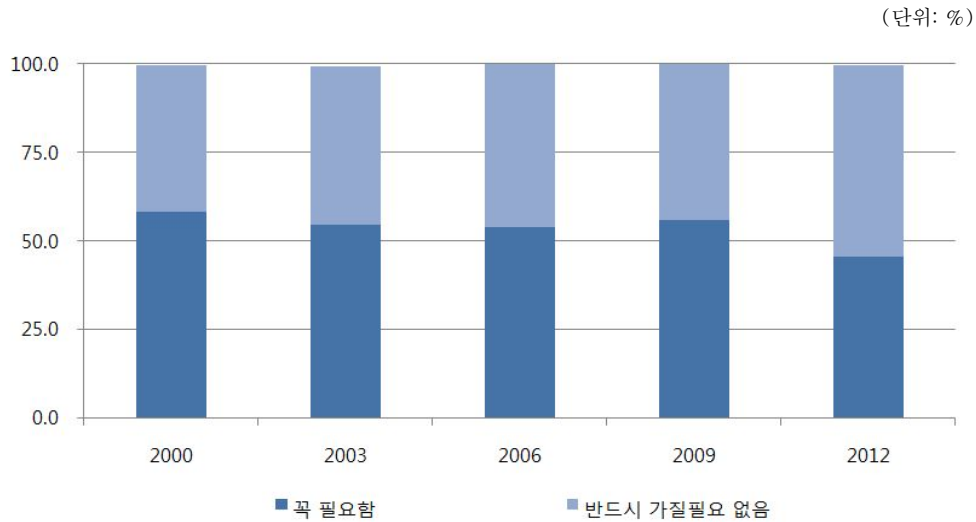


주: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 □ 자녀필요성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녀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4세의 유배우자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에는 응답자의 58.1%가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으나 2006년에는 53.8%, 2012년에는 45.5%만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응답으로서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0년에는 41.5%였으나 2012년에는 54.1%를 차지하였다.

[그림 3-39]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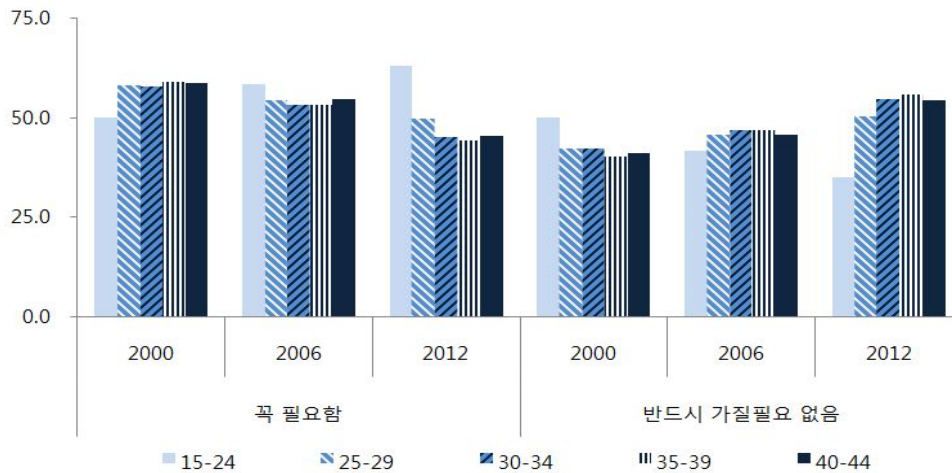


주: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여성들의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3년 후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5-24세 연령대의 여성의 경우는 2012년에 오히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전 시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사결과가 유배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유배우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자녀중심적인 가족가치관에서 부부, 개인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강해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육체계는 부재함으로써 자녀양육이 가져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림 3-40] 연령대에 따른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03-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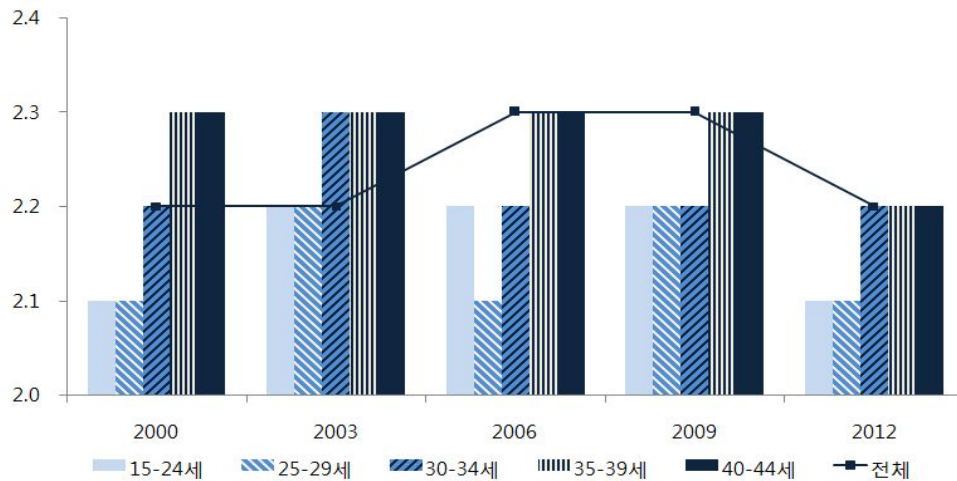
주: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 □ 이상 자녀수

15-44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2000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평균 이상 자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이상 자녀수가 2.2였으나 2006, 2009년에는 2.3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2년에는 다시 2.2명을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 이상 자녀수를 확인해보면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30세 이상의 유배우부인에 비해 젊은 연령대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증대되는 과정 속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감소하는 현상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1] 이상 자녀수(2000-2012년)

(단위: 명)



주: 2012년 자료는 유배우부인의 부재로 인하여 대리응답한 남편의 응답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 나. 여성/젠더

### [양성평등]

#### ■ 배경

양성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젠더 구조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젠더 구조는 생물학적 성별 차이를 넘어서서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양성불평등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동시장 진입기회의 차이,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임금격차, 여성관리자 비율, 가족 내에서는 성별 역할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인구변동에서 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가 부(-)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었다. 경제학자 Ahn & Mira(2002)연구에 따르면 발전국가에서 여성경제활동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고 이 결과는 통계적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미시적 분석에서는 취업여성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과 출산이 부적(-)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결혼 및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events)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잘 드러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또 한가지 쟁점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수준이다. McDonald(2000)는 개인적 성평등 수준과 가족제도 내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큰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따라서 출산율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 중 하나는 성별 임금격차이다.

McDonald의 논의를 연장하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주의적 경향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부인은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은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은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 부부간 의사결정 구조 등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가족 내 가사분담과 양육활동 분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의 가사 및 양육 활동 시간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 내 취업여성일지라도 가사 및 양육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여성의 가사 및 양육 활동 시간은 취업여성에게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간할당의 불평등은 출산의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시간압박이 출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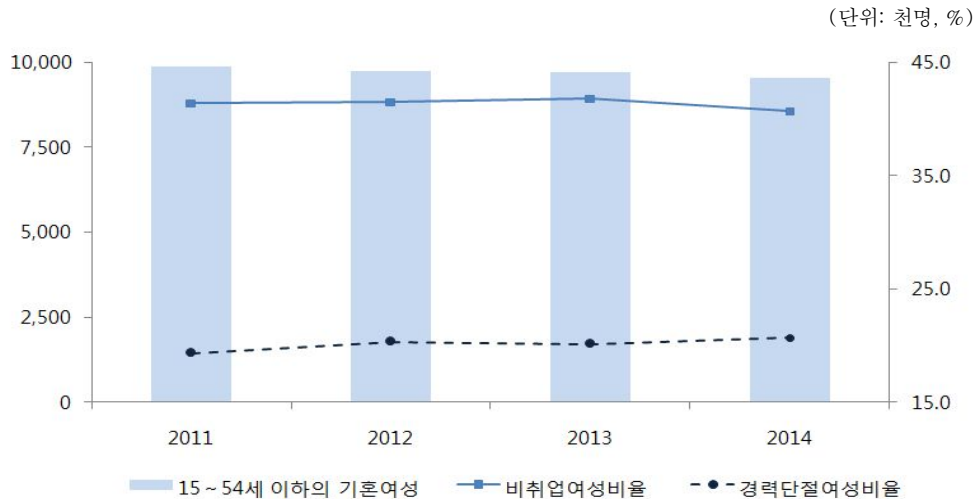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비율

1980년 이전까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은 반비례 경향이 있었지만, 주요 발전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을 함께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80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을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비율은 2011년 41.4%에서 2013년 41.8%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4년 40.7%로 감소하였지만,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2011년 19.3%에서 2014년 20.7%로 미미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3-42]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2011-2014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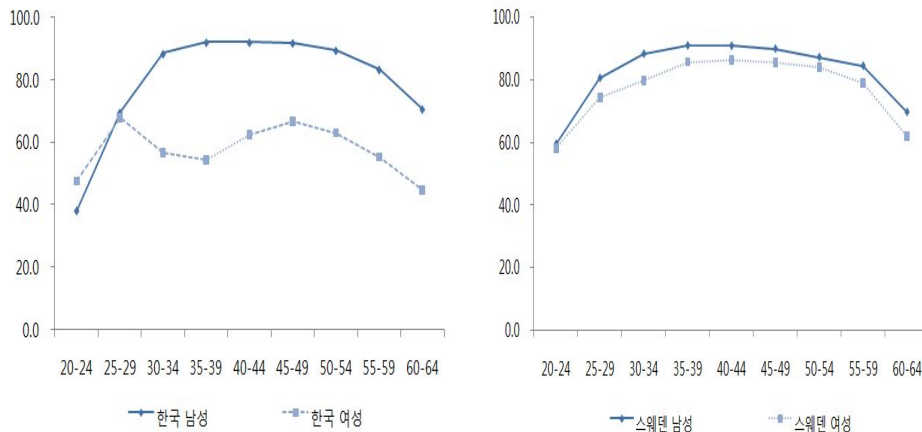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의 성·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25-40세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성별 취업률의 차이는 연령대별로 1.4~8.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성별 취업률은 최대 37.7%의 차이를 보이며 여성의 취업률은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후반의 경우 성별 취업률 차이는 1.5%에 불과하지만, 30대 초반 성별 취업률 차이는 31.7%로 급증하고, 30대 후반의 경우 37.7%로 가장 큰 성별 취업률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 뿐 아니라, 외국 여성들에 비해서도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 여성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24세 여성들의 취업률이 58.0%로 한국여성들의 38.1%에 비해 약 20%p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 여성들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30대 후반의 경우 85.7%에 이르지만, 한국 여성들의 경우 20대 후반의 취업률이 68.5%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후 30대의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30대 후반 여성들의 취업률은 54.4%로 스웨덴 여성들에 비해 취업률이 약 30%p 낮은 수준이다.

[그림 3-43] 스웨덴과 한국의 성·연령별 취업률(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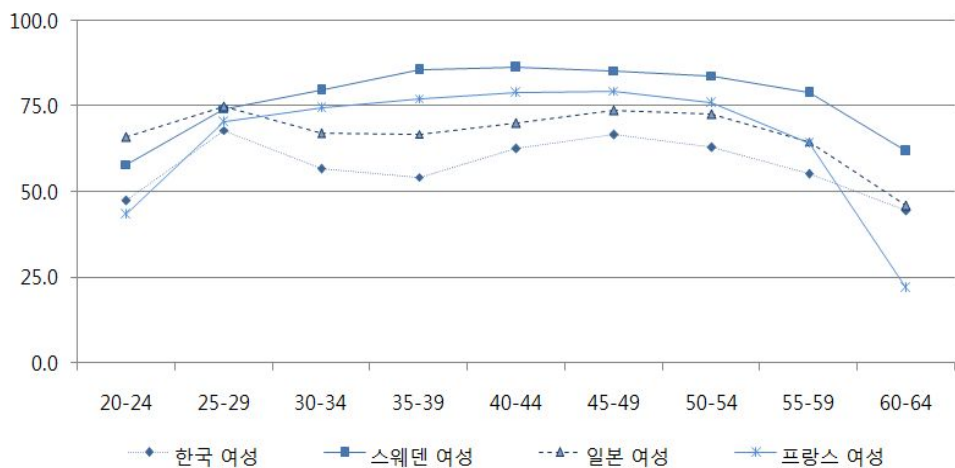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의 원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 2014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LMF1.4).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30-40대의 취업률이 80~90%대로 높은 역 U자형 그래프를 보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 30-4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일어나는 30대 후반의 여성취업률은 50%대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서도 약 10%p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전 연령대의 여성취업률이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림 3-44]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국제비교(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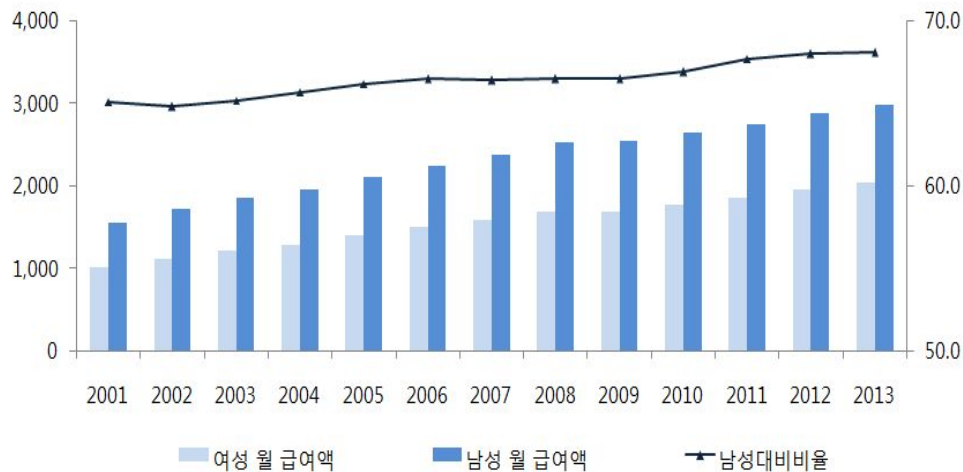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의 원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 2014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LMF1.4).

#### □ 임금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출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월 급여액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2001년에는 여성의 월급여액은 남성의 65.1% 수준이었으나, 2013년의 여성의 월급여액은 남성의 68.1%로 약 3%p 상승하였다.

[그림 3-45] 성별 월급여액과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01-2013년)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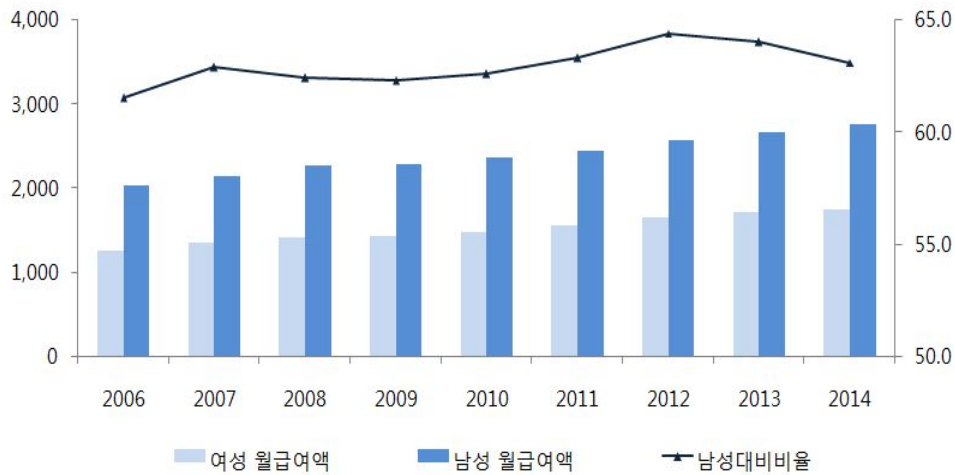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5인 이상 기준)」, 각년도.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성별임금격차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 성별임금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2006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은 66.5% 였으나, 1인 이상 사업장은 61.5%에 불과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1인 이상 사업장은 2012년 이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월급여액 평균은 1,742,00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의 평균 임금 2,986,146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46] 성별 월급여액과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1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06-2014년)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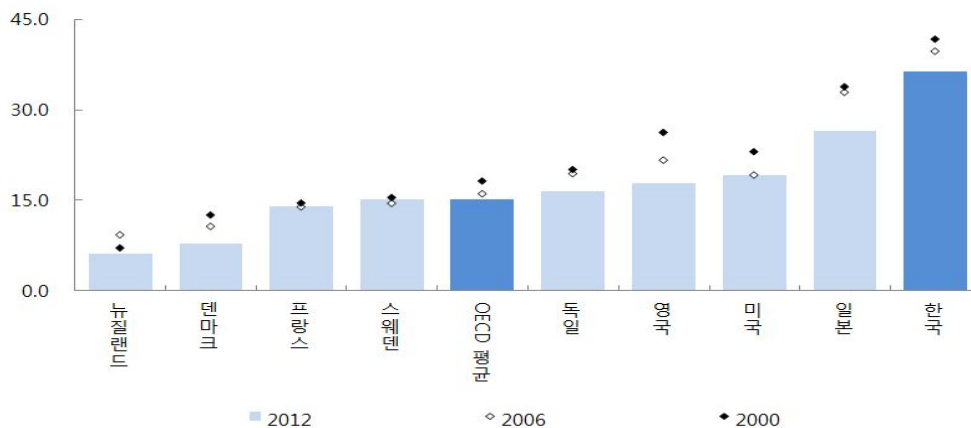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인 이상 기준)」, 각년도.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일제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는 뉴질랜드(6.2%)이고, 한국은 36.3%로 37개국 중 가장 성별임금격차가 큰 나라로 나타났다.

[그림 3-47] OECD 주요 국가의 성별임금격차(2000-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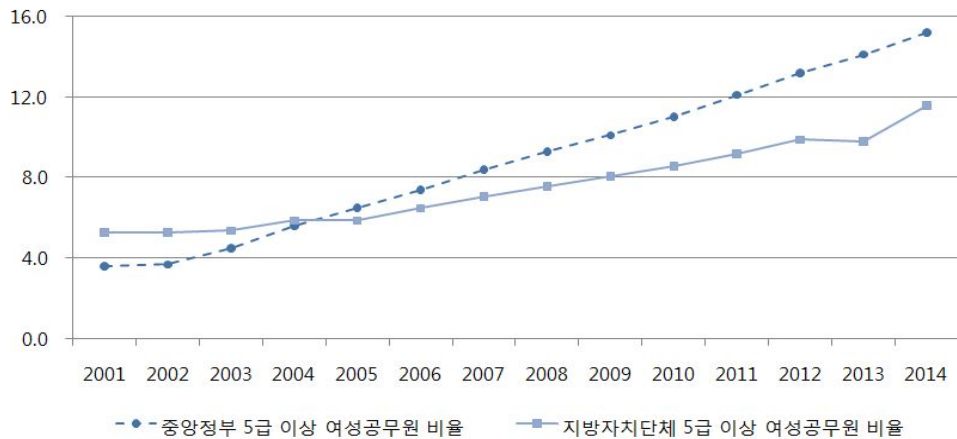
주: OECD Family database의 원자료는 OECD Employment Database 2014 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LMF1.5).

## □ 여성 관리자 비율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관리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먼저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로 인해 2001년 중앙정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3.6%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5.3%에서 11.6%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48]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2001-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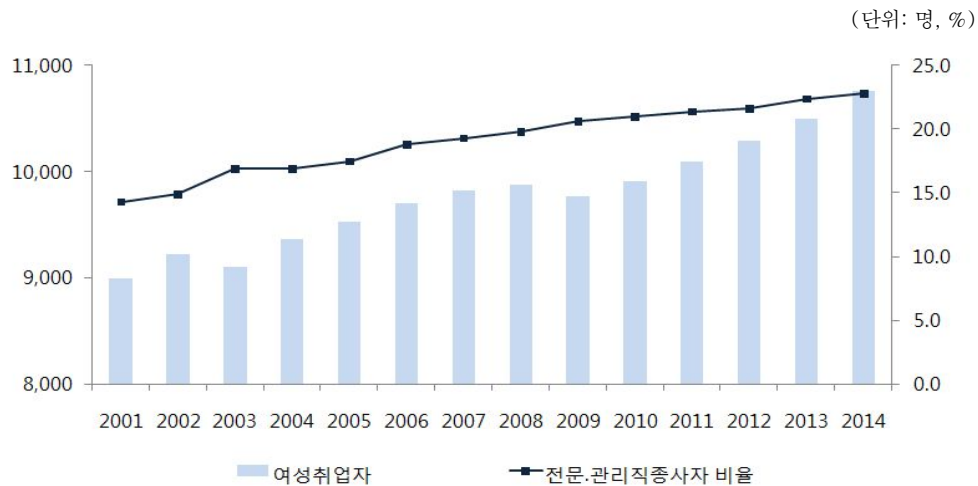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안전행정 통계연보」, 각년도; 인사혁신처, 「인사통계」, 각년도; 행정자치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2010.

민간영역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2001년 14.3%에서 2014년 22.8%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 전문직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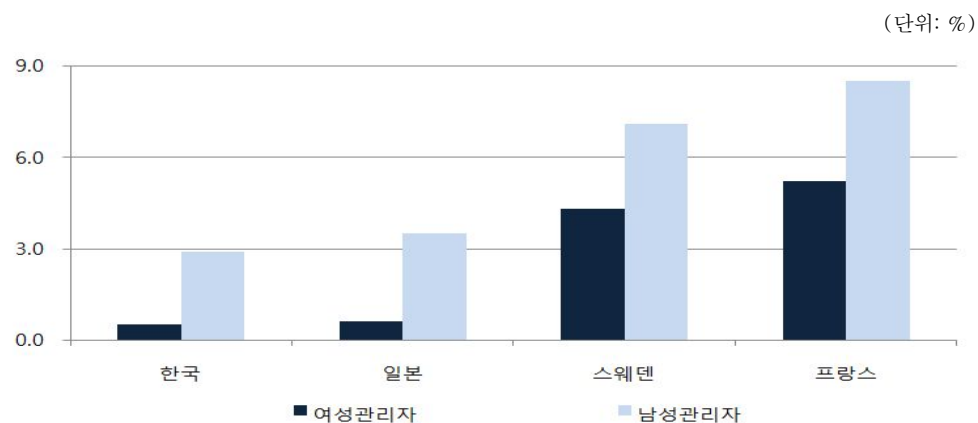
[그림 3-49]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2001-201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요 OECD 국가들의 가장 최근(2013년 혹은 2012년)의 성별 관리직 비중을 살펴 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관리직 비중이 여성에 비해 각각 1.6배, 1.7배 높은 수준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8배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여성 관리직 비중은 0.5%에 불과해 프랑스 5.2%의 1/10 수준이다.

[그림 3-50] OECD 주요 국가의 관리직 비율 성별 비교(2013년 혹은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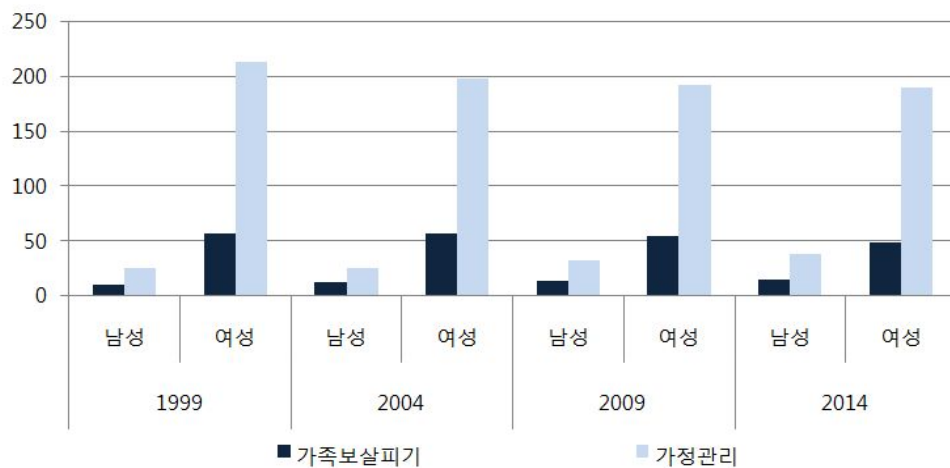
주: OECD Stat의 원자료는 ILO, ILO STAT database 임.  
 자료: OECD Stat, 「Proportion of employed person with managerial responsibilities, by sex」.

## □ 가사노동시간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정 내에서 성평등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통계자료이다. 1999년 남성이 하루 평균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11분에서 2014년 15분으로 4분 증가하였고,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은 25분에서 38분으로 13분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이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57분에서 49분으로,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은 213분에서 189분으로 각각 8분, 24분씩 줄어 들었다.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미미하지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성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략 3배 많은 시간을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약 5배 많은 시간을 가정관리에 쓰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으로 인해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성들의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중·후반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51] 성별 가사노동시간(1999-2014년)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 다. 고용/노동

### [고용]

#### ■ 배경

‘일’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한 사회가 재생산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여건이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문제가 핵심 정책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고 노동시장 유연성증대는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안정적 일자리에의 진입 및 유지는 생계유지와 인생설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청년세대의 경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임에도 일자리가 없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경우 사회진출 혹은 독립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소위 ‘3포 세대’나 ‘헬 조선’이라는 표현은 고용문제에서 기인한 청년세대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용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삶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재생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 뿐 아니라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낮거나 자신의 역량에 비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유희인력 혹은 저활용노동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생산가능인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잠재경제활동참가자를 줄이고 취업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만간 도래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관련 정책이 보다 핵심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고용이 대체로 정규직 일자리의 특성을 지녔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비표준 고용’이라는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앳킨슨, 2015). 이 결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임금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임금불평등은 고용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

다.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비정규고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불평등이 클 경우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격화되고 이는 노동시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율,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기업을 향한 긴 노동대기열(labor queue), 공시족 등은 임금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고용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임금불평등 해소에 일차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여년 동안 고용문제가 핵심 정책현안으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고용관련 지표는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고용관련 지표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다. 고용관련 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사유, 고용형태, 평균 근속기간 등인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지표를 간략히 살펴본다.

## ■ 통계설명

### □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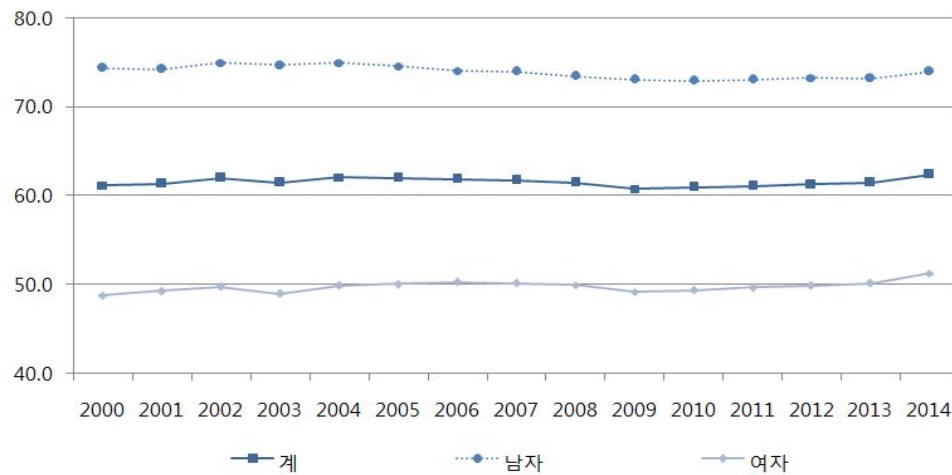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 사회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상황과 임금 및 사회복지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내내 61~62%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2000년 61.2%에서 2014년 62.4%로 지난 14년 동안 1.2%p 증가에 그쳤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산업구조 변화, 기계화 등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높은 고등교육참여율, 여성인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청년층도 높은 고등교육 참여율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미발달과 가구경제 유지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활동인구에서 5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장잠재

력 확보 및 기업의 생산력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용정도가 낮은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림 3-5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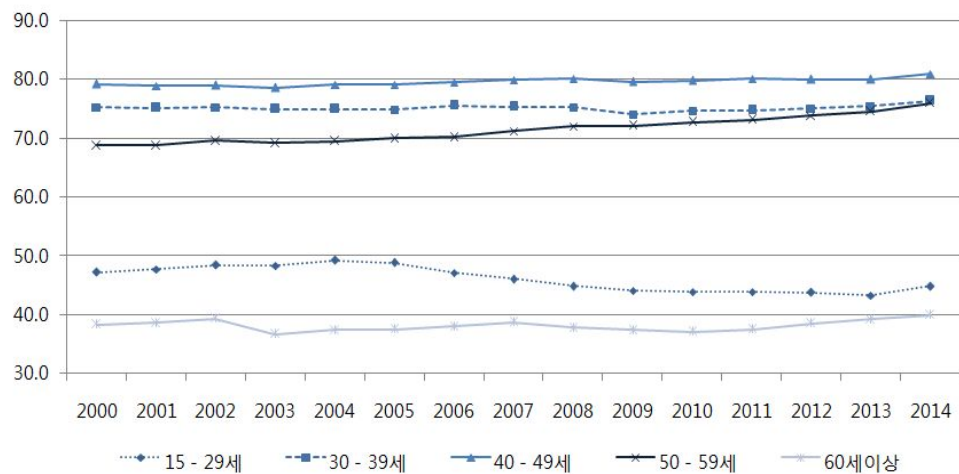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3-5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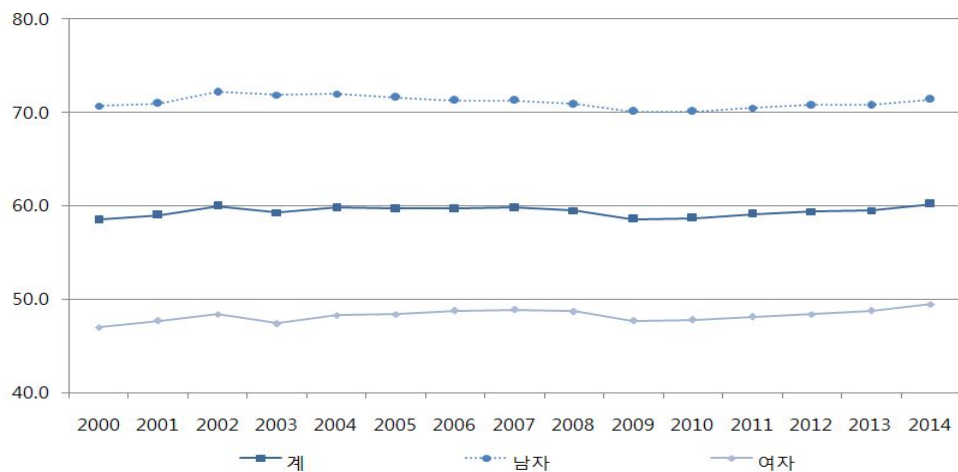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 고용률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14년 60.2%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인적 특성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50대(7.7%p)와 40대(2.7%p) 및 여성(2.5%p)의 고용률 증가폭이 컸다.

[그림 3-54] 성별 고용률(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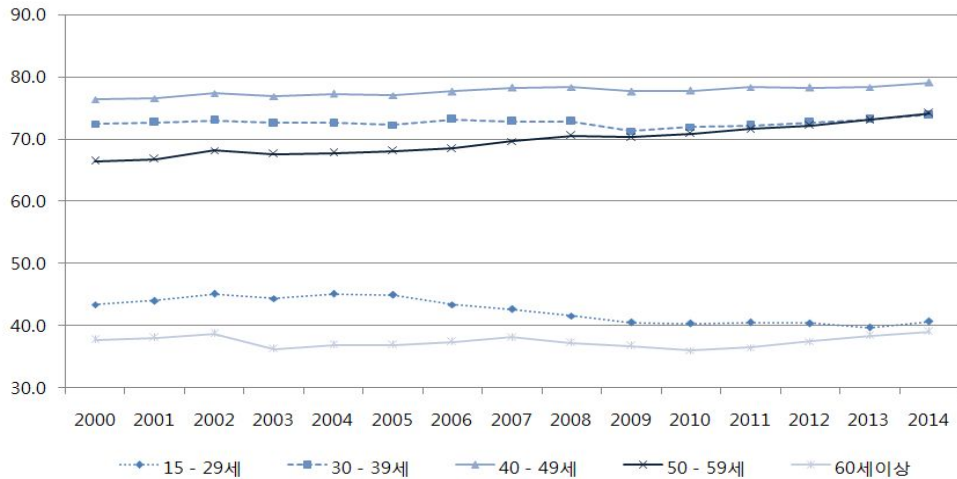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3-55] 연령별 고용율(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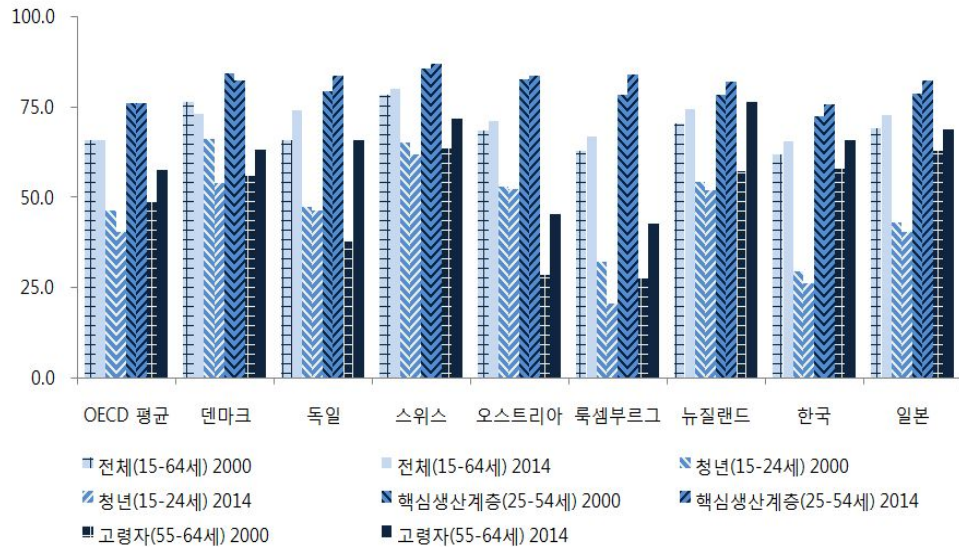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고용률(15~64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3%로 OECD 평균(65.8%)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북유럽국가와 직업 교육이 발달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0년 대비 고용률 증가폭을 보면 OECD 평균 0.2%p 증가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3.8%p)는 독일(8.3%p), 룩셈부르크 및 뉴질랜드(3.9%p), 일본(3.8%p)과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고용률이 상승했다. 연령 집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이 특징이다. 청년층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국 청년고용문제가 악화되어 우리나라와의 상대적 격차가 줄었지만, OECD에 비해 여전히 14.3%p가 낮은 수준이다.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도한 교육 참여가 원인이다. 고령자는 각국 정부가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3-56] OECD 주요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 비교(2000-2014년)

(단위: %)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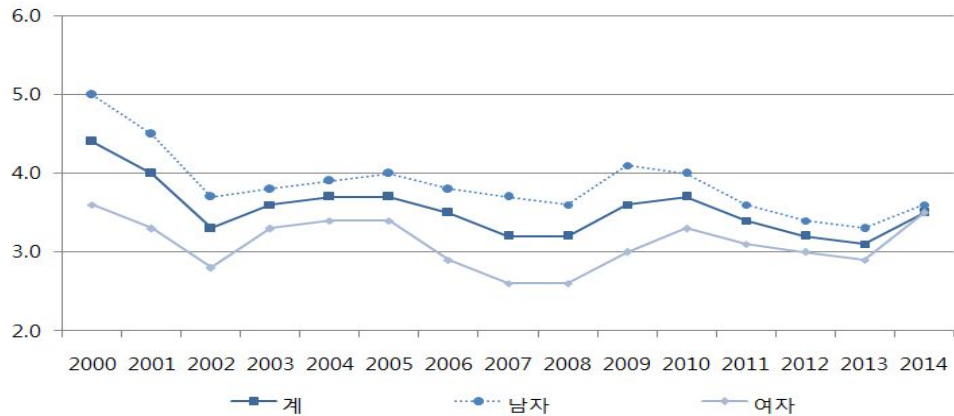
## □ 실업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로 경기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을 단념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져 실업문제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척도로 노동시장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3%대로 하락해 2014년 3.5%이다. 생산가능인구 기준 실업률은 3.7%로 노르웨이(3.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7.5%)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외견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실망실업자들이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다양한 실업률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3-57] 성별 실업률(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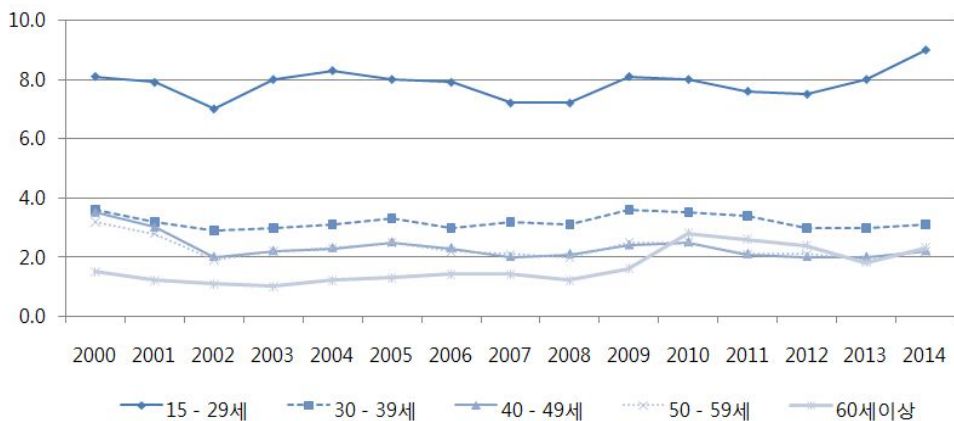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9.0%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은 2~3%로 매우 낮다. 2000년 대비 2014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청년층과 60세 이상에서만 실업률이 상승했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과 인구·제도적 요인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가 고령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실업률 증가로 나타났다.

[그림 3-58] 연령별 실업률(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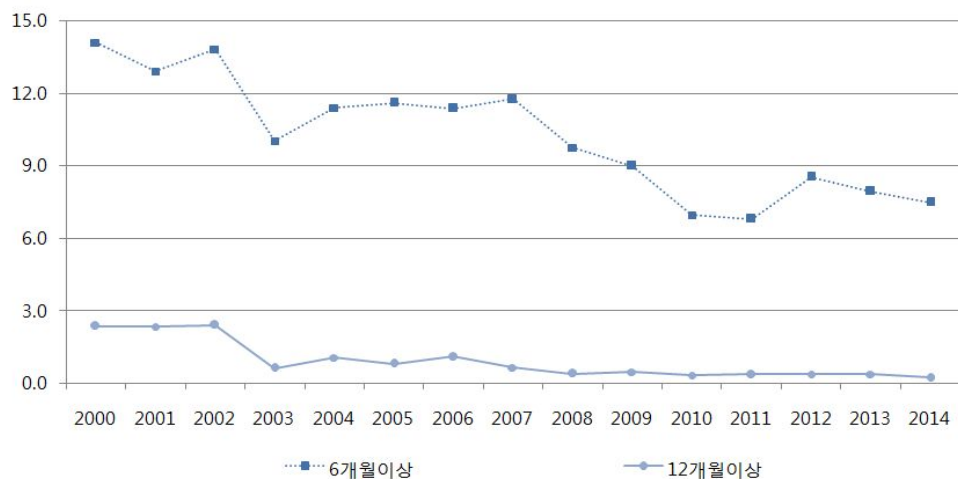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장기실업자는 실업상태가 6월 혹은 12개월 이상 지속된 자로 노동시장의 유효수요 부족과 사회복지제도 구비여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실업자 비중이 2014년 기준 6개월 이상은 7.5%, 1년 이상은 0.2%에 불과하다. OECD 국가(35.2%)와 비교할 때 극히 낮은 수준인데 높은 노동시장유연성과 중소기업의 상시적인 초과수요로 장기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수요 요건이 엄격해 장기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사회안전망 미흡도 중요한 요인이다. 장기실업은 소득의 차단으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직무수행 기술 및 지식을 마모시켜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인 고용정책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림 3-59] 장기실업자 비중(2000-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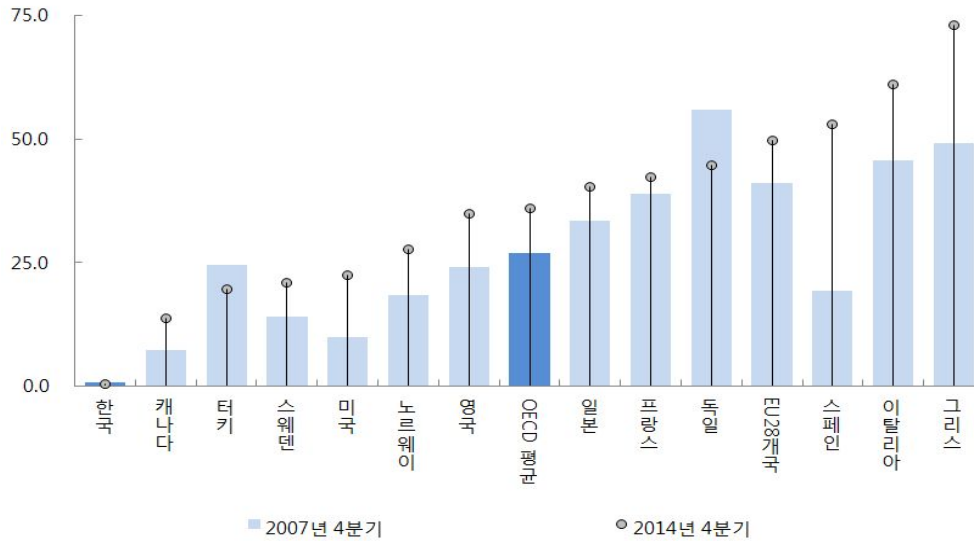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3-60] OECD 주요 국가의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2007년 4분기, 2014년 4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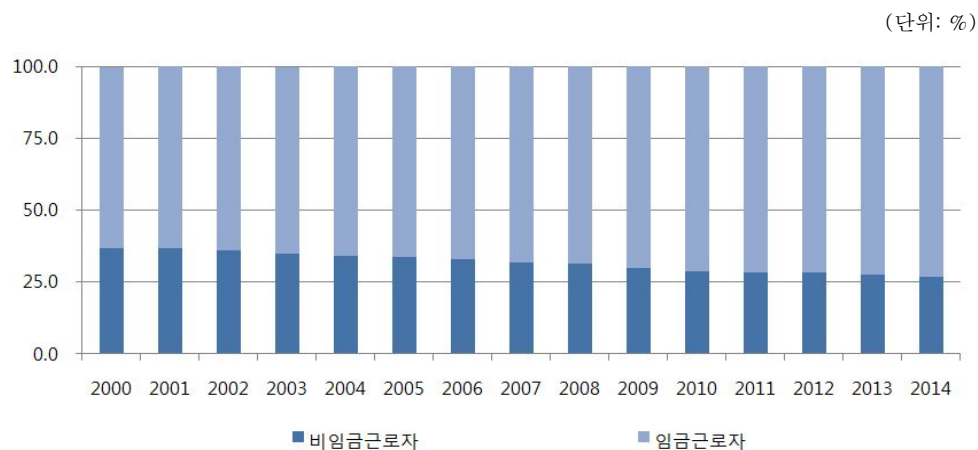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288.

## □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분포를 보면 우선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임금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2000년 63.1%에서 2014년 73.2%).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는 고용구조가 선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2013년 OECD 평균 14.6%). 비임금근로자 비중 하락은 자영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자와 가족종사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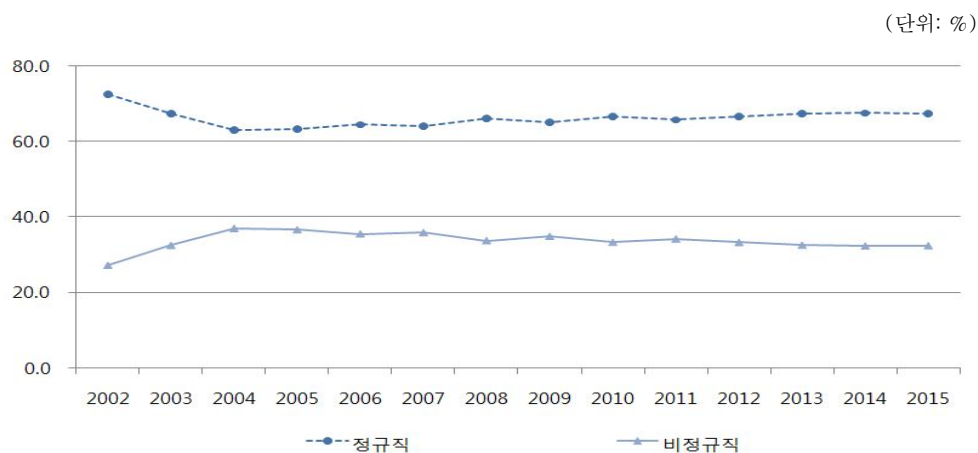
[그림 3-61] 종사상지위 분포(2000-201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정규직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이다. 2002년 임금근로자의 27.4% 수준이던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37.0%까지 증가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2014년 32.4%로 그 성과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으로 올수록 기업들이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파견 등의 형태로 외주화(간접고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62] 고용형태별 취업자 비중(2002-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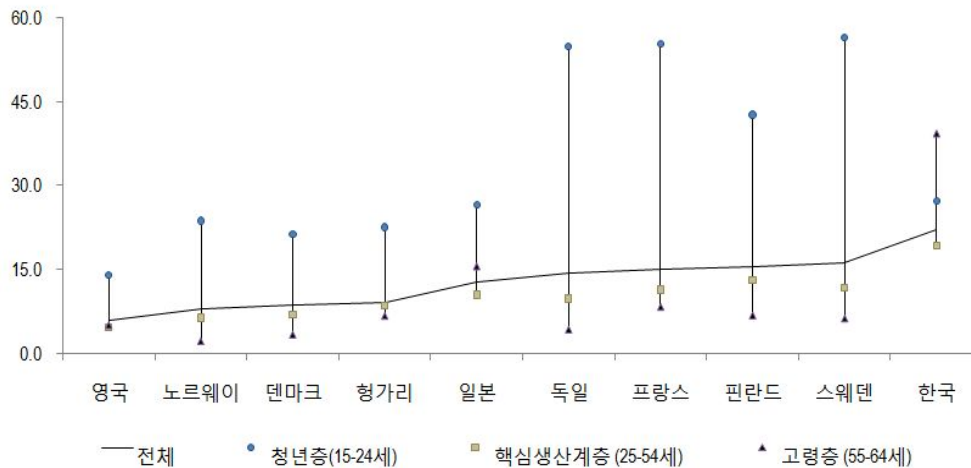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sup>4)</sup>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2014년 기준: 한국 21.7%, OECD 11.1%). OECD국가의 경우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은 낮고 핵심생산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그림 3-63] OECD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임시직 비중(2011-201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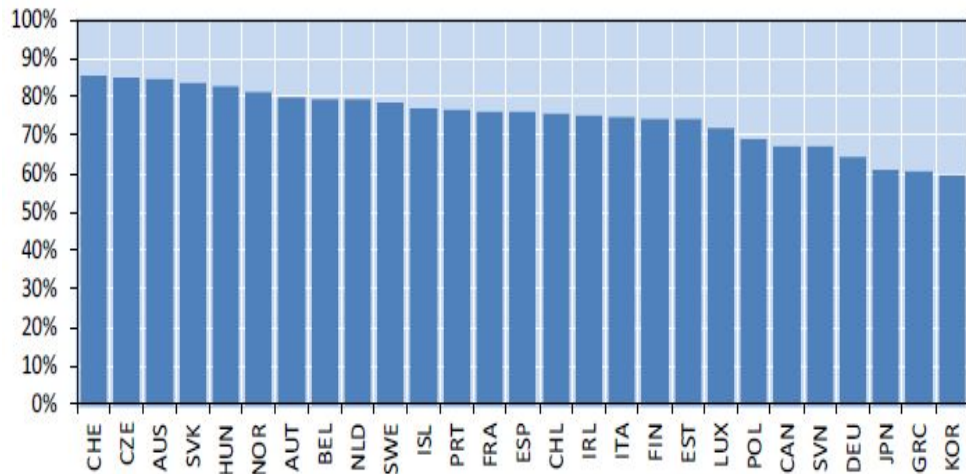
자료: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p.154.

보다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근로시간 격차에 비해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4%(2015년 8월 기준)에 불과한데, 2008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중위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0% 수준으로 그리스, 일본과 함께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사회보험가입률(30~40%) 역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클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혼인이나 출산을 유예·단념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4)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제+단기계약+파견+일일근로자를 임시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3-64] 국가별 정규-비정규간 중위임금 격차(2008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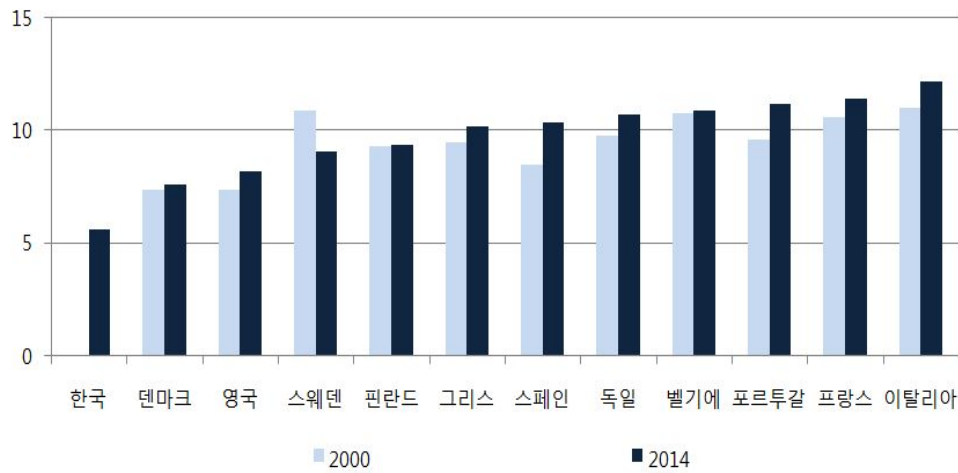
자료: OECD(2012), Inequality in labour income—what are its drives and how can it be reduced?, p. 4

## □ 근속

근속은 노동자의 숙련형성과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근속기간 추이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함께 근속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대부분의 국가가 10년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년에 불과하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높은 비정규직 비중 때문이다. 이 결과 1년 미만 초단기 근속자 비중이 30.8%로 OECD 평균(17.5%)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적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짧은 근속은 고용불안정과 숙련습득 및 전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65] OECD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2000,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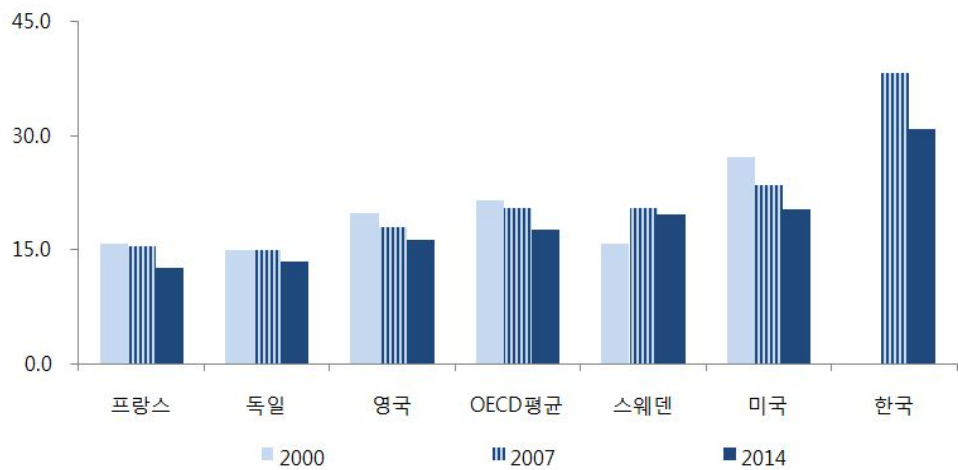
(단위: 년)



자료: OECD Stat, 「Employment by job tenure intervals - average tenure」.

[그림 3-66] OECD 주요 국가의 1년미만 단기근속자 비율(2000-2014년)

(단위: %)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282.

## [노동]

## ■ 배경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가진 불리한 특성 때문에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약자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은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노동관련 기준은 근로기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재해 등 비교적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데 작업현장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정해 사용자의 과도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착취로부터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호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직업병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과 작업장 안전에 대한 경시는 생산력의 유지·보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임금에 기반한 장시간 근로관행이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지식경제시대에는 맞지 않는 고용관행이다. 장시간근로가 오히려 조직과 노동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노동력이 조기 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동자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고용관행의 확산과 함께 고용창출이 최대 정책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각국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되었다. 이 결과 고용안정성이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과도한 자기착취로 이어졌다. 가구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장기간근로는 가구 내 재생산 구조를 약화시켰으며 ‘위험의 외주화’ 전략은 취약집단 노동력의 조기 소진·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규제

완화는 일자리창출보다는 근로조건 악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처럼 육아교육문제 외에 일자리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정비·준수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매우 긴급하고도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노동관련 지표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영역이므로 비교적 다양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관련 지표로는 임금(임금불평등),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사분규 분규 등인데 이하에서는 임금수준, 임금불평등 및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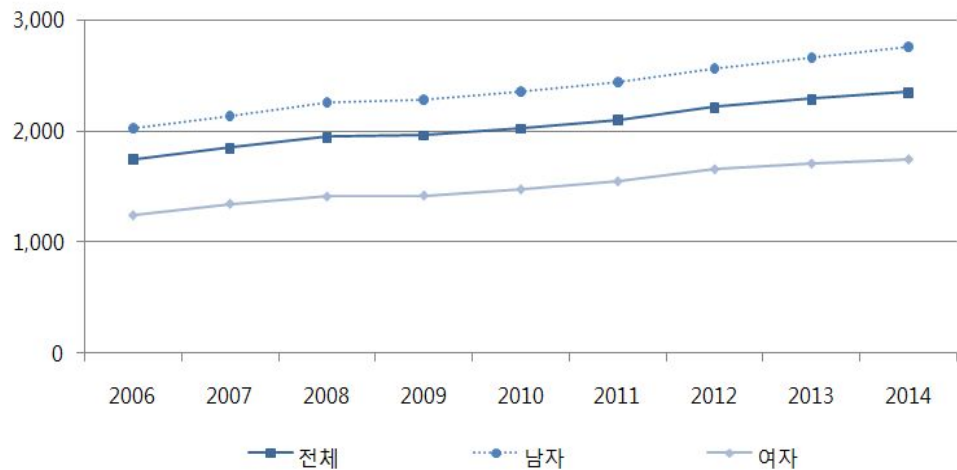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임금수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06년 174만 2천원에서 2014년 235만 3천원으로 연평균 3.8% 상승하였다. 1990년대까지 10%에 가깝게 명목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 전략’의 한계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자 특성별로 구분해보면 성별, 종사상지위별 그리고 학력별로 격차가 큰 편이다.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2006년 54.7%에서 2014년 48.4%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학력별로도 고졸자를 기준으로 중졸 이하자는 소폭 하락, 전문대졸 이상자는 소폭 상승해 학력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3-67] 성별 월급여액(2006-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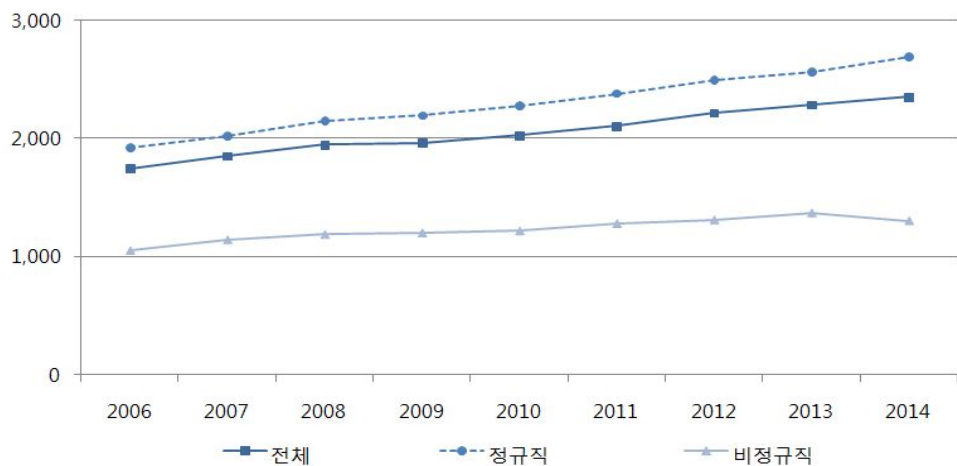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고용노동통계」의 원자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년도.

[그림 3-68] 고용형태별 월급여액(2006-2014년)

(단위: 만원)



주: 「고용노동통계」의 원자료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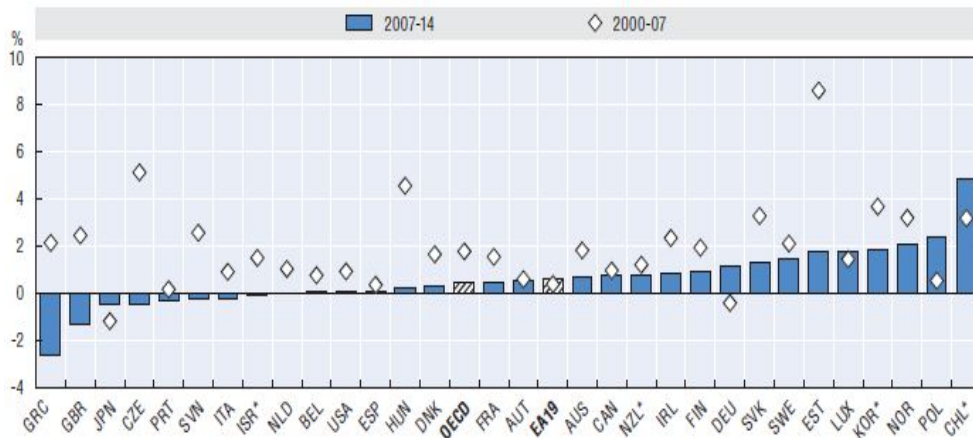
한편, 아래의 [그림 3-69]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시  
간당임금 변화율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상승폭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 대비 임금상승률이 낮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종규(2013)는 2008년 이후 기업저축이 가계와 내수를 고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3-69] OECD 주요 국가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연평균 시간당임금 변화율

(단위: %)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 33.

#### □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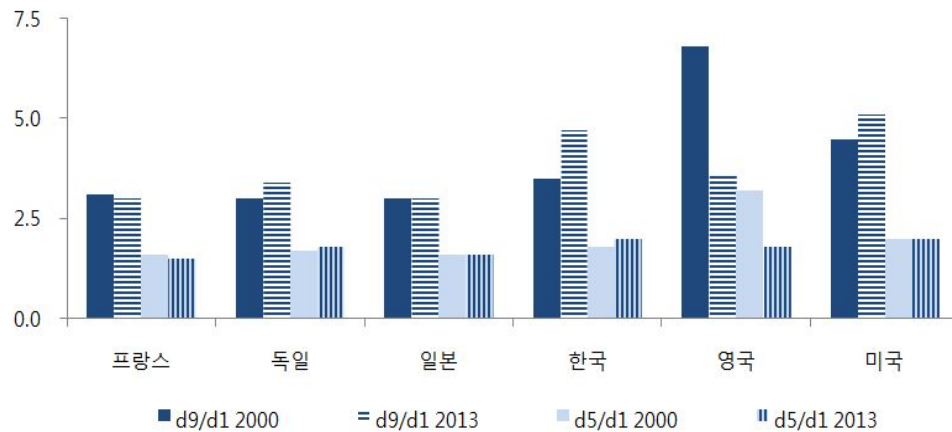
앞에서 근로자 특성별로 임금격차가 큼을 확인하였는데 임금10분위 배율을 통해 임금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불평등 정도는 10분위 배율인  $d9/d1$ ,  $d5/d1$ ,  $d9/d5$  및 저임금근로자비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임금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이다. 1995년에는  $d9/d1$  비율이 3.2에 그쳤으나 계속 확대되어 2013년에는 4.7에 달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3.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d5/d1$ 도 2.0으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국가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간 임금불평등정도가 높은 것은 앞의 고용파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장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24.7%로 OECD평균(17.1%)에 비해 7.6%p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과

도한 임금불평등은 보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노동공급 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등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림 3-70] OECD 주요 국가의 임금분포 추이(2000, 2013년)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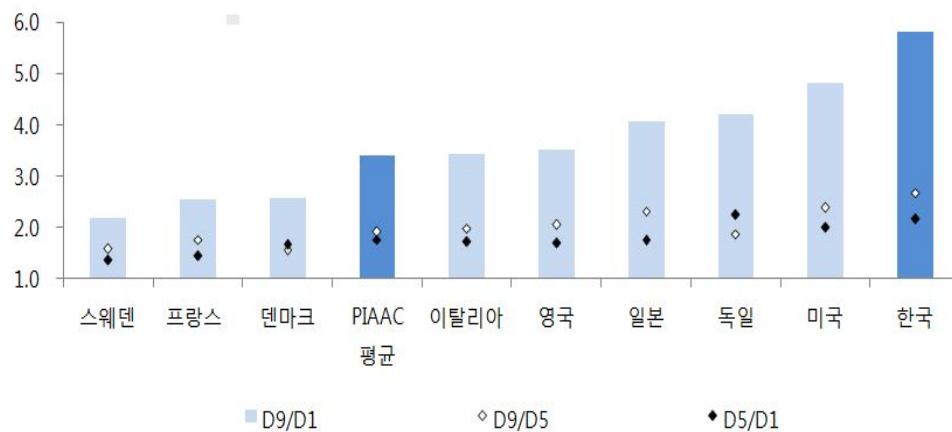


주: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의 2/3 이하자임

자료: 노사정위원회(2014), 2014 임금보고서;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그림 3-71] PIAAC 주요 국가의 임금불평등 지수(2012년)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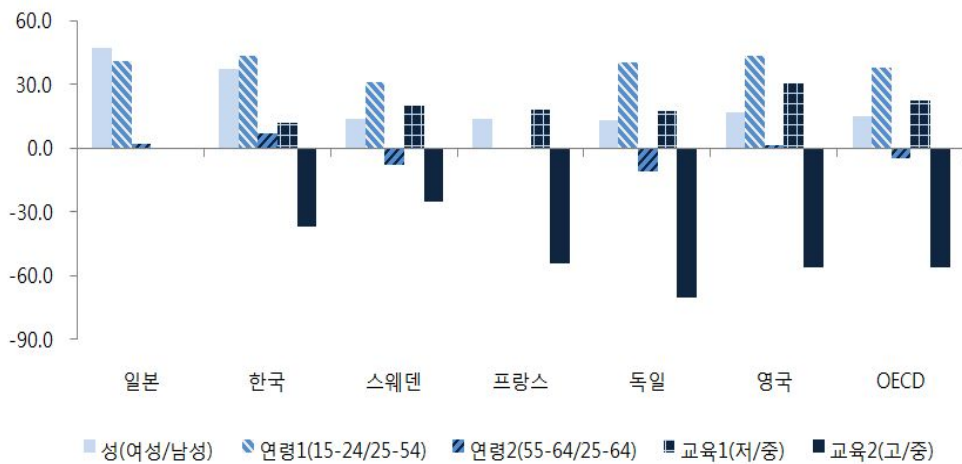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67.

인적특성별로 상대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성 및 연령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여성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OECD 평균 15%이지만 우리나라는 37%가 낮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핵심생산계층 대비 청년층 임금이 과도하게 낮으며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 임금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일본만 임금이 소폭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학력별 임금격차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3-72] OECD 주요 국가의 성, 연령 및 학력별 상대임금(2003, 2013년)

(단위: %)



자료: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p.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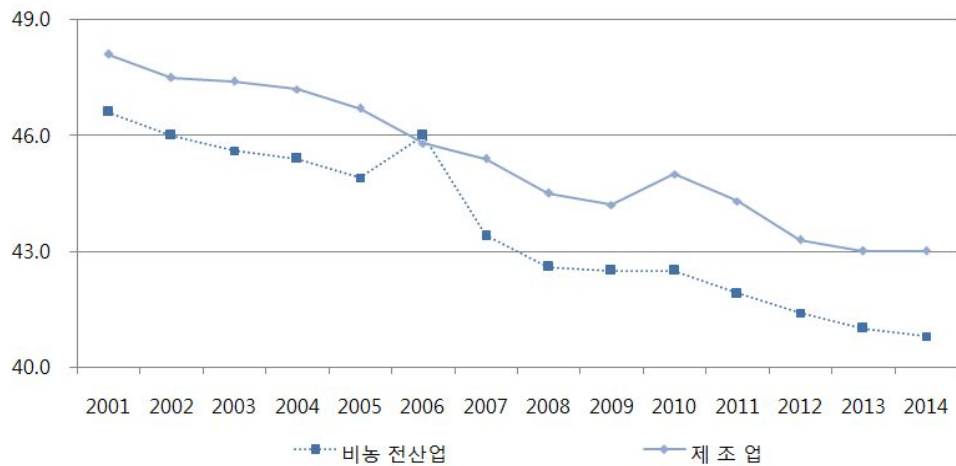
#### □ 근로시간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삶의 질 악화, 노동생산성 저하,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간대별로 노동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공급 유연성을 제약했으며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축소, 낮은 노동생산성을 연결되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잦은 야근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수면으로 주말을 보내거나 가족 간 대화 부족 등 일-가정 양립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장시간근로는 이

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체질개선,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갖는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노사정도 현재의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의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10인 이상 사업장: 1987년 51.9시간 → 2014년 40.8시간)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이다.

[그림 3-73] 주당근로시간(2001-2014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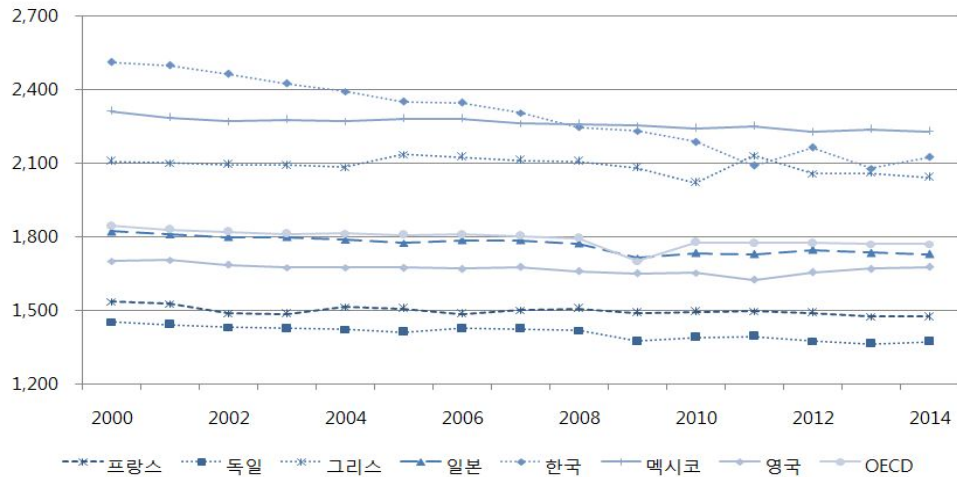
주: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호; 한국노동연구원(2015), 「KLI 노동통계」, p. 108에서 재인용.

OECD 주요국의 연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2,512시간으로 OECD국가에서 가장 길었으며 OECD 평균(1,843시간) 대비 무려 36.3%가 길었다. 이후 주5일제 시행으로 근로기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2,124시간으로 OECD 평균(1,770시간) 대비 20%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연장·휴일근로를 통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근로자도 잔업·휴일 특근에 따른 단기적 임금증을 선호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그림 3-74]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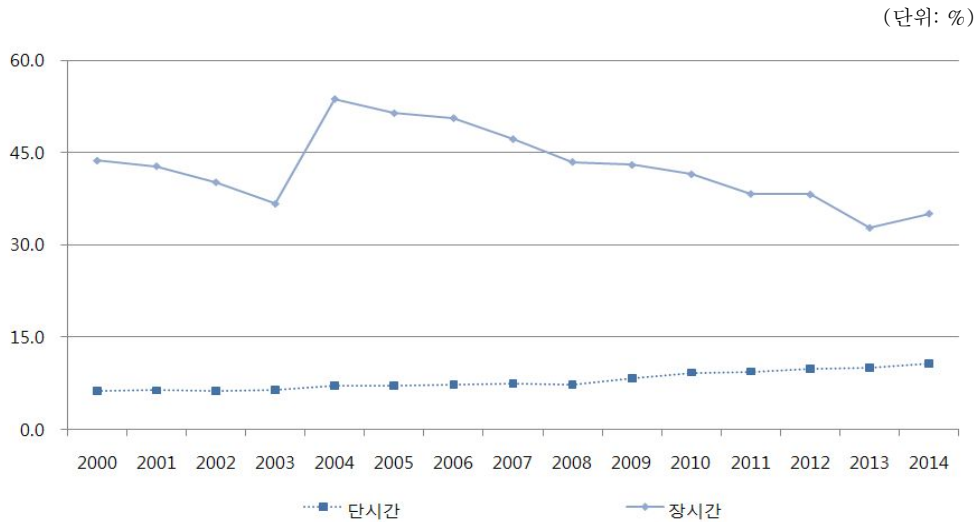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ours Worked」.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단시간 및 장시간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비율의 증가와 장시간근로자 비율의 하락이 뚜렷하다. 단시간근로자 비중 증가는 여성 및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이들은 주로 임시·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비전형근로의 증가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결과이다. 반대로 근로시간 감소를 반영하듯 장시간 근로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주5일제, 교대제보급 등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축의 효과이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보면 저학력자와 상용직에서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량 공급했지만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불평등 확대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내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75] 장·단시간 근로자 비율(2000-2014년)



주: 1) 단시간 근로자는 평소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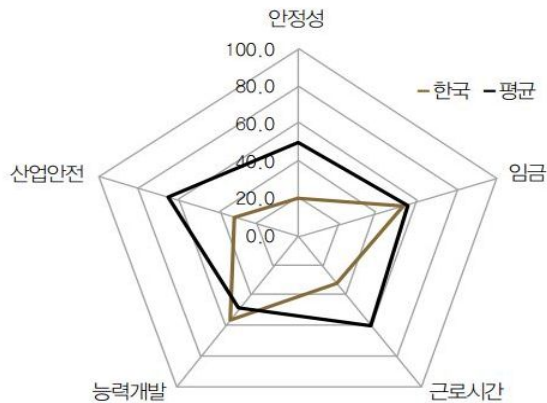
2) 장시간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주업+부업)이 48시간 이상인 근로자(03년까지는 52시간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2015), 「KLI 노동통계」, p. 112-113, 115-116에서 재인용.

현재 고용창출과 함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근로시간은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이다. 최근 조병수·김민혜(2015)는 고용관련 5개 항목의 7개 통계수치<sup>5)</sup>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고용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고용의 질 지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수 개선율: 한국 1.2%, OECD 0.6%), OECD국가와 비교할 때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임금과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을 보다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5) 5개 항목은 안정성(비정규직비율, GDP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실질임금),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능력개발(대졸이상 취업자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임(연합뉴스에서 재인용, 2015. 11. 5).

[그림 3-76] 우리나라와 OECD간 고용안정성 지수(2013년)



자료: 조병수, 김민혜(2015),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p.21.

## 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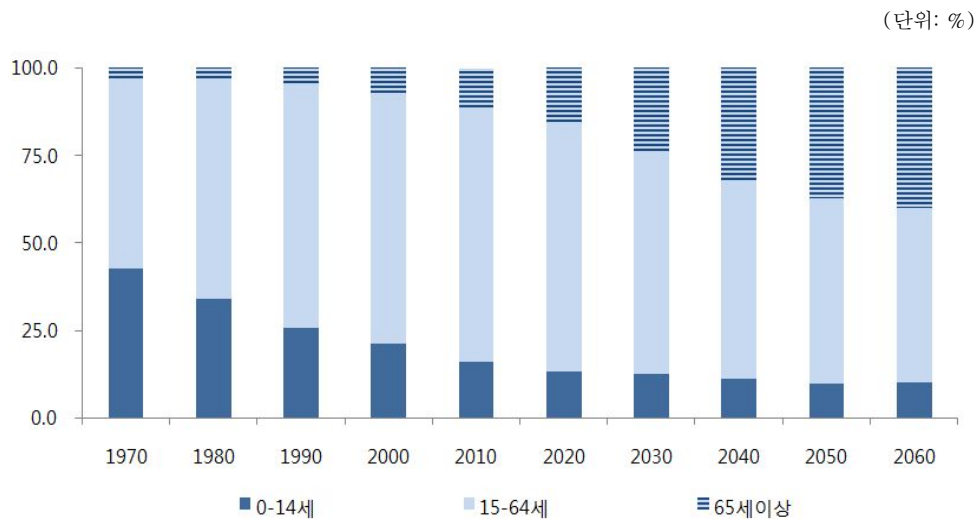
### ■ 배경

1970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약 6명으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출산억제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1983년 인구대체수준(2.1)으로 출산율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다(김태헌, 2012).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2014년 합계출산율 약 1.2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저출산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의 절벽 혹은 저출산의 늪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인구정책은 주로 인구의 양적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제는 인구의 양적 성장정책 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소영, 최인선, 2014). 이러한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

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적 접근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학생 1인당 공공지출을 늘리고 아동1인당 보육교육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인구의 질 제고 및 사회 충원기능을 통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정치, 경제, 인구 등)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인구학적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가 최근 들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7]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70-206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5,20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대상인 학령인구는 오히려 점차 감소될 것이다. [그림 3-79]를 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지만 노년인구의 비율은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에서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초·중·고·대학교의 입학정원의 미달문제, 대학교 정원감축문제, 교원 선발인원 축소문제, 학생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문제, 학교의 통폐합 문제, 폐교의 활용 문제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끼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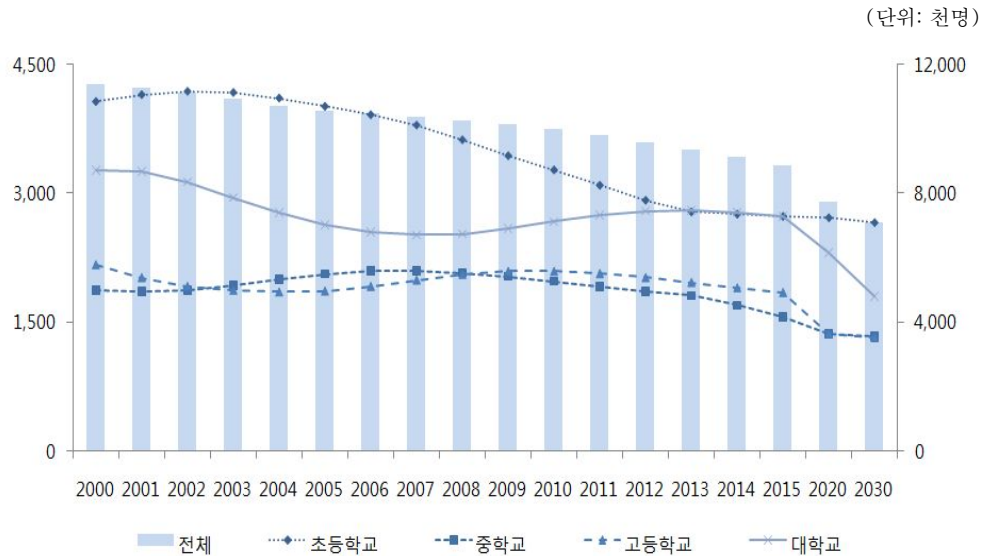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학령인구

학령인구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통계이다. 학령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 6세~21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이러한 학령인구는 6세~11세인 초등학교 인구, 12세~14세인 중학교 인구, 15세~17세인 고등학교 인구, 18세~21세인 대학교 인구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의 변화는 아래의 [그림 3-78] 과 같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 11,383천명이던 학령인구는 2005년에 와서 10,575천명으로 감소되었고, 2010년에는 10,012천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이용한 학령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8,874천명, 2020년에는 7,751천명, 2030년에는 7,11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합계출산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합계출산율이 2000년 이후 초저출산율(1.3 이하)을 유지하고 있기에 때문에 앞으로도 학령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령인구의 감소가 2000년 이후의 초저출산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림 3-78] 학령인구(2000-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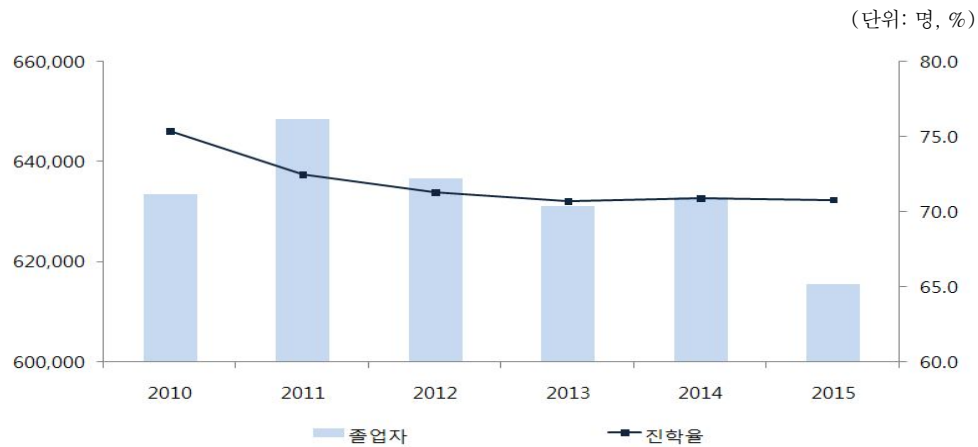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년 12월.

#### □ 고교졸업자수와 대입정원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는 대학의 구조개혁이다. 이러한 대학 구조 개혁은 초저출산율의 지속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대학교의 입학정원간의 간격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면서 대학과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2000년 764,712명에서, 2015년 615,462명으로 약 19% 줄어든 것을 아래 [그림 3-79]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 초저출산율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다. 2010년 75.4%였던 진학률은 2015년 70.8%로 4.6%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점차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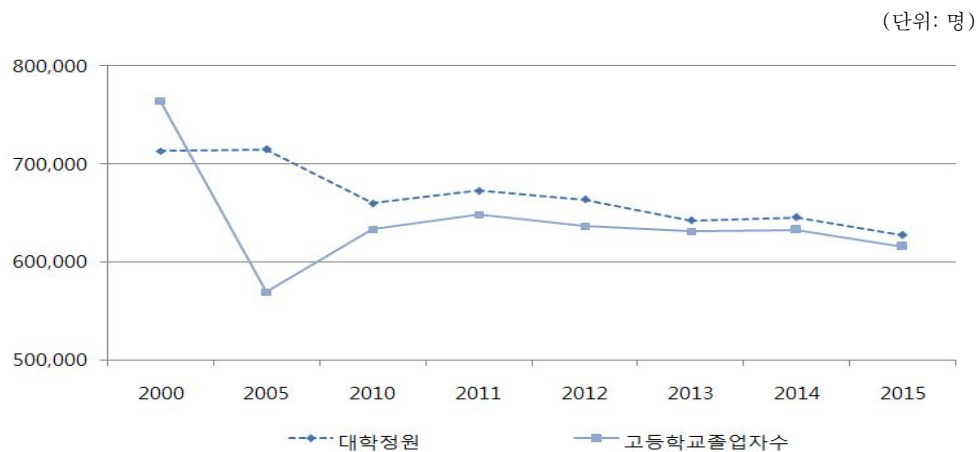
[그림 3-79] 고등학교 졸업자수 및 진학률(2010-2015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sup>6)</sup>은 2000년 713,275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수 764,712명보다 적었다. 하지만 2015년 대학교 정원수는 627,389명이고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615,462명이다. 대학교 정원수의 개혁 없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고등학교의 졸업자수가 줄어들 경우 점차 이 둘 간의 간격은 심화될 것이다.

[그림 3-80]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수(2000-2015년)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육부, 「대학입학정원현황」, 각년도.

6)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 대학원의 수치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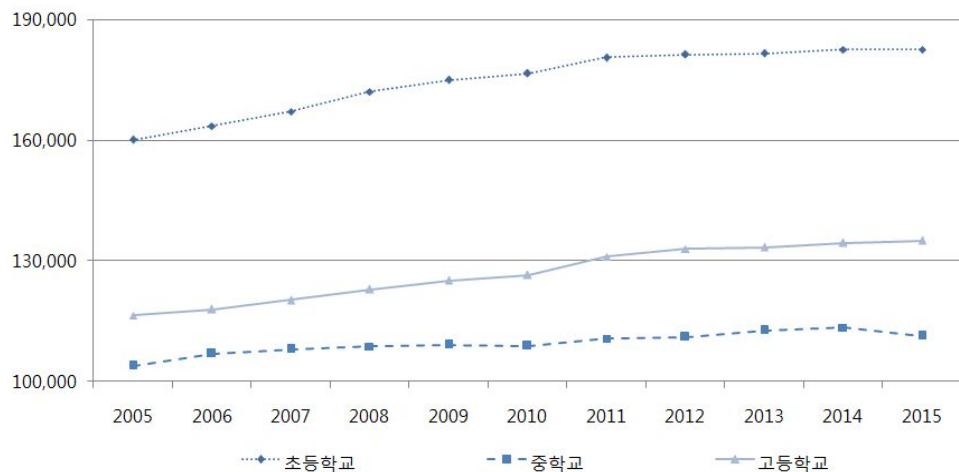
## □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수는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사나 교수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통계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교원수를 바탕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학생수/교원수)를 구하게 된다. 교원의 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변화하게 되는데 추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적절한 교원수의 유지를 위하여 교원수의 선발 문제와 잉여 교원수의 활용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교원수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초등학교 교원수는 160,143명, 중학교 교원수는 103,835명, 고등학교 교원수는 116,411명이었다. 이는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며 2015년에는 초등학교 182,658명, 중학교 111,247명, 고등학교 134,99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81] 우리나라 교원 수(2005-2015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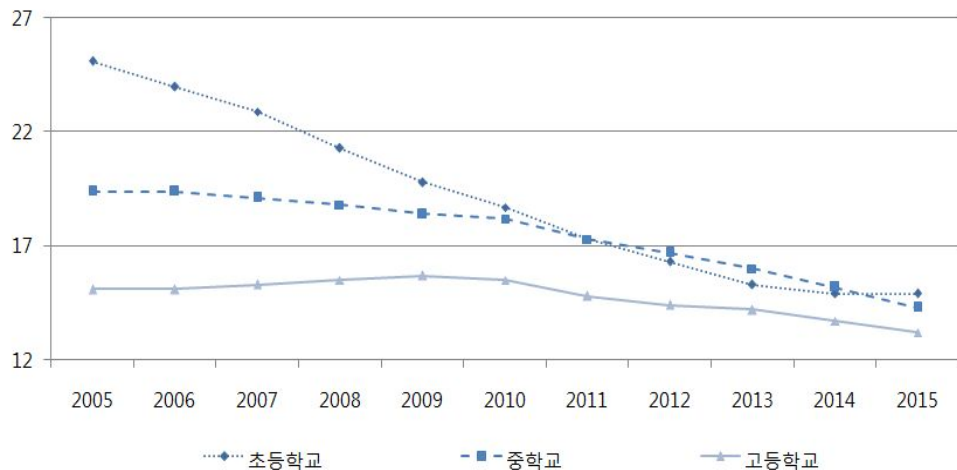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사람의 교원이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어느 수준까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00년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이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어 2005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5.1명, 2010년에는 18.7명, 2015년에는 14.9명까지 줄어들었다. 2000년 대비 2015년에는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3.8명(약 48.1% 감소)이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00년에 20.1명이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5년 19.4명, 2010년 18.2명, 2015년 14.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5.8명(28.9% 감소)이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19.9명, 2005년 15.1명, 2010년 15.5명, 2015년 13.2명으로 점차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차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교원 수의 증가보다는 학생 수 감소 때문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것이 교육 여건 개선의 청신호만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3-82] 교원1인당 학생수(2005-2015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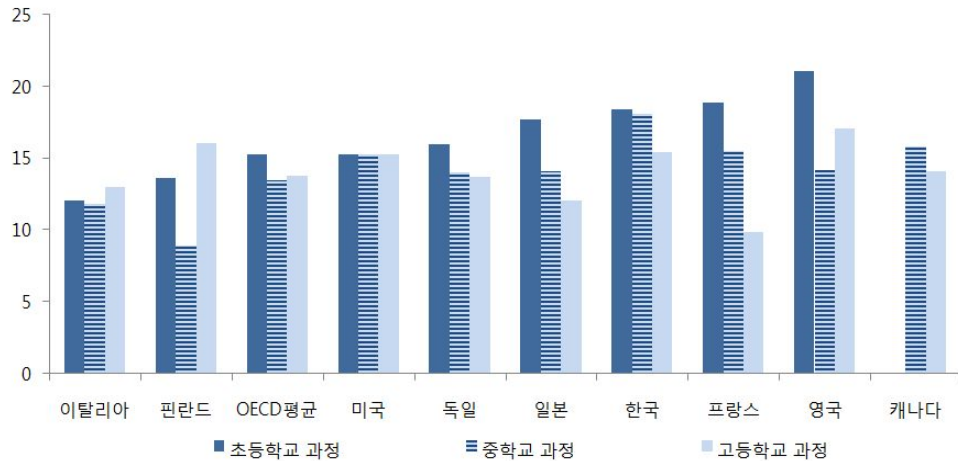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년도.

2012년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국제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OECD회원국의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

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평균보다는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교원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OECD평균과의 차이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3] OECD 주요 국가의 교원1인당 학생수(2012년)

(단위: 명)



자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p.451.

#### □ 학생1인 월평균사교육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심각한 만혼(晩婚)과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만혼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양육에 따른 사교육비의 부담도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래의 [그림 3-84]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의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사교육참여율=(사교육참여학생수/전체학생수)\*100]을 나타낸 것이다. 사교육 총액은 2009년 약 21조 6천억 원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4년도에는 약 18조 2천억 원까지 떨어졌다. 사교육의 참여율 역시 2007년 77%였던 것이 2014년 68.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도 기준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81.1%를 나타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69.1%,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9.5%(일반계고: 56.2%)의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3-84]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2007-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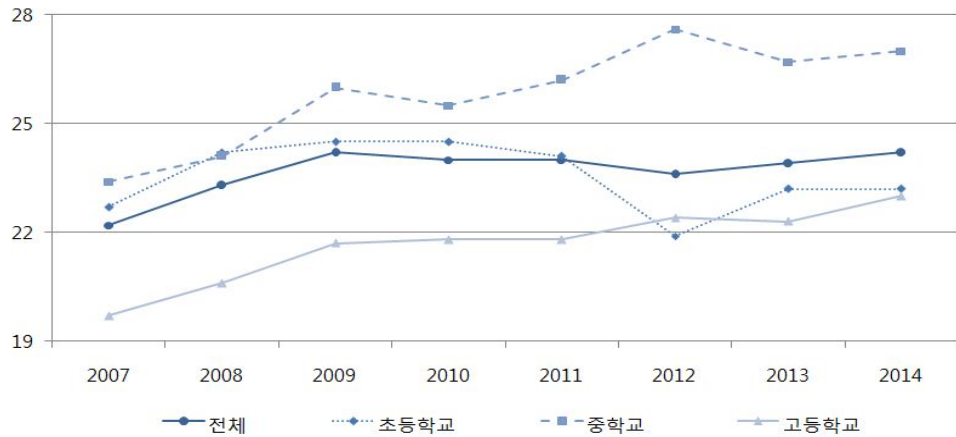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하지만 사교육비 통계에서 중요한 지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식=당해연도총사교육비액/당해년도학생수(초,중,고)]는 단적으로 학생 1명당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평균을 알 수 있기에 유용한 지표이다.

초, 중, 고등학생 전체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전년대비 -0.8%p, -1.7%p 감소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위의 [그림 3-84] 에서 사교육비의 총액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 추세는 사교육비 총액의 감소의 영향보다는 당해연도 학생수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나게 한 것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수치 역시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5] 초/중/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07-2014년)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 마. 경제

### [빈곤과 불평등]

#### ■ 배경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는 빈곤과 소득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빈곤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빈곤의 심화는 국가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사이의 소득불평등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는 역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4년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4.6%인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47.2%로 노인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같은 해 전체 지니계수는 0.307인데 비해 노인인구 지니계수는 0.433으로 노인의 불평등도가 훨씬 크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노인빈곤과 노인 소득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고령화가 계속 진전될 경우 향후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세대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출산율은 소득불평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소득불평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소득불평등에 따라 출산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출산율이 낮은 고소득층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De La Croix & Doepke, 2003). 반면,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라 빈곤층이 확대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다수의 빈곤층이 출산을 꺼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 출산율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율이 낮아지면 코호트 내 불평등도가 큰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Deaton & Paxton, 1997)는 것으로 설명된다. 본 고에서 인구변화와 관련이 있는 빈곤지수로 전체 빈곤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을, 그리고 불평등지수로 대표적인 지니계수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제시되는 모든 지표는 중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빈곤율의 경우 중위가처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이다.

## ■ 통계설명

### □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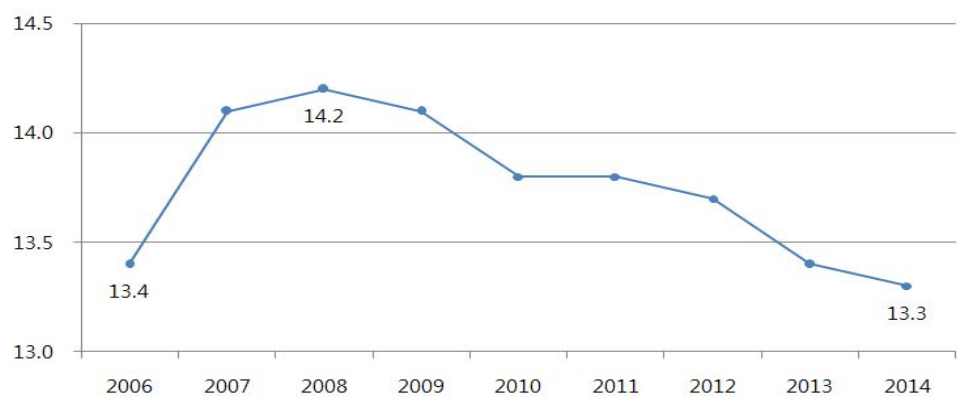
빈곤율은 한 사회의 빈곤수준을 나타내주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따라서 빈곤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나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는 드물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통상 중위소득(혹은 지출)의 50%로 설정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에 의해 계산되는 빈곤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부른다. 본 고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을 빈곤율로 칭하기로 한다.

OECD와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중위 가처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해서 빈곤율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빈곤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처분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2006년 13.4%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14.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씩 안정되면서 2014년은 13.3%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림 3-86] 우리나라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006-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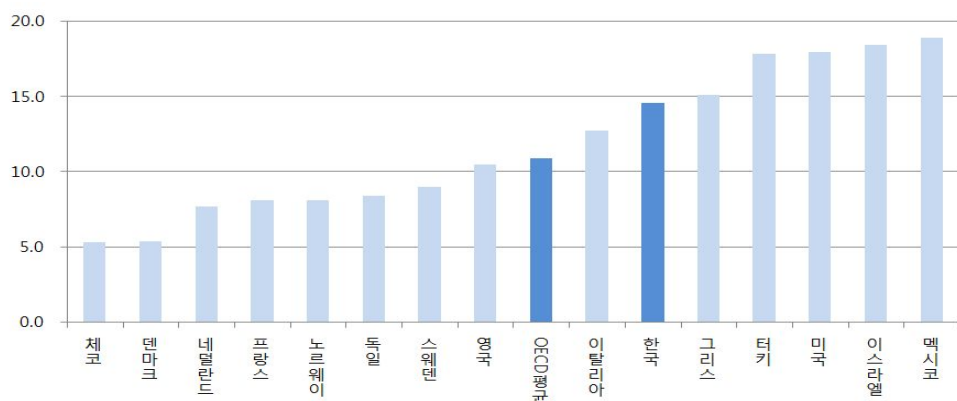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정은화·이주미(2015) 「2015 빈곤통계연보」, p.51에서 재인용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높은 그룹에 속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빈곤율은 14.6%로 OECD 평균 10.9%보다 3.7%p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터키,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이다.

[그림 3-87]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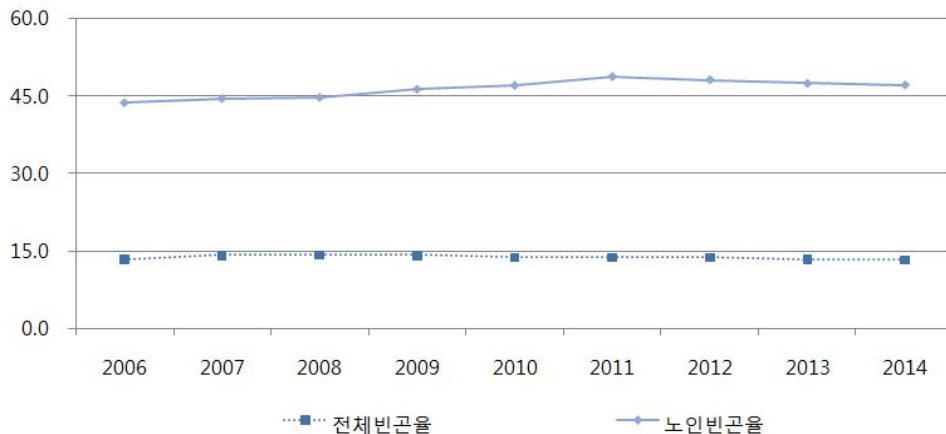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은 고령화사회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집단의 전체적인 후생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전체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계산된다. 즉,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8%에서 2011년 48.8%까지 증가한 후 조금씩 하락하면서 2014년 47.2%를 기록했다. 전체 빈곤율이 2008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3-88]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006-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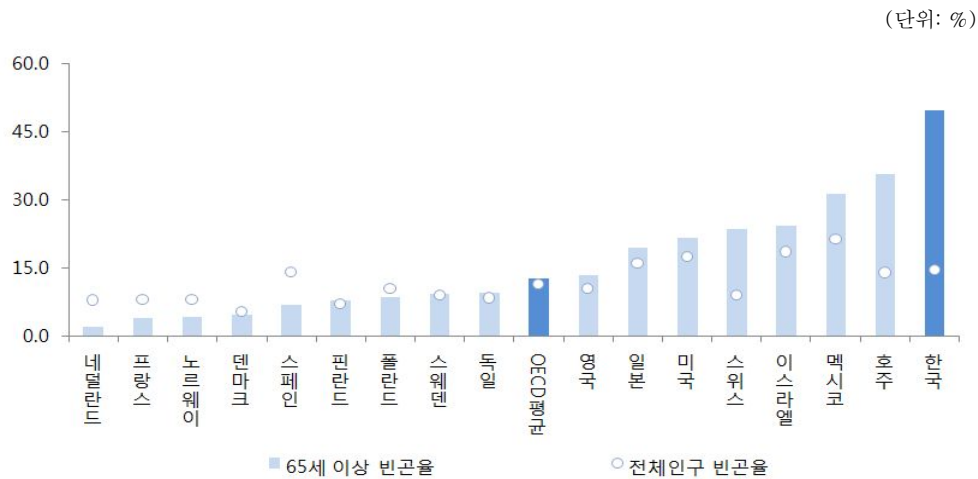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정은화·이주미(2015) 「2015 빈곤통계연보」, p.84에서 재인용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6%의 네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호주(35.5%), 멕시코(31.2%)에 비해서도 각각 약 15%p, 20%p 높은 수준이다.

[그림 3-89]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2015」, p.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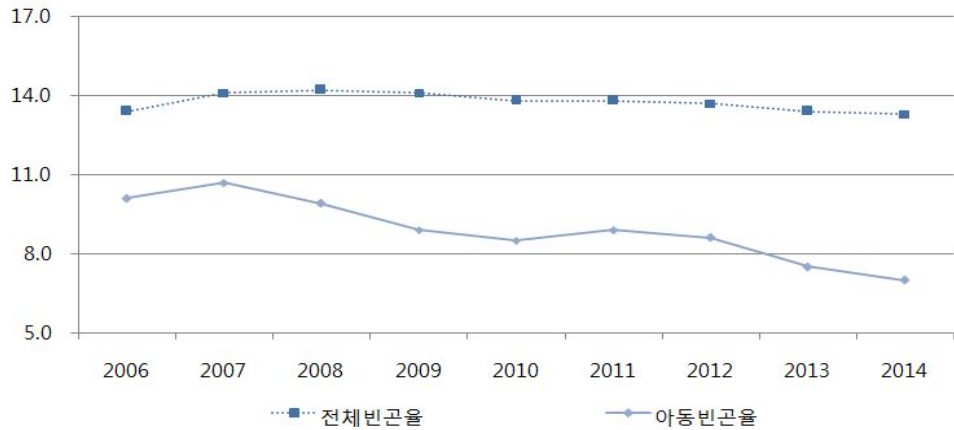
#### □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 아동 중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뜻한다. 아동은 스스로 소득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되는 소득은 가족과 공유하는 가구소득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주소득원인 가구주 대부분이 생산연령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동가구원이 이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빈곤율은 2006년 10.1%에서 2007년 10.7%로 증가한 이후 2014년 7.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율이 아동 빈곤율을 상회하면서 횡보하는 것과 다른 추이를 보인다.

[그림 3-90]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기준, 2006-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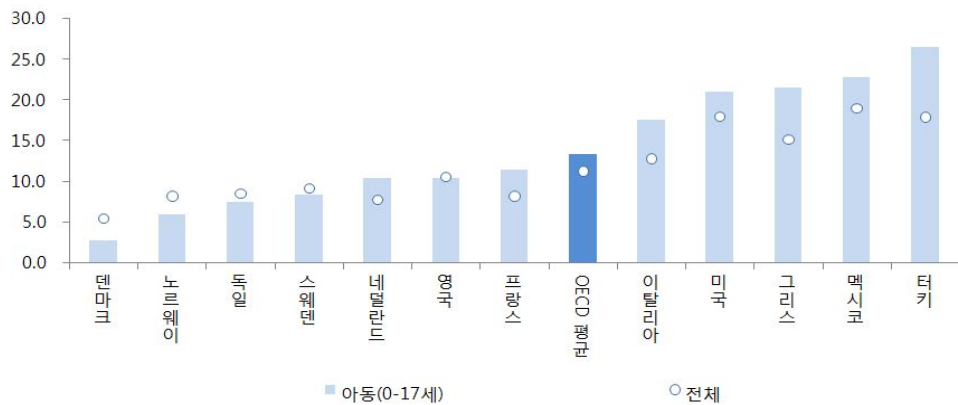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정은희·이주미(2015) 「2015 빈곤통계연보」, p.77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아동 빈곤율은 13.3%로 전체 빈곤율 11.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동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3-91]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빈곤율(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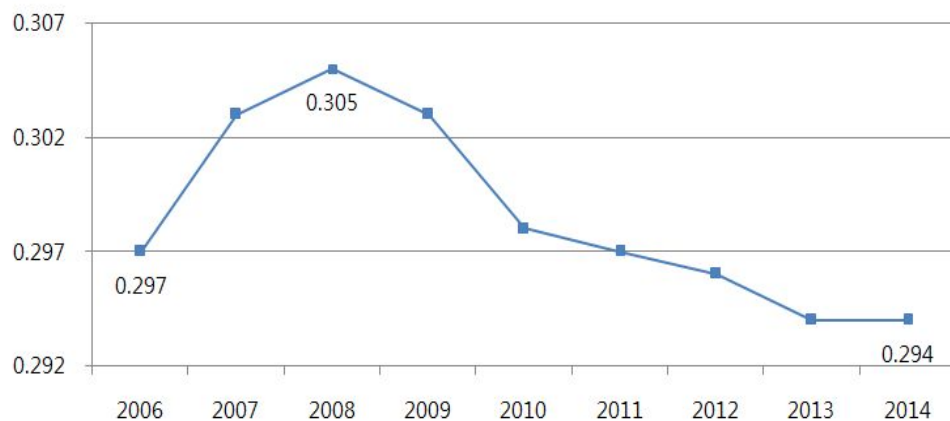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CO.2.2).

## □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지수 중 하나이다.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데, 소득분포가 평등 할수록 0에 가깝고, 소득분포가 불평등 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06년 0.297에서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에 0.305까지 증가했다.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0.294로 떨어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3-92]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가처분소득기준, 2006-2014년)

(단위: 지니계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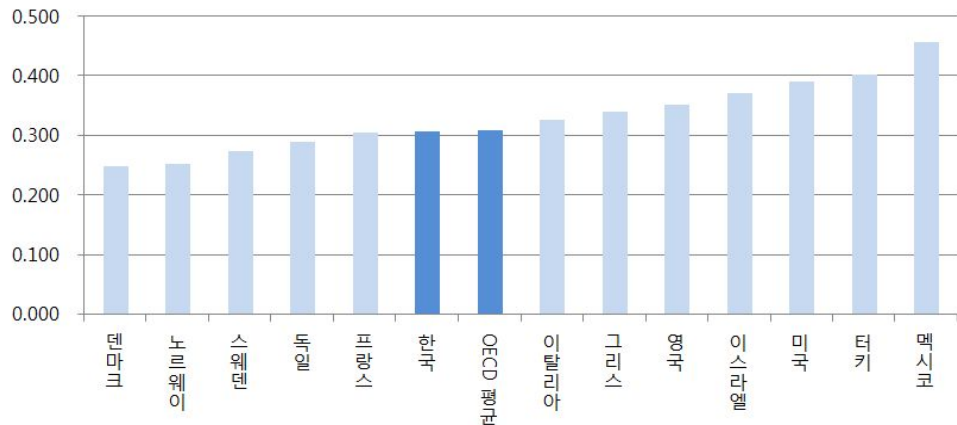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정은화·이주미(2015) 「2015 빈곤통계연보」, p.125에서 재인용

지니계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7로 OECD 평균인 0.30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93]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2012년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지니계수[비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 [경제성장]

## ■ 배경

인구와 경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인구증가 또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해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본, 산출량, 저축 및 소비와 더불어 인구증가율을 꼽는다.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구증가는 노동력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 역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발명과 혁신의 양을 늘려 지식 축적과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돕는다(Massimo Livi Bacci, 2007; (번역서) 송병건·허은영,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인구변화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변화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관심사가 되어왔다. 케인스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인구증가는 자본의 수요를 촉진시켜 자본축적률을 높인다고 보았으며(Keynes, 1937), 쿠즈네츠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인구주기와 경제주기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도 했다(Kuznets, 1965)<sup>7)</sup>. 이 같

은 인구-경제간의 관계에 기초해서 UN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은 생산연령(15~64세)인구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변화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다. 인구변천 4단계(저출산-저사망)에 이르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먼저, 인구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면서 예의 ‘인구배당’은 사라지고, 생산가능인구의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산율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상반된 방향을 가지는데, 저출산은 미래 생산연령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한편, 1인당 교육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저출산의 최종적인 영향은 이 두 효과가 발생하는 시차와 여타의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인구통계에 있어서 경제와 관련된 통계는 인구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로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기의 논의를 통해 인구와 상호 관련을 갖는 경제성장과 관련되는 통계로 잠재성장률과 자본스톡증가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써 인구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표로 적합하다. 자본스톡증가율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통계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 ■ 통계설명

### □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지표로써 수출의 일시적인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구조적

7) “생활수준의 향상은 해외인구의 이입을 유발하고 혼인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인구증가는 다시 인구증가에 특별히 민감한 투자(주택, 도로)를 촉진시켰지만, 그 때문에 자본재(기계류와 산업용 구조물)에 대한 다른 투자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재 투자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인구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주기의 시작으로 이어졌다”(Kuznets, 1965; Massimo Livi Bacci, 2007(송병진·허은영, 2009)에서 재인용)



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초단기 추정을 하게 되지만 잠재성장률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수 십년까지의 장기추정을 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이 늘거나 생산성이 올라가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총부양비를 매개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수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관에서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민간기관인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하고 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은행은 2013년 4월에 잠재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0~2012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은 추정 방법에 따라 3.3%에서 3.8%로 추정되었다.

<표 3-11> 추정방법별 잠재성장률

(기간 중 평균, %)

구분	1990~1999	2000~2009		2010~2012 <sup>1)</sup>
			2008~2009	
생산함수접근법 I <sup>2)</sup>	6.7	4.5	2.8	3.7
4.4생산함수접근법 II <sup>3)</sup>	6.7	4.6	3.0	3.6
HP필터법	6.7	4.5	3.4	3.3
다변수 은닉인자 모형	6.4	4.4	2.5	3.8

주 1) 2010.1/4~2012.3/4분기 평균성장률

2) 장기추세 및 신용여건을 감안하여 중요소생산성 추정

3) 장기추세만을 감안하여 중요소생산성 추정

자료: 박양수 외(2013),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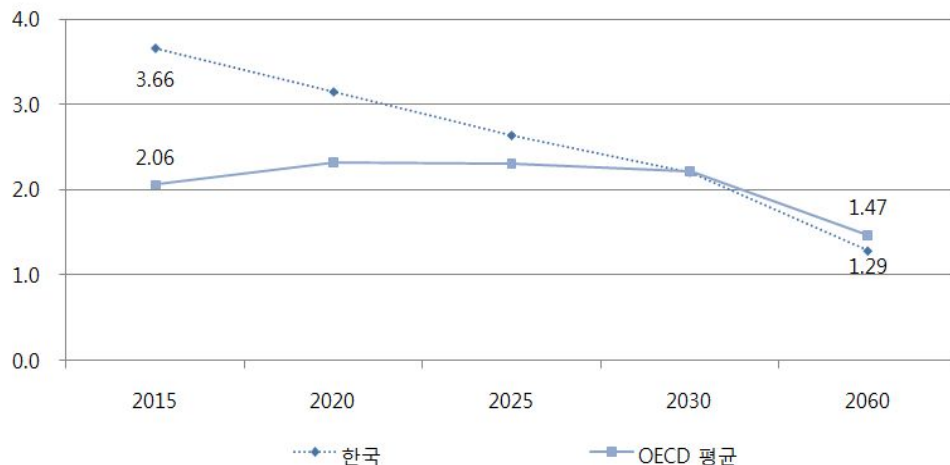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까지 연 3.6~3.7%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여러 기관에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3.2%로 추정했고(김석기, 2015), 한국개발연구원은 2011~2015년 잠재성장률을 3.1%로 추정하고(조동철, 2015)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2019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3%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15), 한국개발연구원은 2026~2030년의 잠재성장률을 1.8%, 2031~2035년 잠재성장률을 1.4%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조동철, 2015).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15년 3.7%에서 2020년 3.2%, 2025년 2.7%, 2030년 2.2%, 2060년 1.3%로 급속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에는 2%대(2.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OECD, 2012). 또한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하락속도를 보이면서 현재 OECD 평균보다 높은 잠재성장률은 2030년부터 OECD 평균을 하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94] 잠재성장률 전망: OECD국가 평균과 비교(2015-2060년)

(단위: %)



자료: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우리나라의 이 같은 급속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지목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1년에 7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62.5%로 OECD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52.3%로 일본(51.1%)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2).

### □ 자본스톡증가율

인구가 증가하면 근로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인구 증가가 근로자 1인당 자본의 양을 줄이는 것을 자본희석(capital dilution)이라 부른다. 이 같은 자본희석에 따라 인구증가는 1인당 생산에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인구 증가가 고려된 확장된 솔로우(Solow) 모형은 높은 인구증가율은 자본희석의 경로를 통해 1인당 소득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Weil, 2005<sup>8)</sup>). 반대의 경우, 즉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근로자 1인당 자본의 양을 늘림으로써 1인당 생산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인구의 변화는 1인당 생산, 즉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합하면, 인구변화는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 변화를 매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이 반전되어 출산율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해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즉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스톡 통계는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연간 기준으로 공동 작성해서 매년 5월 중순 경에 공포된다. 국민대차대조표에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가 기록되는데, 통상 비금융자산을 자본스톡으로 약칭한다. 금융자산과 부채를 제외한다는 의미에서 순자본스톡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한 자산가액 추계가 완료되어 1995년부터 완전한 자본스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순자본스톡은 크게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고, 생산자산은 다시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며,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으로 구분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체 순자본스톡 명목가액은 1995년 GDP 대비 6.5배에서 2012년 7.8배로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자산은 GDP 대비 59.7%에서 52.3%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고정자산은 35.6%에서 44.2%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8) Weil, D. N. (2005). Accounting for the effect of health on economic growth (No. w1145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lt;표 3-12&gt;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명목, 1995-2012년)

(단위: 조원, 배, %)

	1995	2000	2005	2010	2012	2012/ 1995(배)
비금융자산	2,796.9 (6.5)	3,792.6 (6.0)	6,230.3 (6.8)	9,577.6 (7.6)	10,770.4 (7.8)	3.9
생산자산	1,113.3 (39.8)	1,821.3 (48.0)	2,855.9 (45.8)	4,467.3 (46.6)	5,088.1 (47.2)	4.6
고정자산	996.6 (35.6)	1,694.8 (44.7)	2,686.1 (43.1)	4,181.7 (43.7)	4,756.8 (44.2)	4.8
건설자산	730.2 (26.1)	1,264.3 (33.3)	2,134.9 (34.3)	3,385.8 (35.4)	3,852.7 (35.8)	5.3
설비자산	227.4 (8.1)	353.4 (9.3)	415.9 (6.7)	585.5 (6.1)	651.4 (6.0)	2.9
지식생산생산물	39.1 (1.4)	77.0 (2.0)	135.3 (2.2)	210.3 (2.2)	252.7 (2.3)	6.5
재고자산	116.6 (4.2)	126.5 (3.3)	169.8 (2.7)	285.7 (3.0)	331.2 (3.1)	2.8
비생산자산	1,683.6 (60.2)	1,971.3 (52.0)	3,374.4 (54.2)	5,110.3 (53.4)	5,682.3 (52.8)	3.4
토지자산	1,668.5 (59.7)	1,953.3 (51.5)	3,346.3 (53.7)	5,067.6 (52.9)	5,635.0 (52.3)	3.4
지하자원	11.8 (0.42)	12.3 (0.32)	20.0 (0.32)	23.5 (0.25)	26.0 (0.24)	2.2
임목자산	3.3 (0.12)	5.7 (0.15)	8.1 (0.13)	19.1 (0.20)	21.3 (0.20)	6.5

주: 1) ( ) 내는 각 자산이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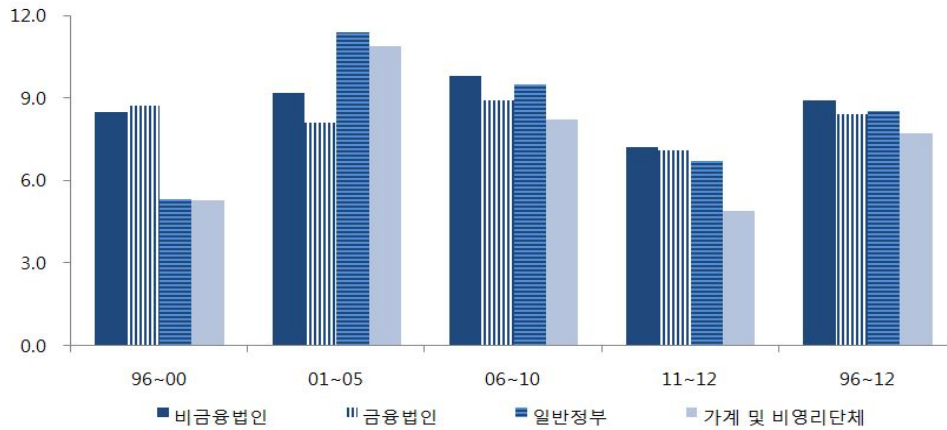
2)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자료: 한국은행(2015),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p.119.

자본스톡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등 제도부문별로도 구분이 된다. 제도부문별로 자본스톡 증가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01~2005년 중에는 모든 제도부문에서 증가율이 확대되었다가,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5] 제도부문별 자산가액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15),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p.128.

## 바. 건강

### [건강생활습관]

#### ■ 배경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 생활습관병은 국가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만성질환(chronic diseases)이라는 용어를 상용하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생활습관 관련병(life-style related diseas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강진경, 2004; 정영호 등, 2014, p.49에서 재인용).

생활습관병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며,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이라 할 수 있다(WHO, 2011; 정영호 등, 2014 재인용, p.13에서 재인용).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COPD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원인 및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다(WHO, 2011; 정영호 등, 2014, p.1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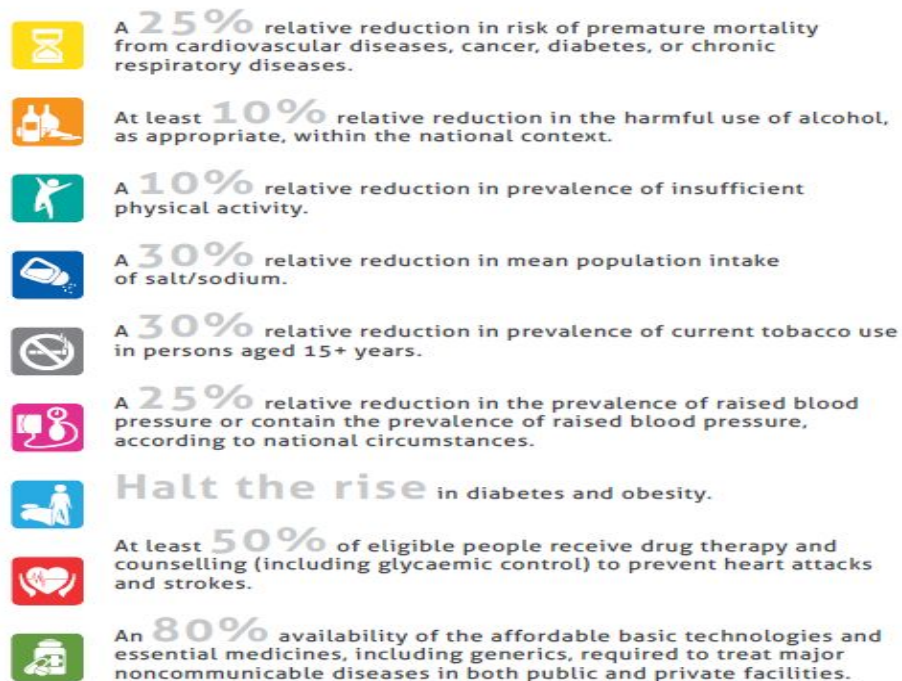
IHME(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서 실시한 전 세계 질병부

담 연구에 의하면 2013년 시점, 담배, 식이요인, 음주 등은 한국인의 질병 부담에 세 번째 큰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동진 등, 2015, p.21).

건강에 있어서 생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념화하고 의미를 부여한 공식기록은 1974년 캐나다의 라론드 보고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예방의학과공중보건편집위원회, 1999). 이에 따르면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활방식, 의료, 환경, 그리고 유전을 들고 그 중 생활방식이 60%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하였다(예방의학과공중보건편집위원회, 1999).

즉,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이 생활습관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감염성질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원인(causes of causes)으로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이 등 생활습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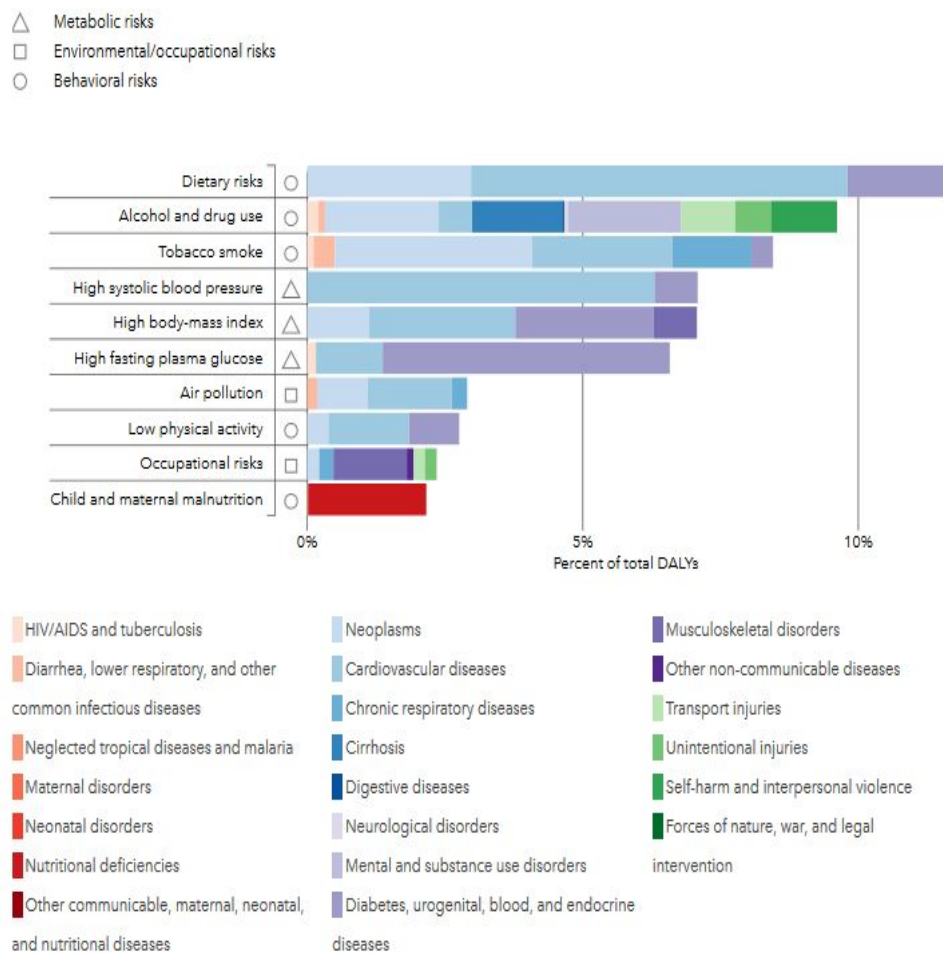
[그림 3-96] WHO 비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액션 플랜 목표



자료: WHO(2013), Global action plan for prevention and control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p.5.

때문에 건강생활습관은 그 자체로서는 물론이고 기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은 인구자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의 국내연구(이소영, 최인선, 2014)에서도 전문가 조사결과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에 적합한 측정지표로서 활용된 바 있다. 특히, 흡연, 비만 등은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97] 주요 위험 요인의 질병 부담 기여(2013년)



자료: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Country Profiles - Korea.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4(available at: <http://www.healthdata.org/south-korea>, 검색일: 2015.10.01.); 김동진 외(2015), p. 22에서 재인용.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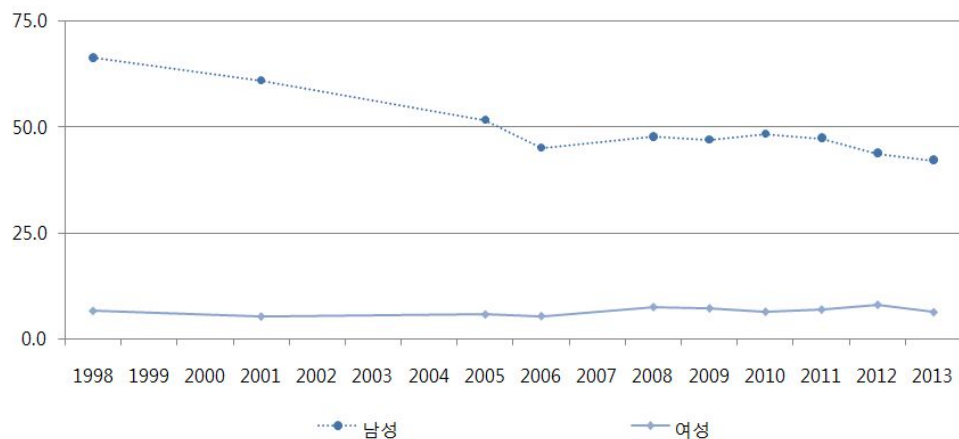
### □ 흡연율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만 19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12).

현재흡연율(만19세 이상, 표준화)은 2013년 남자 42.1%로, 2008년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3년 간(201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 6.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30대, 여자는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흡연율이 높았다. 미국의 경우 2013년 현재흡연율(만18세 이상)은 남자 20.5%, 여자 15.3%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남자는 약 2배 높았고, 여자는 약 2배 낮았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sup>9)</sup>.

[그림 3-98] 성별 현재흡연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1998-2013년)

(단위: %)



주: 1) 1998년 : 만20세이상.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3)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74.

9)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Early release of selected estimates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3. 2014. ([http://www.cdc.gov/nchs/data/nhis/earlyrelease/earlyrelease201406\\_08.pdf](http://www.cdc.gov/nchs/data/nhis/earlyrelease/earlyrelease201406_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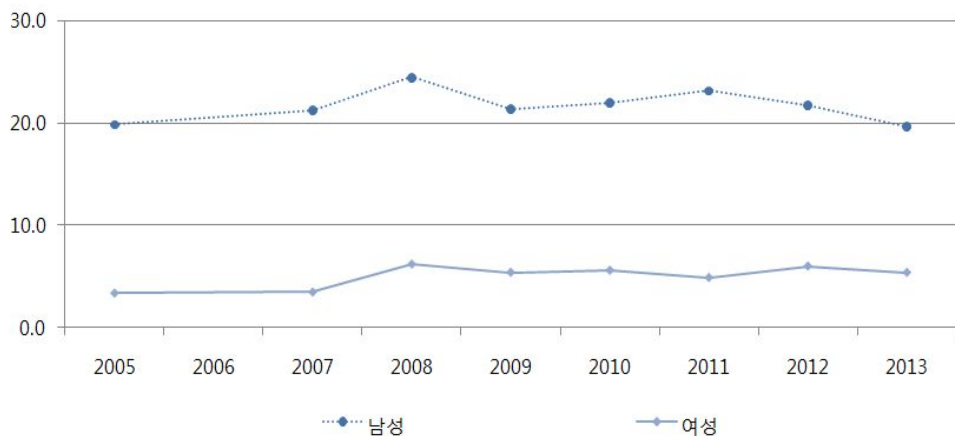
## □ 고위험음주율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만19세 이상)들의 분율을 정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16).

고위험음주율(만19세이상, 표준화)은 2013년 남자 19.7%, 여자 5.4%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자 40대가 25.9%, 여자 20대가 8.8%로 가장 높았다.

[그림 3-99] 성별 고위험음주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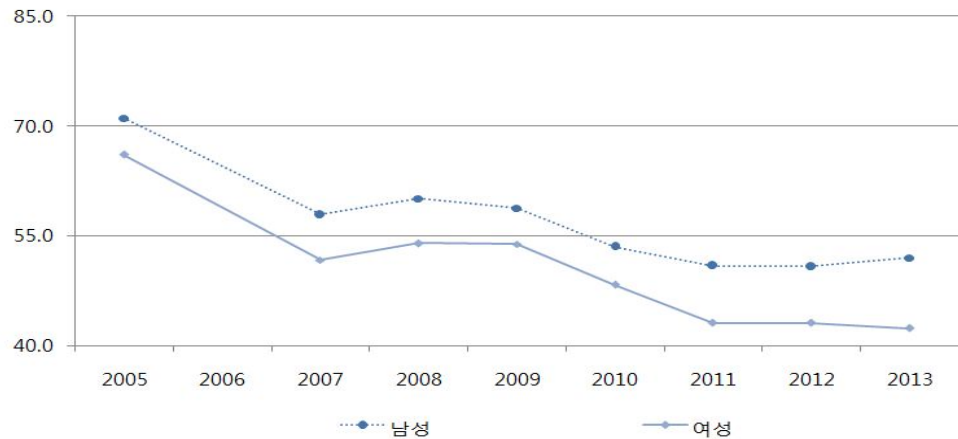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106-107.

## □ 신체활동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걷기포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 또는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분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19)로 정의할 수 있다. 걷기를 포함한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만19

세 이상, 표준화)은 2013년 남자 52.0%로 여자 42.4%보다 높았으며,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3-100] 성별 중등도이상(걷기포함)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142-145.

#### □ 식품안정성가구비율

최근 1년간 가구의 식생활 형편을 묻는 문항에 대해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로 응답한 가구는 44.1%이었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49.4%로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93.5%이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81.7%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안정성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lt;표 3-13&gt;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2013년)

구 분	n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A)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음(B)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음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전체	2,939	44.1 (1.3)	49.4 (1.2)	5.2 (0.6)	1.3 (0.3)	93.5 (0.7)
거주지역						
동	2,342	44.1 (1.5)	48.7 (1.3)	5.8 (0.7)	1.4 (0.3)	92.8 (0.8)
읍면	597	43.9 (2.4)	52.3 (2.1)	2.8 (0.8)*	1.0 (0.5)*	96.2 (1.2)
소득수준 <sup>2)</sup>						
하	732	30.3 (2.3)	51.4 (2.2)	14.4 (1.5)	3.9 (0.9)	81.7 (1.9)
중하	760	38.2 (1.9)	57.4 (1.9)	3.4 (0.8)	1.0 (0.4)*	95.6 (0.9)
중상	694	47.6 (1.9)	50.4 (1.9)	2.0 (0.6)*	0.0 ( - ) <sup>3)</sup>	98.0 (0.6)
상	727	61.6 (2.0)	37.9 (2.0)	0.5 (0.3)**	0.0 ( - )	99.5 (0.3)

주: 1)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 변동계수 50%이상

4)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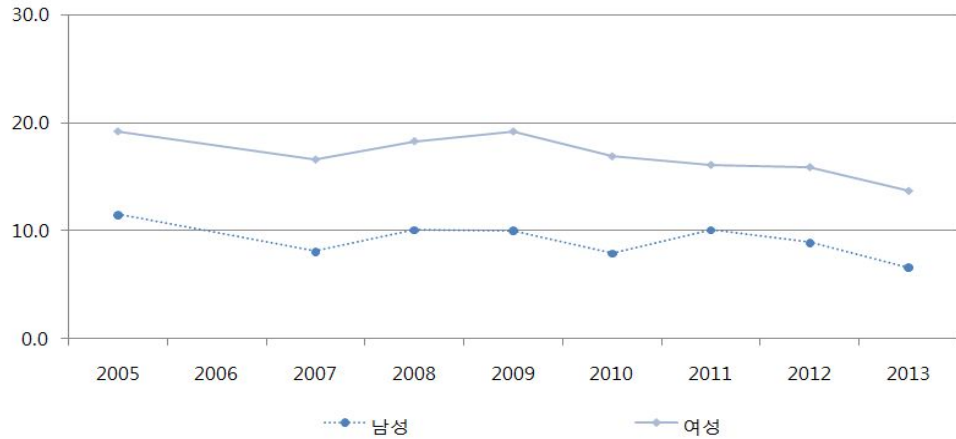
#### □ 우울증상경험률

우울증상경험률은 만19세 이상 성인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사람들의 분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23)로 정의할 수 있다.

우울증상경험률(만19세 이상, 표준화)은 2013년 남자 6.6%로 여자 13.7%보다 낮았고, 2012년에 비해 남녀 모두 약2%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림 3-101] 성별 우울증상경험률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5-2013년)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162-165.

## [유병]

## ■ 배경

이소영, 최인선(2014)에 의하면, 인구의 자질을 논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의미는 인구의 건강이고, 실제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도 인구자질의 여러 영역 중 보건영역에 속한 인구자질의 지표가 가장 많이 선정되고 있다.

건강지표 중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유병상태도 흔히 사용하는 건강지표 중의 하나로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 중독이나 사고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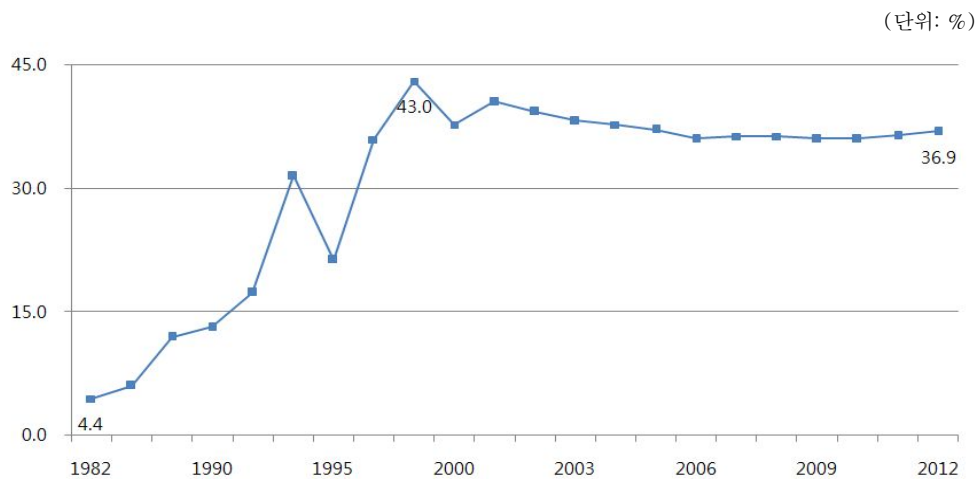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인구의 통태와 관련있는 모자보건 관련 유병지표로서 제왕절개분만을, 단태아 저체중아출생률을 포함하였고, 그 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과 치매를 지표로서 포함하였다. 제왕절개분문율과 단태아 저체중아출생률의 경우 대표적인 모자보건 지표로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고, 태어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게 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 ■ 통계설명

### □ 제왕절개분만율

제왕절개분만율은 당해연도 총 분만건수 중 제왕절개 분만건수의 비율이다. 1982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약 36%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2] 제왕절개분만율 추이(1982-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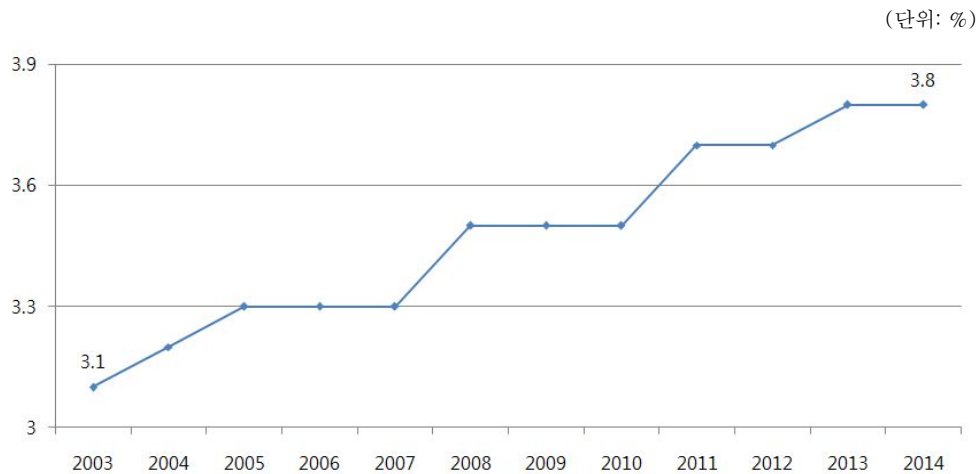


자료: Changes in the Cesarean Section Rate in Korea(1982-2012) and a Review of the Associated Factors; OECD Health Data 2013; 김동진 외, 2014 재인용.

### □ 단태아 저체중아출생률

단태아 저체중아출생률은 당해연도 연간 출생 단태아 중 출생시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출생아의 비율로 정의하였다(홍창의 소아과학, 2007; 김동진 외, 2014, p.138에서 재인용). 단태아 저체중아출생률은 2003년 3.1%에서 2014년 3.8%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으나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3-103] 연도별 단태아 저체중 출생률(2003~2014년)



자료: 통계청(2015), 「2014 출생통계」,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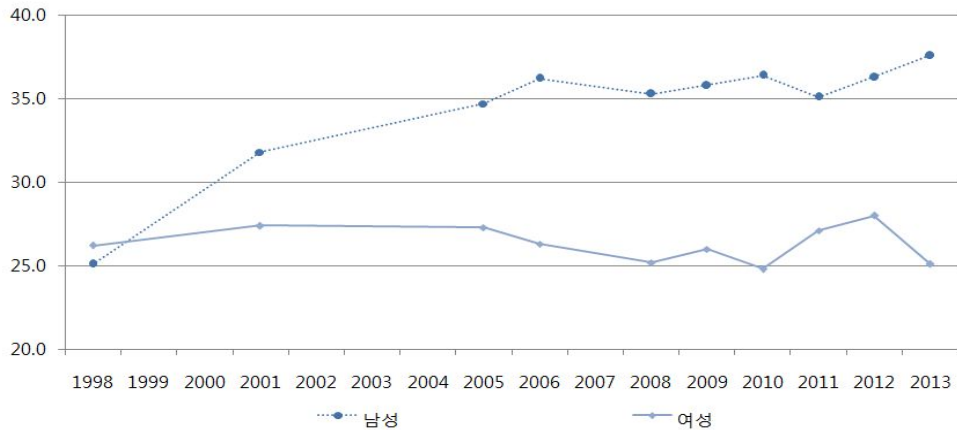
#### □ 비만

비만 유병률은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25\text{kg/m}^2$  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정의(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45)할 수 있다

비만 유병률(만19세 이상)은 전체 32.5%, 남자 37.6%, 여자 27.5%로 남자가 여자보다 10.1%p 높았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남자의 비만 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으나,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체질량지수는 남자  $24.2\text{kg/m}^2$ , 여자  $23.2\text{kg/m}^2$ 이고, 95백분위수는 남자  $30.1\text{kg/m}^2$ , 여자  $29.6\text{kg/m}^2$ 이다. 여자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30.6%, 중하위 26.6%, 중상위 24.7%, 상위 17.8%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림 3-104] 성별 비만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1998-2013년)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564-567.

□ 치매<sup>10)</sup>

우리나라의 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 결과, 2012년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 이었고, 치매 환자수는 540,755명(남성 155,955명, 여성 384,800명)으로 추정되었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 치매의 표본유병률은 65세를 기준으로 5세가 증가할 때 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여, 65~69세 사이는 1.3% 이었지만, 85세 이상에서는 33.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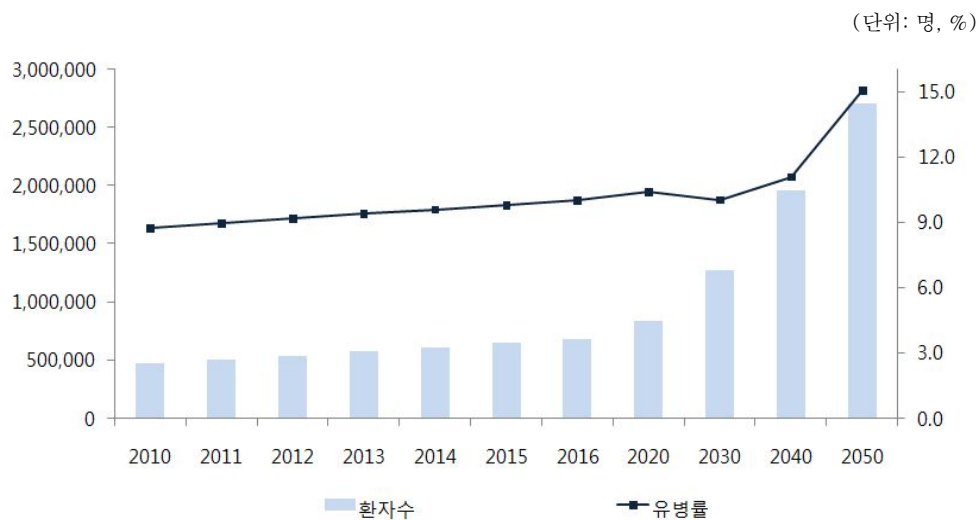
2008년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치매인구수는 2011년에 50만, 2025년에 100만, 2043년에 2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연구에서는 2011년에 50만, 2024년에 100만, 2041년에 200만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2008년 추정에 비해 100만을 넘는 시점은 1년, 200만을 넘는 시점은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매인구수는 2008년 예측보다 1~2년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치매 환자수는 2050년까지 20년 마다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10) <http://public.crcd.or.kr/Info/Mechanism/Morbidity>

약 84만 명, 2030년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추산된다.

치매 유병률은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13.9%, 캐나다 8%, 영국 6.6%, 이탈리아가 8.3% 였고,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그 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유병률을 보여서 중국은 1.8%~4%, 인도 1.1% 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인종, 환경의 차이 뿐 아니라 연구방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5] 치매유병률 추이 및 예측결과(2010-2050년)



주: MMSE-DS를 이용한 간이평가 실시후 정신건강전문의 및 심리사가 최종진단 및 유형 감별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 보도자료, p. 1

## [예방서비스]

### ■ 배경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문제 또한 감염성 질환에서 비감염성 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도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적 의료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최초로 실시된 이래 2004년 암 조기검진체계의 구축,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후 2008년 3월에는 건



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건강검진사업이 법적인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김윤 외, 2013).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자질 측면의 지표로서 예방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 등 인프라나 보건의료 예산 지출 등(이소영, 최인선, 2014)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예방서비스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동일하나, 보다 엄밀하게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인구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보다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인구통계와 관련한 예방의료서비스 지표로는 암검진,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 그리고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하였다.

## ■ 통계설명

### □ 암검진율

암검진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분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188)로 정의할 수 있다.

2009년에서 2013년 19세 이상(표준화)의 암검진수진율을 살펴보면 43-45%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암검진수진율은 2009년 50.0%에서 2013년 58.7%로 증가 추세이다. 2013년의 연령별 암검진율을 살펴보면 60대 70.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50대 64.8%, 40대 62.7%, 70대 이상 53.2%, 30대 33.7%, 30대 이하 5.7% 순이었다. 2013년의 표준화된 소득수준별 암검진율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하층인 경우 35.5%, 중하층 42.6%, 중상층 47.5%, 상층 47.7%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암검진수진율도 높게 나타났다.

&lt;표 3-14&gt; 암검진수진율 추이(성별, 만19세 이상, 2009-2013년)

(단위 : %)

구 분	'09		'10		'11		'12		'13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n	분율(표준오차)
<b>전체</b>										
19세이상	7,471	46.1 (0.8)	6,251	46.6 (0.9)	6,024	46.5 (1.0)	5,604	47.9 (1.0)	5,356	46.3 (0.9)
65세이상	1,648	50.0 (1.6)	1,378	54.3 (2.3)	1,470	53.7 (1.7)	1,440	56.8 (2.1)	1,211	58.7 (1.8)
19세이상(표준화)	7,471	44.7 (0.7)	6,251	44.7 (0.8)	6,024	44.3 (0.8)	5,604	45.3 (0.9)	5,356	43.3 (0.8)
<b>연령(세)</b>										
19-29	1,048	17.2 (1.2)	767	11.9 (1.3)	676	15.0 (1.4)	637	11.0 (1.3)	701	5.7 (1.0)
30-39	1,425	39.0 (1.7)	1,253	39.2 (1.6)	1,094	34.6 (1.7)	959	38.7 (1.9)	938	33.7 (1.8)
40-49	1,495	58.7 (1.4)	1,162	59.1 (1.7)	1,052	59.4 (2.2)	957	60.0 (2.1)	1,042	62.7 (1.6)
50-59	1,247	63.0 (1.7)	1,170	66.2 (1.9)	1,185	64.9 (1.9)	1,070	67.8 (1.9)	1,017	64.8 (1.7)
60-69	1,205	64.2 (1.7)	1,027	67.1 (1.8)	1,027	68.3 (1.9)	1,009	68.6 (1.9)	856	70.3 (2.0)
70+	1,051	43.1 (1.9)	872	47.6 (2.7)	990	47.0 (2.2)	972	52.0 (2.6)	802	53.2 (2.1)
<b>거주지역</b>										
동	5,556	45.0 (0.9)	4,883	46.2 (1.0)	4,810	45.0 (1.0)	4,478	47.8 (1.0)	4,319	46.3 (1.0)
읍면	1,915	50.6 (1.9)	1,368	47.9 (2.0)	1,214	52.9 (1.8)	1,126	48.2 (2.3)	1,037	46.4 (1.8)
<b>소득수준</b>										
하	1,860	38.8 (1.6)	1,538	40.2 (1.7)	1,407	41.1 (1.7)	1,351	41.2 (1.7)	1,308	38.3 (1.8)
중하	1,862	43.7 (1.4)	1,540	48.1 (1.7)	1,527	47.0 (1.6)	1,395	47.7 (1.6)	1,346	45.0 (1.6)
중상	1,819	48.2 (1.4)	1,561	48.0 (1.6)	1,536	45.9 (1.6)	1,383	50.1 (1.7)	1,316	50.8 (1.8)
상	1,850	54.5 (1.5)	1,532	50.9 (1.8)	1,506	52.9 (1.7)	1,409	54.6 (1.7)	1,359	50.7 (1.6)
<b>거주지역(표준화)</b>										
동	5,556	44.4 (0.8)	4,883	45.6 (0.8)	4,810	44.0 (0.9)	4,478	45.9 (0.9)	4,319	44.0 (0.9)
읍면	1,915	45.4 (2.0)	1,368	41.2 (1.8)	1,214	45.4 (1.7)	1,126	42.5 (2.2)	1,037	40.6 (1.7)
<b>소득수준(표준화)</b>										
하	1,860	37.8 (1.3)	1,538	38.7 (1.5)	1,407	39.2 (1.6)	1,351	39.4 (1.6)	1,308	35.5 (1.5)
중하	1,862	42.0 (1.4)	1,540	46.0 (1.4)	1,527	44.4 (1.4)	1,395	44.4 (1.3)	1,346	42.6 (1.5)
중상	1,819	46.9 (1.2)	1,561	45.9 (1.4)	1,536	44.1 (1.4)	1,383	47.8 (1.6)	1,316	47.5 (1.3)
상	1,850	53.2 (1.4)	1,532	49.4 (1.5)	1,506	50.3 (1.6)	1,409	51.8 (1.6)	1,359	47.7 (1.4)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25-50%

4)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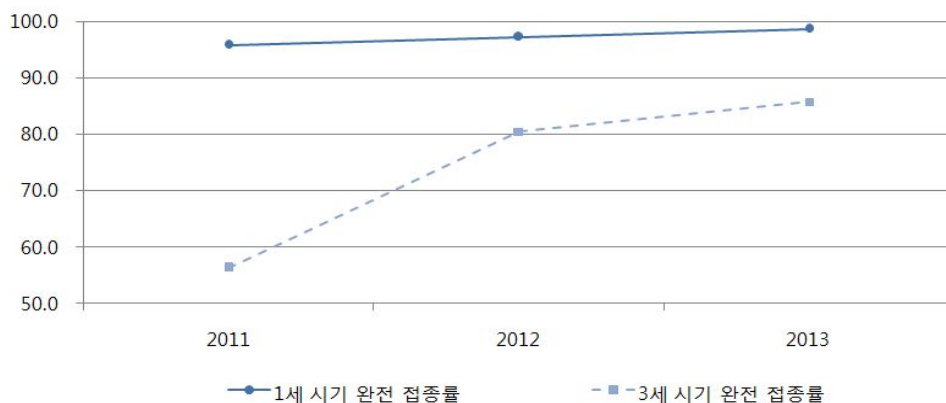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189.

## □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은 조사 시기 만3세 영유아 중 만1세와 만3세 시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받은 영유아의 비율이다(김동진 외, 2014)<sup>11)</sup>. 만 1세 시기 완전접종률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만 3세 시기 완전접종률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2년 29.5%p 증가하였다. 2013년 국내 영유아의 만1세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98.7%이고, 만3세 시기 완전접종률은 85.8%로 나타났다.

[그림 3-106] 영유아(1세, 3세)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2011-2013년)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 「전국예방접종률조사」, 각년도.

## □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김동진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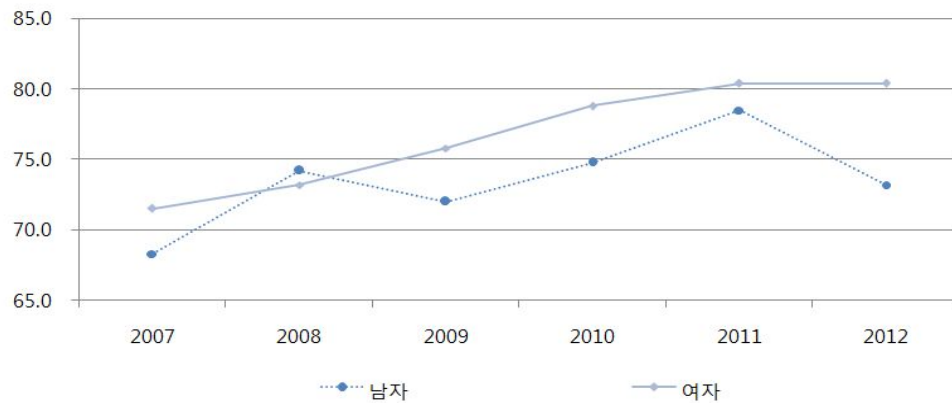
남녀 모두 2009년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매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

11)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는 ① 만1세 시기 완전 접종(3:3:3:1 시리즈): 3 doses DTaP, 3 doses Poliovirus, 3 doses Hepatitis B, 1 dose BCG, ② 만3세 시기 완전 접종(4:3:1:3:1:1:3 시리즈): 4 doses DTaP, 3 doses Poliovirus, 1 dose MMR, 3 doses Hepatitis B, 1 dose BCG, 1 dose Varicella, 3(or 2) doses Japanese encephalitis가 포함됨.

사 대부분의 연도(2007년~2012년)에서 노인 여성의 예방접종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노인 남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3.2%, 여성은 80.4%로 나타났다.

[그림 3-107]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2007-2012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 [의료이용]

### ■ 배경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물학적 요인, 생활습관요인, 환경요인, 보건의료서비스로 나누었을 때, 보건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활습관요인에 비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때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ulter 등(2006)은 1960~2000년 사이에 미국인들의 수명이 7년 정도 연장되었는데, 그 중 70%는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때문이고,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2/3는 의학발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Nolte 등(2004)는 1980 년대에 일어난 영아사망률, 그리고 중년과 노년의 사망률 감소는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동진 외, 2013, p.257에서 재인용)

최근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3.2.2 시행)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실태 및 자원 분포를 감안한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이에 포함되었다.

특히 분만의료의 경우 필수의료서비스 중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고, 타 진료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응급의료와 함께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다. 분만의료취약지의 경우 관내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으로, 2014년 2월 현재 전국 54개 지역이 분만의료 취약지(취약지 46개 지역, 준취약지 8개 지역)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의료적 필요가 있을 때, 지리적·경제적·사회환경적 장애 없이 제때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unmet need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 통계설명

### □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수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하여 분만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07년 1,027개에서 '13년 696개로 6년간 331개 감소하였다. 2014년 12월 현재 전국 시·군·구 중 산부인과의 없거나 산부인과의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57개 시·군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4곳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33곳은 산부인과의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sup>12)</sup>.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의 감소하고 있는데,

12) 산부인과 의료기관: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표시과목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자료 기준), 조산원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57개 지역중 89%가 군(郡)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산모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sup>13)</sup>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15).

<표 3-15>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200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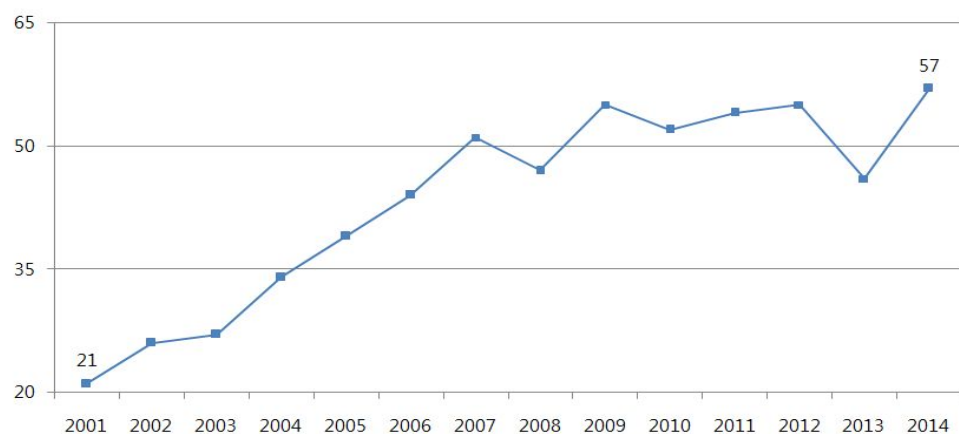
(단위: 개)

종 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07년 대비
상급종합	43	43	44	44	44	43	42	△1
종합병원	133	125	112	108	100	97	91	△42
병원	123	127	123	124	135	140	144	△21
의원	710	640	564	518	484	445	401	△309
조산원	17	18	16	14	13	13	17	-
보건기관	1	1	1	0	1	1	1	-
총계	1,027	954	860	808	777	739	696	△33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13년 통계).

[그림 3-108]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수 추이

(단위: 개)



자료: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3)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 : 1.25배, 임신 중독증 : 1.15배(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년, 농어촌 산부인과 취약지역 도출 및 공급 방안 개발 연구)

## □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2곳), 강원(9곳)도 소아과 의원 수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sup>14)</sup>. 한편 소아과가 없는 56개 시군구 중 상당수가 산부인과도 없는 의료 취약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lt;표 3-16&gt;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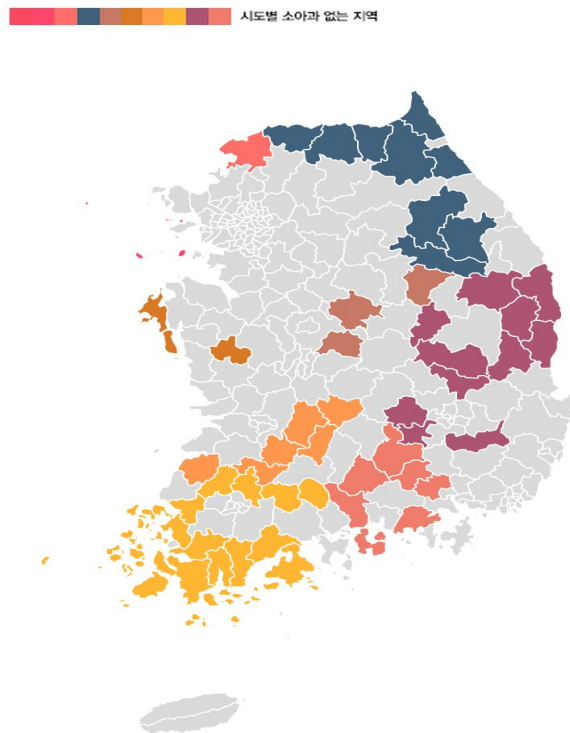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경기(1)	연천군
강원(9)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3)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충남(2)	청양군*, 태안군*
전북(6)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5)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12)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7)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천군*

주: \*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동시에 부재한 시군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연합뉴스 2013. 9. 17

14)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map/pediatrics/pediatrics.html>

[그림 3-109]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자료: 연합뉴스 2013. 9.17.

#### □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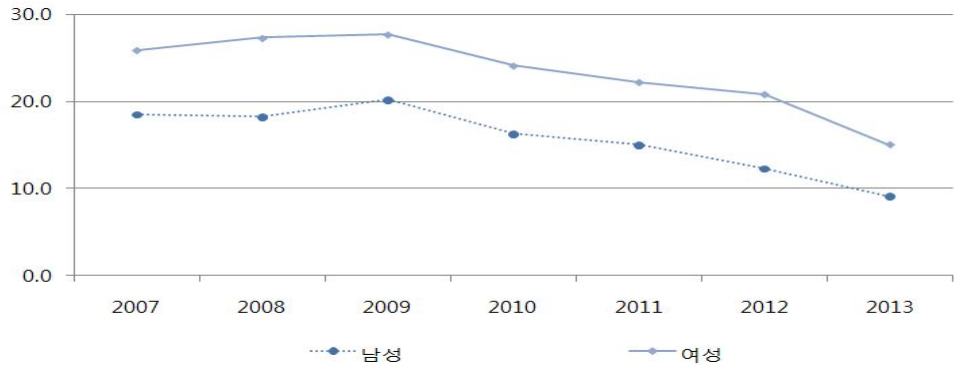
연간미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만19세 이상)이 병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의 분율(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p.729)로 정의할 수 있다.

연간미치료율(병원)(만19세이상, 표준화)은 2013년 남자 9.1%, 여자 15.0%로, 2009년 이후 감소경향이며 2012년에 비해 남자는 3.2%p, 여자 5.8%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30대와 50대, 여자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3-110] 병의원 연간미치료율 추이(19세 이상 표준화, 2007-2013년)

(단위: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국민건강통계」의 원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p.192-195.

## 사. 안전

### [안전사고]

#### ■ 배경

안전사고란 부주의 등과 같이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여 인적 혹은 물적 손실을 입는 사고로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가 대표적인 안전사고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추락, 물에 빠짐 등의 우발적인 사고를 안전사고로 분류한다.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은 비의도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부정적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의 발생 역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또한 사회적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과 노인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령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과 노인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성인들이라면 회피할 수 있는 위험에도 큰 손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는 경찰청이 집계한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에서 나타나는 교통사고 통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나타나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 중 추락 사고에 의한 사망자와 익사사고에 의한 사망자 통계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안전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인들의 안전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들의 안전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부모들이 아동들의 보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며, 아울러 정부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이 실효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들의 수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안전대책은 이제 노인들에게도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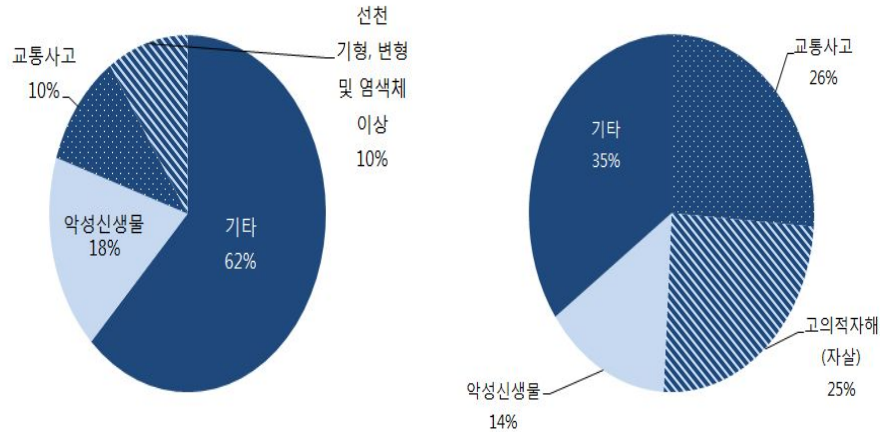
### □ 교통사고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사망원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세 집단에서는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10.5%,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9.5%를 나타내었으며, 10-19세 집단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살 24.7%, 악성신생물 14.3%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서는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3-111] 19세 이하 집단의 사망원인(2014년)

&lt;2014년 1-9세 집단의 사망원인 구성비&gt;

&lt;2014년 10-19세 집단의 사망원인 구성비&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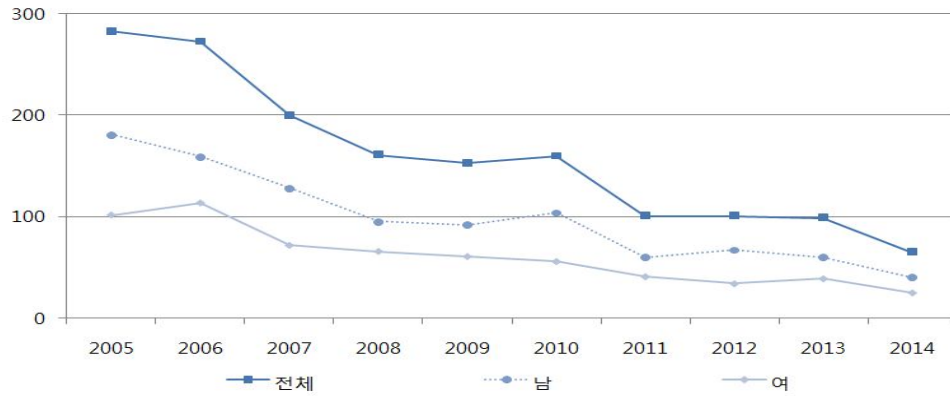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2014 사망원인통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12,462명에서 2014년에는 9,459명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남성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 폭(2005년 4,612명, 2014년 3,447명)이 여성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 폭(2005년 1,757명, 2014년 1,31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이하 연령집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283명)는 2005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5명)의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14세 이하 연령집단의 감소 폭도 남성(2005년 181명, 2014년 40명)이 여성(2005년 102명, 2014년 25명)에 비해 다소 컸다.

[그림 3-112]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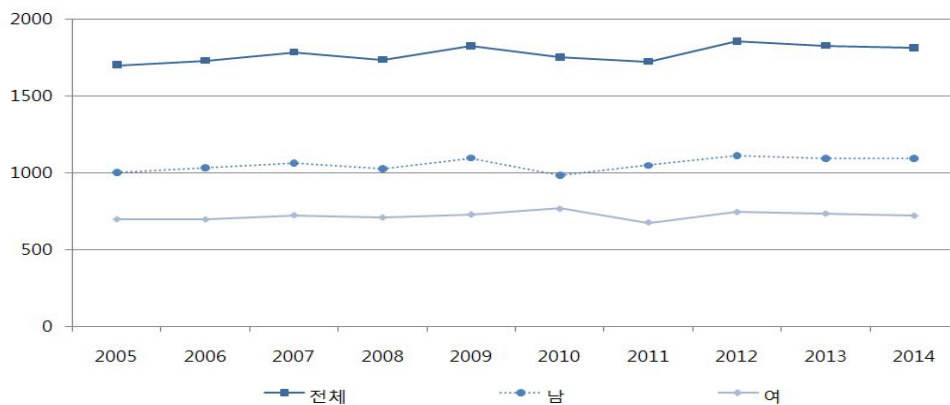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관리시스템」.

반면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미세하기는 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노인 집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1,700명에서 2014년 1,815명으로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노인 집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13]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5-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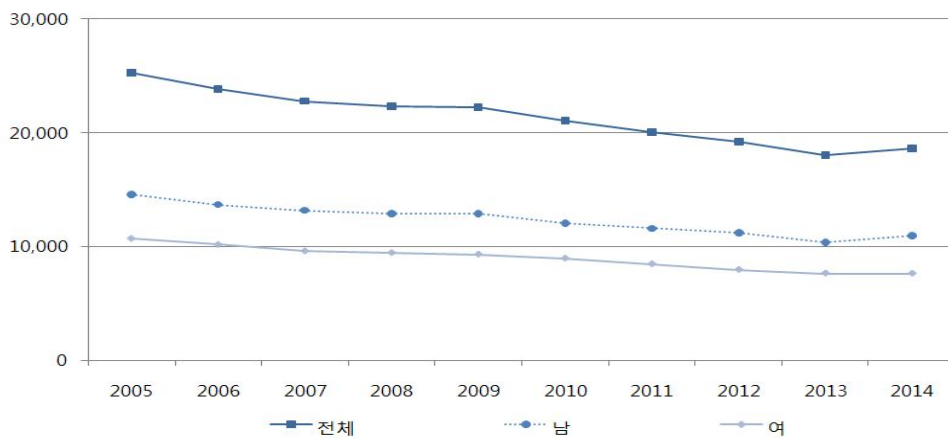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관리시스템」.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에 비해서,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5년 342,233명이었는데 2008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2009년 361,875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전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337,497명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수의 변화에 비해 14세 이하 연령집단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05년 14세 이하 집단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5,314명에서 2013년 18,034명까지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한 18,643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14세 이하 연령집단의 감소추세는 남성과 여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114]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5-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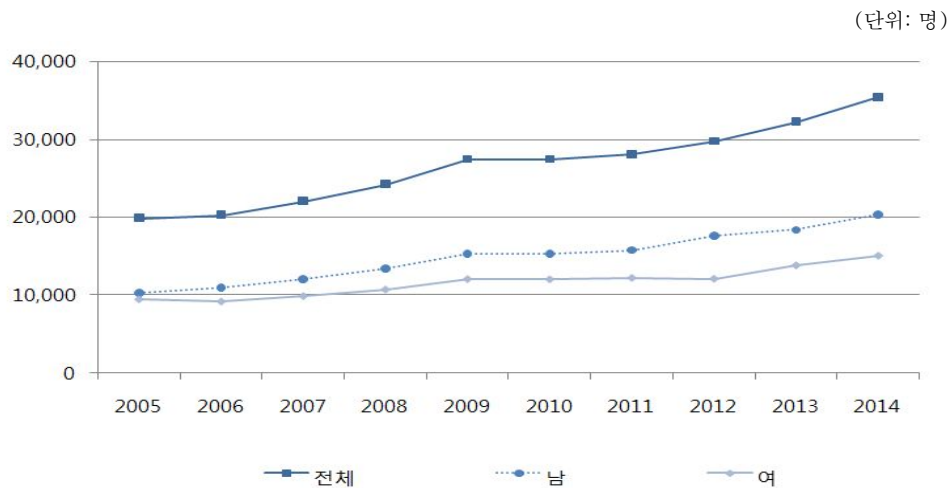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관리시스템」.

그런데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매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2005년 19,832명이었던 부상자 수가 2014년에는 35,352명으로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5세 이상 남성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5년 10,318명

에서 2014년 20,302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05년 9,514명에서 2014년 15,050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집단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15]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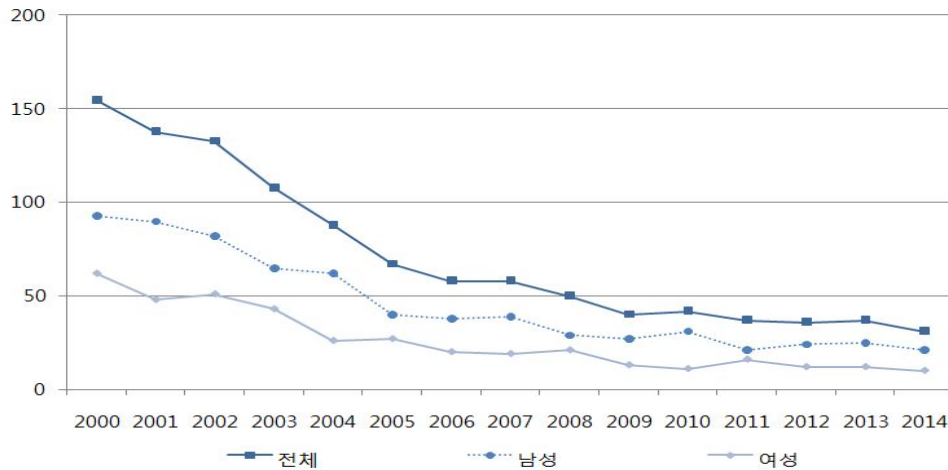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관리시스템」.

#### □ 추락사고(낙상사고)

2000년 이후 14세 이하 아동들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155명(사망률 1.6)이었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6년에는 67명(사망률 0.6)으로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31명(사망률 0.4)의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성 아동의 낙상 사망자는 2000년에 93명(사망률 1.8)에서 2011년에 21명(사망률 0.5)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소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20명대 초반의 사망자수를 유지하였다. 여성 아동의 낙상 사망자는 2000년에 62명(사망률 1.3)이었던 것이 2009년에 13명(사망률 0.3)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16]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2000-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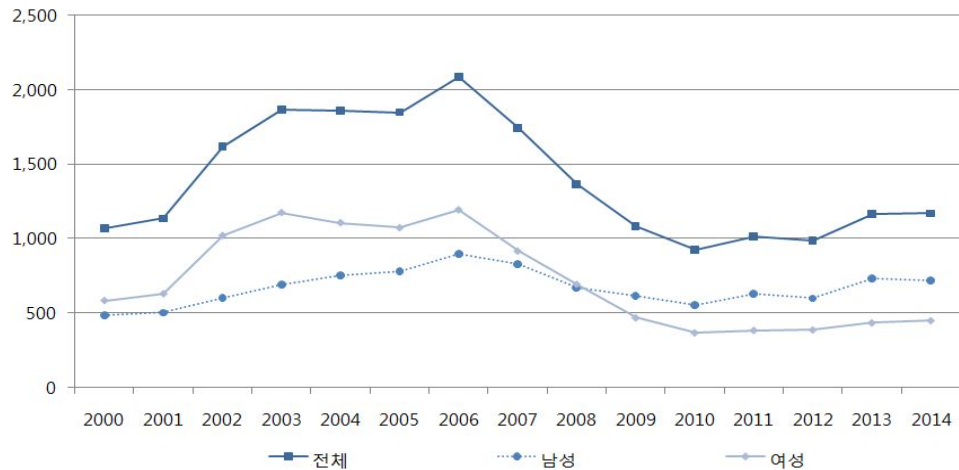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2014 사망원인통계」.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 1,072명(사망률 32.8)이었던 것이 2006년까지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사망률 47.0), 다시 크게 감소하여 2010년 925명(사망률 17.3)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소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집단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감 추세는 14세 이하 아동들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노인 인구집단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감 폭은 여성 노인에게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0년의 여성 노인 낙상 사망자는 586명(사망률 28.6)으로 남성 노인의 낙상 사망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2003년에 남성 노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175명(사망률 50.1)에 이르게 되고 2006년에 1,193명(사망률 44.4)으로 정점을 보인다. 이후 2010년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370명(사망률 11.6)이 되어 낙상사망자 수가 남성노인보다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시 다소 증가하여 2014년에는 451명(사망률 12.3)의 낙상 사망자 수를 나타내었다. 남성 노인의 낙상 사망자 수의 변화는 증감 시기는 여성 노인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변화만을 나타낼 뿐이었다.

[그림 3-117]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낙상(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2000-2014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5), 「2014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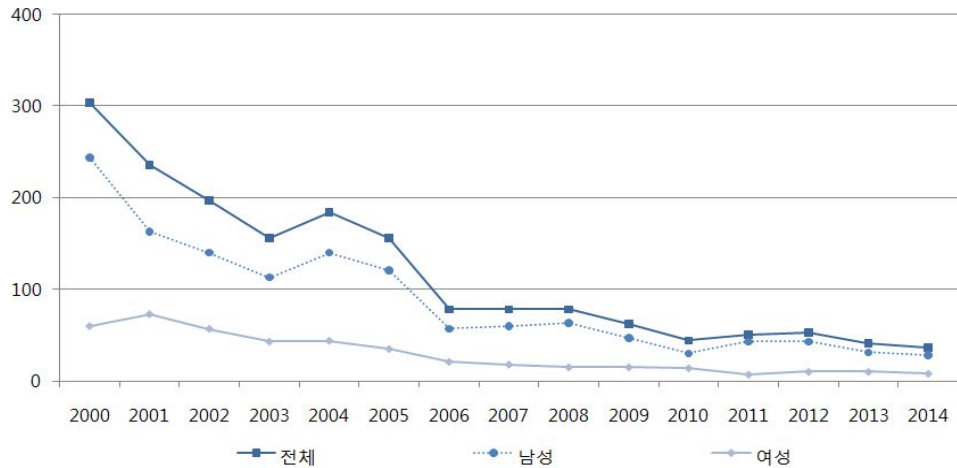
## □ 익사사고

다른 안전사고 사망자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14세 이하 아동 집단의 익사자 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304명(사망률 3.1)의 익사자가 있었던 2000년부터 78명(사망률 0.9)의 익사자가 발생한 2006년 사이에 약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감소 추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남성 아동들에게 더 두드러지는데, 남성 아동의 익사자는 2000년 244명(사망률 4.6)이었다가 2006년에 57명(사망률 1.2)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약간의 증감을 거듭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져서 2014년에는 28명(사망률 0.7)으로 까지 감소하였다. 여성 아동 익사자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1년 73명(사망률 1.6)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익사자를 나타낸 이후 2011년 이후에는 10명 이하의 익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8] 14세 이하 집단의 연간 익사자 수(2000-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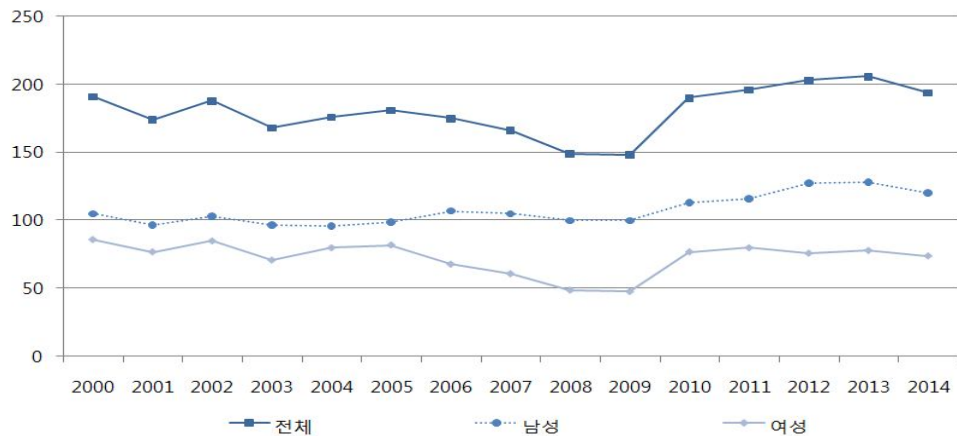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2014 사망원인통계」.

200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익사자 수의 변화는 일정한 패턴 없이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 191명(사망률 5.8)의 익사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9년에는 148명(사망률 2.9)으로 최하점을 나타내었고,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94명(사망률 3.1)으로 2000년과 비슷한 익사자 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익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므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익사 사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다소의 증감이 있으나 사망률 3.0 내외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119] 65세 이상 집단의 연간 익사자 수(2000-2014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14 사망원인통계」, 2015년.

## [범죄]

## ■ 배경

범죄는 범죄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이다. 또한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 내의 범죄 증가는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범죄의 발생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는데, 사회가 혼란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와 같은 일탈현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 집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구조 내에서 보호받기 힘든 약자들은 범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구집단 취약한 집단인 아동과 노인의 범죄와 피해를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범죄 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재입력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분석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학대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현황>과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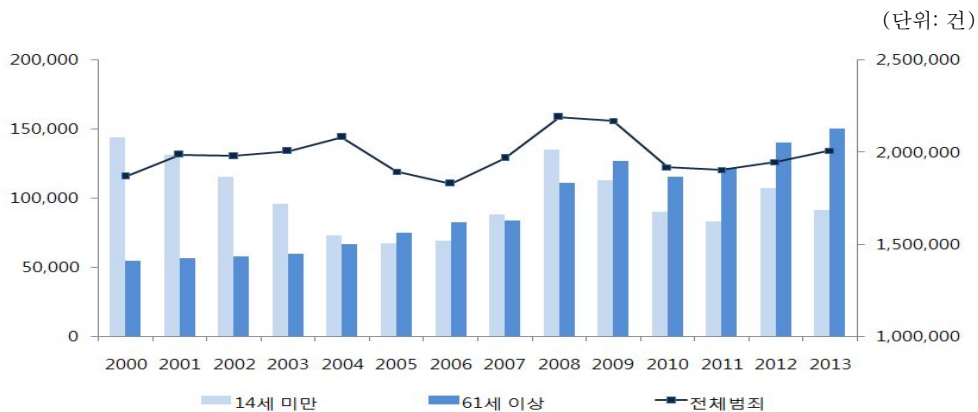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전체 범죄

검찰청이 집계한 공식통계상의 우리나라 전체범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체 범죄가 증가하다가, 이후 2006년까지는 감소하였고,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등, 2000년 이후 뚜렷한 패턴 없이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14세 미만 연령의 아동 범죄는 전체 범죄의 증가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감소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여년 동안 전체 범죄의 증감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2000년 이후 노인범죄는 2010년에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양상이 지속되었다. 이같은 노인범죄 발생건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아동범죄 발생 건수보다 적었으나, 2005년과 2006년에 일시적으로 추월하였다가, 2009년 이후에는 아동 범죄 발생건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양상이었던 것이다. 범죄자는 형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이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인구집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다.

[그림 3-120] 연령별 범죄 발생건수(200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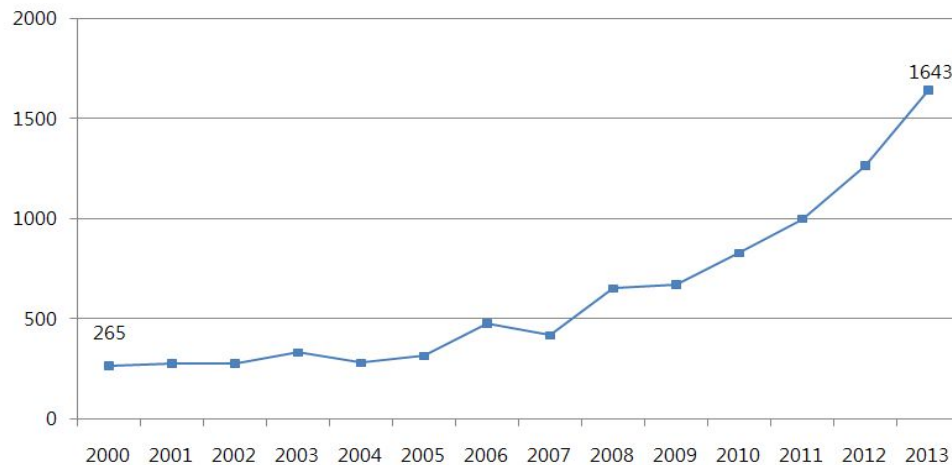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통계시스템」.

## □ 성폭력 범죄

노인 범죄의 증가는 다른 범죄보다 성폭력 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61세 이상 노인의 성폭력 범죄자의 수는 2000년에 265건이었다가 2006년에는 476건으로 약 1.8배정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3년의 노인 성폭력 범죄자의 수는 1,643명으로 2007년(418명)의 4배 가까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노인 성폭력의 증가는 노인 인구 자체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아동들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전영실 외, 2007), 그것은 노인들의 입장에서 아동들이 유인하거나 제압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림 3-121] 연도별 61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수(2000-2013년)

(단위: 명)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통계시스템」.

노인 성폭력 범죄자의 주된 범행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는 노인 성폭력 범죄자 수의 증가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5세 이하 아동들의 성폭력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여자아동의 경우 2000년 1,064명, 2001년 787명, 2002년 1,148명 등 2000년대 초반에는 1,000명 전후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2006년 2,037명, 2007년 2,171명 등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약 2배정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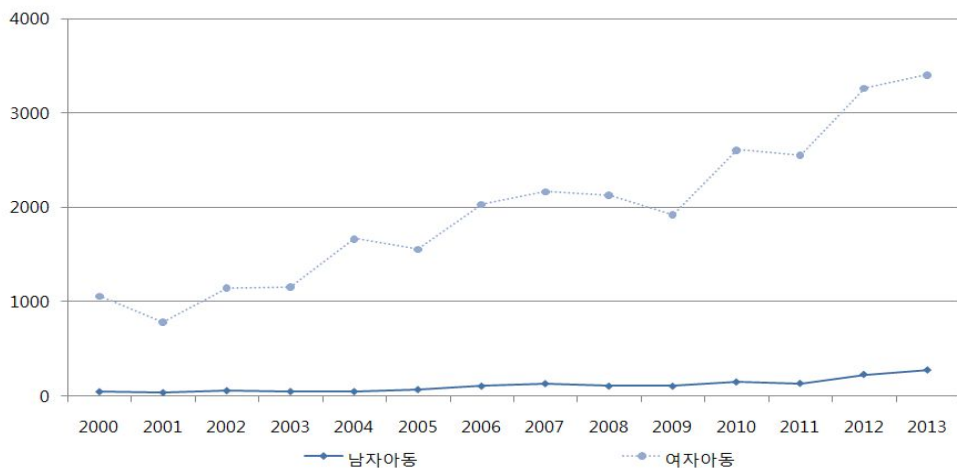
하였고, 2012년 3,267명, 2013년 3,410명 등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여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자 아동들의 성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는 48명의 남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228명, 2013년 275명 등으로 5배 이상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성폭력 범죄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전에는 문제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던 성폭력(추행 포함) 범죄들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된 범죄만 집계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범죄통계에서 실제 범죄가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신고율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이 암수가 많은 경우 이러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3-122]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2000-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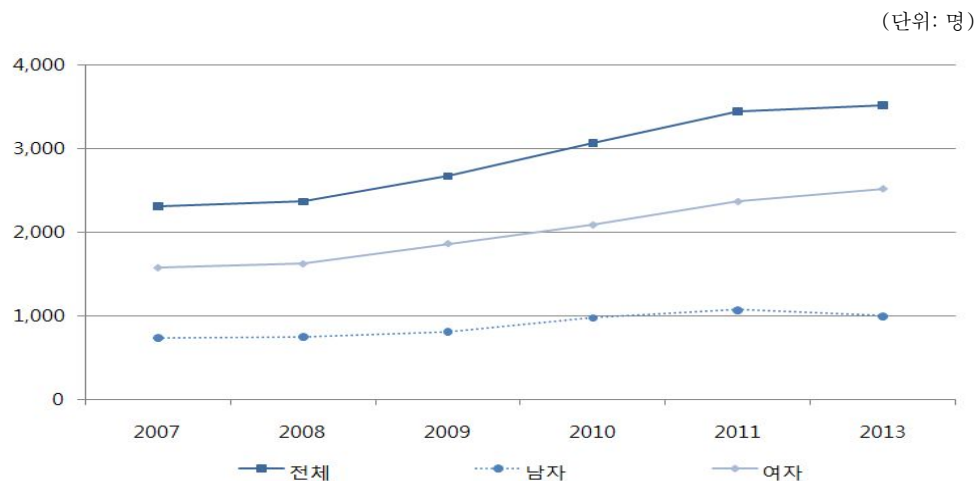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분석통계시스템」.

## □ 노인학대

2007년 이후 학대 피해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312명이었던 피해 노인의 수가 2013년에는 3,520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 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의 빈곤과 이로 인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집단의 경제적 곤란이 노인 학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여성 노인 피해자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 학대 피해 노인의 수는 2007년 1,575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2,522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여성 노인 집단에게서 나타난다. 남성 학대 피해 노인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성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비를 보였다.

[그림 3-123] 성별 학대 피해노인 수(200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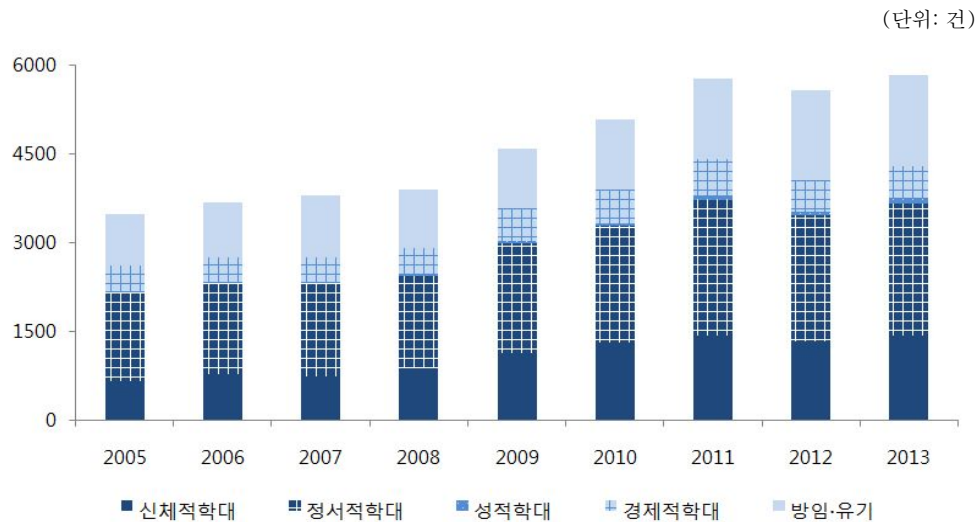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노인 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 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지만, 점차로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 학대의 증가로 인한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

다.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점차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는 급증하고 있었다. 신체적 학대는 2000년대 중반에는 약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체 학대 중 25% 정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로서 전체 학대 중 약 10%를 차지하는 유형이며, 성적 학대는 전체적인 비율은 매우 낮으나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3-124] 유형별 노인학대 건수(2005-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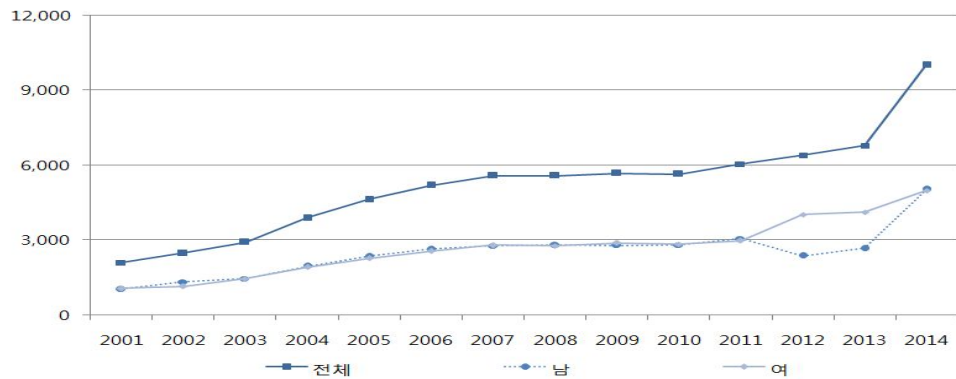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 □ 아동 학대

아동 학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학대 피해 아동의 수는 2,105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5,581명으로 약 2.6배가량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2010년까지 비슷한 수를 유지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6,796명, 2014년 10,027명으로 증가하였다. 학대 아동 피해는 2012년과 2013년의 차이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 역시 거의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5] 성별 아동학대 피해자 수(2001-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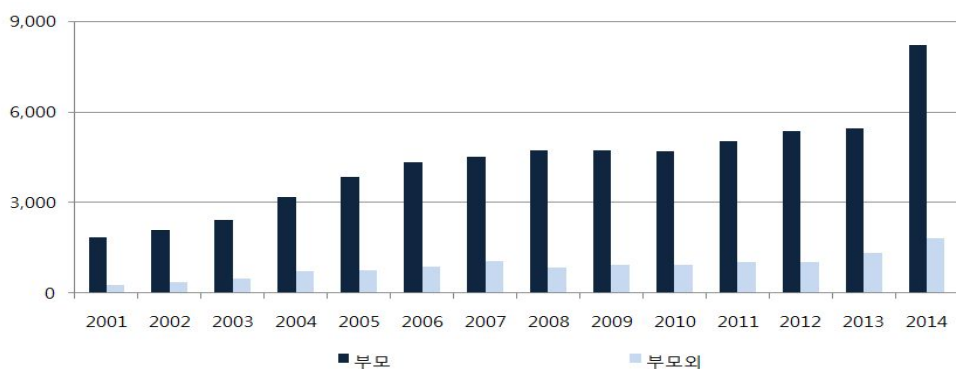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년도.

아동학대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이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반 이상은 친부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은 조부모, 기타 친척 등이 가해자였으며,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 학대는 아동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통계상 나타나는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26] 유형별 아동학대 가해자(2001-2014년)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각년도.



## [산업재해]

### ■ 배경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써 한 사회의 안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 및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 통계를 생산하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사회보험제도가 개발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상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한 보상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는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노동력의 손실과 관련된다. 산업현장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적인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발생율은 OECD 회원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서는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사고 비율, 그리고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에 관한 통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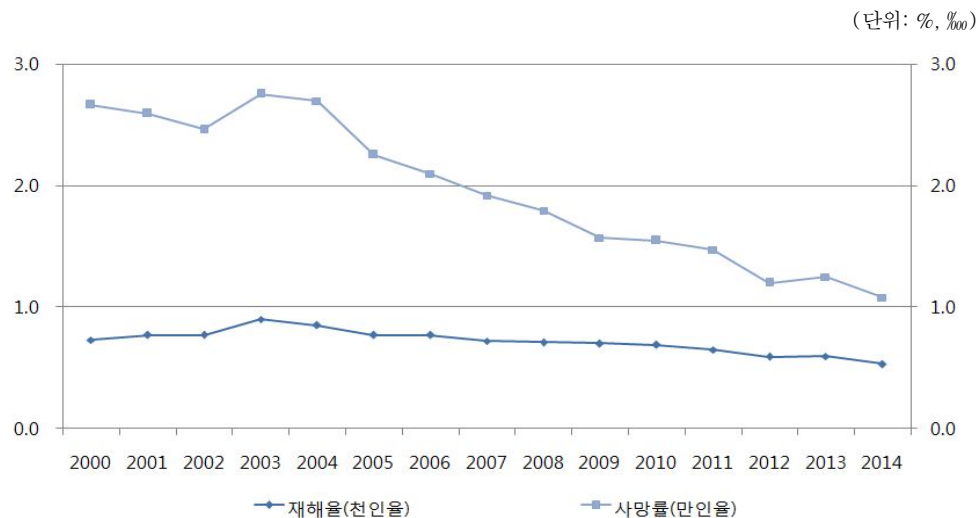
#### □ 재해율과 사망률<sup>15)</sup>

2000년 이후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으로 나타났고, 재해율과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해율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3년 0.9%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4년은

15)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재해율(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사망률(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재해율 0.5%를 기록했다. 사망률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03년 2.8‰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2000년의 절반 수준 이하인 1.2‰로 떨어졌다. 비록 2013년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2014년 사망률은 1.1‰로 2000년 이후 산업재해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27] 재해율(천인율)과 사망률(만인율)(2000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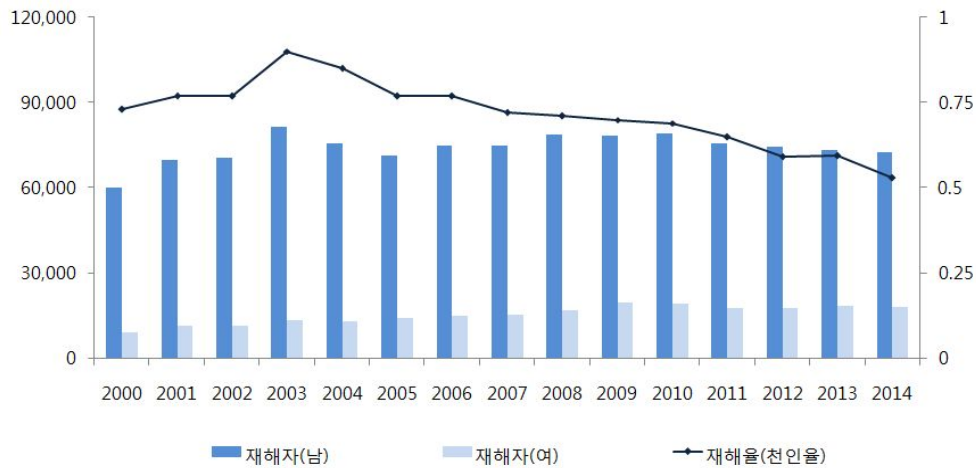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성별 산업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전체 재해자 68,976명 중 남성은 59,967명(86.9%), 여성 9,009명(13.1%)로 산업재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2000년 이후 남성 재해자수는 200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재해자수는 2000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4년에는 2000년의 2배가 넘는 18,200명이었다. 2014년의 경우 재해자 중 남성 비중은 80%로 여전히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 재해자 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반면, 여성재해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8] 성별 산업재해자와 재해율(천인율)(2000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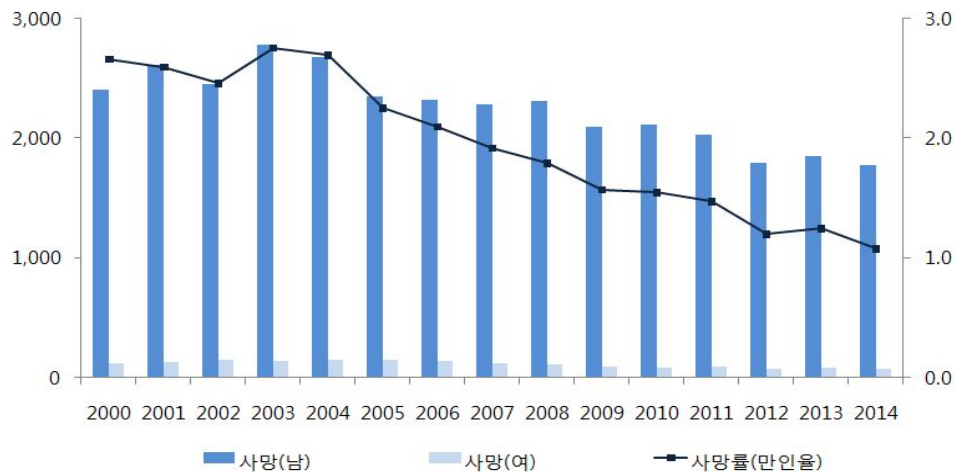
(단위:명, %)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그림 3-129] 성별 산업재해 사망자와 사망률(만인율)(2000년~2014년)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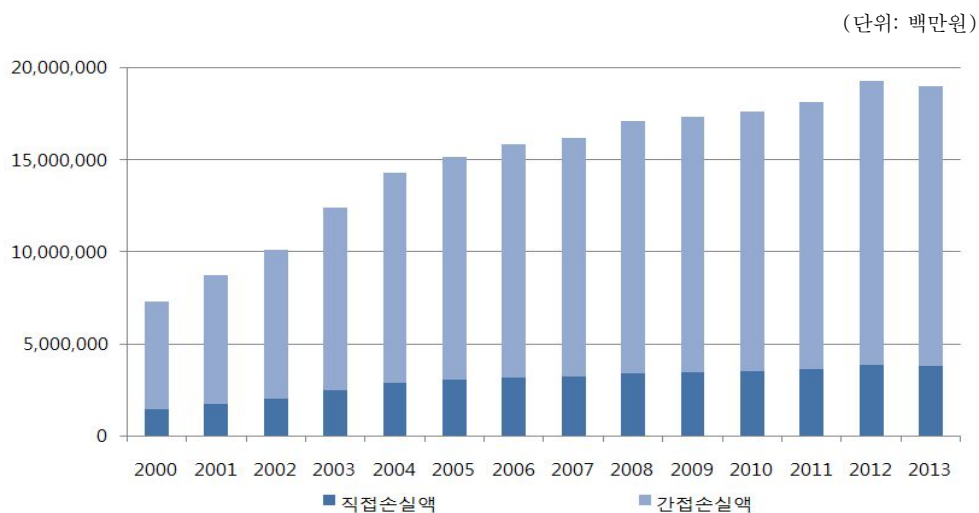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 □ 경제적 손실 추정액

산업재해율과 재해사망률은 2000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산업재

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2000년의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7,281,330백만원(산재보상금으로 인한 직접손실액 1,456,266 백만원 + 간접손실액 5,825,064 백만원)이었으나, 매년 5.8%~22.8%의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2004년 14,299,570백만원으로 약 2배가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1.2%~6.2%의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고, 2013년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 감소하였다.

[그림 3-130]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추정액(2000년~2013년)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 아. 문화

### [여가와 사회참여]

#### ■ 배경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3.1%이고, 2020년 15.7%, 2030년 24.3%, 2050년 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한 사

회의 조직 원리가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사회의 주요 인구가 노인에 해당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노인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중에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소비 여력이 있는 노인 집단이 노후 생활을 향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 역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의 활성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한 여가생활의 향유는 전 인구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써, 인구정책의 주요한 초점일 수 있다.

다른 한편, 여가와 사회참여는 산업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관심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후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버 경제 또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휴양 중심의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노인에게 편리한 주택, 건강 보조용품, 일반적 식품의 노인 친화성 및 건강기능 상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여가생활 지표와 문화활동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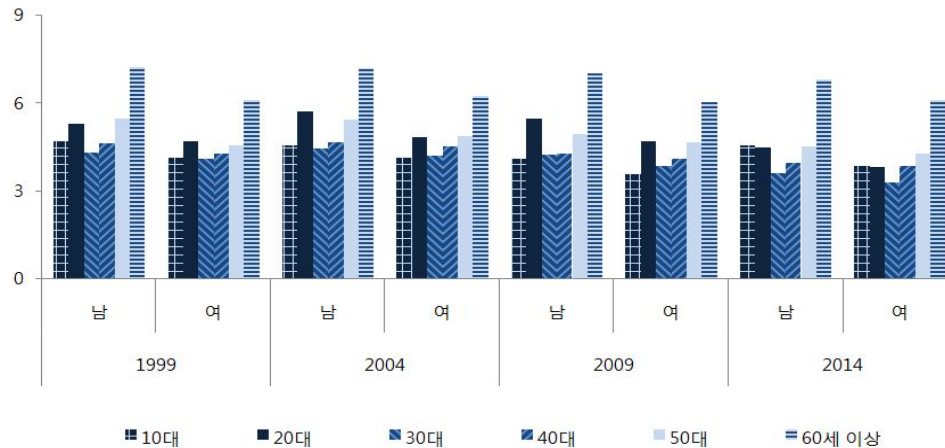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여가시간

10세 이상의 인구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시간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차이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30대 여성으로 나타났는데, 4년 평균 30대 여성의 하루 여가시간은 약 3.8분으로 60대 이상 남성의 여가시간 7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131] 성·연령별 일평균 여가시간(1999-2014년)

(단위: 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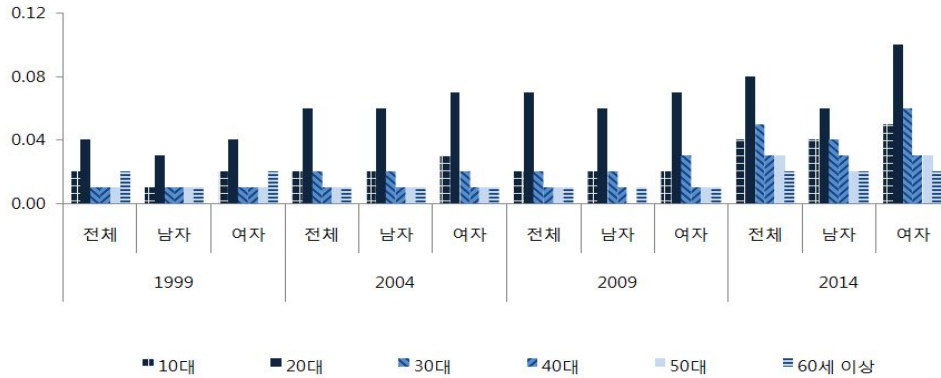
## □ 문화활동 참여시간

1999년에서 2014년까지 10대 이상 인구의 문화활동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1999~2004년까지는 전체 조사대상 샘플의 문화활동 참여시간은 0.03시간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은 0.07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 문화활동 참여시간은 1999년과 2004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시간을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과 2014년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문화활동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모든 조사년도에서 20대가 문화활동 참여시간이 가장 긴 집단으로 나타났고, 50대와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문화활동 참여시간이 낮은 편이었다. 60대 이상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일평균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집단이지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문화활동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2] 성·연령별 문화활동 참여시간(1999-2014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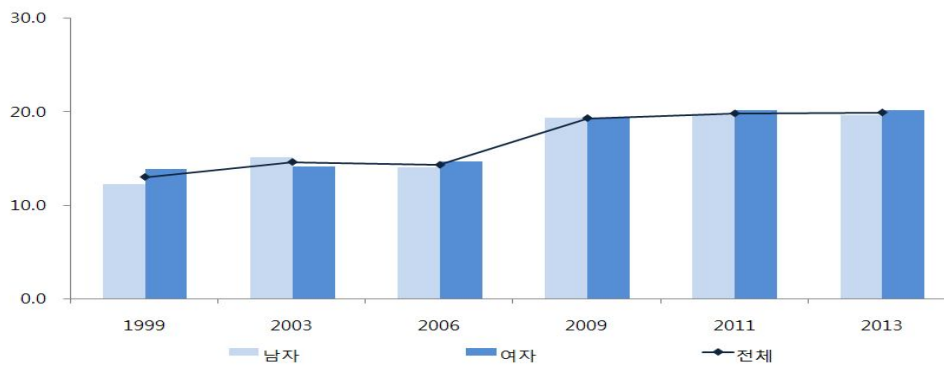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 □ 고령자 자원봉사 참가율

2003년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먼저 성별 참여율을 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지만, 남성과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133] 성별 자원봉사 참가율(1999~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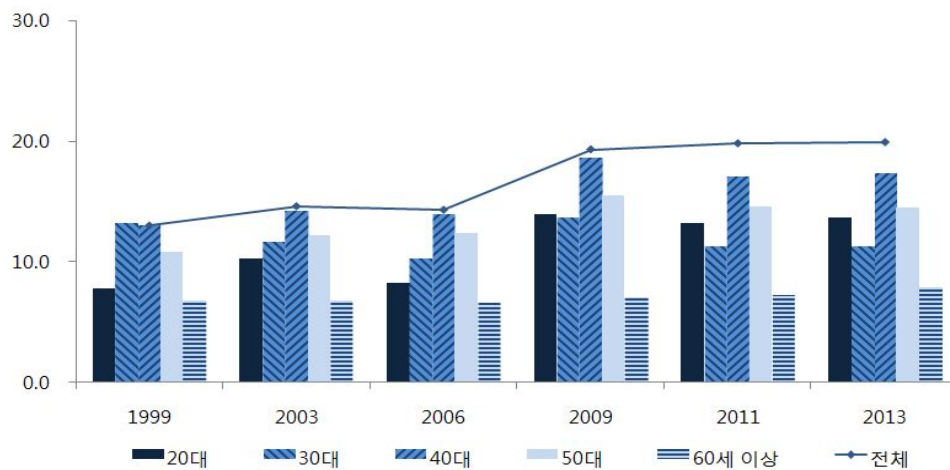


주: 자원봉사참여율 = (지난 1년간 자원봉사참여자수 ÷ 조사대상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이에 반해 연령별 참여율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전 연령층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3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8%에서 13.7%로 약 1.7배 상승한 반면, 3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3.2%에서 11.2%로 약 1.5%p 감소하였다. 4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기준 17.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 6.7%에서 2013년 7.8%로 약 1%p 상승하였지만, 대부분 각년도 평균의 절반수준 이하로 전 연령층 중 가장 저조하였는데, 60대 이상의 집단의 경우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34] 연령별 자원봉사 참가율(1999~2013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3. 정책영역

#### 가. 저출산 대응정책

[혼인·임신·출산]



## ■ 배경

혼인,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부문의 주요 공식통계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는 주로 주거 정책과 임신지원 관련되는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한다. 우선 주거문제는 가족형성기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원 가족에서 독립하여 신생 가족을 형성할 때 1차적으로 주거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혼인과 임신 및 출산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주거비용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연구에 따르면(박종서, 2015),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항목 중에서 주거비 지출 비중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반면 고소득층은 동일 기간에 주거비 지출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는 고소득층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주거비 지출 비중이 교육비 지출비중을 초과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교육비 지출 비중이 주거비 지출비중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자녀양육비용의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연관관계 때문에 주거비용의 부담은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래에 들어 고령출산이 많아지면서 산모 및 영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5세 이상 출산모의 비율이 2002년 8.0%에서 2012년 18.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쌍태아 중 저체중아 비율이 55.7%, 삼태아의 93.3%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소영, 임지영, 2013). 정부는 이와 같은 최근의 고령출산 및 난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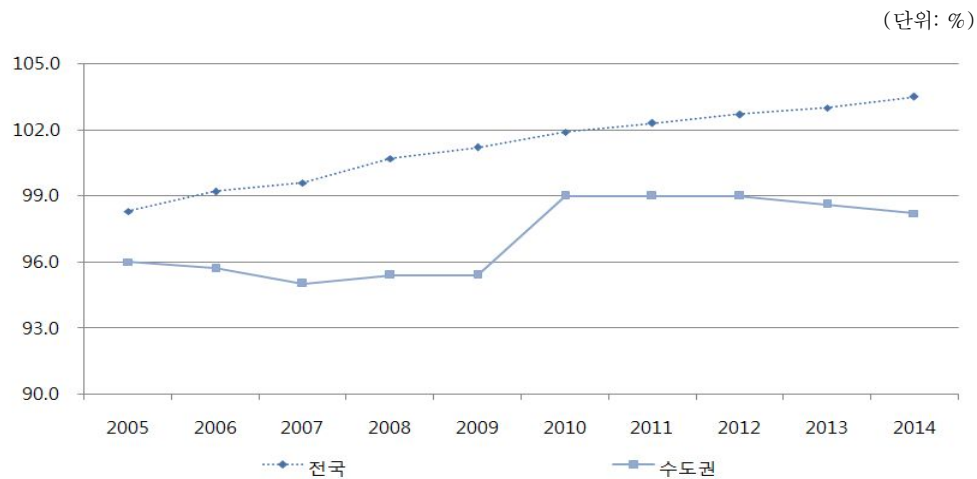
이런 배경에서 여기서는 일반적 현황으로써 주택보급률과 직접적인 정책성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관련 통계를 살펴볼 것이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 ■ 통계설명

### □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수 \* 100)으로 정의되며,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연도의 주택보급률은 추정치를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전국 98.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100%를 넘어섰고, 2014년 기준 103.5%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지만,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와 서울의 경우 각각 97.3%, 97.9%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135] 주택보급률(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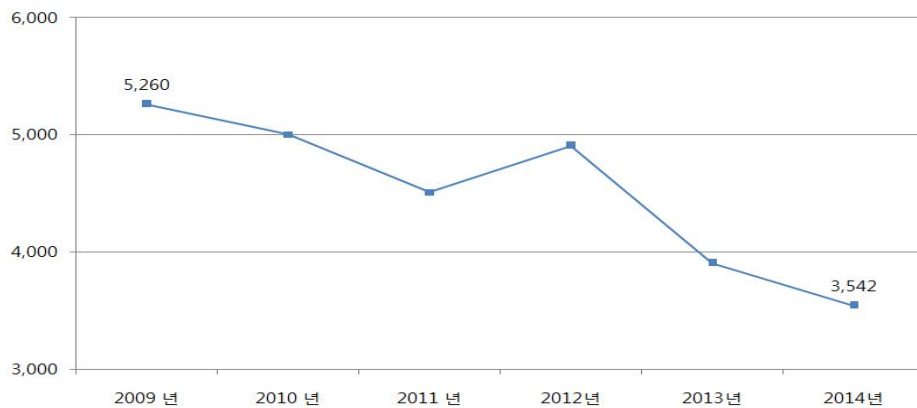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연보」, 각 연도.

### □ 신혼부부 주택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185가구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총 5,260가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제도 초반보다 30%가량 줄어든 3,542 가구를 지원하였다.

[그림 3-136] 신혼부부 전세임대 현황(2009년~2014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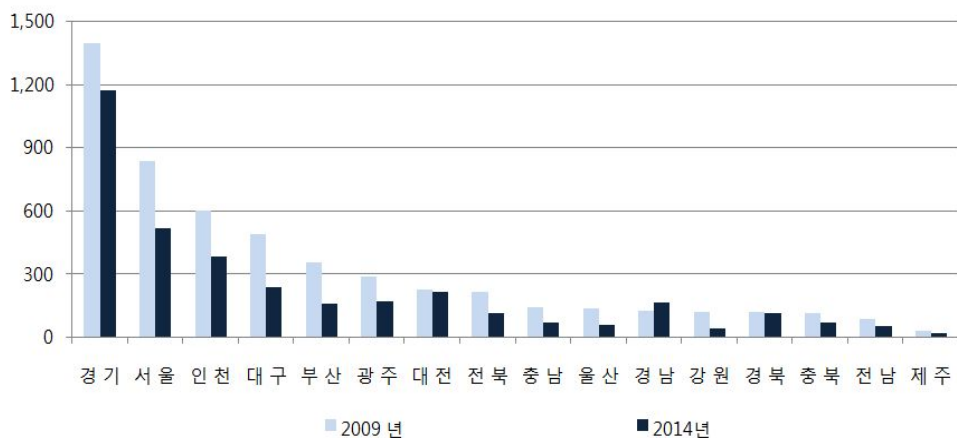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연보」, 각 년도.

신혼부부 주택지원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도 초반인 2009년에 비해 대다수의 지역에서 지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 일정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 초반에 비해 2014년의 지원현황이 증가하였다.

[그림 3-137] 지역별 신혼부부 주택지원현황(2009년, 2014년)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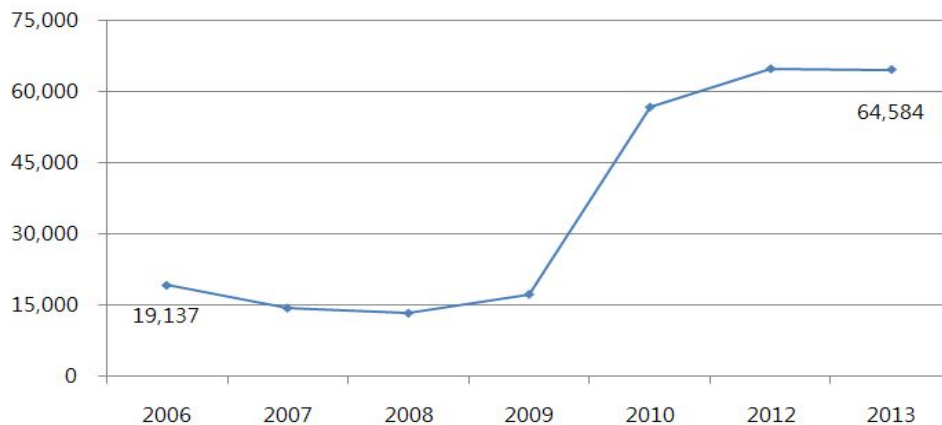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연보」, 각 년도.

##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

2006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는 19,137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64,584건으로 7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2008년까지는 다소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9년까지만 해도 지원건수는 17,238건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 56,658건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이후 56천 건 수준에서 2012년부터 64천건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64,584건까지 증가한 것이다.

[그림 3-138]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수(2006-2013년)

(단위: 명)



주: 2011년의 경우 자료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각년도.

## [자녀 양육]

## ■ 배경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통계는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성과 지표에 해당한다. 자녀 양육의 문제는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 감소의 요인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때문이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96.1%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에 찬성비율도 70.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승권 외, 2012).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클수록 혼인이나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족부양의 책임은 국가 또는 사회전체에 이양되는 추세로 전개되었다. 아동의 교육은 국가책임으로써 의무교육제도가 발달했고, 점차 영유아기 돌봄의 책임 또한 점차 국가로 이양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 영유아기 돌봄의 공공화는 발전국가에서는 보편적 제도로 정착되었다. 돌봄의 공공화는 공공보육시설 또는 민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발전으로 전개되었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양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발전되었다. 현금지원은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형식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자녀 양육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0-2세 영아를 양육할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는 일반적으로 보육 기관현황과 기관 이용아동의 비율로 측정된다. 보육 기관 현황은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등과 같은 기관 유형별 설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보육아동 수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아동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설유형 별 현황 및 보육아동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 변화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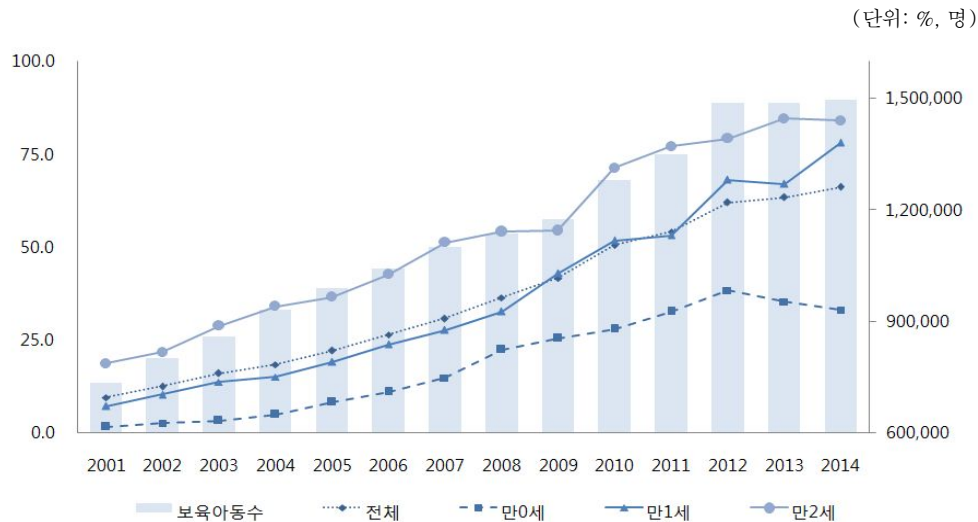
### □ 보육아동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1년 734,192명에서 2014년 1,496,671명으로 15년간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영아(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2001년 9.4%에서 2014년 66.1%로 6배가량 늘어나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은 점점 일반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영아의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만 0세 아동의 이용률의 경우 2001년~2012년까지 드라마틱한 증가를 보였다. 2001년에는 만 0세 아동 중 1.5%만

이 어린이집을 이용했으나, 2006년 10.9%, 2010년 27.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전체 0세 아동 중 약 1/3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만 1세 아동의 이용률도 2001년 7.1%에서 2014년 78%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만 2세의 경우도 2001년 18.6%에서 2014년 84%로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다.

[그림 3-139] 보육아동수 및 어린이집 이용률(2001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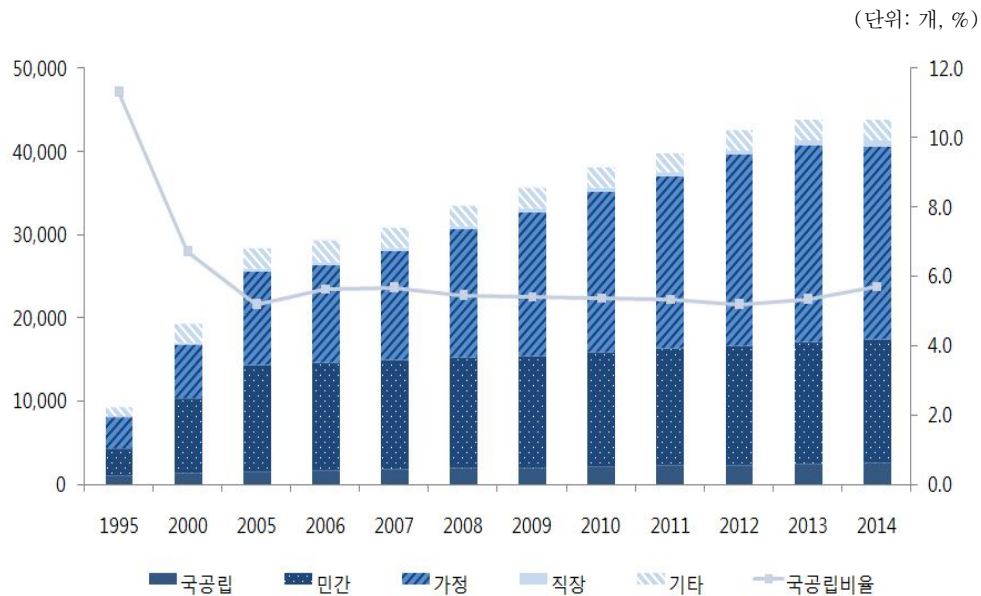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 유형별 보육시설현황

어린이집수는 1995년 9,085개에서 2014년 43,742개로 약 5배에 가까운 증가를 하였다.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43,742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어린이집(53.3%)이고, 민간(33.9%), 국공립(5.7%), 사회복지법인(3.2%) 순이다.

유형별 어린이집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국공립 어린이집은 1,029에서 2014년 2,489개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은 3,175개에서 14,822개로 약 4.5배, 가정어린이집은 3,844개에서 23,318개로 약 6배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1995년의 국공립 비율은 11.3%였지만 2014년에는 5.7%에 불과하다.

[그림 3-140] 유형별 보육시설현황(1995~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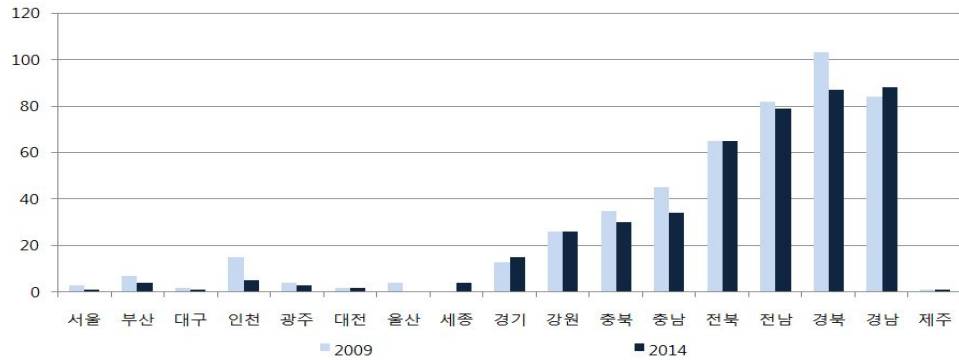
#### □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이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445개의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는 2014년 기준 모든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만, 경남과 경북의 경우 각각 88개 지역, 87개 지역의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13개에서 2014년 15개로, 경남의 경우 2009년 84개에서 2014년 88개로 오히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증가하였다. 전남과 충북의 경우는 미미한 수준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2009년 82개 지역에서 2014년 79개 지역으로 3개 지역이 감소하였고, 충북의 경우는 35개에서 30개 읍면동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141] 어린이집 미설치지역(2009년, 2014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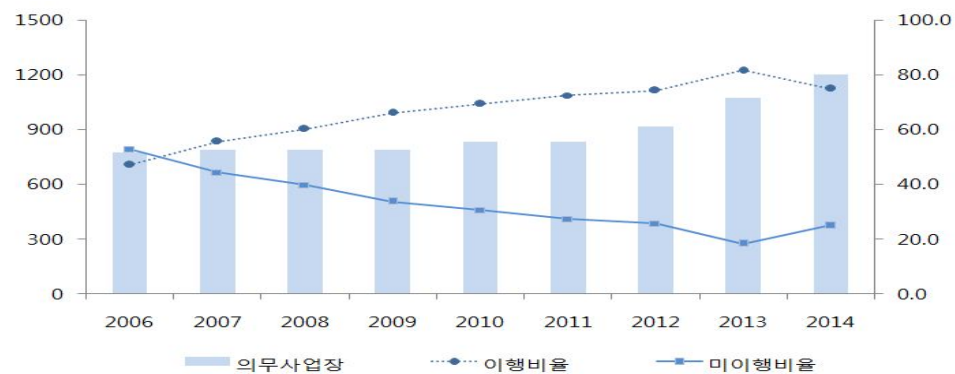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각년도.

###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직장 보육시설 의무이행률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의무사업장 총 775개 중 410개 사업장(52.9%)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당 혹은 위탁을 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는 의무이행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의무사업장의 81.7%의 의무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의무이행률이 75%로 감소하여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42]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2006~2014년)

(단위: 개, %)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실태조사」, 각년도.



## □ 평가인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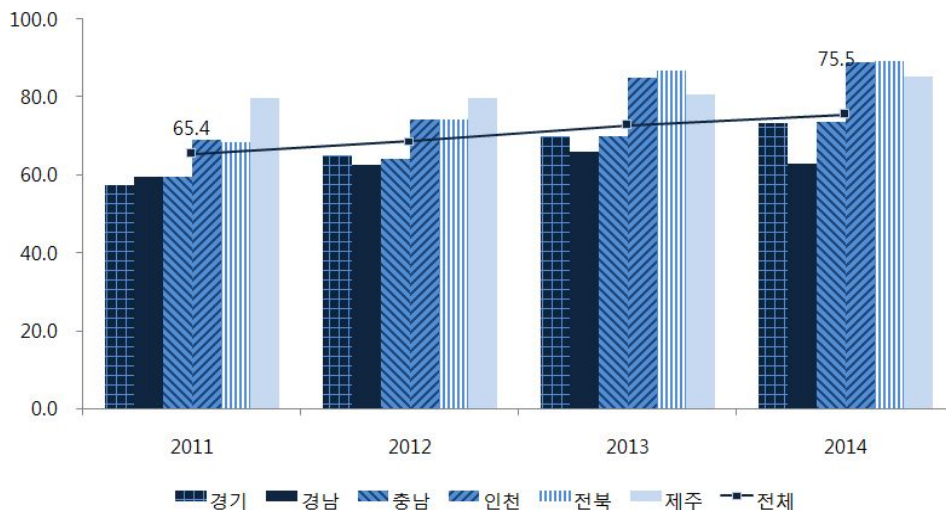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2011년 65.4%에서 매년 3~4% 포인트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중 75.5%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2011년 평가인증률은 57.3%와 59.5%로 하위권이였으나, 2014년은 73.2%로 평균 75.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남의 경우 2011년 59.5%에서 2013년 65.9%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지만, 2014년은 62.9%로 감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인증률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제주의 경우 2011년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이 7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은 85.3%로 여전히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1년 69.1%, 68.3%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89.0%와 8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인증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43] 평가인증률현황(2011년~2014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 [일·가정 양립]

## ■ 배경

일·가정양립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성역할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가족 내 여성의 가사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일·가정양립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북유럽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국에서도 출산율 하락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강화노력을 지속해왔다. 많은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장문화와 노동시장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여전히 잔존하여 여성에게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써의 역할이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엄마나 주부의 역할과 직장여성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따라서 출산을 꺼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가정양립제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휴가휴직제도의 성과와 노동시장이탈 지표를 나타내는 육아휴직자의 직장유지율,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실적, 가족친화인증 기업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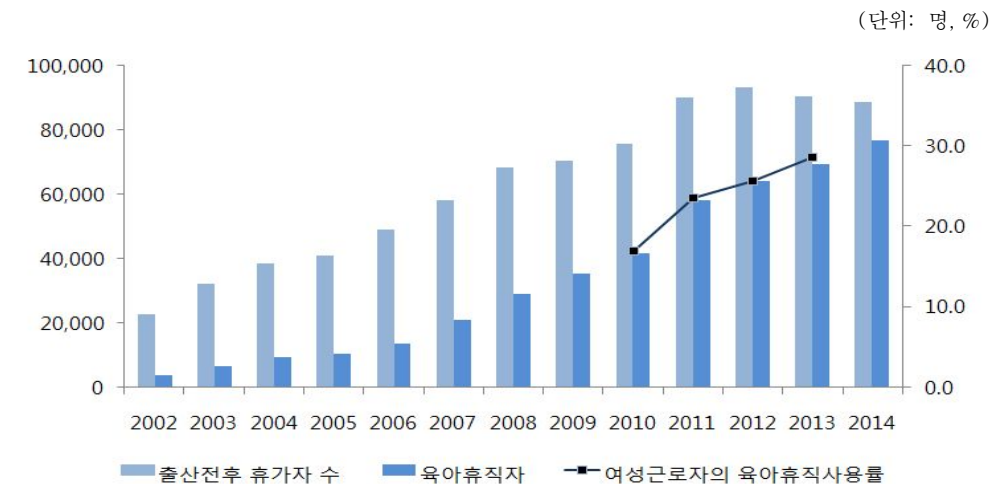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에서 추가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 초반인 2002년 출산전후휴가자수는 총 22,711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약 4배가 넘는 93,394명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하였고, 2013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88,756명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수급하였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자도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되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자는 2010년 41,733명에서 58,13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 중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2010년 16.9%에서 2013년 28.6%로 육아휴직 사용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의 급여대체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자가 낮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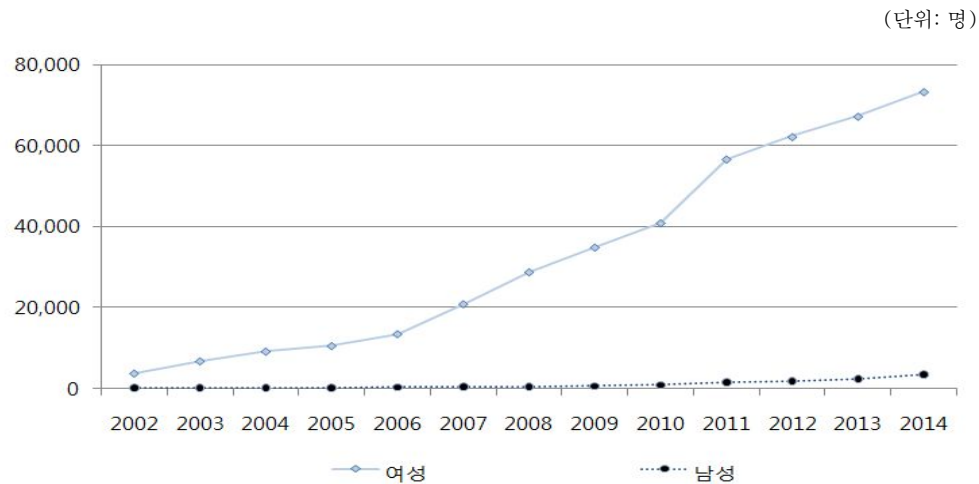
[그림 3-144] 출산전후휴가자 수와 육아휴직 사용률(2002~2014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통계청, 「등록센서스 DB」.

육아휴직제도의 성별 사용률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남성근로자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육아휴직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평균 2.2%에 불과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08년 1.2%였고, 2009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4.5%가 남성이었다.

[그림 3-145]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200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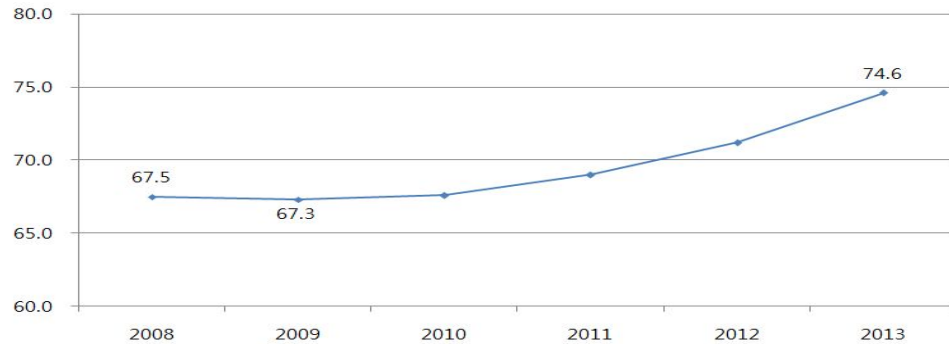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1년 후 동일한 직장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을 보면 2008년 67.5%에서 2009년 67.3%로 미미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부터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13년에는 육아휴직 사용자 중 74.6%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6]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유지율(2008~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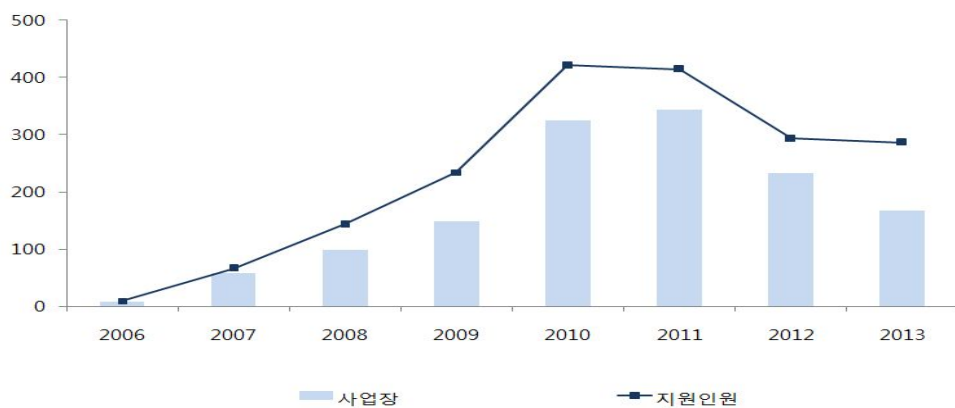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제도가 도입된 초반인 2007년에는 58개 사업장, 66명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344개 사업장 414명의 비정규직 재고용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32개 사업장, 294명에서 2013년 167개 사업장, 286명으로 2012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47]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2006~2014년)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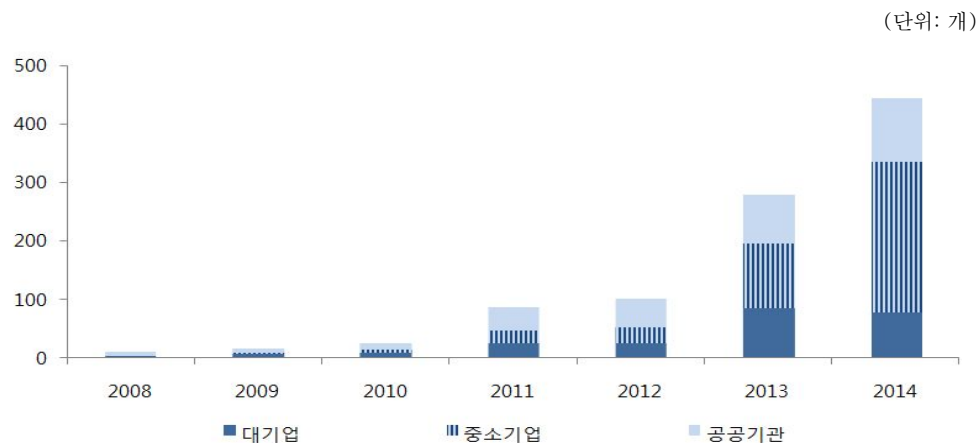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14 고용노동백서」, p.80

## □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수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부여받은 기업·기관은 2008년 대기업 3개, 공공기관 6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수는 23개에서 2011년 86개(대기업 24개, 중소기업 22개, 공공기관 40개)로 전 기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체 인증부여 기업·기관의 절반은 공공기관으로, 제도 초반기에는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민간부분의 인증이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대기업 84개, 중소기업 111개, 공공기관 84개로 대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대기업 77개, 중소기업 257개, 공공기관 110개로 중소기업의 인증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3-148]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수(2008~2014년)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제」.

## 나. 고령화 대응정책

고령사회정책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인구정책이다. 고령 사회정책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후 삶” 즉, 고령자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정책, 고령자의 건강보장정책,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인구 구성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거나 순기능을 확대시키는 대응 정책이다. 사회구성원의 고령자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고령자가 새로운 소비자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분야인 고령친화사업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분야의 대응 정책 등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소득보장, 건강보장, 여가 및 사회참여 보장 정책이다. 정경희 외(2012)의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노인의 경제상태, 노인의 건강, 노인의 사회참여, 노인의 물리적 안전,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구성 영역 중 정책 영역은 크게 소득, 건강,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환경 정책으로 구성된다.

#### [노후소득보장]

#### ■ 배경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 제약 또는 노동시장의 제약으로 인해 주요 소득원인 근로 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원의 확보가 필요로 한다. 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 농경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교를 바탕으로 한 효 사상으로 인해 노후 주요 소득원은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족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자녀에 의한 경제적 부양을 노년기의 주요 소득원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2002년과 2014년 조사결과,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에 의하면, 2002년 결과 ‘스스로 해결’(9.6%), ‘가족’(70.7%), ‘가족과 정부사회’(18.2%), ‘정부사회’(1.3%), ‘기타’(0.2%)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에서 가족에 의한 부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스스로 해결’(16.6%), ‘가족’(31.7%), ‘가족과 정부,사회’(47.3%), ‘정부사회’(4.4%)이다. 부모부양에 있어 가족만의 역할이라는 생각은 13년 만에 절반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이러한 결과는 노후 소득원으로서 사회보장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사적인 소득보장과 공적인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공적 소득보장으로는 연금제도와 기초보장제도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대표적이며, 기초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소득보장의 기본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고령자가 주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30.6%(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로 고령화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공적연금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20년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었다. 그 외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노후 소득보장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 노인세대의 공적 소득원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제도이며, 이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앞서 살펴본 공적 소득보장과 함께 사적 소득보장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공적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 함께 사적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사적 소득보장으로는 개인 연금, 퇴직연금, 주택 연금 정책이 실시 중에 있다.

## ■ 통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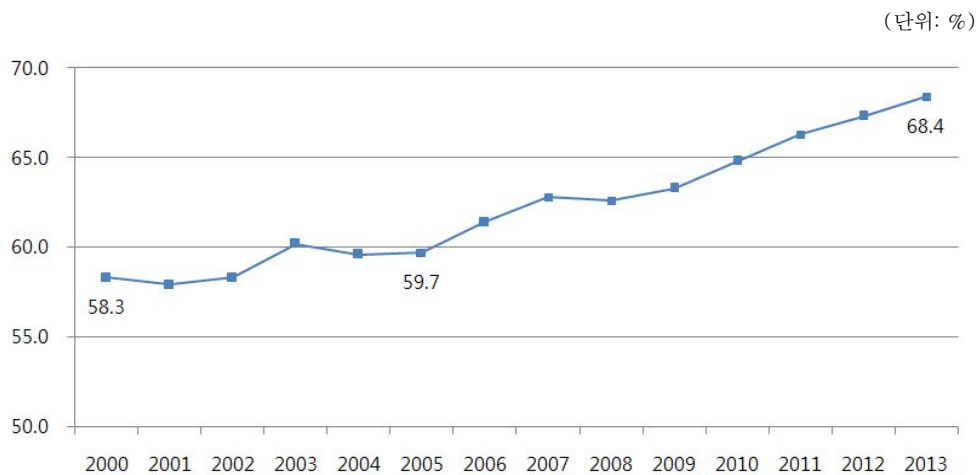
### □ 공적연금 가입율

공적연금은 노후소득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 중 대표적인 소득원이다. 의무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 공무원, 사학 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공적연금 가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58.3%, 2005년 59.7%로 가입률의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 2005년 이후부터 공적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13년 68.4%로 확대되었다.

[그림 3-149] 공적연금 가입률(2000-2013년)



주: 공적연금가입률=(공적연금가입자수÷만 18-59세 추계인구)×1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년도;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 □ 공적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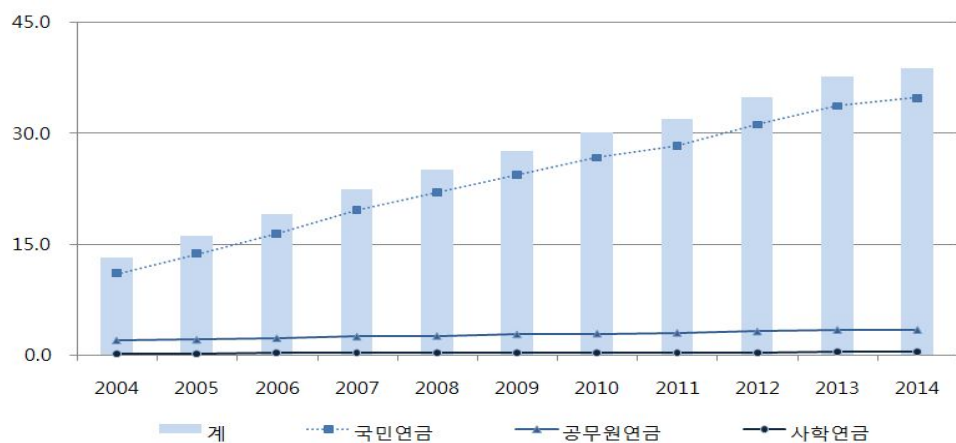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입기간 20년을 통해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4년 13.2%에서 2010년 27.6%, 2014년 38.7%로 확대되었다. 이는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년기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기존 가족과 자녀들로 부터의 부양보다는 본인과 국가/사회에 의한 부양 책임의 부양관을 갖게 된 배경이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2005년 13.7%에서 2010년 26.7%, 2014년 34.8%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연금은 2004년 2.0%에서 2014년 3.4%로 증가하였으며, 사학연금은 0.2%에서 0.5%로 증가하였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인해 수급률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률은 과거 10년 동안 꾸준하면서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즉, 노후연금은 노년기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50]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률(2004-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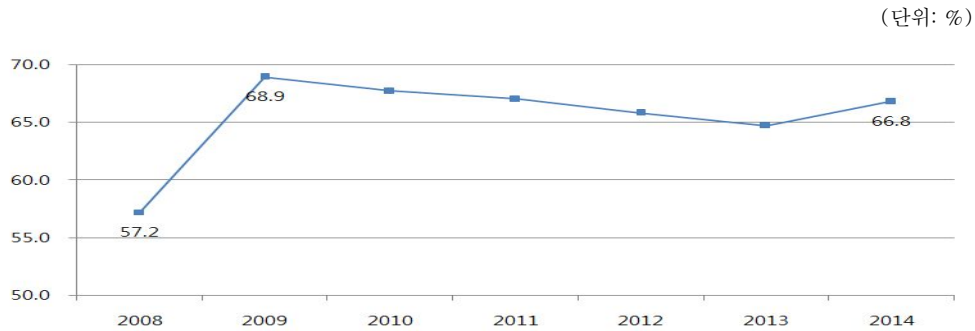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년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년도.

#### □ 기초연금 수급률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제도 확대를 통해 2014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 설계시 노후 빈곤해소 목적을 위해 노인의 하위소득자 70%에게 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노인의 57.2%가 급여를 받았으며, 2009년 68.9%, 2013년 64.7% 이다.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시작한 2014년 수급자률은 노인 중 66.8%로 나타났다.

[그림 3-151] 기초연금수급자 비율(200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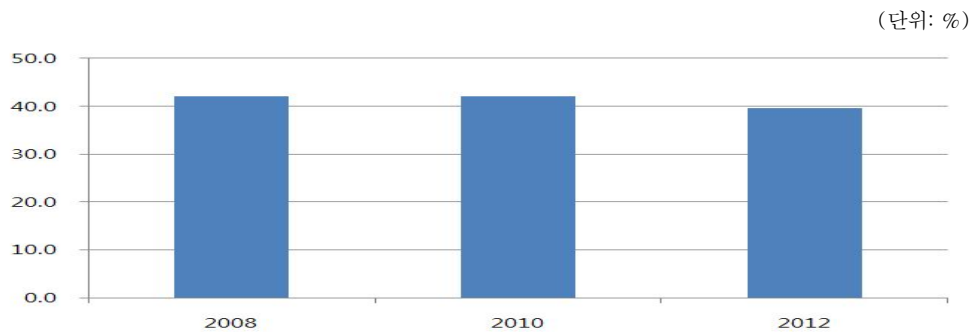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 □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그 외 특수직역 연금 등을 통해 노후 소득원의 안정성 수준은 과거 10년 동안 크게 확대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2008년 기초(노령) 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가입률 확대, 또한 공적연금 수급율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수급액의 수준이 기존 소득과 비교할 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은 노년기 안정적 소득보장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2006년 이후 격년으로 산출되는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2008년 42.1%, 2010년 42.1%, 2012년 39.6%로 4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52]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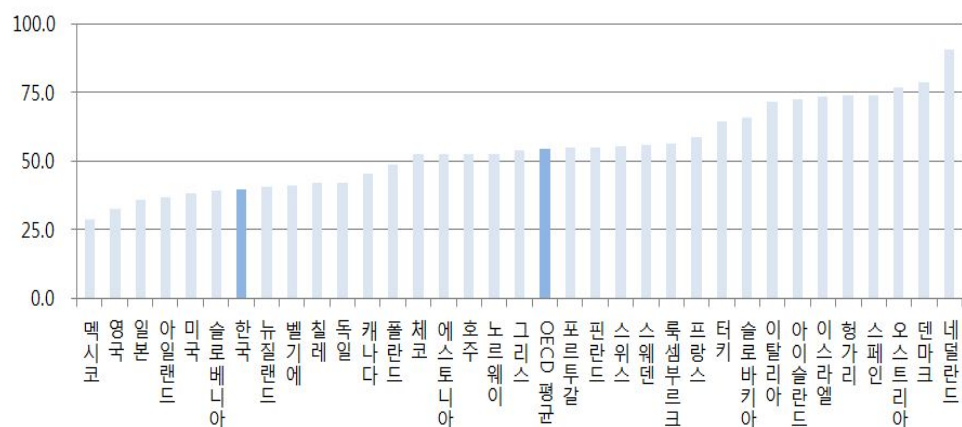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Pension replacement rate(Gross, 중위소득1, 남성기준)」.

OECD국가와 비교하면, OECD 평균 54.4%의 대체율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90.7%로 가장 높으며, 덴마크 78.5%, 오스트리아 76.6%로 나타나며, 일본, 영국, 미국의 경우 30%대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인구현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급여수준을 낮추는 연금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만을 통한 노후소득의 충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충분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적연금제도 외의 사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153] OECD 주요 국가의 실질 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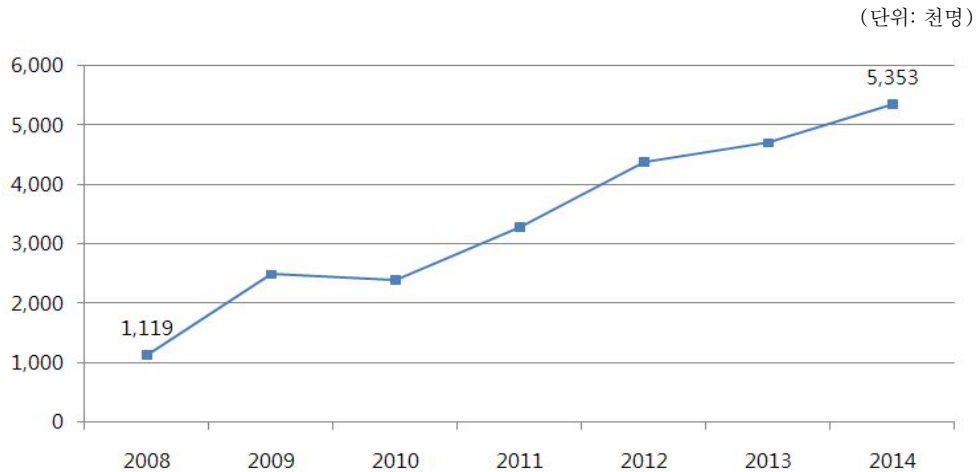
자료 : OECD.Stat. 「Pension replacement rate(Gross, 중위소득1, 남성기준)」.

#### □ 퇴직연금 가입자수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본격화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5년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에 대해 연금방식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 퇴직연금가입자수는 1,119천명이었으며, 2010년 2393천명, 2014년 5,353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약 5배의 가입자 증가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림 3-154] 퇴직연금가입자수(200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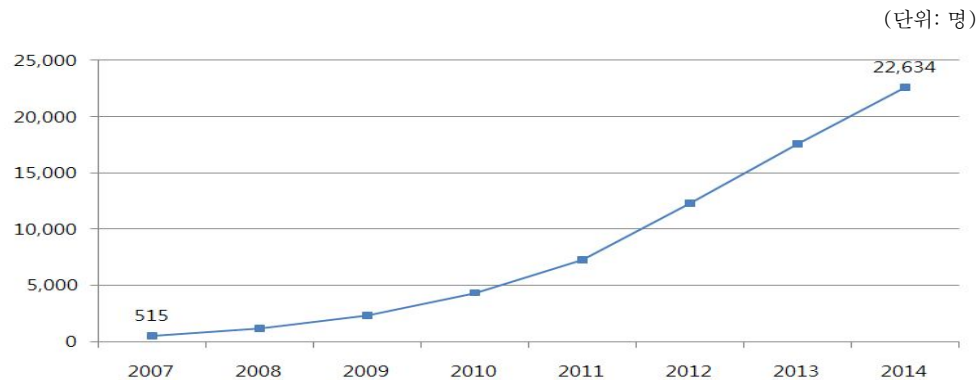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www.moel.go.kr)

#### □ 주택연금가입자수

우리나라 노인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목적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생활을 위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처가 없는 상태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택연금제도는 역모기지 제도로 노년기의 주택을 활용하여 거주와 생활비 마련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택연금수급자는 2008년 1210명이었으며, 매해 2배 가량의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2011년 7286명, 2014년은 22634명이 주택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녀들로부터 부양이 당연히 되었을 때는 노년기는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주택을 상속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부모부양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노인 세대가 본인의 자산을 활용한 노년기 경제적 자립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3-155] 주택연금가입자수(2007-2014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노후 건강 및 돌봄 보장]

### ■ 배경

노년기는 건강의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이론에서도 질병과 질환의 낮은 위험, 인지와 신체적 기능의 유지, 사회활동의 계속적 참여는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로 밝히고 있다(John W. Rowe & Robert L. Kahn, 2015). 노년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진다.

고령사회정책에서의 노년기 건강관리 정책으로는 예방적 정책과 대응적 정책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건강관리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전 연령에 대한 건강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에 특화된 건강보장이라기 보다는 전 연령층의 건강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악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장기요양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사회가 노인 돌봄의 책임을 상당부분 사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점차 개인과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인식이 변화되고, 또한 가

치 뿐 아니라 가족 내 돌봄인력의 감소 등의 상황이 반영된 제도이다.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의 돌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영역에서는 노후 건강 보장정책을 반영하는 통계로 중장년층 이상의 건강 검진 수검률, 노인의 의료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후 돌봄 보장 정책의 상태를 파악하는 통계로 노인장기요양보장수급율, 노인장기요양기관수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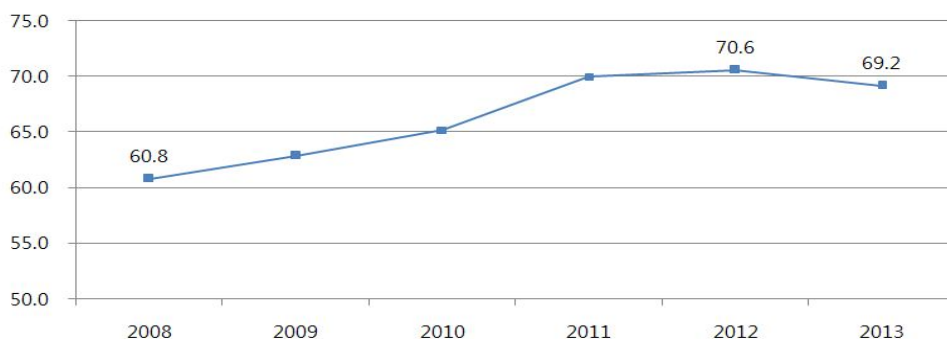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

노년기 건강보장 정책의 건강검진정책은 예방적 특성을 갖는 정책으로, 노년기 이전에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책의 도입을 통해 노년기 이전부터 건강에 관심을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정책을 수립하고, 45세가 되는 시점에 모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60.8%에서 2011년 70.0%까지 향상하였으며, 2013년 약간 감소한 69.2%로 나타났다.

[그림 3-156] 4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2008-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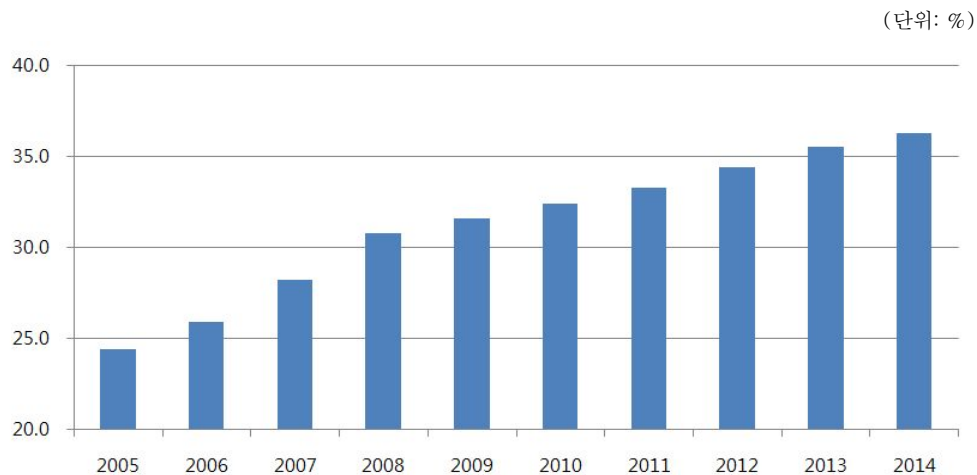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 각년도

## □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갖는 의미는 노인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동시에 사회에서 노인으로 인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다.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4.4%였으나 2010년 32.4%, 2014년 36.3%로 약 10년간 11.9%포인트 증가하였다. 노년기는 타 연령층에 비해 질환 유병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2005년 고령화율이 9.3%였으며, 노인의료비 비중은 약 24.4%로, 고령화율과 비교할 때 약 2.6배 높았으나, 2014년 현재 고령화율 12.7%과 비교할 때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3.1배 높다.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노인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은 노인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57]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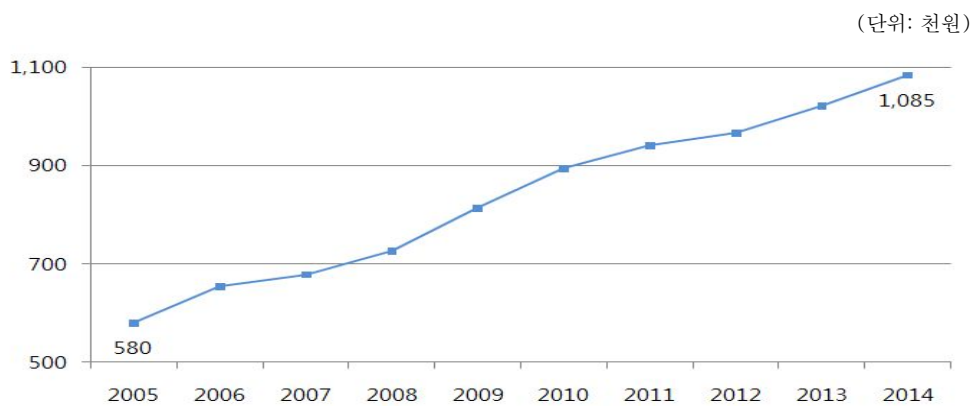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년도.



## □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5년 580천원이었으나, 2014년 1,085천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맥락에서 노인의 의료에 대한 욕구 충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58]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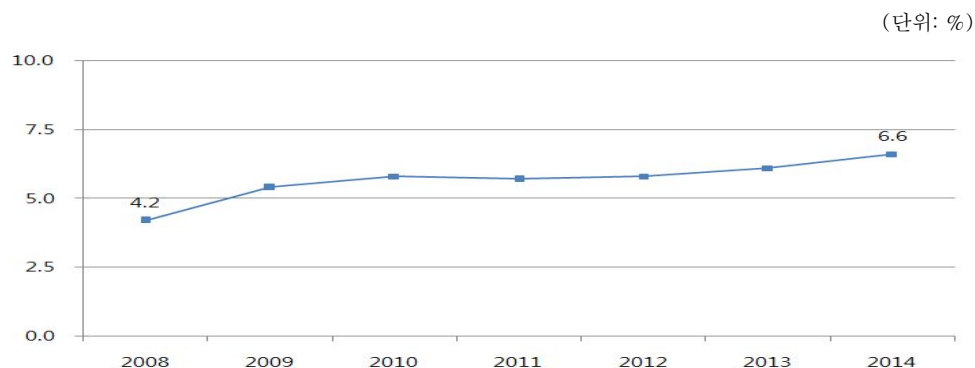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년도.

## □ 노인장기요양보호율

노년기 신체 및 정신적 기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게 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노인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사회에서 보호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 중 제도에서 보호를 받는 비율은 2008년 4.2%, 2010년 5.8%, 2014년 6.6%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대상자 보장수준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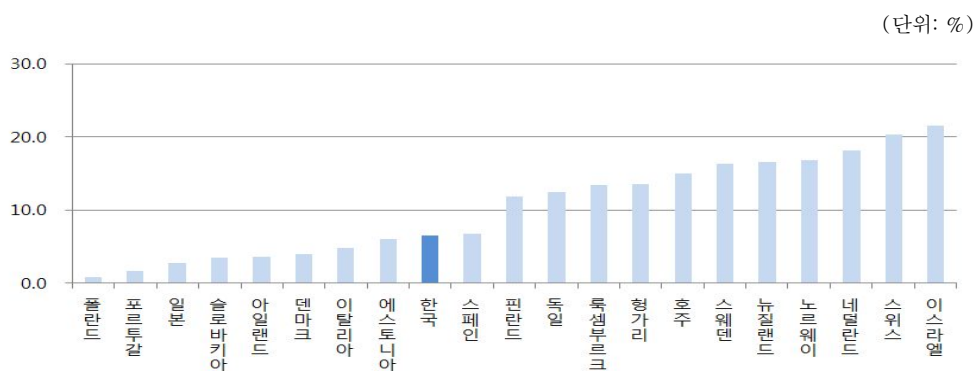
[그림 3-159] 노인장기요양보호율(인정률)(2008-2014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년도.

장기요양보장 보호율은 국가별 큰 편차를 보인다. 이는 제도가 갖고 있는 보장성의 수준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규모, 특히 장기요양의 주요 대상이 되는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별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율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위스가 20% 가량의 높은 보호율을 보이며, 호주, 헝가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가 15% 가량의 보호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핀란드, 독일의 10%가량을 보이며, 우리나라는 6.5%수준으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 중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규모, 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보호율은 차이를 나타냄으로 향후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60] OECD 주요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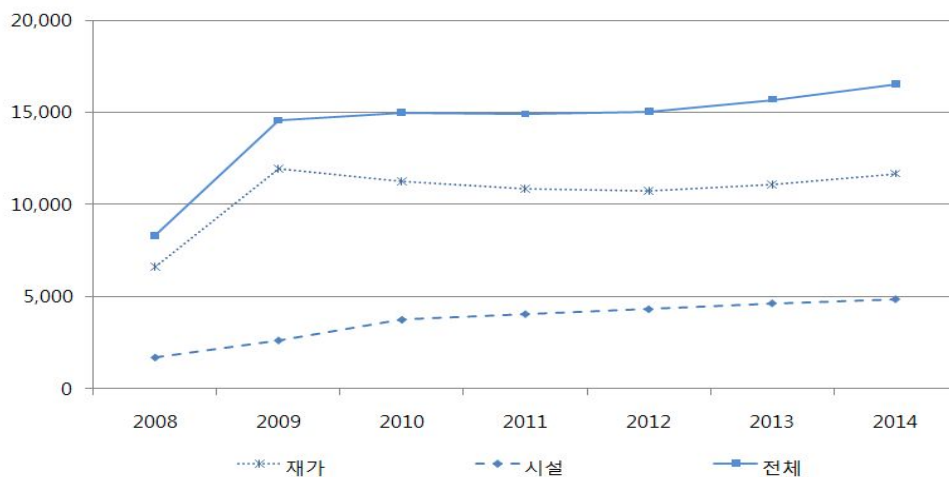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Stat.

## □ 노인장기요양 기관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보호받는 노인의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시설 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며, 재가서비스는 노인이 집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급격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다. 2008년 8,318개소인 장기요양기관은 2009년 14,560개소로 확대되었으나 그 이후 증가속도는 원만히 이루어지며, 2009년 이후 재가시설은 다소 감소하지만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서비스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0개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00개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추세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정적인 공급규모를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161] 노인장기요양 기관수(2008-2014년)

(단위: 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각년도.

## [노인 사회참여 및 인권보장]

### ■ 배경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노년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노인 개개인과 국가와 사회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존감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방안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함으로 이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권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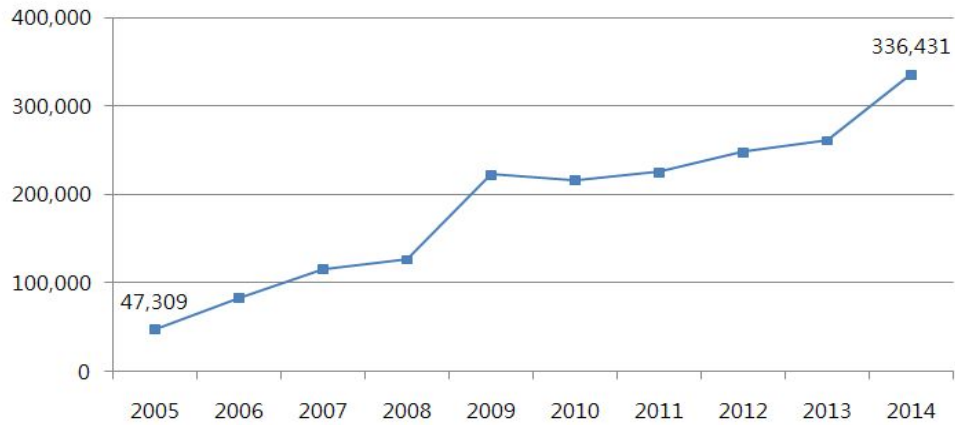
### ■ 통계설명

#### □ 노인일자리창출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소득보장의 목적보다는 노인의 사회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시작 되었으며, 2008년 126천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 222천명, 2013년 261천명, 2014년 336천명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과 2014년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림 3-162] 노인일자리 창출수(2005-201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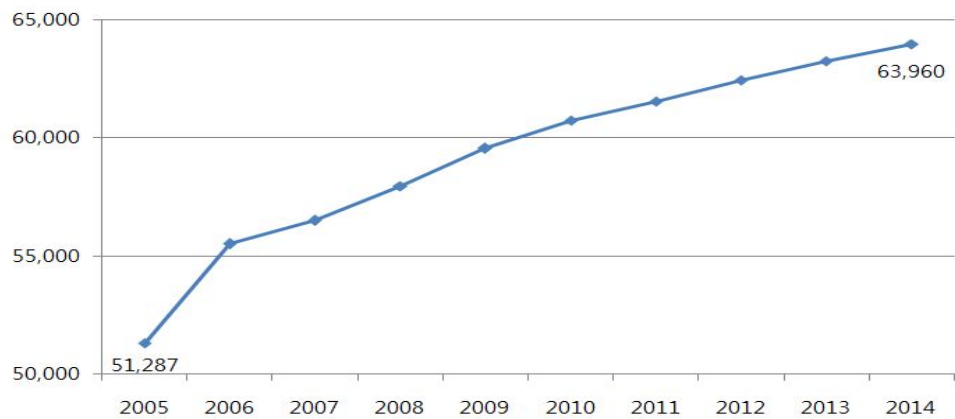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 □ 경로당 설치운영수

현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급기관 중 경로당은 대표적으로 노인이 외부와 접촉을 하는 복지기관이다. 경로당은 2008년 51천 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약 64천개로 확대되었다.

[그림 3-163] 경로당 설치운영수(2005-2014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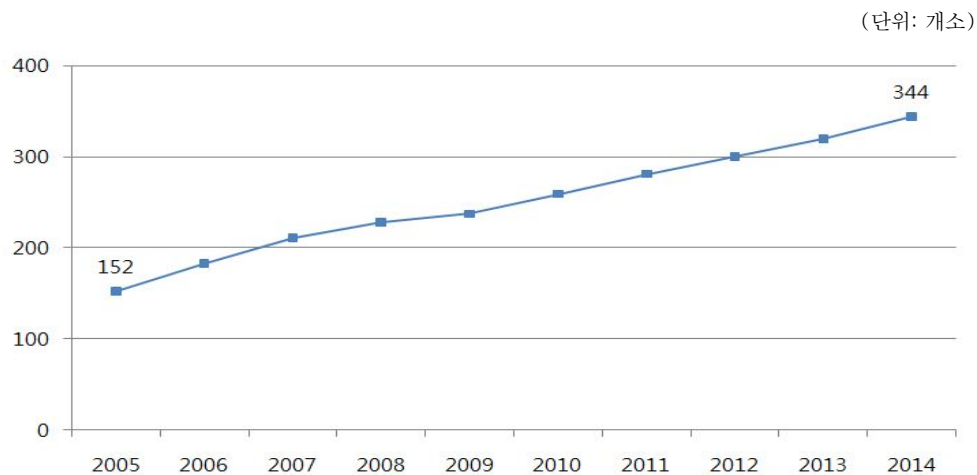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년도.

## □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

경로당이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은 경로당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노인복지관은 2005년 152개였으나, 2014년 현재 344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어 노인의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를 조직화하는 핵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6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수(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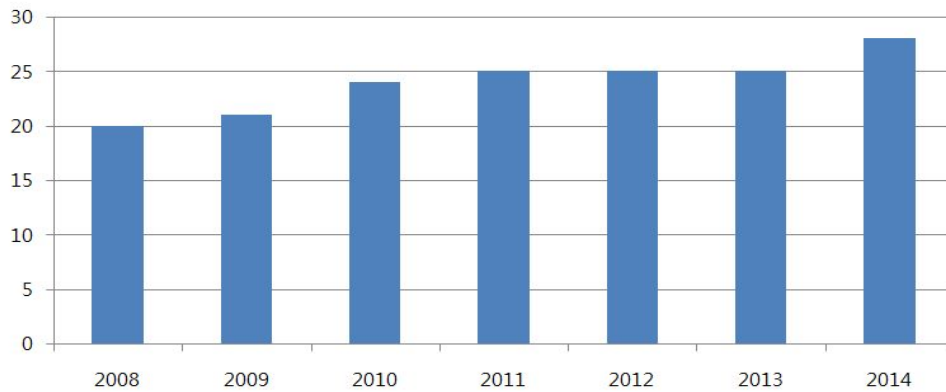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년도.

## □ 노인보호전문기관수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현재 2014년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도별 1개를 기본으로 하되, 노인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 운영된 지역이 있다.

[그림 3-165] 노인보호전문기관수(2008-2014년)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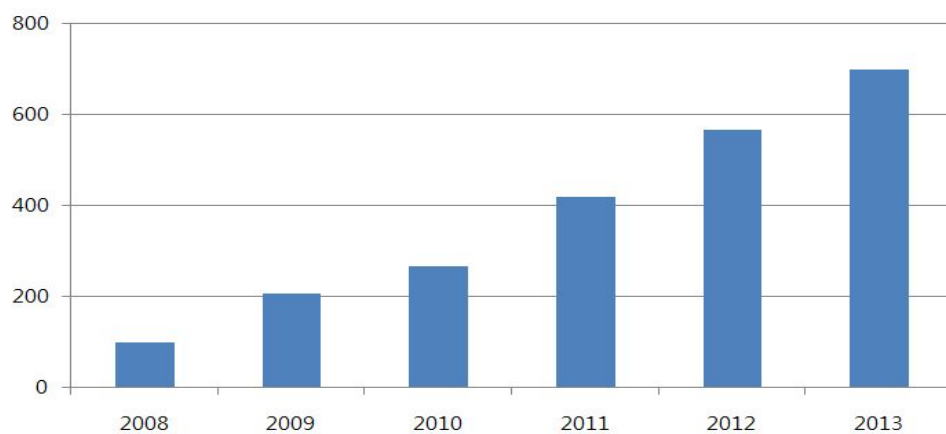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년도.

## □ 노인보호구역 지정수

노인의 지역에서의 안전한 거동을 위해 노인인구의 이동이 많은 도로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8년 97개소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 697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그림 3-166] 노인보호구역 지정수(2008-2013년)

(단위: 개소)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수」.

## □ 고령자용 주택 공급 비율

교통과 함께 고령자의 주택의 안정적 보급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핵심요소이다.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 정책이 본격화 된 것은 2010년 이후로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였으나, 2013년 수도권은 8.6%, 지방은 5.6%로 확대되었다.

&lt;표 3-17&gt; 고령자용 주택 공급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수도권		5.9	5.0	8.6
고령자용 주택 공급비율	8			
지방		3.1	3.4	5.6

주: 주거약자(고령자용)임대주택/전체임대주택 x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각년도.

## 다. 정책추진기반

## [예산 및 재정]

## ■ 배경

인구정책 통계의 정책영역에서 정책추진기반 지표인 예산 및 국가 재정 통계는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 차원에서 재정투입 규모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 재정 안정성 측면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추진된 것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저출산 대응정책과 고령화 대책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본계획에 포함된 많은 정책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으로써, 정부재정을 신규로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부터 신규로 도입된 정책을 포함하여 전체 기본계획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의 투입지표로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투입예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재정투입에 따른 출산율 상승 기대감이 국가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인구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각종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재정은 그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국제적 수준과 비교를 통하여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 축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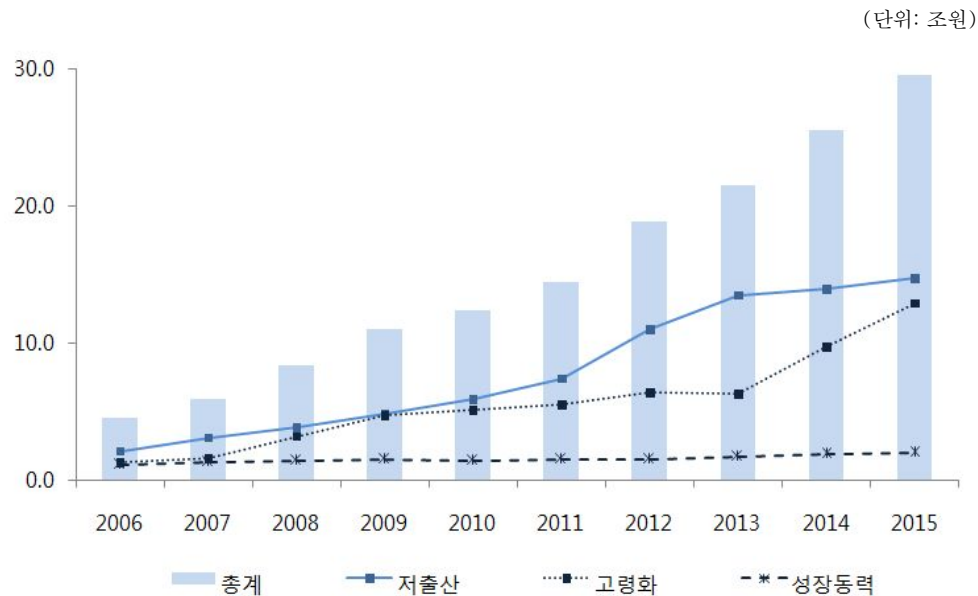
이런 배경에서 인구정책의 추진기반 측면에서 투입 예산의 규모와 정부의 재정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우선 투입 예산의 규모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가족 관련 지출, 공적연금관련지출, 국민의료비 등은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비율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 ■ 통계설명

### □ 인구정책예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시행되었던 2006년 예산 집행액은 4.5조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관련 예산액은 29.6조원으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재원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성장동력 관련 예산은 2006년 1.1조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0조원이 투입되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저출산 관련 예산의 경우 2006년 2.1조원에서 2015년 14.7조원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예산은 1.3조원에서 12.9조원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3-16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예산(2006-2015년)



주: 1) 지방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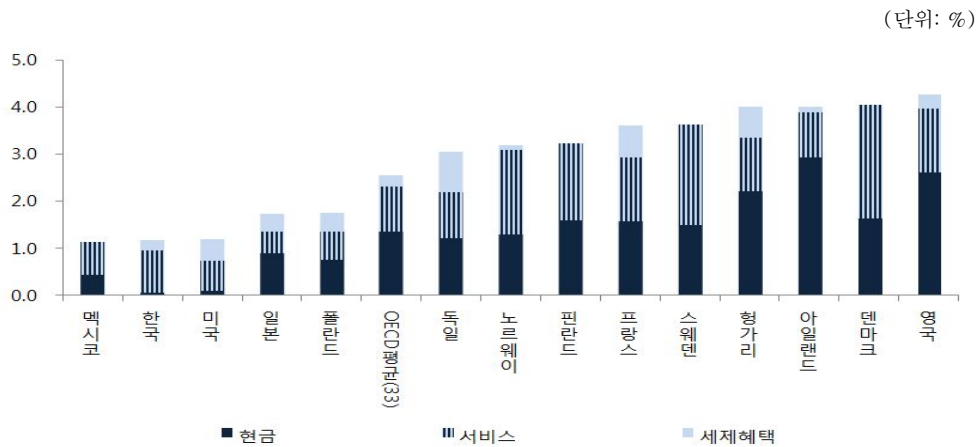
2) 2006-2013년은 실집행액, 2015년은 예산액 기준.

자료: 정부부처합동(2015),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20.

#### □ GDP대비 가족 관련 지출

OECD 국가들의 가족관련 지출은 크게 현금, 서비스, 그리고 세제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기준 전체 GDP의 1.2%를 가족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금 0.1%, 서비스 0.9%, 세제혜택 0.2%로 서비스 비중이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등으로 대략 전체 GDP의 4% 정도를 가족과 관련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 한국, 미국 등은 가족관련 지출은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가족관련 지출액은 GDP대비 약 1%수준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군의 1/4 수준에 불과했고, OECD 평균 2.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족관련 지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사민주의 국가들은 현금과 서비스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 현금, 서비스, 그리고 세제혜택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3-168] GDP대비 가족관련 지출(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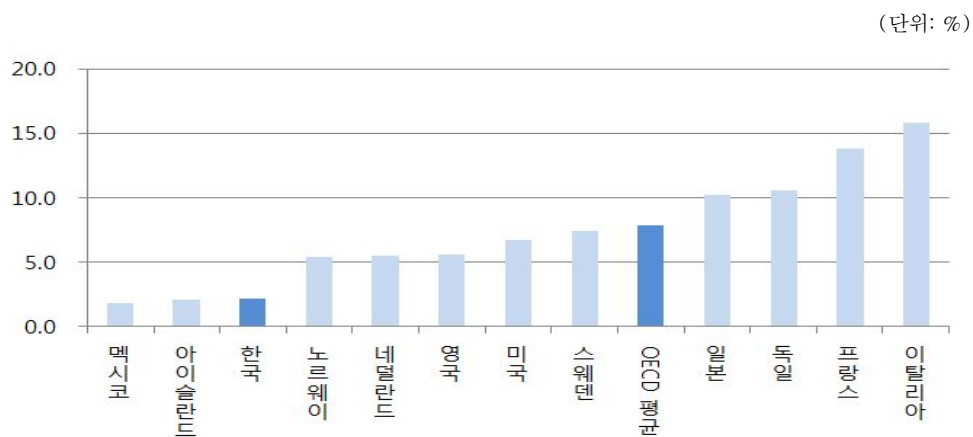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1.1).

## □ GDP대비 공적연금 관련 지출

한국의 GDP대비 공적연금 관련 지출은 2011년 기준 2.2%로 OECD 평균 7.9%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멕시코, 아이슬란드, 한국 등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약 2% 수준인 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공적연금과 관련한 지출이 전체 GDP의 10%~15%를 차지했다.

[그림 3-169] GDP대비 공적연금관련 지출(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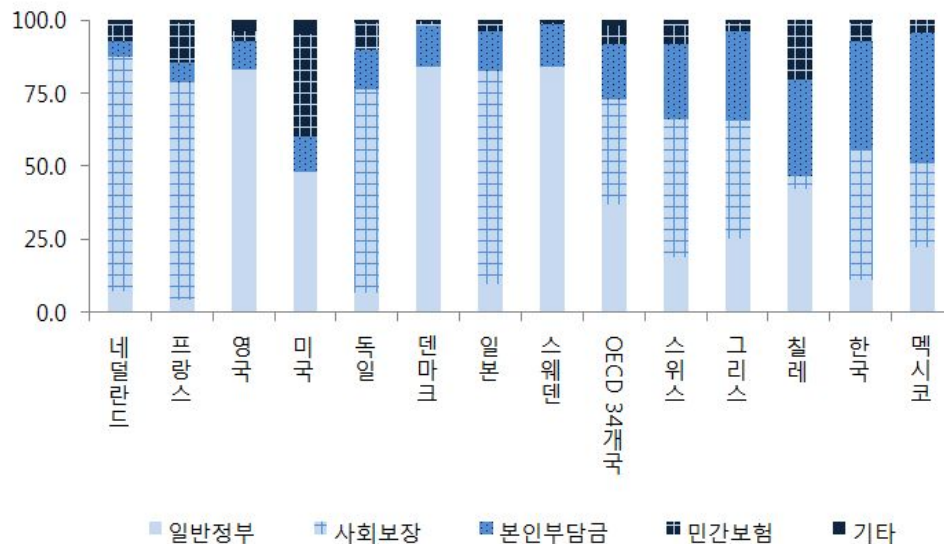
자료: OECD, 「Pension spending(indicator)」, doi: 10.1787/a041f4ef-en.

## □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재원조달은 크게 일반정부, 사회보장, 본인부담금, 민간보험,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부분의 재원조달이 높은 편으로, 34개국 평균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부 36.9%, 사회보장 35.9%, 본인부담금 19.4%, 민간보험 6.3%, 기타 1.6% 순이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일반정부로부터 80%가 넘는 재원을 얻고 있고, 독일, 일본 등은 사회보험으로부터 약 70% 정도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반면 그리스, 칠레, 한국, 멕시코 등은 본인부담금 부담이 30-45%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한국의 의료비 재원조달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11.1%, 사회보장 44.8%, 본인부담금 36.9%, 민간보험 6.5%, 기타 0.7%로 OECD 평균에 비해 공공부분 재원조달이 낮은 편이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3-170] 재원조달 유형별 국민의료비(2013년 혹은 가장 최근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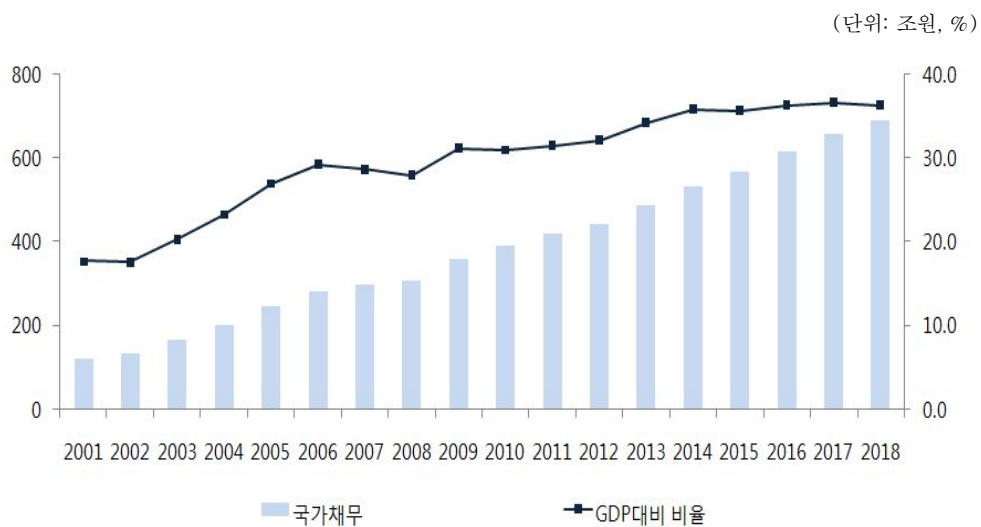
주: 자료는 총 국민의료비를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5,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규모는 2001년 121.8조원에서 2015년 569.9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07-2008년 일시적인 감소현상이 있었으나 2001년 17.7%에서 2018년 36.3%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3-171]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2001-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 제 4 장

# 인구정책통계 개선방안

---

제1절 인구영역 개선과제

제2절 사회영역 개선과제

제3절 정책영역 개선과제





# 4

## 인구정책통계 개선방안 <



이 장에서는 인구정책 통계의 개선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과제는 크게 기존 통계의 개선과 신규 필요 통계의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 통계의 개선과제는 작성방법의 개선점이나 항목의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신규 필요 통계는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국제비교를 위한 항목 검토 과정에서 제기되는 통계를 제시 한다.

### 제1절 인구영역 개선과제

인구 영역의 통계 개선과제 중 인구변동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통계청 KOSIS 자료 제공의 연령 구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영역의 주요 통계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매우 높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 비교에 적합하도록 통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KOSIS 통계에는 연령 구간이 5세 간격으로 나타나 세밀한 동향의 변동 경향을 짚어내기에는 다소 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령구간을 각 세(1세)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생통계 측면에서 그동안 제공되지 않는 조정 합계출산율을 공표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출산통계인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는 기간 효과(tempo effect)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출산 연령의 변동에 따른 변화(quantum effect)를 측정할 수 있는 조정 합계출산율(adjusted TFR)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역시 출생통계와 관련하여 유배우 합계출산율의 산출을 고려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우리나라 출산이 기혼여성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배우 합계출산율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계산 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유배우 합계출산율에서도 혼인연령 및 혼인기간의 변동이 반영된 조정 합계출산율의 산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망통계에 관한 개선과제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과 사망원

인의 구성의 변화로 이어졌다. 사망력의 하락에 따른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은 저출산의 심화와 더불어 인구고령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 등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쟁점들의 밑바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사망력 하락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사망력 지표의 개발과 관리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한 전통적인 사망력 지표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간과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현상이다(Lee & Mason 2011). 특히, 인구고령화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대수명의 향상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수반한다. 그런데, 연대기적 연령(chronical age)에 기반한 전통적인 사망력 지표는 기대수명의 향상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1970년의 65세 노인과 2013년의 65세 노인은 그들의 건강, 교육 수준, 재산 등 각종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연대기적 연령에 기초한 사망력 지표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치들에만 의존하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물론 사망력 하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건강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의 증가는 전통적인 사망력 지표의 변화가 시사하는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최근의 인구학적 연구들은 대안적인 사망력 지표와 인구고령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장래 연령(prospective age) 혹은 기대여명에 기반한 사망력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식통계의 사망력 지표는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하고 있다. 연대기적 연령은 태어나서 관측시점까지 살아온 기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회고적 연령(retrospective age)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사망, 이동 등 인구학적 행위들은 이러한 연대기적 연령에 의해서 크게 다른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대기적 연령은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인구학, 넓게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으로 하나로 취급된다. 그런데,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인해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지표들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70년의 기대수명은 61.9년이었고, 2013년에는 그 수치가 81.9년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1970년의 75세 인구는 기대수명보다

13.1년이나 더 오래 생존한 ‘초고령’ 인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2013년의 75세 인구는 기대수명보다 ‘젊은’ 인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기대수명 등의 사망력 지표의 시계열적 비교는 그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인구학적인 연구들은 장래 연령(prospective age) 혹은 기대여명에 기반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대여명 15년 미만 비중(Prop. RLE 15-)과 평균기대여명(Population Average Remaining Years of Life, PARYL) 등을 들 수 있다(Lutz et a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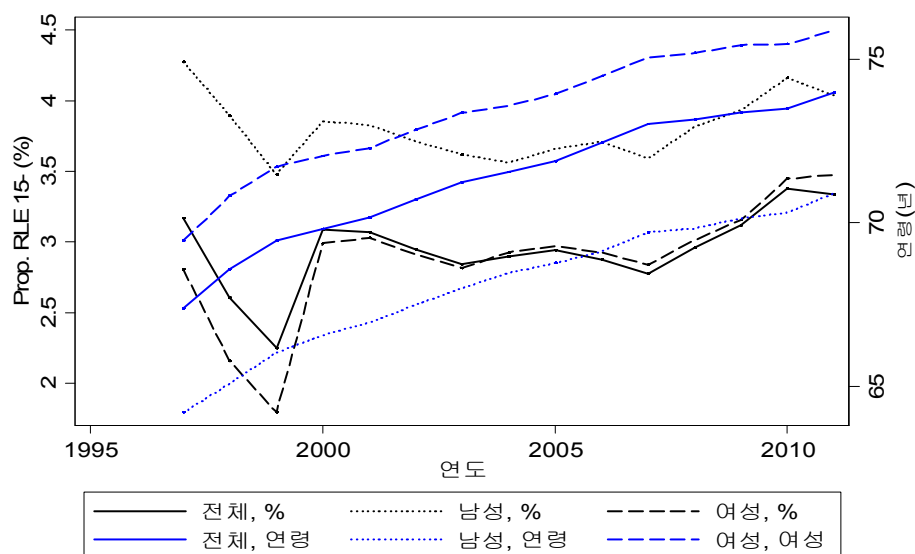
다음은 기대여명 15년 미만 인구비중(Prop. REL 15-)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rop. RLE 15-는 기대여명이 15세 미만인 집단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생명표의 기대여명(ex)은 앞으로 생존할 기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래 연령(prospective age)라고 할 수 있는데, Prop. RLE 15-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이 측정치는 연대기적 연령의 시기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1]은 통계청의 완전생명표와 2010년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서 계산한 Prop. RLE 15-와 기대여명이 15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sup>16)</sup>

파란 색으로 표시한 해당연령은 기대수명 향상을 반영해서 관측기간(1997-2011)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검은 색으로 표시한 Prop. RLE 15-는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1997년 이후 Prop. RLE 15-는 2-5% 구간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는 연대기적 연령에 기반한 65세 인구 비율의 변화추이와 대비된다(1997년의 4.9%에서 2011년의 10.5%로 증가).

이는 기대여명이 15년 미만이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추정치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인구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정책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 혹은 기대수명의 향상에 따라 연대기적 연령의 시기별 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대여명에 기반한 사망력 지표 및 인구고령화 지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 Prop. REL 15-의 계산을 위해서는 1970년부터 가용한 간이생명표가 아니라 1997년부터 가용한 완전생명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기대여명이 15년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세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1] 기대여명 15년 미만 비중(Prop. RLE 15-)(1997-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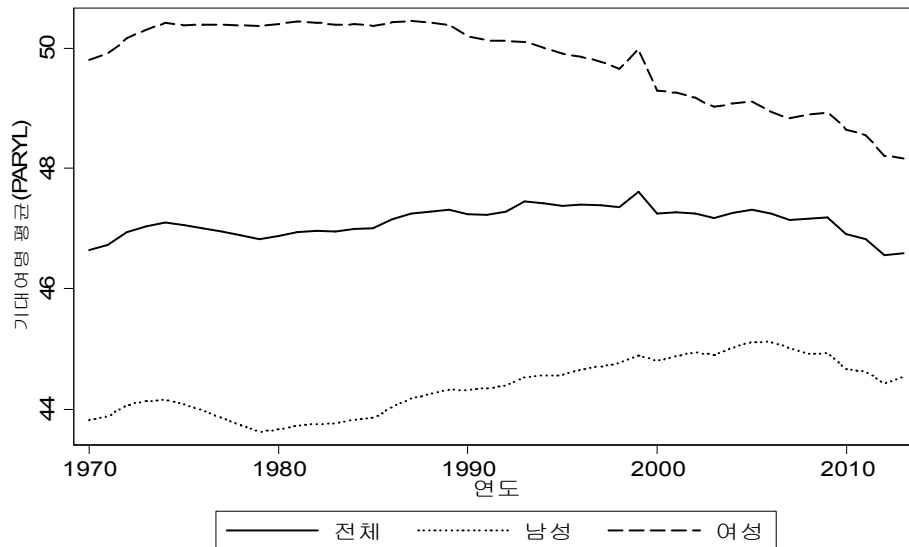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완전생명표」, 2015;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11.

평균기대여명(PARYL)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평균기대여명(PARYL)은 기대여명의 가중평균인데, 연령구성비를 가중치로 활용한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ARYL = \sum ex * px$  ( $ex$ : x세 기대여명,  $px$ : x세 인구비율). 이는 해당시점의 기대여명 혹은 장래연령(prospective age)의 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는 PARYL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4-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균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연대기적 연령이 아니라 기대여명에 기반을 둔 사망력 측정치는 지난 4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이 1970년의 23.6세와 18.5세에서 2013년의 39.3세와 39.7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통계청, 2011)과 매우 상반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령 측정 기준(연대기적 연령 vs. 장래 연령)에 따라, 사망력 수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령 측정 기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향후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림 4-2] 기대여명 평균 추이(1970-2014년)



자료: 통계청, 「완전생명표」, 2015;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11.

다른 한편, 인구의 이동과 관련 몇 가지 개선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계속적인 이주자 유입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인력 의존도의 상승 등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인구에 미칠 영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입 이주자 인구의 인구자질 관리, 사회통합의 문제, 미등록 이주자 관리와 같은 출입국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이주자 통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구정책의 한 측면으로 이주자 문제가 다뤄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이주자 관련 통계들은 대부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나 행정자치부의 주민통계 등과 같은 행정통계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는 격리된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발전된 주민등록 및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인하여 총 인구 규모 파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이주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가 특수 목적을 지닌 행정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통계가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활용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 및 외국인 등록 관련 통계들에서는 총량적 정보(aggregated data) 만이 제공되면서 이들의 연령,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단위의 통계정보를 얻을 수 없어 통계의 활용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행정 목적에서는 불필요하지만 인구자질 관리 등의 인구정책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력,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의 정보는 애초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격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외국인 주민통계 역시 지역 수준에서 총량적 자료 제공되고 있으며, 연령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인 등록 자료와 주민등록 통계만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정확성은 파악이 불가하다. 주민등록 자료가 실제 인구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나 초기에 등록된 인구들의 실제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불어 통계 생성 과정에 대한 통계적 차원의 질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통계는 지자체 별로 작성되어 취합되기 때문에 통계 생성 과정의 표준화 정도와 정확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 관련 통계를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통계작성이나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과정에서 인구정보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행정통계의 취합을 통해 이주자 관련 통계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실제 통계작성 과정에 대한 품질 진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과정에서 생성된 통계들의 오류나 특이 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개선과제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과제는 주로 통계청의 소관업무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통계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lt;표 4-1&gt; 인구통계 개선과제

세분류	개선과제	신규과제	관련부처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구간(현재 5세간격)의 한계</li> <li>• 유배우 합계출산율 및 조정합계출산율 산출</li> </ul>		통계청
인구 변동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사망력 지표 개선</li> <li>e.g.&gt; 기대여명 15년 미만 비율(Prop. RLE 15-), 평균기대여명(Population Average Remaining Years of Life, PARYL)</li> </ul>		통계청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 생산과정의 표준화 및 통계 품질 모니터링</li> </ul>	법무부

## 제2절 사회영역 개선과제

### 1. 가족 및 가구

인구정책 통계의 사회 영역에서 우선 가족 및 가구 관련 몇몇 개선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혼인통계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혼인 중에서 사회 다변화에 따른 초혼 및 재혼 등과 같이 혼인의 종류가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증가에 따라 재혼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적인 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혼과 재혼을 명확히 구분하여 초혼율과 재혼율을 제시하거나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합계혼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초혼과 재혼이 구분되어 조사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미상으로 기록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합계 혼인율과 함께 합계이혼율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조이혼율은 전체 인구 중 이혼자의 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국제비교에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15세 미만의 인구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통계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OSIS통계에서는 일반이혼율과 연령별 이혼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이혼현상의 변동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사람(혹은 성별로)이 평생 경험하는 이혼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이혼율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다음은 동거(사실혼) 실태에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동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미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해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잔존하여 동거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가족구성 측면에서 몇 가지 통계 개선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지욕구 및 빈곤실태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연령대별 구성 혹은 15세 이하 자녀 유무에 따른 구분 등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3세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한부모가족이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노인기준의 상향화와 초고령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건강한 노년층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노인기준을 상향하였을 때 노인1인 가구의 비율 등을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비교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서구에서는 노인인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화(65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연령대 별 세분화된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가족가치 통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계나 다면적 가족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조응하는 가족가치 문항이 개발되고 조사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문항도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으나 성역할 규범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문항의 경우 문항에 따라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거나 가치관의 변화를 세밀하게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가치는 다양한 세부항목을 포함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가족가치를 다면적으로 측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로서의 책임감, 양육태도 등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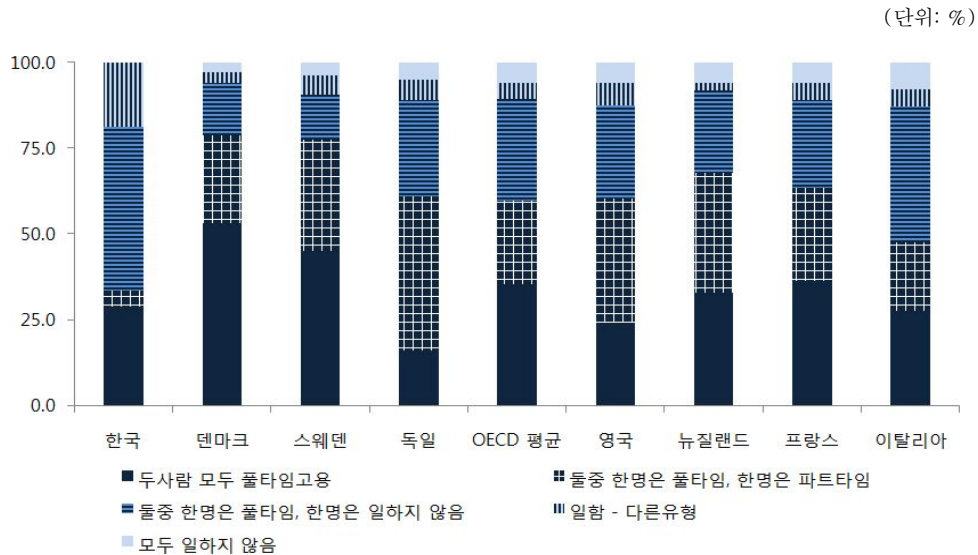


## 2. 여성 및 젠더

여성 및 젠더 분야에서 기존 통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고용과 가계 수지에 대한 대표적 조사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이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곧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는 많은 사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정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대부분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관련 조사에서 여성의 생애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 자료의 활용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초혼시기와 혼인이력, 출산력, 자녀정보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가정양립정책의 경우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OECD에서 현재 국제 비교통계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으나, 이 통계에서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2013년기준)



자료: OECD Family database(LMF1.1).

### 3. 고용 및 노동

다음은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통계 개선과제를 살펴보자. 고용상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국제비교도 용이한 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포착할 수 있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과 고용 지표 간 괴리가 큰 편이다. 대표적으로 실업률 통계는 신뢰도 제고 및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조지표를 개발·공표할 필요가 있다. 공식실업자 외에 불완전취업자와 비경활자 중 장기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업자개념이 미국[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지표]처럼 보다 포괄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통계 조사 보완 및 조사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대표적이며 그 외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으로 고용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 계층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적 대표성(소규모사업체 제외, 민간부문의 상용근로자 중심)이 부족해 경활인구조사와 비교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고용통계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각 조사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자료간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상동, 2012).

또한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인사관리전략변화로 파견, 용역, 도급, 외주,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노사갈등의 대부분이 간접고용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간접고용 규모와 실태파악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노광표, 201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나 고용부의 사내하도급실태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간접고용 규모와 근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을 개념정의하고 이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간접고용 근로실태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차원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취업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노동력 수급구조 변화는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출산을 제고뿐 아니라 유휴인력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에 비해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특히 저학력 청년층과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는데 이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저학력청년들의 노동시장이행에서 정착까지의 과정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형태의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졸이하 저학력청년층은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특화된 질문을 구성하고 표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노동분야의 통계개선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노동관련 통계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유일하나 조사항목의 엄밀성(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이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관련 통계는 고용부 집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노동부 조사통계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용부조사통계의 경우 특정 업종이 제외되어 있고(농림어업이나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기업체노동비용조사,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또한 특정목적의 조사(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용근로자 중심이어서 전체 취업자의 노동관련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세계경제통합과 기술발전으로 비전형적인 근로관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취업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사관계, 인적자원, 산업재해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분야 중 노사관계(노조조직률, 노사분규), 인적자원관리,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해당 과에서 노동정책 수립 및 평가를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 자료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연구기관에서 패널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바 보다 체계적인 자료 생산 및 관리가 필요하

다. 사업체의 인적자원관리 전력이나 근로시간, 산업재해 실태 등은 고용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종 행정통계를 표준화하고 노동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자료가 생산·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정부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영향으로 시간제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여성, 고령자의 시간제근로 참여비율이 높는데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이었으나 이제는 시간제근로가 하나의 고용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제근로를 전전하는 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어떤 노동이동을 경험하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상대적 취약집단인 시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는 정책연구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간제근로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취지에서 보다 세부적인 항목의 조사가 필요하다.

#### 4. 교육

교육분야에서 일부 개선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고교졸업자수와 대학입학정원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입학정원의 경우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각 대학의 유형별 대학입학정원에 대한 통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대학입학정원에서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입학정원에서 따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 선발인원에 대한 추계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교원의 선발인원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교원의 선발과 적정 수에 관련한 표준화된 추계자료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현재 교원수에 대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표준화하여 교원수에 대한 추계자료가 산출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기가 좋을 것이다.

교원통계의 연도별 통계누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통계 서비스 자료는 매우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연도별 통계자료에는

2000년 ~ 2010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년도의 통계연보나 간추린 통계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통계의 가정이 년도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5. 경제

빈곤과 소득분배와 관련한 통계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지표를 발표하고 있고, 이 자료들이 OECD에도 보고가 되어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특별히 문제시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첫째,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이 두 가지의 상이한 자료(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분배지표’에 상대적 빈곤율(2014년 가처분소득기준 14.4%)이 포함되어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빈곤지표’에도 상대적 빈곤율(2014년 가처분소득기준 16.4%)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빈곤율도 마찬가지다. 각 통계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용목적에 따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다소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청년빈곤율과 같은 통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빈곤위험집단이 노인에서 청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OECD, 2014), 청년빈곤율의 정책적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빈곤지표’에서는 20대의 빈곤율이 수록되어 있지만,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청년의 연령(15~24세)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여러 기관에서 추정해오고 있다. 이들 중 가장 공신력을 가진 기관은 한국은행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정기적인 통계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료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의 개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3년 4월을 끝으로 지금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GDP갭은 통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잠재성장률 자체가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을 가늠케 하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추정결과가 공식

적인 형태로 공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자본스톡의 경우 UN과 OECD에서 추계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별로 개별적인 경로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비교 자료로서 활용하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스톡과 관련된 통계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어렵고,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 6. 건강

건강 분야의 통계 관련 개선과제를 살펴보자. 우선 유병 현황과 관련하여, 유병의 지표로 제왕절개분만율, 단태아저체중아출생률, 비만, 치매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른 지표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소영 등(2014)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만 유병률, 암 발생률, AIDS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및 발생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우와 같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였을 경우 감염성 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유병관련 지표는 그 시기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암검진율은 전체 암 검진율로만 제시하였으나, 암 종류에 따라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암 종별로 세분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이용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을 제외하고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 등은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집계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국회 등 외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접근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구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수의료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때문에 향후에는 인구의 자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필수의료서비스를 구체화 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7. 안전

안전 관련 통계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안전사고에 의한 통계는 교통사고의 경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이외에, 경찰청의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통계를 통해 부상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안전사고 통계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만 제공되고 있어 사망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 현황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 등의 자료로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은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 통계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범죄자에 대한 통계는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공식통계상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범죄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1세 단위로, 성인의 경우에는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해자 연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수 역시 범죄자 통계에 비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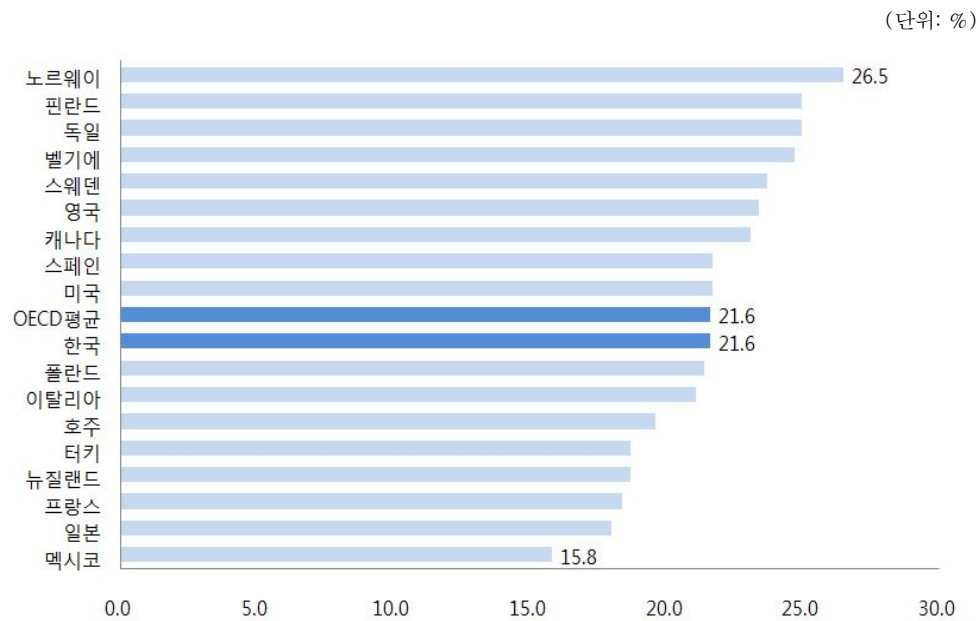
산업재해 관련한 통계는 성별 통계 생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제공하는 성별 통계는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중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에 대한 성별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여성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노동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여성재해자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자 수가 증가하는 것인지, 여성근로자 중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성별 통계가 필요하다.

## 8. 문화

문화 통계와 관련 개선과제로서, 여가시간의 개념과 공표단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1일 평균 여가시간이 하루 24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21.6%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여가시간에는 먹고, 자는 등의 개인생활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표하는 여가시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OECD의 경우 여가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초 단위(KOSIS)와 시간(E-나라지표) 단위로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통계와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4] OECD 주요 국가의 일평균 여가시간(2006년)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p. 26.



&lt;표 4-2&gt; 사회통계 개선과제

세분류	개선과제	신규과제	관련부처
가족/ 가구	가족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혼율과 재혼율 제시</li> <li>• 15세 이상의 인구 대상으로 한 합계혼인율</li> <li>• 합계이혼율(현재 일반이혼율과 연령별 이혼율 제공)</li> <li>• 한부모 가족 구분(자녀 연령별 혹은 15세 이하 자녀유무 등)</li> <li>• 노인인구 세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사실혼)에 대한 조사</li> <li>• 가족 구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재혼가족 등)</li> </ul>	통계청
	가족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문항 개발 및 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li> <li>e.g.&gt;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로서의 책임감, 양육태도</li> </ul>	보사연
여성/ 젠더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여성의 생애사건 항목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있는 부모의 취업상태</li> </ul>	통계청
고용/ 노동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통계 조사보완 및 조사 간 연계 강화</li> <li>• 취업취약계층 실태조사(저학력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경찰 부가조사 형태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관련 보조지표 개발</li> <li>e.g.&gt;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활자 중 장기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집단</li> <li>• 간접고용 규모와 근로실태 파악</li> </ul>	고용노동부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관련 통계의 대표성 확보</li> <li>• 노사관계, 인적자원, 산업재해 자료의 활용도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근로자 근로조건 파악</li> </ul>	고용노동부
교육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유형별 대학입학정원에 대한 통계의 정리</li> <li>• 교원통계의 누락 연도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선발인원 추계</li> </ul>	교육부
경제	빈곤과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지표의 상이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빈곤율 추가</li> </ul>	통계청
	경제성장 및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성장률의 주기적 발표</li> </ul>		한국은행
건강	유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병관련 통계 생산을 위한 주기적인 통계 검토</li> </ul>		보건복지부
	예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종류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li> </ul>		보건복지부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한 통계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모니터링</li> </ul>	보건복지부
안전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하지 않은 사고 발생현황 파악을 위한 다양한 안전사고 통계 수집</li> </ul>		경찰청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통계상의 범죄 피해자 정보 보완</li> </ul>		경찰청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통계생산</li> </ul>		고용노동부
문화	여가와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의 개념과 공표단위의 불일치 개선</li> </ul>		문화체육관광부

### 제3절 정책영역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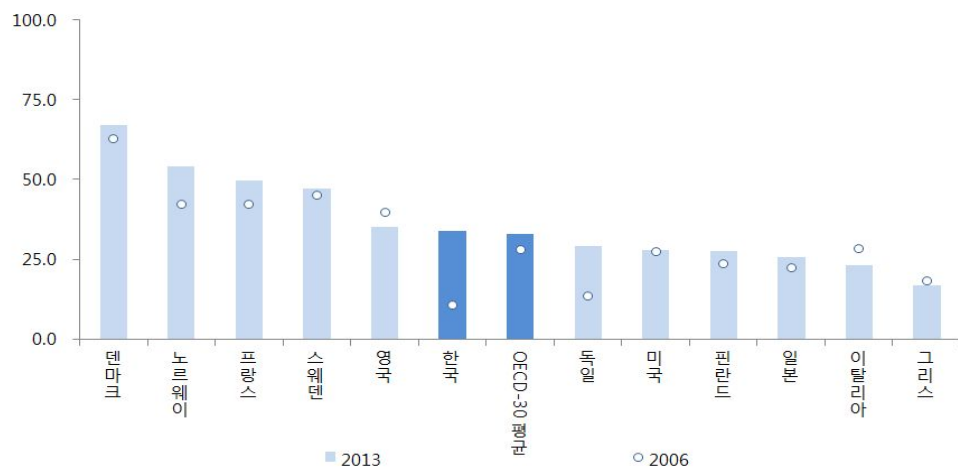
#### 1. 저출산 대응정책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통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최근의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임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현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난임 발생 현황 통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난임경험율이나 난임유병율, 난임 진단건수 등의 통계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OECD Family database 와 국내공표통계의 차이가 발견된다. OECD family database의 한국의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6년 10.9%, 2013년 34.1%로 국내공표통계인 26.3%와 63.3%와 비교하면 약 1/2 수준이다.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와 E-나라지표를 통해 공표되는 통계 수치의 커다란 차이는 한국의 보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내외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림 4-5] OECD 주요 국가의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참여률(2006,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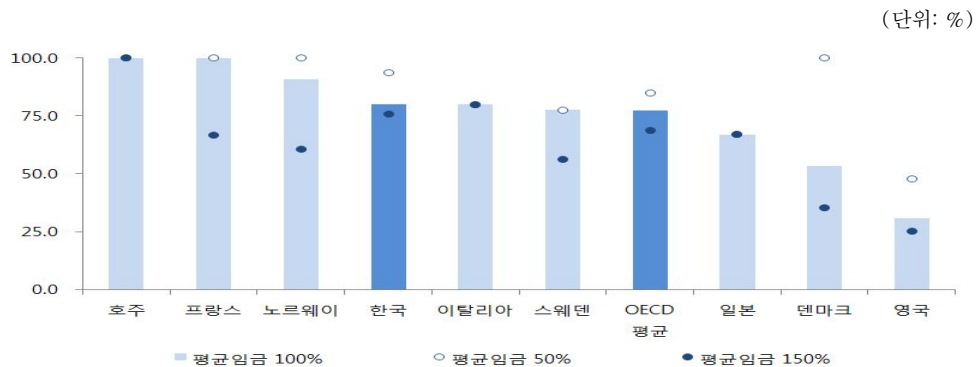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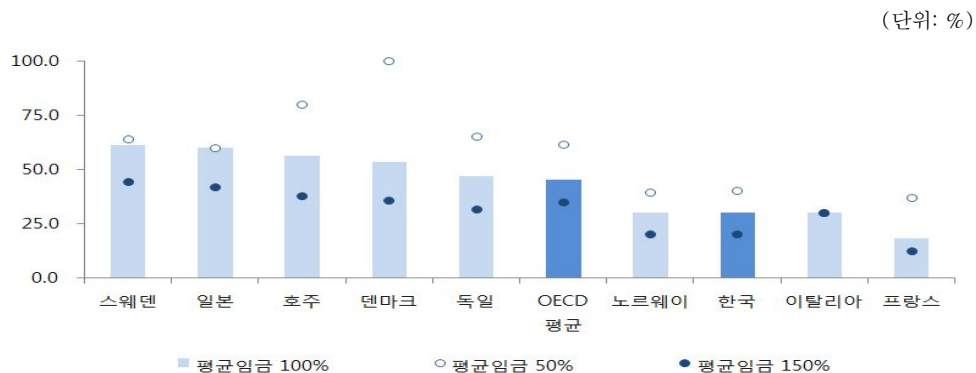
일·가정양립정책에서는 소득수준별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OECD Family database에 한국의 소득수준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공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 통계는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2011년 이후 급여지급이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Family database에 보고되는 한국 통계를 살펴보면, 모성휴가의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육아휴직(부모휴가)의 경우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6] OECD 주요 국가의 모성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2.4).

[그림 4-7] OECD 주요 국가의 부모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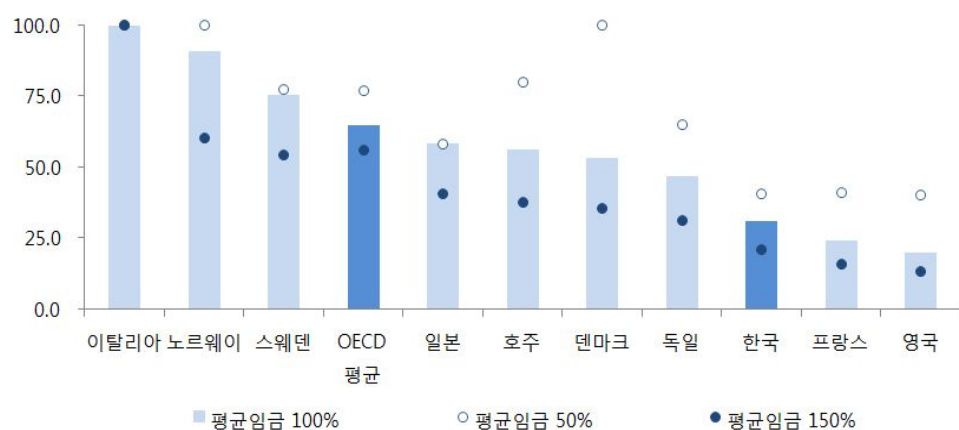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2.4).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아버지 휴가관련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2012년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통계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성의 일·가정양립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배우자 휴가사용실태 파악과 더불어, 아버지 휴가와 관련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통계생산도 필요하다. OECD의 경우 모성휴가, 부모휴가와 함께 아버지휴가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부모휴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휴가의 소득대체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림 4-8] OECD 주요 국가의 아버지 휴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2014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PF.2.4).

## 2. 고령화 대응정책

고령화 대응정책 관련 통계 개선과제에서 우선 노후보장소득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을 정책적 지향점으로 두고 다양한 노후 소득원별 가입 수준과 수급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다. 공적연금의 가입율과 수급율, 기초연금의 수급율, 퇴직연금 가입자수, 주택연금수급자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외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는 사적연금가입율의 파악이 요구되어진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적연금가입율의 공식적 통계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공적연금에 의한 실질소득대체율 수준은 파악되고 있으나, 그 외의 퇴직연금, 사적연금, 주택연금 등을 통한 소득대체율 수준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만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다양한 소득원에 의한 노후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연령구분을 세분화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인구정책 통계에서 활용되어지는 조사자료 또는 행정자료에서 개인을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는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령구분을 최대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통계에서는 연령층에서 연령구분을 61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과 같이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여 대상 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조사규모가 크지 않은 조사나 해당자가 적은 행정통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장기적인 고령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노인 연령별 통계생산이 요구되어진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의 후기연령층이 노인에 대한 정책이 인구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통계생산에서도 노인 집단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거나 인구센서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조사의 경우 결과산출에서 노인연령층의 세분화된 통계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기준 마련과 검증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으로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구분으로서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거나,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노인과년 통계의 통일된 개념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되는 통계별로 사용되는 정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의 개념을 1)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또는 2)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통계로서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대표적으로 KOSIS)에서 상이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표된 통계의 개념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될 조사 또는 통계 공표에서의 통일된 정의로 조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lt;표 4-3&gt; 정책통계 개선과제

	세분류	개선과제	신규과제	관련부처
저출산 대응 정책	혼인·임신·출산		• 난임 경험률, 난임 유병율, 난임 진단건수	보건복지부
	자녀 양육	• OECD family database와 국내공표통계의 차이 수 정보완		
고령화 대응 정책	일·가정 양립		• 소득수준별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 통계 생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아버지 휴가 관련 소득대체율	고용노동부
	노후 소득 보장	• 세분화된 노인 연령별 통계 생산(전기노인과 후기 노인 구분) • 공표되는 통계의 통일된 개념 정의 적용 e.g.> 노인가구의 개념	• 노후보장소득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 e.g.> 사적연금가입율, 퇴직연금/사적연금/주택연금 등을 통한 소득대체율	
대응 정책	노후 건강 및 돌봄 보장			
	노후 사회 참여 및 인권 보장			

### 3. 국가 통계 체계에 관한 개선 과제

현재 국내 통계 관리의 핵심역할은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가통계포털인 KOSIS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은 주요 국가 행정통계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의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공표된 통계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당부분 타 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업로드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제시된 결과가 국가통계로서 신뢰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사 항목이 다른 조사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국가통계로 제시할 것인가 등을 고려할 때, 신뢰도 높은 통계결과 활용을 위해 국가통계로서 공신력 있는 결과만이 이용될 수 있도록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로 공표하기 위한 조사설계 및 과정,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인구주택총조사가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센서스와 순환센서스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이전 센서스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이전 센서스의 전수조사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등록센서스의 전수조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항목간

연계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센서스의 교육정도 항목과 혼인상태 항목이 등록센서스의 전수조사 항목에서 제외되고 표본조사 항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이 두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공표시기와 순환센서스 운영방식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매 5년마다 센서스 결과를 공표해왔으나 향후 전수조사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의 공표 주기가 어떻게 운영될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자료의 활용 측면과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정확한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된다.

<표 4-4> 국가 통계체계 개선과제

개선과제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SIS 등록 민간기관 조사통계 관리</li> <li>• 인구주택총조사 보완 방안 검토</li> </ul>	통계청





제 5 장

## 인구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

제1절 인구정책통계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인구정책 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 5

## 인구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

&lt;

### 제1절 인구정책통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로써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추진 10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올해로 완료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될 것이다. 기본계획은 5개년 종합계획의 의미를 가지며,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었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5개년 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으로 연도별 중앙부처 시행계획이 별도로 수립 추진되며, 모든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성과평가까지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까지 일련의 정책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매년 정책의 근거기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책 근거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자료이지만 그동안 인구정책과 관련한 통계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평가 및 환류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관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 1. 법적 근거 마련

향후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은 인구정책 통계의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제29조를 살펴볼 수 있다. 동법 제29조 ①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인구정책 통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계 관리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존 사례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는 좋은 보기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제18조는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범위, 절차 등을 포함한 운용지침을 마련토록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는 통계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통계의 경우,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 그리고 각 통계작성기관 내 통계책임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통계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박재용 외, 2011). 통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와(동법 제5조의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의 5).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동법 제5조의 2). 현재 제1차 국가통계 발전(‘13-’17)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총 103개의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 정책으로 인정되는 현실에서 이와 법적 근거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개인부터 가족, 사회, 경제 시장, 국가의 재정 등과 관련하여 전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현실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통계관리 기능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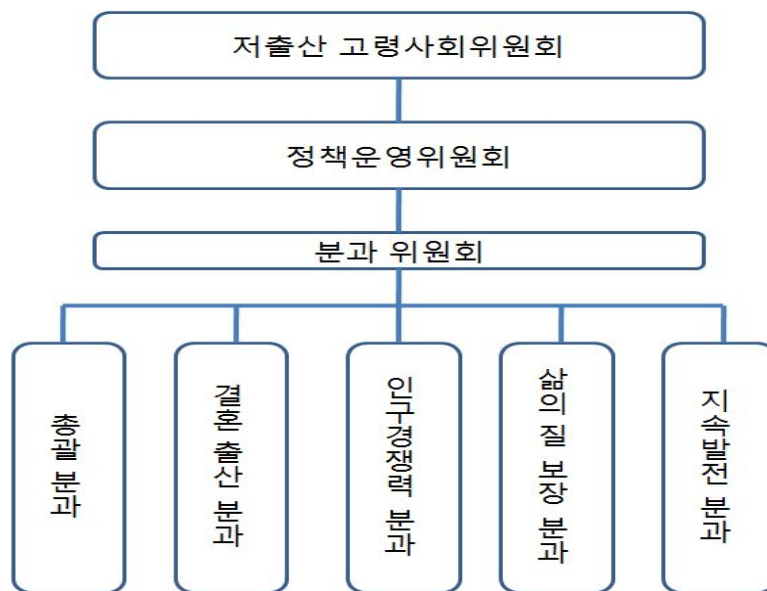
인구정책 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통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에서 인구정책 통계 관리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구통계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 밑에 정책운영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분과, 결혼 출산 분과, 인구경쟁력 분과, 삶의 질 보장 분과, 지속발전 분과를 두고 있다. 각 분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세부 영역을 구분한 것으로써,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부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중 총괄분과에서 인구정책 통계의 관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괄분과 주관으로 각분과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인구정책통계 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 통계관리체

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의 위상을 강화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 통계 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통계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 3.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매5년) 및 연도

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따라서 간사위원이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역할로 인구정책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구정책 통계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은 인구정책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과, 현황분석과 문제점, 중점추진과제, 개선과제의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계획으로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고 구체적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인구정책 통계 관리계획’ 내용 구성

구분	내용 구성
관리계획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정책 통계 관리의 목표를 정립함</li> <li>인구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근거기반 확립 등</li> </ul>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정책 통계 관리의 기본방향 제시</li> <li>정책수립, 추진과정 모니터링, 정책 평가 등의 경험적 기초자료 구축</li> <li>대국민 통계제공을 통한 인구정책 이해 제고</li> <li>정책의 추진과정의 효율성 증대 등</li> </ul>
현황분석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정책 영역의 총괄 및 각 영역별 인구정책 통계 문제점 파악</li> <li>통계의 생산 및 관리 체계 상 문제점 파악</li> <li>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포괄성 등을 파악 등</li> </ul>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점에 기초하여 관리계획을 통하여 추진할 중점 과제 제시</li> <li>통계관리의 주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통계 내용에 관한 사항</li> <li>통계 관리를 위한 외부환경에 관한 사항 등</li> </ul>
개선 통계 발굴 및 개선협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시</li> <li>분야별 세부 통계 항목의 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li> <li>신규 필요 항목에 관한 사항</li> <li>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계획 등</li> </ul>

이와 같은 인구정책 관리 계획은 위원회 총괄분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은 관리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진행과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인구정책 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 1. Database 및 인구정책통계 포털사이트 구축

인구정책 통계를 향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축적 과정이 요구된다. 통계자료가 그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통계자료의 추세를 파악하고, 인구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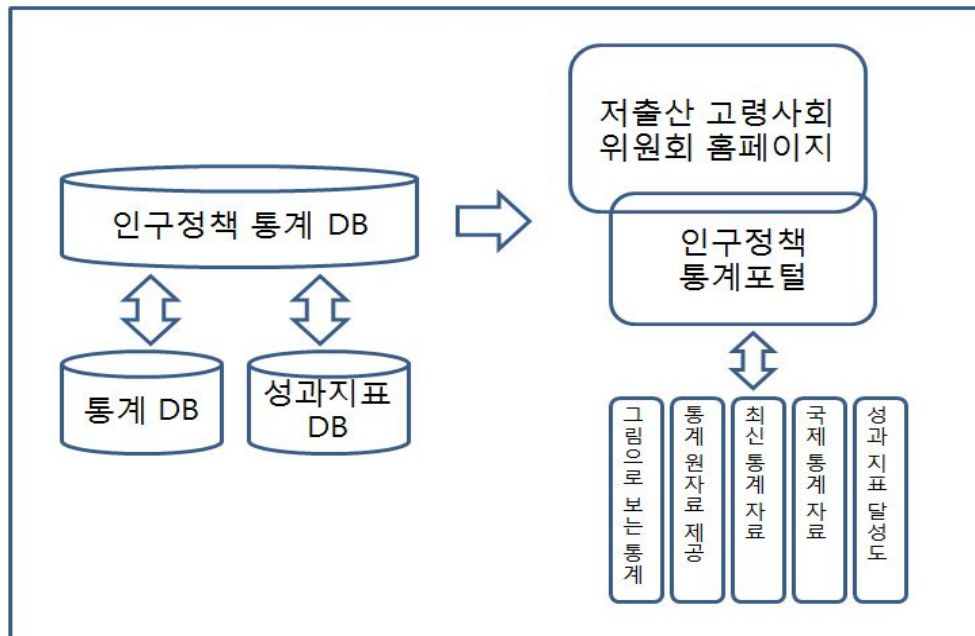
인구정책 통계의 시계열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된 통계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Database로 구축될 것이다. Database는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수집과 축적을 위한 Database이고, 다른 하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축적하는 Database이다. 특히 정책과제의 성과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매년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지표의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정책성과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통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을 허용하고 자료의 공유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면 활용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정책 통계의 홈페이지는 관련정보를 종합하는 포털사이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포털사이트에서는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공표가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된 통계를 그래프와 같은 그림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정책의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적된 통계 원자료를 공개하여 정책입안자와 관련연구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최신 발표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해외 관련 통계 또한 축적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축적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지표 도달치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추

진과정의 모니터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는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전산장비를 일부 추가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인구정책통계 DB와 포털사이트 구조



## 2. 성과지표 Data base 구축

인구정책 통계 Database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공표 통계를 축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축적하는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1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기존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 축적이 미흡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인구정책 통계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정책 성과지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매년 시행하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300여개에 가까운 정책의 성과지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까지 정리된 성과지표를 Database로 구축하고, 이후 진행되는 매년 성과평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시계열 자료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 정책 효과성 평가까지 일련의 평가과정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토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3. 정기 간행물 발간

인구정책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기 간행물 발간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구정책 통계연보(가칭)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발간 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구정책 통계의 변화가 급속하지 않다면 매년 발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연보는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정기 간행물은 또한 백서 형태를 띌 수도 있다. 연보는 통계집으로써 통계표를 제공할 뿐이라면, 백서는 인구정책 통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어 독자의 이해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백서는 인구정책의 추진 성과나 계획을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연보보다는 백서가 일반 국민의 활용성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서의 경우 발간 주기를 연보보다 길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백서는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때 5년마다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기본계획 발표 익년 또는 전년도에 발간하면 업무의 중복을 피할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신규 통계 개발

현재 인구정책 관련 통계에서 특히 정책의 성과 통계부분 자료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분야별로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인구정책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신규 통

계에 대한 작성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행정자료가 잘 집적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복이음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면 필요한 인구정책 통계를 새로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보육정보시스템 등도 매우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한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향후 중요한 신규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6 장

## 결론

제1절 결론



##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인구정책의 개념적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였다. 여기서 인구현상이 기본적으로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고, 인구정책이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제반 분야에 개입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구정책 통계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인구정책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개념들은 인구정책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이며 동시에 인구정책 통계를 정리하기 위한 틀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정책 개념들의 핵심 가치로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인구정책 통계를 크게 인구영역, 사회영역,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중분류와 세분류 체계를 가지며, 각 세분류 안에 통계 목록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인구정책 개념들과 분류체계 및 통계목록을 확정한 이후, 각 통계의 작성 현황과 통계별 추세 분석을 제시하였다. 전체 통계 항목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제시하고, 연도별로 통계 내용의 변화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전반적 추세 변화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학술적 논쟁점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일반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충실히 작성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선정된 인구정책 통계 목록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통계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인구정책에 필요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통계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계 생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정책 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 하위 분과 중에서 총괄분과의 역할로 인구정책 통계의 관리 업무를 규정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의 수집 및 축적, 그리고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과 정기간행물 발간을 제안하였다. 정기간행물은 크게 연보 형태와 백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연보의 경우는 격년 또는 3년 주기 발간을 제안하였고, 백서는 5년 주기 발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구정책 분야의 통계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인구정책 통계의 체계를 정립하고 인구정책 통계의 안정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정책 통계는 무엇보다도 정책입안 및 평가의 경험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정책 근거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lt;

- 강진경. (2004). 생활습관병의 개념. 대한의사협회지, 47(3), pp.188-194.
- 계봉오 외. (2013). 인구와 보건의 사회학. 서울다산출판사
- 계봉오. (2015). 인구 고령화,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불평등의 관계, 경제와 사회, 106, pp.41-72.
- 공은배, 이기준, 이미라, 임현정, 김동훈 등. (2011). 교육분야 통계 수집·관리·활용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관계부처 합동. (2011). 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 과천: 관계부처합동.
- 교육인적자원부. (2013). OECD통계 자료집.
- 국회예산정책처. (2015).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현, 김창환.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석기. (2015). 최근 저성장의 추세성 여부 판단과 잠재성장률 추정, 금융포커스, 24(9), pp.14-15.
- 김동진,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진, 기명, 김명희, 김유미, 윤태호, 장숙량 등. (201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통계집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진, 김명희, 김유미, 기명, 윤태호, 정혜주 등. (2015).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영, 여인권, 오준석, 김혜영. (2010).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pp.1-34.
- 김승권 외.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 박종현, 이희영, 김정, 정혜민, 노준수 등. (2013). 국가건강검진사업 성과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김은경, 박성민, 서주연, 박혜석, 박웅신. (2015). 범죄통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 대검찰청.
- 김현식. (2013). 인구고령화와 사회변동. 계봉오 등, 인구와 보건의 사회학(pp.61-82)에서. 서울: 다산출판사.
- 노광표. (2014).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상태. (2006). 인구정책의 의의와 체계. 한국인구학회.(편), 인구대사전(pp.488-492)에서.  
대전: 통계청.
- 박세경(2004).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93, pp.47-64.
- 박양수, 장영재, 구자현, 김현수. (2013).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3년 4월, pp.14-33.
- 박재용, 김재수, 송영혜, 장수익, 안필립. (2011). 국가통계 미래발전 전략. 통계청.
-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賃金)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 반정호. (2012).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호, pp.55-67.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Issue and Focus, 293.
- 보건복지부. (2013).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05.03.).
- 보건복지부. (2015). 분만취약지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통계」.
- 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I. 지표 체계. 통계청.
- 석현호 외. (2014).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II. 지표 DB. 통계청.
- 송태민, 이준순. (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서비스 현황, 보건복지포럼, 165, pp. 106-117.
- 예방의학과공중보건편집위원회. (1999).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서울: 계축문화사.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 95-140.
-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 (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형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2).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전망과 과제. 한국인구학, 36(2), pp. 105-127.
- 이상호, 최효미, 윤미래. (2012). 지역노동통계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영, 임지영. (2013).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자질 향상 방안-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최인선, (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형. (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재열 외(2014).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총괄체계. 통계개발원.
- 장영식, 김나연, 이성웅, 진달래. (2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경희. (2006). 인구정책의 역사와 가족정책의 등장.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대사전 (pp.485-488)에서. 대전: 통계청.
- 정기원. (2006). 인구정책: 분산정책.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대사전(pp.442-445)에서. 대전: 통계청.
- 정영호, 고숙자. (2014).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용찬, 강현철, 오세성, 허지수, 김설아, 안임준 외. (2005). 방송통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최정수. (2005). 국가통계의 발전방향. 통계개발원.
-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pp.143-160.
- 조동철(2015).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조병수, 김민혜. (2015).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은행. 통계개발원. (2014a). 2013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 통계개발원. (2014b). 국민의 삶의 질 측정 2013.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통계청. (2013a). 2013 녹색성장지표 작성결과.
- 통계청. (2013b). 제 1차 국가통계발전(‘13-’17) 기본계획. 보도자료(2013.12.20.).
- 통계청. (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
-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통계개발원.
- 한국은행, 통계청(2014).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 추계(1970~2012년). 보도자료 (2014.12.29.).
- 한국은행. (2015).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 서울: 한국은행.
- 한혜리, 김수진, 노성원. (2008). 정신보건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황상규. (2006).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구축 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Ahn, N. & Mira, P.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pp.667-682.
- Arpino, B., Esping-Anderson, G. & Gosta, P.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pp.370-382.
- Atkinson, A.B.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역). 서울: 글항아리 (원서출판 2015.).
- Billari, F. (2004). Becoming an adult in Europe: A macro(/micro)-demographic perspective in G. Andersson and G. Neyer (eds.), *Contemporary Research on European Fertility: Perspectives and Developments.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3, Article 2: pp.15-44, available at <<  
http://www.demographic-research.org/special/3/2/default.htm>>.
- Brewster, K. L. &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 271-296.
- Buchholz, S., Hofäcker, D. & Blossfeld, H-P. (2006). Globalization, accelerating economic change and late careers. A theoretical framework. in Blossfeld, H-P, Buchholz, S & Hofäcker, D.(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Late Careers in Society* (pp.1-23).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Cutler, D. Deaton, A. & Lleras-Muney, A. (2006). The determinants of mort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3), pp.97-120.
- Deaton, A. & Paxson, C. H. (1997). The effects of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on national saving and inequality. *Demography*, 34 (1), pp.97-114.
- De La Croix, D. & Doepke, M. (2003). Inequality and growth: Why differential fertility matte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4), pp.1091-1113.
- Dyson, T. (2010). *Population and Development: the demographic transition*. Zed Books.
- Eldridge, H. T. (1979). Population policie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 381-388. New York: Macmillan Co. and The Free Press.
- Finkle, J.L. & Crane, B.B. (199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In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population policy experience(pp. 167-183). New York, June 27-30, 198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Holland, J. A. & Keizer, R. (2015). Family attitudes and fertility timing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3), pp.259–285.
- Jones G. W. (2015). Low fertility and ageing in Singapore: Policies to influence and respond to trends.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Issues i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eynes, J.M. (1937). Some Economic Consequences of a Declining Population. *The Eugenics Review*, 29(1), pp.13–17.
- Kuznets, S. (1965).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New York: Norton.
- Lee HY. (1980).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8, pp. 5–18.
- Lesthaeghe, R. (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3), pp. 411–435.
- Lloyd, C. B. & Ivanov, S. (1988). The effects of improved child survival on family planning practice and fertility. *Studies in Family Planning*, 19(3), pp.141–161.
- Li, N & Lee, R. (2005). Coherent mortality forecasts for a group of populations: An extension of the Lee–Carter method. *Demography*, 42(3), pp.575–594.
- Livi–Bacci, M. (2009). 세계인구의 역사 (송병건, 허은영 역). 서울: 해남출판사 (원서출판 2007).
- Lee, R. & Mason, A. (2011). *Population aging and the generational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 Lutz, W., Sanderson, W. & Scherbov, S. (2008). The coming acceleration of global population ageing. *Nature*, 451, pp.716–719.
- May, J. 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 427–439.
- Morgan, P. S. & Hagewen, K. J. (2006). Fertility In Poston, D. L. & Micklin, M. (eds.) *Handbook of Population*. New York: Springer.
- Nolte, E. & McKee, M. (2004). *Does healthcare save lives? Avoidable mortality revisited*. London: Nuffield Trust.

- OECD. (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Publishing.
- OECD. (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OECD Publishing.
- Rowe, J. W. & Kahn, L. (2015). Successful aging 2.0: Conceptual expansions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Gerontology*, 70(4), pp.593-596.
- Seccombe, K.(2008). *Families and their social worlds*. Pearson Education, Inc.
- Trent, K. & South, S. J. (1989). Structural determinants of the divorce rate: A cross-socie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pp.391-404.
- United Nations. (1994).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0). *World population policies 2009*.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5 Re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Van de Kaa, D.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pp. 290-331.
- WHO. (2011).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0*.
- WHO. (2013), *Global action plan for prevention and control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 Wilmoth, J. and Horiuchi. 1999. "Rectangularization revised: Variability of age at death within human populations". *Demography* 36(4): 475-495.
- 日本内閣府. (2015). 平成27年版 高齢社会白書.
- 日本内閣府. (2015). 平成27年版 少子化社会対策白書.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247호(2012년 2월 1일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 12449호(2014년 3월 18일 개정).
- 통계법, 법률 제 12844호(2014년 11월 19일 개정).

<홈페이지 자료>

국민 삶의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guide-flow.do> (검색어: 측정목적 및 연혁, 검색일: 2015.08.31)

녹색성장지표 <https://green.kostat.go.kr/portal/greengrow.do> (검색어: 지표정의, 검색일: 15.09.01.)

통계청 <http://kosis.kr/> (검색어: 승인통계현황 및 분류, KOSIS 100대 지표, 검색일: 2015.08.3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검색어: 통계분류현황, 국가주요지표 검색일: 2015.08.31.)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5.09.01).

日本 総務省統計局 <http://www.e-stat.go.jp/SG1/chiiki/Welcome.do?lang=01> (검색일: 2015.12.09.)